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09. 9.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 목 차

1. 심사의안	1
2. 심사경과	1
가. 임명동의안 제출 : 2009. 9. 9.(정부)	1
나. 임명동의안 회부 : 2009. 9. 10.	1
다. 상정 및 청문일자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2
가. 구성경위	2
나. 활동기간 : 2009. 9. 9. ~ 9. 25.(17일간)	3
다. 회의경과	3
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6
(1) 증인명단	6
(2) 참고인명단	6
마.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7
(1) 교섭단체별 요구현황	7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7
바.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9
사.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9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10
가. 위원장 인사요지	10
나. 국무총리후보자(정운찬)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11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질의·답변요지	16

(1)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 .....	16
(2) 국무총리직 수행관련 .....	53
(3) 정책 현안 관련 .....	64
(4) 기타 .....	99
(5) 증인 · 참고인 .....	102

## 5. 요약 및 종합 정리 .....121

### 가.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 ..... 121

(1) 병역기피 의혹 관련 .....	121
(2) YES 24 고문직 수행 등 겸직금지 관련 .....	123
(3) 가계수지 분석 관련 .....	125
(4) 재산등록 및 종합소득세 누락 및 탈세 .....	126
(5) Y모회사 회장으로 받은 금전(용돈) 관련 .....	127
(6)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관련 .....	128
(7)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	129
(8) 논문의 이중게재관련 .....	129
(9) 정후보자 장남의 국적논란 .....	129
(10) 삼성화재 관련 문제 .....	130

### 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및 자질 등에 관한 사항 ..... 131

### 다. 주요 국정현안 및 정책과제 등에 관한 사항 ..... 132

(1) 세종시 건설 관련 .....	132
(2) 4대강 사업 .....	133
(3) 감세정책 .....	133
(4)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관련 .....	134
(5) 교육정책 .....	135
(6) 주택정책 .....	135
(7) 경제 및 금융정책 .....	135

(8) 개헌 및 행정 정책 .....	135
(9) 노동정책 .....	136
(10) 기타 .....	136
라. 공직후보자(정운찬)의 마무리 발언 요지 .....	137
마. 인사청문특별위원장(정의화)의 마무리 발언 요지 .....	139
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관련 논의경과(9월25일 제6차위원회) .....	142
사. 증인 불출석 사유 및 고발현황 .....	144
6. 첨부자료 .....	145
가. 공직후보자(정운찬) 이력서<참고자료 1> .....	146
나.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참고자료 2> .....	148
다.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참고자료 3> .....	149
라.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참고자료 4> .....	155
마. 강운태의원등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관련 국세청 답변자료<참고자료 5> .....	164
바. 공직후보자(정운찬)의 재산소명자료에 대한 강운태의원 등 민주당의원의 분석자료<참고자료 6> .....	166
사.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자료에 대한 감정의뢰 · 답변 및 해명자료<참고자료 7> .....	170
아. 공직후보자(정운찬)의 서면질의 답변서[별 첨 1]	
자. 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회의록[별 첨 2]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 심사경과보고서

2009년 9월 일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1. 심사의안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 2. 심사경과

가. 임명동의안 제출 : 2009. 9. 9.(정부)

나. 임명동의안 회부 : 2009. 9. 10.

다. 상정 및 청문일자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9. 9. 14.) 상정

제2차 위원회(2009. 9. 21.) 인사청문회

제3차 위원회(2009. 9. 22.) 인사청문회

제4차 위원회(2009. 9. 23.) 인사청문회

제5차 위원회(2009. 9. 24.)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

제6차 위원회(2009. 9. 25.)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가. 구성경위

- 2009년 9월 9일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
-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13인)가 자동 구성됨.
-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교섭단체	위 원 명
한나라당(7인)	정의화위원      권경석위원      나성린위원 정옥임위원      정희수위원      차명진위원 이해훈위원 → 정미경위원 (09. 9. 24) 정미경위원 → 손범규위원 (09. 9. 25) 정희수위원 → 김동성위원 (09. 9. 25) 정옥임위원 → 김금래위원 (09. 2. 25)
민 주 당(4인)	강운태위원      김종률위원      백원우위원 최재성위원 김종률위원 → 백재현위원 (09. 9. 25) 백재현위원 → 양승조위원 (09. 9. 25)
비교섭단체(2인)	박상돈위원      이정희위원 박상돈위원 → 이진삼위원 (09. 9. 25)

- 9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정의화 위원(한나라당)
  - 간 사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 백원우 위원(민주당)



## 나. 활동기간 : 2009. 9. 9. ~ 9. 25.(17일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2009. 9. 9. ~ 9. 20.(12일간)
  - 제1차 위원회(2009. 9. 14.)
- 인사청문회 실시 : 2009. 9. 21. 및 9. 23.(3일간)
  - 제2차 위원회(2009. 9. 21.)
  - 제3차 위원회(2009. 9. 22.)
  - 제4차 위원회(2009. 9. 23.)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견 상정
  - 제5차 위원회(2009. 9. 24.)
- 경과보고서 작성 · 채택 : 2009. 9. 25
  - 제6차 위원회(2009. 9. 25)

## 다. 회의경과

-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6차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됨.
  - 그 중 제2차 위원회(2009. 9. 21.) · 제3차 위원회(2009. 9. 22.) 및 제4차 위원회(2009. 9. 23.)는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임.
- 9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함.
  - 인사청문회의 증인 3인 · 참고인 1인을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하고 추가되는 증인 ·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간 위임하여 추가로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함.

- 9월 17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증인 1인 · 참고인 1인에 대하여 추가로 출석요구함.
- 9월 21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 정운찬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는 후,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별 주질의 7분, 1차보충질의 9분 및 2차보충질의 10분을 각각 실시함.
- 9월 22일 제3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 정운찬에 대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별 주질의 9분, 증인·참고인신문 및 1차보충질의 9분, 2차보충질의 10분, 3차보충질의 7분을 각각 실시하고, 9월 23일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위원회(인사청문회)를 계속실시하여 공직후보자 정운찬의 최종진술을 들음.
- 9월 24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함.
- 9월 25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사 경 과	비 고
1	'09. 9. 14(월) (15:09~16:03)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5. 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 건 6. 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선임 - 한나라당 정의화 위원 ○간사 선임 -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 - 민 주 당 백원우 위원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일괄상 정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 의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 결함 - 증 인 : 4인 - 참고인 : 9인 ○자료제출요구를 의결함 - 제출시한 9월 18일(15:00)	* 장 소 - 의원회관 101호실
2	'09. 9. 21(월) (10:00~22:16)	1.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 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회	○위원장 인사말씀 및 공직후보자 소개 ○공직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주질의(위원별 각 7분 배정) ○보충질의(위원별 각 9분 배정) ○재보충질의(위원별 각 10분 배정) ○공직후보자(정운찬) 답변 ○위원장 인사말씀 ○산회 선포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3	'09. 9. 22(화) (10:00~23:59)	1.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 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 문회(계속)	○주질의(위원별 각 9분 배정) ○증인·참고인신문 및 보충질의 (위원별 각 9분배정) - 증인(김진수 등 3인) 증언 - 참고인(권명숙 등 9인) 증언 ○재보충질의(위원별 각 10분 배정)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4	'09. 9. 23(수) (00:00~00:47)	1.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 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 문회(계속)	○의사일정 제1항 상정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계 속) ○공직후보자 마무리발언 ○위원장 마무리발언	* 장 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5	'09. 9. 24(목) (17:40~17:47)	1.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 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 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장 소 - 의원회관 101호실
6	'09. 9. 25(금) (11:24~23:47)	1.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2.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 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 택의 건(계속)	○불출석 증인 김동녕 고발 의결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 사경과보고서(안) 작성 ○동 보고서 채택	* 장 소 - 의원회관 101호실

## 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증인 4인과 참고인 9인을 각각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함.

### (1) 증인명단

(가나다순)

연번	성 명	직 업	신 문 요 지	비 고
1	김동녕	YES24(주) 대표이사	YES24(주) 고문재직 시 세금 탈루 관련	불출석(사유서 제출)
2	김진수	YES24(주) 대표이사	YES24(주) 고문재직 시 세금 탈루 관련	
3	박기남	율곡출판사 대표이사	인세 지급내역 관련	
4	이혜영	서울대학교 교무과 공무원	YES24(주) 관련	

### (2) 참고인명단

(가나다순)

연번	성 명	직 업	신 문 요 지	비 고
1	권명숙	주부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 제출 등	
2	김기복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주민등록 관련	
3	독고 윤	이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논문 관련	
4	박경규	병무청 공무원	병역 관련	
5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4대강살리기 사업 검증 관련	
6	변창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후보자 정책 관련	
7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 본부장	후보자 정책 관련	
8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후보자 정책 관련	
9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	후보자 정책 관련	

마.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16건

(1) 교섭단체별 요구현황

합 계	한나라당	민 주 당	비교섭단체
516	160	226	130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기 관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고
1	국무총리	150	122	28	
2	서울대학교	80	72	8	
3	대통령 비서실	1	0	1	
4	대법원	9	4	5	
5	기획재정부	3	3	0	
6	교육과학기술부	15	13	2	
7	법무부	13	6	7	
8	국방부	20	17	3	
9	행정안전부	29	28	1	
10	환경부	7	5	2	
11	노동부	3	3	0	
12	보건복지가족부	2	2	0	
13	국토해양부	21	19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3	0	
15	금융위원회	2	2	0	
16	금융감독원	11	1	10	
17	국세청	41	39	2	
18	관세청	6	4	2	

	기	관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고
19	경	찰청	28	22	6	
20	병	무청	26	24	2	
21	법	제처	2	2	0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0	
23	서울시		14	14	0	
24	경기도		2	2	0	
25	국민건강보험공단		3	3	0	
26	국민연금공단		2	2	0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1	0	
28	대한적십자사		3	3	0	
29	한국은행		7	4	3	
30	국민은행		1	1	0	
31	한국연구재단		1	1	0	
32	경제사회연구회		2	2	0	
33	Yes24		6	6	0	
34	(주)디에스 플러스		1	1	0	
	계		516	432	84	

바.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 내용 : 9인의 위원으로부터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 및 자질,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견해 등

교섭단체	위 원 명
한 나 라 당 (4인)	나성린위원      이혜훈위원      정옥임위원 차명진위원
민 주 당 (4인)	백원우위원      강운태위원      김종률위원 최재성위원
비교섭단체(1인)	이정희위원

- 국무총리(정운찬) 서면질의 답변서 [별첨 1]

사.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교섭단체	위 원 명
한나라당(4인)	나성린위원      이혜훈위원      정옥임위원 차명진위원
민 주 당(4인)	백원우위원      강운태위원      김종률위원 최재성위원
비교섭단체(1인)	이정희위원

##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가. 위원장 인사요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그 임명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가 꼭 갖추어야 될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과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국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관할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런 법적 권한과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세계위기로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세 주체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경제적 난제들을 극복해서 일단 한시름을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실용과 통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최고 사령탑인 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정운찬 공직후보자는 저명한 거시경제학자로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지방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해서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의 과거의 경력과 정책 집행 능력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회생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통할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 분들은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입니다. 국민들은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청문회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망에 어긋나지 않는 품격이 아주 높은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나. 국무총리후보자(정운찬)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새 공직후보자로서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서며 저는 지금 무한한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청문회에 임하는 저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국립대학교 총장을 거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우리 사회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덕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한 봉사로서 그것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 제가 대통령님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러한 부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망설이게 한 것은 다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능히 감당할 만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발표한 글이나 말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 나갈 뿐 아니라 내각이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비슷한 대통령님의 뜻을 살피 चु고 어두운 구석을 두 팔로 보듬고 삶에 지친 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가꾸는 데 열과 성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는 해묵은 남북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국민통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계층·세대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으로의 도약은 그만큼 늦어지고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권리와 책임이 동반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세계로, 미래로 응비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기보다 조화와 균형으로 나가야만 창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화와 균형은 학의 다리는 자르고 오리의 다리는 늘리는 것과 같은 강제적 획일이나 산술적 평등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분야는 경쟁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서민층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인 조화와 미래지향적인 균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 행정을 맡고 있을 때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지역균형선발제를 도

입하여 산간 오지와 낙도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한 것이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가정,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층균형선발제를 계획했던 것도 이러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저에 대한 임명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각자의 몫을 키우고 사회정의를 확립하여 강자와 약자의 간격을 좁히며 모두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던 학창시절부터 저는 국민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몇몇한 나라, 먹고 입고 자는 것 정도는 별걱정이 없는 따뜻한 나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무대를 주도해 나가는 똑똑한 나라를 마음 속에 그려 왔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바른 사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밝은 사회, 배경과 학벌보다 신용과 성실로 승부하는 밝은 사회를 열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청년실업 문제부터 각박한 서민생활, 과도한 사교육비, 노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불안한 국제경제와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까지 실로 버거운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저에게 총리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겠습니다.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100년, 200년이나 걸려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한 위대한 나라, 저력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0만 명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하는 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회하는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6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입니다. 5000만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이 시대, 이 땅의 영웅이요,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특별한 업적을 남긴 교과서 속의 위인들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며 모은 것을 나누어 주고 몸을 낮추어 봉사하는 분들이 모두 위인이요, 성인입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직원들의 밥을 챙기는 크고 작은 기업인들,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인들, 한여름 띄약벌과 한겨울 삭풍도 마다하지 않는 농부와 어부들, 단잠을 떨치고 일터로 나가는 셀러리맨과 거리의 환경미화원들, 밤낮이 따로 없는 연구원과 기능공들,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과 민주주의를 꽃피운 시민들,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이 땅의 희망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총리로서 봉사하는 기회를 국회에서 제공해 주신다면 바로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성공 스토리를 함께 쓰는 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일 작정입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고 국회를 국민의 대표로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을 위해 총리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꿈을 심어 드리는 국민희망본부,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대통령님의 비전을 설명하는 국가경영지원본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책서비스본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도약의 기회인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의 티끌은 대들보처럼 보면서 저의 눈의 대들보는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대학 강단에 서 있었 으면서도 남을 가르치기에는 수양이 부족했고 남을 비판하기에는 수신이 미흡하지 않았나 제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찰과 각오를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정과 편달을 바로 국민의 말씀으로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고 가  
슴 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후보자에 대한 주요질의 · 답변요지

### (1)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답변요지
<p>【 병역 관련 】</p> <p>○ 장인은 66년도 당시 병무국장, 68년도에는 2군 부사령관, 69년도에는 5관구 사령관을 하셨으며, 이때는 후보자가 병역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음. 인정하는지?</p> <p>○ 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장인이 66년도에 돌아가셨다고 되어있는지?</p> <p>○ 67년 후보자의 장인과 만난 분이 "당시 병무국장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해외 출국을 허가받지 못한 자신을 즉석에서 내보내 줄 정도였다" 이런 말씀 보도된 적 있는데 들어 보셨는지?</p> <p>○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고령인지?</p> <p>○ 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부선망 독자로 면제받았다고 나와 있는지?</p> <p>○ 70년 12월 15일, 마이애미 대학 입학원서 작성 당시에는 후보자가 보충역이 될지 안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던 상황임. 후보자는 왜 마이애미 대학의 입학원서에 '나는 병역이 면제되어 있다'고 썼는지?</p>	<p>○ 장인의 경력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름. 군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1973년에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국방부 병무국에서 일하셨다고 하는 경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저기 야전 사단장 또는 사령관도 한 걸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음.</p> <p>○ 장인께서 돌아가신 년도는 2000년인 것 같음. 실무자의 실수임. 66년도에 돌아가신 것은 저의 양부이심.</p> <p>○ 못 들어 봤음.</p> <p>○ 결과적으로 그러함. 나이가 들어서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쪽 연기받을 수 있다가 어떤 연령에 도달한 것임.</p> <p>○ 결과적으로 31세에 면제를 받았지만 31세까지 계속 소집 연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선망 독자 때문이었음.</p> <p>○ 영어를 못 해서 그랬건 어떤 뜻으로 했건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를 드림.. '해당사항 없음', 또는 'non applicable'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본인이 그냥 'I wa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잘못 쓴 거라고 말씀드리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이야기 인가?</li> <li>○ 70년대 미국은 징집제로 병역을 운영하고 있어 신입생들에게 ‘병역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았고, 후보자는 미국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I’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유학 입학허가신청서에 이런 질문이 있는가</li> <li>○ 후보자는 한국은행 근무 당시 외환관리부에서 근무했음에도 입학원서의 영어 의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li> <li>○ 마이애미 입학신청서에 면제라고 쓴 것이 병역 연기에 영향을 주는가</li> <li>○ 마이애미 대학교 입학 당시 영어 표현 애기가 나오는데 면제, 소집 연기, 해당사항이 없음 중 어떤 것을 쓰는지에 따라 마이애미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여부</li> <li>○ 당시 유학생 여권의 발급 요건은 유학시험 통과와 병역필임 만약에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면 병무청이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때 보증인을 세웠는가</li> <li>○ 통지서가 없었고 만약에 통지서를 보냈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병역의무를 필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군대는 해당 안 되고 한국 군대는 부선망 독자로서 보충역으로 되면 계속 소집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그렇게 썼음.</li> <li>○ 그러함.</li> <li>○ 징병제가 없어지고 모병제가 되었으므로 지금은 없음</li> <li>○ 죄송하고 잘못했음</li> <li>○ 전혀 주지 않음</li> <li>○ 거의 문제가 안 됨. 게다가 초청받은 것임.</li> <li>○ 본인의 기억이 맞다면 총리를 하셨던 이현재 선생님이 해 주셨음.</li> <li>○ 그것과 관련해서 이현재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과태료를 안</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않으면 당연히 보증인 섰던 분을 과태료를 매겼을 것임. 그런데 과태료를 이현재 전 총리 쪽으로부터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음.</p> <p>○ 76년에 유학이 끝났을 당시에 입영통지서가 왔었는지?</p> <p>○ 유학 도중에 입영통지가 날아오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귀국할 생각이셨는지?</p> <p>○ 7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몰라서 귀국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귀국 안 했다가보다는 귀국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때문 아닌지?</p> <p>○ 결혼을 73년에 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72년 10월 30일에 되어 있음</p> <p>○ 부선망 독자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67년이 맞으나 이에 대하여는 병역이 6개월 보충역으로 줄어들고 징집을 한 번 연기할 수 있는 혜택밖에 없음. 양자로 입적할 당시 병역이 소위 6개월 방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양자로 입적했다고 추정되어짐. 즉, 후보자는 부선망 독자가 되든 안되든 양자로 입적하면서 6개월 방위로서의 병역 혜택은 받게 되는 것임</p> <p>○ 부선망 독자로 인해 병역이 계속 연기되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령으로 연기되었다, 이것이 후보자의 주장인데 76년도 병역법 제44조에 의하면 부선망 독자는 연기만 할 수 있고 면제는 불가능하며 그것도 나이가 23세까지만 연기가 가능함</p> <p>○ 양자 입적은 병역 연기와 무관한가</p>	<p>내셨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보임.</p> <p>○ 연락을 못 받았음.</p> <p>○ 그럴 생각이 있었음.</p> <p>○ 그것은 아님.</p> <p>○ 처가에서 미국을 보내려고 혼인신고를 미리 해 놓은 것 같으며 결혼은 73년 6월 23일에 했음</p> <p>○ 그것은 모르겠지만 71년 출국할 때 국방부 허락을 받고 나갔음</p> <p>○ 절대 무관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는 '부선망 독자'라는 이유로 병역이 연기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지하였음. 그것은 면제사유가 아님. 한번에 걸쳐서 연기는 될 수 있지만 면제사유가 될 수는 없음을 인정하는지 여부</li> <li>○ 언론보도나 야당의 지적에 의하면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징집 연기의 목적으로 숙부의 양자로 입적했으며,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다가 고령으로 소집이 면제되었다고 함. 양자입적시기? 양부사망은? 첫 신체검사는? 징집 연기 신청은? 징집 연기 사유는?</li> <li>○ 병역법 개정으로 부선망독자의 징집연기 혜택을 준 것은 67년이고, 양자 입적은 65년이므로 양자입적과 부선망독자의 혜택을 받은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li> <li>○ 대학재학 중 징집 연기혜택을 위해 양자 입적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인가?</li> <li>○ 2차 신체검사는 70년에 했는가? 유학은 언제 갔는가? 유학 갈 때 병무청장 허락을 받고 갔는가? 허가한 내용은 부선망독자는 허가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는가? 유학은 합법적으로 갔다는 말인가?</li> <li>○ 양부는 언제 사망하였으며, 모친은 누가 부양하였는가?</li> <li>○ 학비는 어떻게 조달하였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할 수 없음. 만약에 부선망 독자가 아니었다면 68년에 징집연기가 안 됐을 것임</li> <li>○ 입적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인 1965년, 양부는 양자 수속 이후 얼마 안돼서 사망하였으며, 첫 신체검사는 1966년에 했음. 징집 연기 신청은 66년에 신체검사를 받고 67년에 보충역을 배정된 후 68년에 징집영장을 받았음.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으로 갔으나, 징집관이 본인의 서류를 본 후 본인은 군대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li> <li>○ 관계없음.</li> <li>○ 그러함. 본인은 항상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음.</li> <li>○ 2차 신체검사는 70년에 하였고, 유학은 71년 8월에 갔음. 병무청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만 25세가 되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할 때,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부선망 독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었음. 유학은 합법적으로 갔음.&lt;</li> <li>○ 양부는 66년에 사망하였으며, 생모는 저를 키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였고, 양모께서는 고향에서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사셨음.</li> <li>○ 중학교 1학년부터 가정교사를 하였음. 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입주가정교사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형편은 모친이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 이었고, 본인은 고학으로 학업을 계속했다는 말인가?</li> <li>○ 정리하면 후보자는 병역 연기를 신청한 그 사유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였고, 부선망독자라고 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신체검사를 한 이후에 제도가 생겨서 부선망독자의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진 것이지 후보자는 입적할 당시는 전혀 이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입적하게 된 것이므로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인가?</li> <li>○ 생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을 때, 작은아버지가 더 빨리 사망할 확률이 높은가? 작은 아버지가 빨리 사망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어떤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li> <li>○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으면 부선망독자 규정을 이용하려고 굳이 양자로 갈 필요은 없는 것 아닌가?</li> <li>○ 자서전에 따르면 후보자는 모친이 73년도에 사망하셨는데도 몰라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학생일 때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교수가 된 다음에도 어머니 묘소한 번 찾아보지 않았는가</li> <li>○ 후보자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두 번이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나</li> <li>○ 병역 기피 의사가 있었나</li> <li>○ 71년도에 유학을 갈 때 기왕이면 6개월 방위를 마치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가</li> <li>○ 유학을 갈 때는 병역에 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갔다 와서 병역을 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것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함.</li> <li>○ 그러함.</li> <li>○ 본인의 아버지는 1953년에 사망하셨고, 작은아버지는 1965년에 사망하셨음.</li> <li>○ 본인의 부친은 아들이 둘이었음. 본인의 형은 군대를 다녀왔음.</li> <li>○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한참 지나 알게 되었고, 1970년대의 비행기표는 아주 비쌌기 때문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음</li> <li>○ 66년과 70년에 두 차례 했음</li> <li>○ 없었음</li> <li>○ 방위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고 동기들 중 처음으로 미국을 가게 된 것인데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가게 되었음</li> <li>○ 그러함</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대학에다 허위로 병역사항을 기재한 이유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기 위한 여권과 비자를 얻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당시 여권과 비자의 발급요건이 무엇이었는가</li> <li>○ 만약 컬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병역 연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병역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li> <li>○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마쳐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병역당국이 입영대상자의 상황, 유학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취업이 됐는지 안됐는지와는 상관없이 유학생 집으로 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지서를 받았는가</li> <li>○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후보자는 “나는 병역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한국은행 입사 당시부터 유학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된 도피성 유학이 아니라 입사 때부터 유학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이게 과거 상사의 말인데 사실인지 여부</li> <li>○ 한국은행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유학 준비를 한 것으로 과거 상사는 얘기하고 있는바 확인 요청</li> <li>○ 본인의 병역 문제 때문에 당시의 병역법 시행령이라든지 병역법을 확인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유학을 가려면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유학시험을 패스하고 미국 대학에 입학지원서를 보내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두 서류를 가지고 유학허가서를 받았음</li> <li>○ 병역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li> <li>○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음.</li> <li>○ 저는 군대 안 간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군대 안 간 것이 잘한 것처럼 보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li> <li>○ “유학 가서 공부 더 하고 올 재목이다”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 했음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참 어렵겠구나’ 하고 있었음. 조순 선생님이 “공부 더 해야 한국은행에서라도 일할 수 있지,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학부 4학년 수준으로 끝나네. 미국 유학 갔다 오지” 라고 권유해서 유학을 가게 됨.</li> <li>○ 유학 준비하다가 국사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였음</li> <li>○ 확인하지 않았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을 것인데 후보자의 소감요청</li> <li>○ 항간에 '지금 대통령도 병역면제자이고 또 국무총리 되실 분도 병역면제자인데 분단 국가고 국가 안보가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 의견</li> <li>○ 아무런 병역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입학과정에 군이 면제된 게 아니라 연기됐다 써도 입학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해명 요구</li> <li>○ 73년도 이후 장인께서는 충주비료 이사 또는 남해화학 부사장임. 공기업인 남해화학 부사장 정도가 아무리 미국 왕복 비행기 값이 비싸다고 해도 귀국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대한 해명.</li> <li>○ 70년도에는 다시 연기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임. 23세 나이 제한에도 걸리게 됨. 부선망 독자는 1회에 걸쳐서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기가 끝나신 거고 재학생 규정으로도 연기가 안 되시는 것임</li> <li>○ 그다음부터는 후보자가 병역을 연기하는 사유는 유학에 의한 병역의 연기임. 그건 인정하는가</li> <li>○ 후보자는 76년도에 유학을 마쳤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 다른 동료들과 같이 군복무를 하고 싶었음 군복무를 안한 것은 지금까지도 늘 미안함. 양자 문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시려고 그러신지, 돌아가시기 전에 양자 수속을 하려고 그러셨는지 그냥 갑자기 양자 수속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해에 돌아가신 것임.</li> <li>○ 별 대답할 것은 없음</li> <li>○ 아까 질문하시기를 '대학 나오고 한국은행 들어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것조차 못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영문 공문을 처음 본 상황이라 그렇게 됐음</li> <li>○ 처가에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음.</li> <li>○ 법률적 지식이 확실치 않음</li> <li>○ 예.</li> <li>○ 안 마쳤음.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유학을 마치는 것임</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후보자의 신분이 그때가 무엇이었는데지 답변요청</li> <li>○ 그러면 취업자인 것인가</li> <li>○ 유학생이 아닌 것인가</li> <li>○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라고 하는 병무청서에 의하면 1년 내에 통상 60일 이상의 급료를 받는 사람은 영리활동을 하는 자고, 영리활동을 하는 자는 당장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음. 후보자는 병역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취업자의 신분이므로 병역법 제82조 도망에 의해서 병역을 면한 자가 되는 것임.</li> <li>○ 71년 병역법 제19조에서는 국외거주로 인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는 징집순서에 있어서 우선하여 징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 징집이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가?</li> <li>○ 그렇게 생각해서 혼동이 되는 것임. 징집이란 징병검사를 의미함. 후보자는 의가사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23살까지 연기를 하였고 24살이 되던 1970년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징집에 응한 것임. 이미 징병검사를 한번 연기해서 23살에 받았고 그 다음에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유학생 신분으로 입대가 연기된 것임.</li> <li>○ 남들은 3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함. 후보자는 부선망독자의 혜택을 받아서 6개월 밖에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인데 해외유학 간다고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 후보자가 한국은행에서 1년 6개월이나 근무를 하는 동안 군입대를 하지 않</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기에서 F 갖고는 일을 못 해서 H로 그냥 바꿔 주었던 것임</li> <li>○ 예.</li> <li>○ 아직도 박사학위 논문을 못 끝냈던 상태였음</li> <li>○ 나중에 또 답변 기회가 있으면 하겠음</li> <li>○ 군대 오라고 해서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li> <li>○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70년대에는 병역미필자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병무청 허가가 있어야 했음.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여권을 받은 것임.</li> <li>○ 우선 6개월짜리 방위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으며, 두 번째로는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함.</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은 것은 후보자가 근대를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병무청에서 인위적으로 기피를 하는 것을 용인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둘 중의 하나에 속하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p> <p><b>【YES24 고문직 수행 등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b></p> <p>○ yes24의 고문직이 과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임.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직무라 함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봄. 첫째는 그 직무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됨. 두 번째는 직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 다음에 보수 문제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공무원법상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 부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기를 바람.</p> <p>○ 후보자는 YES24 라고 하는 민간회사 영리업무, 겸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임. 22개월 동안 매달 월 급여로 1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은 서울대 교수로서 받는 후보자 급여의 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p> <p>○ YES24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후보자는 소득신고 안했으며, 인사청문회 앞두고 9월 15일자로 소득을 수정 신고 해서 세금 4326만 원 냈음, 그렇지 않나?</p> <p>○ 후보자는 YES24 를 홍보하면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정운찬 교수님의 쓰신 책들' '정운찬 교수님의 추천도서' 등 후보자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음.</p>	<p>○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첫째, 권한과 책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직무의 연속성은 하나도 없었는데 보수는 받았음. yes24 기록에 따르면 매번 보수를 정할 수 없어서 그냥 1년에 얼마 주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음. 그런데 편의상 월별로 나누어서 준 것 같음.</p> <p>○ 사례를 받은 일은 있으나 급여로 받지는 않았음.</p> <p>○ 4,326만원 전부가 YES24 때문인 것은 아님.</p> <p>○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을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24 의 고문직을 맡을 당시 총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하였는가</li> <li>○ 급여를 계속 받은 것은 그게 고문료가 되었던 급여의 형태가 되었던 영리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li> <li>○ YES24 는 서적, 화장품, 선물 등을 팔기고 하지만 인터넷 사교육업체이기도 함. 인터넷 서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본격적인 역점 사업으로 인터넷 사교육에 진출하게 된 시점에 후보자가 YES24 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하고 자문도 한 것인데 이는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의 양자로 간 케이스임</li> <li>○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은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YES24 겸직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li> <li>○ 선의에 의해 YES24가 좀 더 건실하고 공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광고모델을 한 것이고, 연간 4,000만원, 5,000만원 수준의 돈을 받은 것은 서민의 심리와 괴리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소한 장학금을 주겠다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li> <li>○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지침은 03년 3월 21일에 만들어졌고 그 규정에 의하면 사외이사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동료들의 관행을 보고 받지 않아도 되겠거니 했음</li> <li>○ 급여가 아니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므로 동의할 수 없음</li> <li>○ YES24 를 인터넷 서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사업 다각화 과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음. YES24 가 어디인지도 모르며 취업을 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li> <li>○ 제의가 왔을 때 좋아하는 책을 보급하고 교육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저 없이 허락한 것임.</li> <li>○ 스코필드장학기금에 2,000만원을 낸 적은 있음</li> <li>○ 규정 확인은 해보지 못했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확인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직무의 특징은 첫째, 권한과 책임 부여, 둘째, 직무의 연속성 보장, 셋째, 보수인데 이 세 가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문제 아닌가</li> <li>○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에 질의를 한 결과 단순한 조언이나 자문 활동은 겸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음.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하셨는지? 다만 대학의 장이 판단할 그런 사유로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지?</li> <li>○ YES24 말고 급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자문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인지? 그냥 무료자문이나 아는 관계이고 또 도와주고 싶어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지?</li> <li>○ 영리기업에는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보수나 자문료를 안 받더라도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제의를 받거나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지?</li> <li>○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국가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을 분명히 금지하고 제26조는 비영리행위 겸직은 허가사항임.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영리행위 겸직을 사외이사에 한해서 허가받고 가능함. 단순히 위법이다 이렇게 시인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데 대한 후보자 의견</li> <li>○ 예스24에는 절대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과 책임과는 거리가 멀고 직무의 연속성은 하나도 없었는데 보수는 받았음</li> <li>○ 확인했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함.</li> <li>○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우선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전부 사직을 했습니다만, 여기 총리 지명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청암재단이라고 있음. 거기에서 이사를 했음. 거기는 허락을 받고 했음, 이사 자리기 때문에.</li> <li>○ 그런 관계는 없음.</li> <li>○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그렇겠지요' 하고 답변했습니다만 저는 결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님</li> <li>○ 근로자로서 고용됐다고 생각하지 않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하는 것인지</p> <p>○ 돈을 받으신 것은 인정하는 것인가?</p> <p>○ 오전에 보여 드렸던 급여명세서에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아는지 여부</p> <p>○ 자문료나 강연료 받으실 때 보험료 내고 그러는지 여부</p> <p>○ 후보자가 22개월에 9583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총 6건의 야구 관람하고 야구 관련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시상식하는 등 6건의 활동을 하면서 9583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에게 왔는지, 이 명세서는 무엇인지, 이런 것 전혀 확인 안하고 이 금액의 돈을 수령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과외수입이 너무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는가</p> <p>○ 제주도의 강 교수 같은 경우가 무보수로 교수들을 위한 교수아파트 짓는 데 대표이사를 했음. 한시적인 회사에 무보수임.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해석은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총장 취임을 불허함. 후보자에 비해서 제주도의 강 교수 문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덜 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요청</p> <p>○ 제주대 강 교수의 경우는 지금 후보자보다 겸직금지 위반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는 의미인지 여부</p> <p>○ 겸직금지 조항을 강 교수는 적용할 수 있고 후보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하는가</p> <p>○ 78년 12월까지 컬럼비아대학 조교수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p>	<p>○ 그러함.</p> <p>○ 그건 전혀 몰랐음</p> <p>○ 아니요, 얼마 떼고 줘서 그냥 원천징수 한 줄 알았고 있었음</p> <p>○ 급여대장을 본 적도 없고 받아 본 적도 없음. 급여명세서라면 본인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됨. 회사 회계상 어떻게 처리됐는지 몰라도 결코 급여로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음</p> <p>○ 주식회사 프로빌이라는 데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했고 또 프로빌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을 한 것임.</p> <p>○ 업종이 다르고 직책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임</p> <p>○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p> <p>○ 법적으로 그러함. 1978년 8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귀국했음.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대</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컬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이 증명서에 의하면 78년 12월까지 하신 것으로 청문회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맞는지? 이때 78년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컬럼비아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으셨는지?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으셨는지?</p> <p>○ 컬럼비아대학의 교칙을 찾아봤음. 85년도 교칙이라서 그 당시에 78년도에 바로 이 교칙이 적용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음. 이렇게 되어 있음. "교직원은 학년도 내에 타 교육기관에서 교수행위를 할당받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컬럼비아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규정임.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오셔서 시간강사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시간강사를 하실 때도 급료를 받으셨을 건데 컬럼비아대학 규정을 보면 금하고 있음.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내 주시기를 바람.</p> <p>○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단순히 자문을 한 것이므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답변을 하였는데, 자문을 했다면 봉급이 아닌 자문료를 받았어야 함. 봉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p> <p>○ 봉급을 받고 예스24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이고, 정규직으로 봉급이 나간 것이므</p>	<p>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사로서 한 것임. 아직 서울대학교에 고용당하지 않았음. 그러다가 12월 7일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조교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컬럼비아대학교 조교수 자리가 그 날짜로 없어졌음.</p> <p>○ 계약을 대개 1년씩 하니까 재직기록은 되어있으나, 안 받았음.</p> <p>○ 교칙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저보고 어디 가서 잠시 휴직하라고 허용했던 걸로 기억함. 휴직을 했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정도는 미국 대학에서 굉장히 신축적이라고 생각함.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면 보내 드리겠음.</p> <p>○ 알고 있음.</p> <p>○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줄 때,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연 얼마씩 주기로 했던 것</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로 정운찬 후보자는 당시 직업이 2개인 것임. 서울대 교수이고 예스24에 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원이었던 것임. 자문은 기타 수입은 자문료라든가 강연료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운찬 후보자의 급여 대장도 있음</p> <p>○ 예스24 관련 건에 대하여 대학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사무국에 질의했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p> <p>○ 후보자가 총장 재직 시절 결재를 한 겸직 신청한 교수들은 전부 봉급 받지 않았던 교수였고, 따라서 규정을 몰랐으며, 사무국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서울대 총장으로서 직접 결재한 분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음. 정운찬 후보자가 총장 하기 전 이기준 서울대 총장은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로 4년 동안 1억원을 받아서 중도하차 하였으며, 제주대 강지용 총장 후보의 경우에도 같은 사유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정운찬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는가?</p> <p>○ 서울대 규정에 벤처기업의 임원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 예스24의 고문이라 하였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야구 관람, 야구 인터뷰, 저자 사인회, 축하 등 총 6건 외에는 오지를 않았음에도 1억원 가까운 돈을 수령한 것은 불로소득 아닌가?</p> <p>○ yes24 급여대장을 언제 보았는가?</p>	<p>임. 1년의 수당을 12번으로 나누어준 것에 불과함.</p> <p>○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p> <p>○ 사외이사와 고문은 다른 것임. 사외이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문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p> <p>○ 임원이 등재임원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p> <p>○ 당초 사외이사를 맡아 달라고 했으나 사외이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고문으로 되었음. 고문료에 대하여 의논한 적도 없고 얼마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한꺼번에 다주는 것보다 편리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함.</p> <p>○ 본 적이 없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자료를 점점 안하고 보낸 것인가?	○ yes24에서 바로 보낸 것이라고 함.
○ yes24에서 급여대장 직접 왔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인가?	○ 총리실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을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음.
○ YES24라는 회사의 고문직을 하면서 수당을 열두번으로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적이 있는가?	○ 말씀드렸음.
○ 후보자는 급여명세서를 청문회 이 순간에 봤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 그러함.
○ 후보자는 YES24 고문료가 수당으로 처리 안되고 급여로 처리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것인가?	○ 어제 처음 봤음.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음.
○ 후보자는 최소한 2007년 12월 연말정산 때 혹은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YES24 고문료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 인정하는가?	○ 몰랐음.
○ 후보자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YES24에서 받은 돈을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음. 아닌가?	○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나 세무대리인이 처리해 준 것임.
○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YES24에서 받은 돈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서 9월 15일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가?	○ 있음.
○ 9월 15일 세금을 납부했을때, YES24에서 받은 고문료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가?	○ 기억이 안남.
○ 기업의 존립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리활동이고 이윤추구 아닌가?	○ 동의함
○ YES24는 코스닥 상장주식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 알고 있음.
○ 후보자 주장대로 하면 고문직은 수락하고	○ 동의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일정 금액으로 자문료를 받기로 했음. 결과적으로 YES24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닌가?</p> <p>○ 그렇다면 후보자는 YES24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것이고, 영리활동을 한 것임.</p> <p>○ 총리실에서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특위 요구자료에는 후보자가 YES24에서 받은 돈이 근로소득이라고 시종일관 증명되어 있으며, 또한 9월 15일, 일주일 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탈루를 수정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음. 후보자는 영리행위를 한 적도 없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p> <p>○ YES24에서 받은 자문료, 자문할 때마다 별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원 넘는 돈이 입금됨에도 불구하고 내정자는 소득세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회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매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대응하여 답변해주기 바람.</p> <p>○ 후보자는 총리 내정 직후까지 자사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음.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았던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직후까지 자립형 사립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맞는가?</p> <p>○ 이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아주 절친한 김승유 한화금융지주회장이 서울에 짓고 있는 자사고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나고 법인 이사 이력을 빠뜨렸는데 고</p>	<p>○ 본인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단숨에 받았음.</p> <p>○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함.</p> <p>○ 본인이 자세히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 회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은 상당히 많이 했음.</p> <p>○ 인정함.</p> <p>○ 별 뜻이 있는 것은 아님. 몇 개월 안한 거라 뻘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의가 있는 것인가?</p> <p>○총리후보자 지명 직후까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법인의 이사로 활동했던 점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함. YES24 고문직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 겸직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함.</p> <p><b>【삼성화재 관련 문제】</b></p> <p>○후보자는 삼성화재의 비공개 자문위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p> <p>○삼성측으로부터 비공개 자문위원의 제안을 받은적도 없는가?</p> <p><b>【재산등록 누락 관련, 가계수지】</b></p> <p>○후보자의 가계수지 상황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입이 지출보다도 오히려 4200만 원이 적다, 지출이 더 많다 하는 점, 지출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이 줄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야 되는데 부동산 팔지도 않고 금융자산은 오히려 늘었으며, 최소한으로 따져서 대략3억 6000만 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4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음. 그렇다면 뭔가 별도의 수입원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됨.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그런데 금융자산은 늘어, 도대체 별도의 수입원이 무엇인지?</p> <p>○지난 3년 동안에 4억 가까운 돈이 뭔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산을 명백히 하셔서 주시기 바람.</p> <p>○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외국에서 강연을 했다거나 세미나를 했다거나 해서 수입이 상당히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p>	<p>○하나학원 이사직은 겸직 허가를 받은 것임.</p> <p>○본인은 삼성의 자문위원을 한 일은 없음.</p> <p>○아주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제안은 있었던 것 같음.</p> <p>○위원님이 제시하신 금융자산 증가액과 수지 적자액은 제가 3년간 지출총액 중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이 상당 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중첩되어서 지출이 중복 계산된 것 같음.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은 금융재산 증가 부분과 지출 부분에 이중 계산되어 있어서 지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함.</p> <p>○그렇게 하겠음.</p> <p>○그것을 양국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상대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음. 이번 청문</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위원의 계산에 따르면 후보자의 별도 수입이 3억 6,200만원 존재하고, 후보자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입이 지출보다 4억 5,900만원 많은데, 본 위원이 만든 서류와 후보자가 만든 서류 두 개를 국세청에 보내서 마지막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세청에서 어떤 서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증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li> <li>○ 인지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590만 원밖에 안되고 2004년도 인세 수입이 2150만 원임. 그것을 각종 비용 다 신고해도 소득신고 할 때는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맞지 않음. 다른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도 마찬가지임</li> <li>○ 배우자의 화실 보증금도 신고를 안했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 임명동의안에도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인세 1억 5000만 원 중에 서울대 총장 재직 기간 동안에 7980만 원, 즉 8000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배우자 미술품 약 5900만 원 이런 등등을 합하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음</li> <li>○ 서울대총장 재직 시에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7,985만원의 인세수입을 재산신고에 누락시키지 않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 준비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산정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완료하고 오늘 아침에 세금을 냈음.</li> <li>○ 위원님과 저의 분석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동안 연구비 등 사업수입을 지출해 온 관행으로 볼 때 이중계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li> <li>○ 인세 수입을 재산 신고하는 것은 과거 것도 전부 써냈더니 최근 것만 써 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임</li> <li>○ 그림을 팔기 전에 그 그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었음</li> <li>○ 서울대 총장 재직 시, 지적 재산권 관련 인세는 신고된 예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신고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음. 당시 행안부에 명시적인 지침은 없었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공직후보 재산신고에는 별도로 신고하였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신고 누락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임. 총장 재직시절 7,985만원 인세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신고하지를 하지 않았음.</li> <li>○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가 서울대총장 재직시절 7,980만원의 인세수입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후보자 배우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다만, 배우자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기 때문에 재산신고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해 왔음. 맞는가?</li> <li>○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아호에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을 재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그린 작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7,980만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li> <li>○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한 사안임.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li> <li>○ 내정자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교수월급이 약 1억원, 그 밖에 강의료, 자문료, 인지세, 용역 수입 등이 있지 않은가?</li> <li>○ 지출은 기억나는가? 2008년의 경우 신용카드만 한달에 1,000만원 이상씩, 부부 간에 1억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장남의 경우 수입은 연간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만 8,000만원 이상 사용하였음. 본인이 국회에 냈던 서류, 국세청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꼭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면 제 실수임. 당시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침은 없었음.</li> <li>○ 그림이 재산인지도 몰랐음.</li> <li>○ 알고 있음.</li> <li>○ 법에 그렇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함.</li> <li>○ 동의함.</li> <li>○ 가장 커다란 것은 예금의 증가임.</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관보 등 공식적인 자료로 분석한 ‘정운찬 후보자 가계수지 분석’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후보자 가족 전체의 수입은 대략 9억원인데, 지출은 9억 4,300만원으로 지출이 더 많았음에도 금융 자산은 3년전에 비하여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종합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이 최소한 3억 6,000만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여기서 지출이란 것이 공식적인 지출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임. 경조사 비용 등 나와 있지 않은 활동비를 감안하면 4억원보다 훨씬 더 넘게 됨.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은 어떤 것인가?</p> <p>○ 3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금액이 비어있는데, 이것은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세금을 절세 또는 탈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제3의 수입원이 있든 이 세가지 중의 하나로 보이며, 따라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임.</p> <p>○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음. 오늘 오전까지 해명자료를 줄수 있겠는가?</p> <p>○ 후보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예금이 증가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최소한 3억 6,2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로 설명을 했음. 첫 번째는 외국 강의료 또 세미나 비용 등이 신고가 안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배우자의 그림 판매한 것, 세 번째는 Y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 그리고 덧붙여서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하고 필요경비 사용분하고 이중으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음. 이중 계산에 대하여</p>	<p>○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음.</p> <p>○ 그렇게 하겠음.</p> <p>○ 제시하신 금융자산 증가액과 수지적자액은 본인이 3년간 지출 총액 중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이 상당 부분 신용카드와 중첩되어 중복 계산된 면이 있음.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은 금융자산 증가부분과 지출부분에 이중 계산되어 있어서 지출액에서는 제외시켜야 함.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강연료며 세미나료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국세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였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는 현행 세법을 보면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공제받는 등 이중으로 공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음.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함. 따라서 필요경비 부분하고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다른 계산을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3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음. 세가지 의문이 있음. 첫 번째는 외국이나 국내에서 인세나 강의료 등의 수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두 번째는 Y회사 이외의 제3자로부터 다른 돈을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수입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해명해주기 바람.</p> <p>○ 해외수입이 1억 이상 있었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 약 6,600만원이 됨. 그것도 필요경비로 제하면 종합적으로 3억 이상이 설명이 안됨. 전문가를 대동하고 분석해서 내일 청문회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p> <p>○ 후보자의 재산 증감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서울대 총장 퇴임후 9월 신고때까지 총 6억 3,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부동산이 3억 5,000만원, 예금이 3억 5,000만원, 부채가 6,800만원임. 부동산은 소득세법 기준시가가 건교부 공시가격으로 바뀌어진 것 때문에 재산 가치만 증가한 것이고, 예금에서 부채를 뺀 증가액은 2억 8,000만원 정도가 됨.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가족 3년간 평균 수입은 약 2억 9,000만원 되는데, 이 중 세금 납부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해서 약 1억 5,000만원 지출을 했음. 세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면 연평균 약 1억</p>	<p>○ 그렇게 하겠음. 또한 Y회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은 것은 인정하나, 수익원을 제3자로부터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셔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림</p> <p>○ 별로 없음. 다만 본인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 왔으나,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아, 제가 남한테는 비판적이고 저한테는 관대했다.’하는 것을 배웠음. 먼저 외국에서 연구비를 받거나 강의해서 수입이 있었던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으며, 두 번째는 본인의 잘못이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일을 부탁해서 YES24에서 받은 소득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못한 것, 그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몇백만원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 지금 스스로 반성하고 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2,000만원이 남고 있음. 이 중 생활비 등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연평균 9,600만원의 실질 재산이 증가했는데, 이걸 3년간 합계를 하면 약 2억 8,000만원이 됨. 해외에서 강의하고 받은 금액까지 더하면 의혹이 제기된 3억 6,000만원에 대한 해답이 됨. 여기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가?</p> <p><b>【Y모자 등 청렴의무위반】</b></p> <p>○ Y모자 주식회사의 회장이 용돈을 간혹 간혹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또 후보자에게서는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부인하는지?</p> <p>○ 흔히 말하는 공직자의 포괄적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2대 요소임. 교수가 자문한 내용이 과연 직무 관련성이냐, 또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대방부터 돈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례들이 보도되면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서 고운 눈초리로 보지를 않음.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들 만약에 총리로 취임하시면 깊이 챙겨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될 것임.</p> <p>○ ‘서울대총장이 궁핍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다는 말이나. 아사자라는 말이나’, 그런 자괴어린 국민들의 이야기가 돈다고 함. 객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었고 또 평소에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p>	<p>○ 그것도 사실과 다름. 제가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에 걸쳐서 가서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은 있음. 두 번에 걸쳐서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됨.</p> <p>○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림. 그 돈은 굉장히 큰돈임. 저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냥 옳김으로써 마치 그게 적은 돈인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인식을 줬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림.</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헤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듬.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다독이거나 국민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면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 후보자께서는 작년의 경우에 한 달에 신용카드만 1000만 원 이상, 1년에 1억 2000 이상 쓰셨는데, 작년에 그러함. 작년에, 그 외국에 사실 때에, 재작년에도 말하자면 한 달에 1000만 원쯤 쓰셨음. 그 Y회사의 회장이 돈을 주면서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궁핍하게 사셨는지?</p> <p>○ 기록을 보면 서울대 총장 되실 때 D그룹 오너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p> <p>○ 대만 국립대학에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 가서서 자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문료 2000불 받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학에서 2000불을 받으셨는데, 이 서울대 대학에서 출장을 가시면서 여비를 또 받음.</p> <p>○ 외국의 학교나 단체, 기업에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를 받은 일이 있는가. 기록을 보면 대만 국립 청쿵대학교에서 자문을 해 주고 2006년 6월 5일에 2,000달러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p> <p>○ 대만 출장 시 서울대 총장으로서 대만 출장 여비를 1,139만 50원 받은 적이 있음</p> <p>○ Y모자 회장께서 신동아에 '공개석상에서 정운찬 총장께서 회장 등의 도움으로 서울대 총장이 될 수 있어 그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후보자가 발언을 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음. 그러면 이 도움이라는 것이 후보자가 표현한 대로 1표의 도움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p>	<p>○ 그건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생활도 방탕하게 하는 것도 아님.</p> <p>○ 전혀 사실무근임. D그룹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음.</p> <p>○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으나 인정함</p> <p>○ 그분이 아마 그 당시 70세이고 운영하는 회사가 50주년 되는 기념 모임이 있었음. 덕담 중의 하나에 제가 '우리 백 회장이 훌륭한 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서울대 학 총장 시절에 일부러 대학병원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석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 만드는 회사 Y사의 회장에게 1,000 만원을 받은 시점은</li> <li>○ 후보자는 활동이 다양하여 기업체 사장들 하고도 친근하다고 하는데 Y사의 회장한테만 받은 것인가</li> <li>○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업체 회장으로 부터 두 번에 걸쳐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증여세를 포탈한 것임</li> <li>○ 하얏트호텔에서 있었던 Y회사의 창업 50 주년 축하연 헤드테이블에 후보자, 김종인 전 의원, Y회사 회장, D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앉지 않았나</li> <li>○ Y회사 회장이 인사말에서 ‘내가 앞장서서 저기에 계시는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총장이 되도록 하는 데 적극 뛰겠다’라고 말한 것 기억하는가</li> <li>○ Y회사 회장이 결과적으로 총장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 주었다면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li> <li>○ D그룹의 회장은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하였고 당시 투표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1201명인데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가 300명으로 가장 많음. 서울대 병원장한테 부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보므로 도움을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영 어색한데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림</li> <li>○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청렴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임</li> <li>○ 그 이외에는 그런 돈 받은 일이 없고 그 분이 외국 가서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수십년을 같이 한 형제 같은 사람임</li> <li>○ D그룹 회장은 기억나지 않음</li> <li>○ 어렵풋하게 기억함. 가볍게 이해를 했음</li> <li>○ 안 주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외부 회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며 오래 전부터 알던 D그룹에 계신 분한테 가서 ‘정운찬하고 나하고 친하니 정운찬 회장되는데 한 표 좀 찍어줘’ 이 정도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교수이던 D그룹에 계신 분이 저한테 흔쾌히 한 표를 던져 주었을 것으로 믿고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았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함</p> <p>○ 고문료로 2년이 채 안 되는 22개월 동안 9583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 회사가 어딘지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음. 이것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10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임. Y모자라는 회사의 백모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 여행경비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두 차례 걸쳐서 1000만 원 받은 게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임.</p> <p>○ 공무원 행동강령 또 공무원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징계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기능직에게도 적용이 되는 규정임을 알고있는지</p> <p>○ 그냥 교수가 아니고 국립 서울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교수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소액을 가지고 외국을 갔음. 만약에 이것이 관련법에 위반이 되거나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위반이 된다면 이것도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지</p> <p>○ 스폰서 총장 아니었는가?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었는가? 소액이라서 받았는가?</p> <p>○ 총리실에서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추석 떡값 수수 감찰을 하고 있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p> <p>○ 어느 공무원이 1000만 원을 형제와 같은 사람한테 받고 걸려서 총리님한테 징계서류가 올라왔을 경우 해명이 '1000만 원 이하의 선물과 뇌물은 소액에 불과하고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 아무 대가성 없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고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인지 여부</p>	<p>○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임</p> <p>○ 그건 잘 모르겠음</p> <p>○ 작년에 미국에 가서 6개월 살고 왔음</p> <p>○ 그것은 아님. 생각 없이 받은 것은 불찰임. 죄송하나 스폰서 총장이라는 이름은 빼 주길 바람. 누구한테 돈 받은 적이 없음.</p> <p>○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음.</p> <p>○ 그건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없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폰서 총장이라는 말씀 듣기 싫다고 하셨는데 아무 대가 없이 형제와 같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저희는 통상 그것을 스폰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li> <li>○ 1000만 원을 소액이라 생각하시고 부인이 아마추어 작가이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그림은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총리후보자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듣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움.</li> <li>○ 두 번에 걸쳐서 받았으면 한 번에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li> <li>○ Y회사, (여차피 영안모자로 실명화되었음)의 백성학 회장과 또 D그룹의 박 회장 그리고 내정자 이렇게 3인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은 '1000만 원 이상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 때 도움을 줬던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당시 했던 박 회장이 그저 본인 한 표는 줬을지 모르겠다. 준 것 같다. 그 외에는 특별히 뭐 도움을 받은 것 없다' 는 취지인지 확인</li> <li>○ 서울대 총장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자이니 지인이 도와준 것인데 건너뛰어서 '글쎄, 한 표는 줬을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 온당한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li> <li>○ 기록을 보니 차점자하고 차이가 한 100표 쯤 됨 . 300명이 다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한 87%, 90% 되던데 그러면 한 260명, 270명 참여한 것임. 물론 의대교수가 병원장이 얘기했다 그래서 전원 정운찬 대표께 투표했다고 생각지는 않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죄송하게 생각함. 지금의 그 잘못을 거울 삼아서 임명된다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음</li> <li>○ 그 그림값이 싸다는 의미에서 아마추어 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림을 시작한 지 지금 10년도 안 됐다는 의미에서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려서 말한 것뿐임</li> <li>○ 지금 의사 결정을 못 하겠음.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을 백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함</li> <li>○ 그러함</li> <li>○ 서울대학 교수들이 총장 직접선거에서 그룹을 지어서 어떤 후보를 찍고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임</li> <li>○ 첫째, 선거는 비밀선거이고, 둘째 서울의대 교수들이 대학병원 원장의 지시라든지 부탁을 받고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을 모독하는 말씀이심.</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만 상식적으로 볼 때 거의 다소간의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p> <p>○ 백성학 회장은 '나와 몇몇 기업인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몇 차례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현재 백 회장의 소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 회장이 1000만 원을 준 용도를 물으니 '때 묻지 말라고 연구비로 쓰라고 줬다' 이렇게 증언함.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백 회장 외에는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수차 진술하여 백 회장의 진술과 다른 점에 대한 해명요구.</p> <p>○ 후보자는 백 회장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줬다' 진술하였는데 백 회장은 '때 묻지 말고 살라고 줬다'라고 진술하여 완전히 뉘앙스가 다름. 그런데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백 회장이 개입되면서 때가 묻어 버렸다고 보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요청</p> <p>○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다가올 추석에 공직자들의 떡값 감찰, 암행 감찰로 인해 많은 결재를 해야 되는 서류가 올라올 텐데 결재하겠는가?</p> <p>○ 총리가 되서 50만 원, 30만 원 떡값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후보자 말처럼 20년 지기이며 형제와 같은 사람, 고향친구로서 아무 직무 연관성이 없어서 받은 것이라는 해명서가 첨부돼서 결재 서류가 올라왔을 경우 이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총리께서 최종 판단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 요청</p>	<p>○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음</p> <p>○ 답변기회 없음</p> <p>○ 어제 용어 사용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님.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하고 또 대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저하고 어떤 회사의 회장하고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음</p> <p>○ 그건 제가 총리가 된 후 결정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b>【세금 탈루 문제】</b></p> <p>○ 후보자께서 기부금을 2009년에 871만 6000원, 그다음에 2007년에 1490만 원, 그리고 2006년에 929만 원 기부금을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에 신고를 함. 기부금 내역서를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사업자에게 신고를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임. 이 세부내역을 서울대학에 신고를 해야 후보자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미 공제를 받은 것임. 그런데 세부내역 제출을 안 하고 있음. 장학금 몇 회 얼마, 교회는 횃수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 공제가 안 되는 것임. 이 자료 내일 청문회 시작 전까지 꼭 제출바람</p> <p>○ 배우자가 미술품을 판 돈에 대하여 세금을 냈느냐는 질의에 “세금납부는 원천징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내로부터 이번에 확인하였음” 이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없고, 납부하지도 않았음</p> <p>○ 아침에 준 자료를 보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p> <p>○ 9월 15일에 우선 부동산 임대소득, YES24 고문료 종합소득세 해 가지고 한 번 수정 신고한 것인지 확인요청</p> <p>○ 9월 21일, 우리 청문회 날 아침에 후보자께서 해외에서 거두어들인 강연료, 세미나료, 기타소득 부분 역시 추가 신고한 것인지 확인요청</p> <p>○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임. 최소한 3번 하는것임을 확인요청</p>	<p>○ 될 수 있으면 빨리 내겠음.</p> <p>○ 배우자는 제가 볼 때 아마추어 화가이며, 그림을 사 간 사람들이 모두 다 세금을 자기가 낸 것으로 알고 있음</p> <p>○ 죄송합니다.</p> <p>○ 예</p> <p>○ 예</p> <p>○ 예</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세를 세 번 하신 것임. 흔히 우리가 탈세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또 어감이 상당히 강해서 거부감도 있는데 탈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음. 고의가 있고 또는 과실이 있음. 후보자의 경우에 고의인지 과실인지 하는 것은 시청하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임</li> <li>○ 병역의무에 대해 후보자는 부인하고 주로 질의를 했던 백원우 위원께서는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 의혹으로 간주하겠음. 납세의무는 후보자 스스로가 인정하셨고 두 번 수정 신고하셨으며 앞으로 한 번 또 수정신고를 해야 할 마당이고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 분이 납세의무를 대단히 해태했다,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변요구</li> <li>○ 종합소득 신고를 하겠다고 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요구. 자료를 반대로 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임</li> <li>○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음. 작년 사업소득 수입이 3억 669만 원인데 후보자의 세무대리인이 간이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기장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필요경비가 1억 7465만 원임</li> <li>○ 일반공무원과 서울대 교수, 사립대학 교수 삼자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함</li> <li>○ 현재 거주하고 있는 래미안 방배 아파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기회 없음</li> <li>○ 인정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아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부부가 별개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것을 소득신고해도 종합소득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함.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li> <li>○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함</li> <li>○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썼다는 것임. 필요경비는 저쪽에서 배정을 받는 거고 제가 드린 세금증가액 원천 분석에서 '비용 계'할 때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경비로 배당받은 것 중에서 700만 원을 썼다는 것이지 필요경비를 배정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임. 수입이 있을 때 필요경비를 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임</li> <li>○ 잘 모르겠음.</li> <li>○ 그러함</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에 취득가액을 허위 축소 신고하여 세금신고를 하면서 5,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 보겠음. 후보자는 처음 소라아파트 재건축 시 분양권을 9억 9,500만원에 구입한 것이 맞는가?</p> <p>○ 소라아파트 토지분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 분양권 매수금액인 9억 9,5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1억 4,000만원의 임의가액을 기재하여 매매가를 축소 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축소 신고를 했음.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다운계약서가 위법이 되고 처벌되고 있음.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용인이 됐었음.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9억 9,500만원 그리고 2억 6,3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감안할 때,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가액으로 축소 신고한 금액이 관행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음.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1,45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면 약 5,2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p> <p>○ 후보자는 소득 탈루를 수정신고 하였지만 지난 15일, 일주일 전에 세금을 납부했고, 오늘도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 것을 수정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으나, 탈루된 것을 15일,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납부한 것 아닌가? 더 이상 탈루한 것, 그리고 더 수정신고 할 것은 없는가?</p> <p><b>【배우자 그림 관련】</b></p> <p>○ 배우자께서 2004년.2005년.2007년 세 번 그림을 팔았는데 5900만 원, 대략 아까 답</p>	<p>○ 방배동 아파트 분양권 매입가격은 9억 9,500만원이었으며, 국토부 자료에 나타나는 가액은 법무사에 의해 신고된 것이고 이 중 1억 4,000만원은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음. 2005년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에는 구청에서 일괄 고지 과세하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음.</p> <p>○ 본인은 없다고 생각함. 국세청에 얘기해서 본인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p> <p>○ 제가 그걸 잘 모름. 그림을 팔았다는 정황을 파악을 했지만 물어보지 않았고, 이번</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변에서 '한 5점 정도 이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5점의 그림을 5명이 나눠서 샀는지, 한 사람이 다 샀는지?</p> <p>○ 배우자의 미술, 예술품 가액이 500만원 이상 돼야 등록할 수 있음. 자기가 만든 작품이 100만원인지 200만 원인지 500만원인지 애매함.</p> <p>○ 후보자 배우자의 소위 그림 판매 문제인데, 원천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다소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설령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가족의 세금납부실적을 낸 것을 보면 후보자의 부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점에서 후보자가 그림을 판 부분, 59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임. 이것은 세무를 보좌하는 분하고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p> <p>○ 배우자께서 99년에 '표현과 발언'이라고 하는 그룹에 첫 작품을 냈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야말로 새내기 작가, 아마추어 작가임. 그런데 아마추어 작가 그림 한 점에 1600만 원을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냥 접근했거나 아니면 선의로 그림 하나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용돈 비슷하게 주었거나 둘 중의 하나로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됨.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음. 후보자께서도 잘 모르시는지?</p>	<p>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비로소 5점을 팔았다고 하는 것 알게 됐음.</p> <p>○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음.</p> <p>○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저희 집사람이 유화 이른바 오일페인팅을 99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미술대학 출신임. 그래서 기본 소양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전에 가서 입선을 몇 번 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대학뿐만 아니라 미술대학원을 나온 전문 작가들이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호당 3만 원 내지 5만 원—유화임—그리고 잘나가는 신인 작가가 호당 10만 원 받음. 그런 정황을 알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li> <li>○ 자작품 여부 불문하고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일단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권고함.</li> <li>○ 후보자 부인의 그림이 국내의 유명 화가들의 작품에 비해서도 비싸게 팔렸는데 한 사람이 사간 것인가, 혹은 지인들이 사간 것인가</li> <li>○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 배우자 미술품에 대해서 합계 59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음. 미술품 자체가 신고 대상임</li> <li>○ ‘부인이 아마추어 미술가다’ 이렇게 말했음. 부인이 그린 그림을 왜 사전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질문의 요지라면 사실 자기 가족 또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배우자의 그림 실력이 아마추어라고 하였는데, 그림 판매를 빈번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확인한 결과 몇 점 안되는가?</li> <li>○ 배우자가 아마추어 화가인데 이 고가의 그림을 판매한 것은 좀 아마추어 화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서민적 관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여부</li> <li>○ 전시회를 하시는 목적은 그림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시회를 세 번이나 했는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님, 그림 파는 데 대해서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물어봤더니 판 것이 모두 다 100호임.</li> <li>○ 예, 명심하겠습니다.</li> <li>○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사람을 그림 면에서는 높이 평가함</li> <li>○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 것을 몰랐음</li> <li>저희 집사람이 그린 거구나 하지 그 그림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미 판 그림이 있구나, 그것도 저쪽에서 원천징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li> <li>○ 거의 없었음</li> <li>○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음</li> <li>○ 집사람이 개인전을 한 것은 한 번임. 서울대학교 아무한테도 안 알려져서 서울대학교</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그림을 팔지 않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p> <p>○ 2004년에 개인전을 인사동 인사갤러리에 서 여셨는데 '조용히하기 위해서 뭐 일체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요청</p> <p>○ 전시회가 6월 30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열렸는데 6월 28일자 신문에 '정운찬 총장 부인 최선주 씨 첫 개인전'을 타이틀로된 기사기사가 실린 점에 대한 해명 요청.</p> <p>○ 후보자 부인께서 그림 판매에 따른 소득 6150만 원 종합소득세를 안 낸것인가</p> <p><b>【위장전입 관련】</b></p> <p>○ 후보자의 부인이 살지 않으면서 마명리에 주소를 옮겨 놓으셨음.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위장전입임.</p> <p>○ 후보자는 집을 두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또 주소지를 이전해서 땅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p> <p>○ 주민등록 옮기기 전에 가보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나서 또 가보니 차도 없는데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맞는가?</p> <p>○ 서울대학교까지는 도로가 없던 시절에 서너 시간 걸림.</p> <p>○ '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p>	<p>관계자들이 정말 거의 안 왔을 것 같음. 아까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임</p> <p>○ 별로 알리지 않았음</p> <p>○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미리 알고 낸 것임</p> <p>○ 안 냈음</p> <p>하나만 고려해 주시기 바람. 아파트 대지 지분을 제외하면 일생 동안 땅을 한 평도 가져 본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판 적도 없음.</p> <p>없음. 아파트 대지 지분을 제외하면 땅을 사본 적이 없음.</p> <p>예.</p> <p>주민등록 되어 있을 동안에 사실은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도 가고 주중에도 가고 아주 여러 번 갔었음. 갈 때마다 제 친구가 버스정거장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했음.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음.</p> <p>○ 제가 88년에 그 동네 가서 살 생각으로 가서 잠깐 실험을 했던 것임. 그 이상의</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는 일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20년 전의 위장전입, 과거사인가?'는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의원님의 논평임. 당시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20여 년 전의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부총리직을 사임하라고 지금의 여당이 냈던 논평의 내용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20년 전의 위장전입 하나로 현직의 경제부총리가 물러나셨음.</p> <p>○ 후보자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과거에 한 사실은 맞는 것인가? 다만 본래 주소지 이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p> <p><b>【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b></p> <p>○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는 후보자께서 9억 9500만 원에 분양권을 사고, 그것이 토지 부분에 대한 대가임. 왜냐하면 그 당시 소라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샀을 때 대지만 남아 있음. 그런데 그것을 1억 4000만 원에 신고를 하셨음. 그런데 그 당시 기준시가가 2억 9600만 원이었음.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관례랍시고 용인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시가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경우까지 적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 2006년 부동산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다운계약서가 그때 처음으로 위법하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관행으로 용인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p>	<p>것은 아님.</p> <p>○ 단어가 위장전입인지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잘 모르겠음</p> <p>○</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b>【장남 이중국적 관련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자제분의 국적 및 국적 변동 관련 신고내역 서류가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장남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의혹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바람</li> <li>○ 자녀 국적 문제에 대하여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바람</li> <li>○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후보자가 “비자를 한 번 거부당하면 다시 받기 어렵고 나중에 혹시 유학갈 때 시민권이 없으면 학비를 오히려 더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공인인 정운찬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흠결이라고 봄</li> <li>○ 76년 10월에 서울대 교수로 선발되었고, 77년 1월에 고령으로 군 복무가 면제되었음에도 78년 3월에 장남을 낳고 난 뒤에 귀국한 이유가 무엇인가</li> <li>○ 후보자 장남은 현재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물두 살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적이 없음. 그래서 우리 국적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국적이 상실되어 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의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씀인가</li> <li>○ 장남의 미국에 인턴으로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 후 아들이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한번 비자를 거부 당하면 다시 비자를 받기도 힘들고 나중에 혹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텐데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다가 몇 년이 흘렀음. 그리고 이번 일을 당해 아들이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혀 지금은 미국 국적 포기 상태임</li> <li>○ 미국 대학의 계약관계는 간단치가 않아 한번 계약했으면 그 계약을 지켜야 함</li> <li>○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던 것임</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또 현재 후보자 장남은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서 사회보장번호도 부여되어 있음. 이번 후보자가 청문회 즈음하면서 9월 16일 미국 국적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후보자가 먼저 만류했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p> <p>○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립대학 총장도 하고 그러면서 후보자의 장남 국적이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 장남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속을 썩이고 그랬던 것 아닌지 여부</p> <p>○ 9월 16일 이번 청문회에 임해서 비로소 미국 국적포기서를 중용한 것처럼 됐는데 이 청문회에 대비해서 급하게 이렇게 국적 포기신청을 한 것 이 아닌지 여부</p> <p>○ 당연히 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양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이중국적이 됐던 것임. 아들이 미국 여권을 가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p> <p>○ 22살 되는 해에 군대 다녀와서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선택한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해서 자동으로 그때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됐던 것임</p> <p>○ 후보자 장남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1억 8000이 넘는 돈을, 월 500만 원이 넘는 카드를 썼음. 이는 3년간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임. 또한 외제차를 타고 다녔음. 씬씀이가 아주 이례적으로 큰 편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p> <p>○ 후보자 장남은 2009년 4월 20일 금융기관에서 6300만 원 대출받은 사실은 알고 있는지 여부</p>	<p>○ 그렇지 않음</p> <p>○ 장남은 1978년 귀국 이후 한국인이었고 한국 군대를 다 마쳤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2000년대 들어와서 귀국 후 처음 미국여행을 하기 전에는 미국 여권을 가진 적이 없음</p> <p>○ 예</p> <p>○ 장남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음. 일을 하기위해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고 아마 월부로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고 동생이 직업이 없고 대학생이어서 제 동생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갖고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쓰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음</p> <p>○ 알고 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대출 증여해 준 것 아닌지 답변요청</li> <li>○ 여의도가 직장인 후보자의 장남이 대출을 받는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농협에서 6300만 원 대출받았습니다.</li> </ul> <p><b>【논문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내가 본 한국경제 — 97년 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것은 98년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의 50% 이상을 무단 인용하고 표절한 것임. 즉 18쪽 논문의 9쪽 정도의 분량이 출처나 인용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절을 인정하는지 답변요구</li> <li>○ 이중 게재는 인정하는지 여부 및 후보자 스스로 만든 서울대 윤리규정 2006년도에 만든 것을 보면,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이중 게재로 이것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직접 만드신 적 있는지 확인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혀 아님</li> <li>○ 본인이 사람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음</li> <li>○ 인정하지 않음</li> <li>○ 정당한 이중게재였다고 생각함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을 만든 기억은 있음</li> </ul>

## (2) 국무총리직 수행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야당에서는 서민 대책 추진 안 한다고 난리 치다가 이제 서민 대책 추진하니까 또 이게 뭐 그냥 하는 척한다, 위장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을지? 앞으로 들어오셔서 서민 대책을 취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는지?	○인위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정책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그래서 정부정책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중도실용의 서민정책을 쓴다 하면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단지 과거처럼 무리하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음.
○2기 내각을 시작하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참여정부 때보다는 더 많이 배정하시기를 바람. 그래서 절대 부자정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람	○예, 그 방향으로 가겠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람.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임.
○후보자 자서전에 보면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록이 있음. 소위 3불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참여정부와 많은 각을 세우셨던 그런 적도 있음. 이번에 총리에 지명되시고 나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지난 정부에서 즉 추진했던 것과 같이 후보자의 소신을 꺾고 '기여입학제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서면답변에 해 오셨음.	○국립대학은 절대 안 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좀더 신축적으로 하자는 말씀임. 오늘날 보자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임.
○총리가 되신다고 그래서 다시 기여입학제를 쉽게 도입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어도 괜찮겠는지?	○그러함. 스터디는 한번 해 보자는 말씀임.
○박원순 변호사님이 최근에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존경받는 사회원로이자 대한민국 시민지평을 넓혀오신 분임에도 국가로부터 소를 제기당함.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왜 소송 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박 변호사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도움을 주는 주체들한테 이런저런 압력이 있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음.
○박원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	○국민 기본권의 침해는 어떤 경우라도 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고 이것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돼서 이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관할하셔야 되는 법무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이 돼서 여기를 소송하셨는데, 후보자의 소신을 갖고 이런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음</p> <p>○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을 취하하시겠다는 의미인지? 그러면 법무부나 국정원에서 소송을 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 할 것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p> <p>○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이렇게 소송·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미네르바 판결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나오자 이제 민사재판을 활용하여 비판을 옥죄겠다는 의사표명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현상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법치주의를 질식시키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p> <p>○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보다 더 경제정책을 잘 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p>	<p>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음.</p> <p>○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실상을 파악해서 결정하겠음. 특히 국민 기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음. 만약에 그 소송이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임.</p> <p>○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실상을 파악해서 고쳐야 할 것임</p> <p>○ 총리가 된다면 실상을 철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음</p> <p>○ 예, 그런 비슷한 말을 어느 대학의 강의에서 했음. 어떤 청중 중의 하나가 '이명박 후보보다 경제정책을 잘할 수 있냐?' 물어보길래 '이명박 후보는 현장에서 강한 분이고 저는 이론가이고, 누가 잘 할지 모르겠으나 정리는 이론가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으나 거절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시장이 좀 거칠고 독선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이셨음. 무슨 이유인지?</li> <li>○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제 부분 이외에도 사회통합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회갈등 해결 비용이 GDP의 27%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면 국가를 위해 지역을 떠나서 대통령께 소신있는 직언을 하고 국정을 총괄해 주기 바람</li> <li>○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이 세금, 준조세 부담, 규제로서 이 세 개를 같이 완화 내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제는 준조세 부담의 경감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li> <li>○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폐법이 있고 폐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음.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얼마만큼 잘 작동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li> <li>○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국정을 잘 총괄해 주기 바람</li> <li>○우선 가장 급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점을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잘 고려해 주기 바람</li> <li>○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만났음. 그랬더니 "정 교수도 서민 출신이고 나도 서민 출신인데 서민 위하는 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움직인 것 같음.</li> <li>○명심하겠습니다</li> <li>○오랫동안 준조세의 심각성에 대하여 생각을 했었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를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li> <li>○동의함</li> <li>○명심하겠습니다</li> <li>○유념하겠습니다</li> <li>○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국무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고 국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대행하기도 하는 것이며, 후보자의 생각이 어떻건, 내용이 어떻건 그 자체를 표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li> <li>○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국가부채를 줄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내년 세출의 10%를 줄이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의사는</li> <li>○앞으로 총리가 되신다면 소위 실세 국무차장이라고 하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포철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된 것과 같은 의혹이 재발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li> <li>○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때 농성노동자들이 다쳤음에도 경찰이 의사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하여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경찰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무너진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li> <li>○본인이 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어떤 총리가 되고 싶습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의견이 있으나 그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다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제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내부적으로는 간언을 할 생각임</li> <li>○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낭비성 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li> <li>○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처리하겠음</li> <li>○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며 기본 인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함</li> <li>○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하며 제가 총리가 되면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과 인권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음</li> <li>○총리는 대통령을 보필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알고 있음. 대통령께 할 말은 하고 또 국민한테는 구할 것은 구하고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통 수준의 도덕적 기준은 최소한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요구</li> <li>○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중도 실용, 실용 중도론에 대한 견해는</li> <li>○ 후보자는 '중도실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전제 위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탈 이념적 또 실사구시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지 확인 요청</li> <li>○ 이명박 정부를 실용정부라 그러합니다. 그런데 중도실용론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도실용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중도실용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점 국정과제 중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는지 여부</li> <li>○ MB정부가 발표한 중도실용론, 그리고 친 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서민, 중소기업, 소외 계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후보자도 총리가 되면 앞으로 그 부분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리를 피력하였음.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중도실용론이 좌우를 넘는 새로운 통합 이념인가 하는 질문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잘 하겠음</li> <li>○ 저는 일생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해 왔으므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li> <li>○ 예, 그러함.</li> <li>○ 그러함.</li> <li>○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음. 녹색성장이 뭐냐, 녹색금융은 뭐고 녹색성장은 뭐고 녹색뉴딜은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음.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은 하되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li> <li>○ 좌우는 어떤 특정한 이념에 편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실용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이념적, 실사구시적 방법론이다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겠는가?</li> <li>○ 중도실용론에 대하여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 흔히 말하는 파퓰리즘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인가?</li> <li>○ 중도실용노선은 법치주의하고 대북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li> <li>○ 중도실용론의 기본전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li> <li>○ 그것은 방법론이고 중도실용론의 대전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중도실용노선을 유지해 나가는 것임. 기본바탕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는가?</li> <li>○ 이념적 차원을 떠나서도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부에서 확산되고 있으므로, 총리가 되실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임.</li> <li>○ 개혁적 보수, 실용적 보수의 개념과 중도실용과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li> <li>○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함.</li> <li>○ 일반인한테 인기 있는 정책은 상당히 많은 경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li> <li>○ 그러함.</li> <li>○ 법치주의와 남북관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간에 일치다 불일치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법치주의는 내치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대북관계라는 것은 북한과의 문제라고 봄.</li> <li>○ 신축성, 그 다음에 실사구시라고 생각함.</li> <li>○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li> <li>○ 중도실용은 탈이념에 실사구시이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텐데 잘못하면 중도다, 실용이다 해서 그것과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회의가 있을 수 있음. 남북관계에서도 정부 초에 조금 경직적이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최근 이대통령이 조금 더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두 개념이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li> <li>○ 신문에 난 거라든지 관보에 있는 것을 보았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 안에 4대강 사업도 들어 있고 녹색 교통망, 녹색 정보 인프라, 그린 카, 청정에너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인제대에서 "미국의 뉴딜정책은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인 데 비해서 한국의 이른바 녹색성장, 녹색 뉴딜정책은 미래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 요청</p> <p>○YS 정부 때도 100일 동안 과잉 투자해 가지고 IMF 경제위기를 불러 왔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요청</p> <p>○중도실용정부라는 말씀을 드렸고 녹색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내용과 후보자의 강연 내용이 뚜렷이 차이가 남.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로써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표명요구</p>	<p>○아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판을 한 적이 있음</p> <p>○한 적이 있음</p> <p>○본인이 비판한 것은 단기적 안목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 1930년대의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정치와 경제 간의 권력 관계, 또 경제 내에서도 금융과 실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는 것이 위주였고 그것을 다 고친 다음에 TVA 사업을 벌이든가 하는 것이었음. 김영삼 정부 때의 '새 경제'라든지 또는 이번 최근에 중도실용정책을 내걸기 이전의 이명박 정부도 장기적인 의미에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세력 관계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비판했던 것임.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녹색성장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지금 녹색성장한다고 해서 집도 그 방향으로 짓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 원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는 또 이미 많은 준비를 해 온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옴으로 해서 국제수지 적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그린 교통망, 그린 에너지 개발 등등, 이런 구체적인 성장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장 정책 발표 내용과 후보자의 소신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li> <li>○ 후보자가 생각하는 녹색 뉴딜정책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졸속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하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지 질의</li> <li>○ 개인이 모은 재산을 참 뜻 있게 쓰는 문화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음. 다행히 후보자는 '스코필드 박사 동우회' 등 그동안 선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음</li> <li>○ 신동아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의문들을 계속 총리께서 안고 가시는 것은 총리의 직을 수행하시는 데도 대단히 큰 어려움이 계실 것임. 앞으로 이 D그룹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다 정운찬 총리와 연결시켜 생각할 것이 아닌지?</li> <li>○ 총리후보자는 신동아 기사 관련자들을 오후 늦게라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런 걱정을 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기초부터 쌓는 녹색성장, 또는 기초부터 쌓는 신성장 동력 마련 이런 것을 주장한 것임</li> <li>○ 그 정책 자체는 비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비판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총리로 된다면 전체 정책을 다 살펴서 좀 무리가 있는 것은 고치자고 제안을 할 것임. 그것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내부에서 제안할 것임.</li> <li>○ 졸속이라는 말은 옳지 않음. 좀 빨리 서두른다는 의미임</li> <li>○ 어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스코필드 동우회를 만들어서 그분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그 분을 따라서 장학금을 내려고 노력해 왔고 조금 했음</li> <li>○ 전혀 아님.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li> <li>○ 그것은 그분들의 사정이 있어서 잘 모르겠음. 본인은 잘 알려진 프로야구 두산베</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하게 해서 말끔하게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총리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해 짧게 답변해 주길 바랍</p> <p>○총리 지명을 수락할 때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총리의 권한을 보장 받았는지 이와 관련해서 나눈 말씀 있는지 여부</p> <p>○총리로서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총리의 권한 행사가 제대로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총리직을 버리고 나올 각오가 돼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p> <p>○그동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목사업과 공격적 감세라는 MB노믹스를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음. 총리 내정 소감으로 MB정부의 정책의 균형을 잡겠다고 한말을 지키려면 MB노믹스를 뿌리부터 흔들어야 가능한데 오늘까지 청문회에서 답변을 보면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듦. MB정권,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 주요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후보자는 이렇게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서 대</p>	<p>어스의 팬이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음. 대학시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덟 학기 동안 두산의 전신인 OB맥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그냥 저한테 대학 시절 장학금을 줬던 회사의 구단과 친밀감을 느껴서 오늘날까지 두산베어스의 팬이 돼 있을 뿐 두산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p> <p>○서울대학교 당시 투표권자는 한 천 오륙 백 명 됐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투표한 사람이 12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의과대학 300명이 다 투표했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두산그룹의 그 교수가 자기 표를 췌는지 또 주변의 어떤 표를 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저의 총장선거를 도와서 제가 총장이 됐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함</p> <p>○잘 보필하겠습니다마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까지는 했음</p> <p>○의견이 다를 때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음. 그러나 저는 바른 것을 바르다고 얘기 못하면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아님.</p> <p>○그렇지 않음.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중도실용 철학을 보여주었음. 당선된 이후에는 다소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중도실용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생각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립각을 세웠을 정도인데 실제로 생각이 바뀐 것인지 의견 요청</p> <p>○총리가 되시면 공안기관을 통제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요청</p> <p>○예전에 규장각에서 일본 동경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일부를 기증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요청. 그런데 서울대는 환수 노력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불교계와 민간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임</p> <p>○그당시 사회단체에서는 서울대가 실제 기여한 바도 없는데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니냐' 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p> <p>○일이 되려면 원칙이 필요하고 먼저 노력했던 사람들과 공조가 필요함.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 온 민간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함.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p> <p>○영안모자에서 1000만을 수수한 것이 지금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음. 지금 추가 세금 탈루 사실이나 또 혹은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또 추가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행위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후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p> <p>○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1차적 관문은 준법</p>	<p>○총리로 임명된다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하겠음</p> <p>○알고 있음</p> <p>당시 2006년 4, 5월쯤 됐습니다. 그쪽 동경대학에서 문화재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제안이 왔었음. 그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어떤 국회의원, 스님 이런 분들인 걸로 알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그 반환 노력을 시작한 사람들이 받아와야 되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그것이 올 텐데 누가 받는들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걸 받을 수 있게 노력한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음.</p> <p>○알겠음</p> <p>○예,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음.</p> <p>○동의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과 도덕성 아닌가? 국민들의 평균수준 이 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p> <p>○ 지난 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았는가? 합격점을 줄 수 있겠는가?</p> <p>○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과정에서 병역비리, 탈세, 위 장전입 등이 나왔다면 합격시키겠는가? 탈락시켜야 하지 않겠는가?</p> <p>○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재산 축소 신고 등 문제점이 많은 사람만 고르는 것 인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등 국 민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 음. 앞으로 총리가 되면 6명에 대해 전부 장관 제청을 하겠는가?</p> <p>○ 제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 겠는가?</p> <p>○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장기적인 국정 비전은 선진화임.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 적절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제청권이라든지 해임권에 대해서 초일로 서 과감하게 제청권을 사용할 의지가 있 는지 밝혀주기 바람.</p>	<p>○ 열심히 대답하는 것을 보았음.</p> <p>○ 정도가 아주 심하면 그렇다고 생각함.</p> <p>○ 자세히 검토한 후 마음을 정하겠음.</p> <p>○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움.</p> <p>○ 지난 50~60년간 상당히 발전했는데 이제 는 성숙한 민주국가로 만들고 지속적 경 제성장을 하고, 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 한 것임.</p> <p>○ 대통령께 국무위원의 임명이나 또는 그만 두게 한다거나 그런데 대해서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임.</p>

### (3) 정책 현안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b>【세종시 관련】</b></p> <p>○ 세종시 건설사업의 효율성 문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며,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현재 법과 예산이 한창 집행 중인 사업임. 그런데 자꾸 후보자가 이렇게 효율성 운운 하는 것은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위반하겠다는 말씀에 다름 아님. 법을 지키시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셔야 될 총리로서 근본적인 자격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사과하시고 좀 취소하실 용의가 있으신지?</p> <p>○ 후보자의 총리 내정을 놓고 이이제이를 빗대서 '이충제충'이라고 함. 충청 출신 국무총리 내세워서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자 이명박 정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를 입맛에 맞게 축소·변질시키겠다, 충청 출신인 후보자가 세종시를 무산시키는 데 총대를 댔다 이 말임. 왜 총대를 메는지? 후보자의 소신인지?</p> <p>○ 세종시가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통합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수도권-지방 어떤 상생의 방안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p> <p>○ 2002년 12월 30일에 우리 후보자께서 '국가정책상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면 국립대로서 행정수도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p> <p>○ 후보자께서는 국토 균형발전은 찬성하고 있는 균형발전론자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는지?</p> <p>○ 청사가 많이 이격이 돼 있으면 집적화가</p>	<p>○ 취소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음.</p> <p>○ 그러함.</p> <p>○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세종시임. 세종시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을 것임.</p> <p>○ 어느 석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보였음.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음.</p> <p>○ 너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p> <p>○ 청사 분산의 비효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는 입장인지</p> <p>○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능과 그 나머지 복합기능, 교육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기업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을 경우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보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함. 후보자께서 9월 3일 내정 되시자마자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했음. 그것은 오해일 뿐이지 결국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이상은 아닌지?</p> <p>○ 정부 부처를 그리 넣는 계획을 취소하고 과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여타 기능을 통해서 그냥, 예산은 줄이지 않을 테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세종시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지?</p> <p>○ 내정자께서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과 자족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라 같은 차원이라는 답변을 지금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음. 그러한지?</p> <p>○ 만일 세종시가 궤도를 제대로 못 가게 되면 사실상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기로 한 혁신도시도 그 자체로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내정자께서 십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자세로, 말하자면 원안을 존중하되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총리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p> <p>○ 지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체 토지 배분이 약 6.7%인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p>	<p>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시가 목표해야 될 것은 자족도시로 해야 된다는 것임.</p> <p>○ 그러함.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상의 비효율도 있다, 세종시 차원에서 자족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자족기능을 채워 줘야, 만족시켜 줘야 혁신도시건 세종시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세종시를 자족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임.</p> <p>○ 행정부서를 제가 알기로는 9개 부, 2개 처, 2개 청 정도로 옮겨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종시를 위해서 행정부서가 10개 가면 뭐 하고 5개 가면 뭐 하나 그런 의미를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뜻임. 자족시를 만들자 그런 뜻임.</p> <p>○ 한 묶음으로 이해하자 이런 말씀임.</p> <p>○ 예.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종시의 역사 또는 현재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깊게는 몰라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자족도가 한 6~7%밖에 안 된다고 함. 그래서 한 20% 정도 올릴 길이 없나 하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들었음.</p> <p>○ 생각이 있는 세종시 사람들은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지를 줄여 가지고</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이야기임.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전체의 50% 이상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 되는 것임. 많은 돈을 들여서 쓸모없는 도시를 만드느니 그 돈이라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데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임.</p> <p>○ 나한테 맡겨 주면 세종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친 월권적인 말씀임. 기본적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정자께서 하신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가 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함. 말하자면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런 계층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까지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함. 여기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p> <p>○ 세종시의 문제점 중 안보문제 및 통일이 되었을 경우 수도를 재이전해야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p> <p>○ 세간에 세종시의 자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을 유치하도록 터를 다시 닦자는 말이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안을 무엇인가</p> <p>○ 유신헌법 통과될 때 국민투표로 통과됐음에도 그것을 고칠 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였듯이 헌법이나 대통령 공</p>	<p>될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세종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로 괜찮은 녹색도시로 만들어서 좋은 녹색도시 아이디어를 거의 표준화해서 세상에 좀 팔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p> <p>○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종시 백지화는 없음. 만약에 세종시가 백지화가 되면 제직을 걸겠음, 제가 임명되더라도.</p> <p>두 번째로는 단지 세종시의 모습을 국가와 세종시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건데 이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요인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 모습을 정말로 세종시에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음.</p> <p>○ 생각해봤으며 동의함</p> <p>○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어떤 형태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단지 지금까지 알려진 계획이 공주를 자족시키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 보는 것이지 지금 읍기지 말자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함</p> <p>○ 이 문제를 유신헌법 만들고 폐지하는 것에 비교 또는 응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약도 문제가 심각하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p> <p>○ 세종시와 관련하여 명품도시, 자족도시 건설에 대하여는 공감하는가</p> <p>○ 후보자의 비효율 발언은 행정기관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냐 약속은 지켜야 한다, 자족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진력해야한다 이런 취지인가</p> <p>○ 세종시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안보 문제, 통일 문제 등에 동의하면서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는</p> <p>○ 당장의 짧은 표심에 의해서 세종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기 바람</p> <p>○ 후보자는 도덕성으로 자신이 없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세종시 문제로 편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p> <p>○ 세종시 사업은 헌법 제123조제2항에 의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헌법상의 의무사항인데, 후보자가 경제학자의 눈으로만 보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p> <p>○ 세종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의 과밀해소비용,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후보자의 비효율 발언은 이런 수도권의 외부비용까지를 넘는 그런 비효율인가</p> <p>○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또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대통령도 누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총리내정자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도 없다면서 이렇게 수정 발언할 수 있는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p>	<p>○ 높은 차원에서 공감함</p> <p>○ 정확한 언급임</p> <p>○ 원안대로 한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계획들로는 자족적 도시를 만들기 힘들기 보이므로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눠보자,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런 뜻임</p> <p>○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약속을 지키자 한 것은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었음</p> <p>○ 그렇지 않음</p> <p>○ 다른 누구보다도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총장할 때도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시행하였음</p> <p>○ 또 혁신도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도 잘 만들어야 하고 세종시도 잘 만들어야 할 것임</p> <p>○ 양심에 따라 바른 말을 했을 뿐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이 있었다고 보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중차대한 발언이었다고 봄.</p> <p>○ 후보자는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p> <p>○ 세종시와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학 정원 할당제 그리고 특수목적고 설립, 우수 교사 유치를 추진하며, 34만평, 18홀 규모의 공무원 전용 골프장까지 만들고 아파트를 특별로 공급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고쳐야 된다’라는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가 슬그머니 들어간 바가 있는데 들은 바 있는가</p> <p>○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 예가 있는데, 브라질리아의 경우 40년 전 브라질 정부가 세웠던 인구 이전 목표수가 세종시와 같은 50만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20만인바, 후보자가 지적한 자족기능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임</p> <p>○ 세종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p> <p>○ 후보자는 ‘세종시 백지화는 없다’, ‘총리직을 걸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인사 청문회를 하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음</p> <p>○ 후보자는 ‘예산은 어떻게든 더 넣어서라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과 힘이 없으며 마치 주머니 싹짓돈 꺼내 주듯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며, 충청권 주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기 바람</p> <p>○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확인 요청</p> <p>○ 그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또 다른 문제냐, 자족기능과 또 별개의 문제 제기냐?" 한</p>	<p>○ 지역균형발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다른 도시의 발전에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 처음 들음</p> <p>○ 제 일은 국회가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나 이 논의를 할 때 제가 임명이 된다면 자족적 도시를 만드는 데 총리로서 저의 아이디어를 많이 넣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할 것임</p> <p>○ 지금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p> <p>○ 주의하겠음</p> <p>○ 충청도를 가볍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충청도를 모두 위하는 방안을 제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러 분과 의논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겠다는 말씀이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었음</p> <p>○ 예</p> <p>○ 세종시는 누가 했든지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결과 그런 것은 아니고 자족기능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p> <p>○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플러스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인지 확인요청</p> <p>○ 후보자의 말은 원안에 플러스해서 알파하자는 얘기에 가까운지 아니면 원안의 마이너스 알파에 가까운 것인지 확인요청</p> <p>○ 후보자도 현재 자족기능이 6% 정도 되는데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p> <p>○ 6%와 20%는 토지이용계획을 말하는 것임. 토지이용계획상 시설용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부지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시설 의료시설 이런 부지가 현재 6.2% 정도가 됨. 이것을 이 자족기능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한 20% 정도로 더 늘려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인지 여부</p> <p>○ 정부가 자꾸 세종시 계획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므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요청</p> <p>○ 후보자의 답변은 행정부처가 옮겨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음</p>	<p>금 현재까지 그리고 있는 모양들로는 자족도시 만들기가 힘들어 보이니 같이 의논해서 자족도시로 만들자 그런 뜻임</p> <p>○ 당초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들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부 2처 2청이 간다, 또 뭘 신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세종시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아직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양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함</p> <p>○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세종시는 반드시 만드는데 세종시를 자족기능이 있는 시로 만드는 것은 총리가 반드시 지켜 봐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음</p> <p>○ 예</p> <p>○ 주로 그런 뜻임.</p> <p>○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충청권을 위해서 부처 다 옮기고 또 엑스트라도 더 주고 그런 것은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음. 모든 가능성을 놓고 한번 다시 의논하기를 바람</p> <p>○ 아무런 그림을 그려 놓고 있지 않음. 누구하고 사전적으로 의논한 적도 없고, 단지 제 고향의 일부가 세종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임. 그러려면 이게 유령도시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족도시가</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행정 효율을 이야기하려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얘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앙부처가 약간 이격되어 있어서 업무상 약간 불편한 것 정도야 조금 지나서 적응되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 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름. 4, 5개 지역으로 통일 후에 분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임</li> <li>○ 정운찬 내정자에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염원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적 소신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걱정하는 측면은 있다지만 정부의 일원이 되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후에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으나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모호한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음</li> <li>○ "세종시 건설이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듣는 사람을 농락하는 모순된 발언이라고 생각함</li> <li>○ 중앙 행정 부처를 현 위치대로 그냥 그대로 놓고, 지금대로 놔두고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나 채우자는 것은 수도권에 어떤 위성 도시 하나 만들 자는 것과 차이가 없음. 교육 기능이나 과학 기능 집어넣고 교육 과학 도시 정도 하나 정도로 입막음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배신감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듣길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되기 위해서는 법이 이미 있기는 하지만 너무 경직적 사고를 하지 말고 좀 신축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음</li> <li>○ 우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포함한 효율성 또 나라 전체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기를 원함.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 수 있음. 총리로 임명된다면 지역주의자는 절대로 아니나 제 지역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하나 내놓겠음</li> <li>○ 답변기회 없음</li> <li>○ 답변기회 없음</li> <li>○ 새 계획은 정부 부처 이동은 하나도 없다는 말도 있으나 현재 아무것도 결정이 안됐음</li> <li>○ 위원님이 오해하고 있음.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조차도 결정이 안 되어 그림이 아직 안 그려져 있음.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정말로 고려할 것임.</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법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임. 총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대통령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그 의사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임.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라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이상한 말씀으로 변명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요청</p> <p>○ '기본적으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9부 2처 2청이 원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합 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나 과학 기능이나 기업 기능 이것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가 볼 때에 자족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족 기능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총리가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을 독려해서 즉각적으로 여기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변경 고시 이것은 즉각 변경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 원안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요청</p> <p>○ 그림은 국회가 그려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림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의견 요청</p> <p>○ 세종시가 22.5조 원이 들고 앞으로 더 들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음. 차라리 22.5조 원을 각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4조, 5조</p>	<p>○ 총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며 지금 총리 내정자는 더욱더 힘이 없음. 그러나 한 개인으로 보기에 세종시는 정말로 자족적인 도시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균형이 보이는 도시,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임</p> <p>○ 원안대로 된다, 안 된다는 다 떠나서 지금 그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것임.</p> <p>○ 그림을 앞으로 그리겠다는 말씀임. 꼭 할 것이고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것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건 물적 자원이건 그 양이 제한돼 있음. 만약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자원만 무한하다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있으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음.</p> <p>○ 답변 불요</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원씩 나눠주면 더 이익임. 4대강 개발은 15, 16조 원이 드는데 이것은 미래의 수익이 많이 발생함 (지역 개발, 주변지역 개발 수익, 관광.문화 등등) 더 큰 수익은 홍수 예방 또 수해복구비에 2조 4000억 원의 절약임. 또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감세를 하자는 것은 부자를 감세해 주자는 게 아니고 다른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임.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감세를 해 주고 대기업도 해 주고 고소득층도 해 주고 저소득층도 해 주는 것임. 조세원칙에 맞게 세율을 인하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간 것임</p> <p>○ 9월3일 대통령을 만난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대한 얘기가, 세종시라는 단어 하나 나온 적이 없는지 확인요청</p> <p>○ 강의나 강연이나 기고나 이런 걸 통해서도 후보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요청</p> <p>○ 세종시 관련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 손봐야 된다, 앞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서 언론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기정사실화시켜서 이것을 공론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그런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요청</p> <p>○ 세종시 사안은 정부 개편에 따른 변경 고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절차에 맞게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임. 즉각 변경 고시를 이행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사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효율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요청</p> <p>○ 국가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무총리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인가</p>	<p>○ 한 시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관해 한 번도 안 하셨음</p> <p>○ 제 기억으로는 없음</p> <p>○ 세종시가 제 고향 부근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종시의 앞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고 있었음.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제 개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던 것임.</p> <p>○ 본인이 보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세종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세종시한테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더 좋은 플랜으로 세종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임. 때로는 조금의 코스트는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조그만 코스트는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음</p> <p>○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 아이디어가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는 꼭 할 것임. 그리고 될</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관련 24%가 재정이 집행되어 있고 진도가 30%까지 나갔으면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임</li> <li>○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전체 주가 26개이고 연방특구가 하나 있음. 연방특구 이름도 브라질리아고 행정수도 이름도 브라질리아임. 브라질리아 연방특구 내에 바로 우리 세종시와 같은 브라질리아시가 있고 이게 바로 브라질의 수도임.</li> <li>○ 그래서 지금 브라질리아, 정확한 인구는 2000년에 19만 8422명, 2008년은 19만 8906명임. 브라질리아시는 472.12km<sup>2</sup>, 세종시가 몇 km<sup>2</sup>인지 아는지 질의</li> <li>○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종시를 더 잘 살려보겠다는 것임. 총리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강조한 것이 맞는지 질의</li> <li>○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혈세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전력을 투구하시기 바라는데 그럴 의지와 역량이 본인에게 있는지 질의</li> <li>○ 이미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공정이 20%, 30% 진행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사업비 22조 5000억 원 중에서 지금 공사비가 책정된 게 한 15조 4000억 원 되는데 이 중에 3.9%만 진행됐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정이 20%까지 진행된 것은 아님. 세종시에 세종시민을 위해서 뭘 담을 것인지 후보자께서 소신껏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또 세종시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같이 고민을 해 보기로 하면 좋겠음.</li> <li>○ 지금 25%까지 나갔으면 나머지 75%를 정말로 생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임</li> <li>○ 2280만 평임</li> <li>○ 그러함</li> <li>○ 역량은 남이 평가해 줄 문제고 의지는 확실히 있음. 어떤 직을 위해서 바른 말을 포기하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li> <li>○ 고맙습니다</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명 행복도시법 제6조에는 행복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의미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행정기능이 중심이 된 복합형 자족도시를 반드시 만들라고 의무를 부과한 것임</li> <li>○ 전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음</li> <li>○ 지금 인구 규모로 보더라도 50% 목전에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56.9%, 금융기관 예금액의 68.4%, 금융기관 대출액의 68.3% 등 모든 경제 규모나 그 내용이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사실상 어떤 국가경제를 얘기하자면 수도권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것임</li> <li>○ 후보자의 고향은 어디인가?</li> <li>○ 공주·연기가 앞으로 세종시가 들어설 곳인가?</li> <li>○ 후보자가 한 발언의 진의는 세종시가 올바르게 발전해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자는 것 아닌가?</li> <li>○ 서면답변에서 자족기능을 보완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자족기능 보완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음.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를 미루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떠나고 있으며, 정부가 세종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임. 아직도 세종시 건설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li> <li>○ 자족도시가 되려면 당초 계획대로 중앙행정부처 9부 2처 2청이 빨리 내려와야 함. 세종시는 이미 법과 예산이 한창 집행 중에 있는 사업임. 이제 와서 '세종시 수정'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기회 없음</li> <li>○ 답변기회 없음</li> <li>○ 답변기회 없음</li> <li>○ 충남 공주임.</li> <li>○ 그렇습니다.</li> <li>○ 그렇습니다.</li> <li>○ 수정한다가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는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족도시,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li>○ 예산이 22조~23조 배정이 되어 있고, 이미 4, 5조가 집행이 되고, 총리실 건물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그림에 따르면 자족도시가 될 것인지에 자신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답변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맞는가?</li> <li>○ 언론에서 질문한 것은 학자적 소신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총리후보자로서 물은 것임. 국정 핵심 현안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총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세종시를 하다가 말아도 되는 그렇게 작은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li> <li>○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임. 총리후보자는 지방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인가?</li> <li>○ 후보자는 고향인 충청도 공주에서 많은 항의를 받았음에도 진정으로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견해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li> <li>○ '세종행정도시가 비효율적이다.'라는 후보자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해 달라</li> <li>○ 과천에 있는 부처들은 서울 사무소를 비공식적으로 두고 있고, 대전에 있는 청들은 여의도 부근에 분소를 두고 있는 낭비가 있음.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여의도를 왕복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li> <li>○ 과천청사는 과천 도심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수는 20분의 1임. 과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 총리는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 세종시를 정말로 크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임.</li> <li>○ 본인이 대학 총장 때 지역 균형 선발제와 계층 균형 선발제 등을 도입해서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음.</li> <li>○ 세종시를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li> <li>○ 국가적으로 보자면 행정부처가 두군데로 떨어져 있는 경우 모임 등으로 인해 많은 인력들이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있으며, 공주시 입장에서 약 20년간 22억 5,000억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사용하였으나 바람직한 도시가 되지 못한다면 비효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임. 대한민국의 총리이기도 하지만 고향인 충청도에 대해서 불리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li> <li>○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경우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있음. 또한 시 자체가 경제적 자족성을 가지지 못하고 유령화 되고 있음. 또한 세종시의 경우 환율비상시, 북한의 수공시,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전염시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있을 수 있음.</p> <p>○ 내정자가 세종시와 관련하여 얘기하는 효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경제적 효율인가? 정부 효율인가 아니면 행정 효율인가?</p> <p>○ 내정자는 불균형개발론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경제적 효율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봄. 행정효율을 생각해보면, 분산되어 있지 않은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 형태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p> <p>○ 정부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9·11테러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따져 볼 필요가 있음.</p> <p>○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내정자가 서울대 총장시절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국토의 균형발전론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 내정자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망가뜨리는 발상임에도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임.</p> <p>○ 총리는 세종시에 있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경우 평상시에도 국정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갖고 오게 되지만, 위기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됨. 더욱이 지금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통령제나 의원집정부제가 되었을 때,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부통령 내지는 총리가 세종시에 있게 되면 상당히 역기능적인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에도 백</p>	<p>○ 경제 효율도 있고 행정 효율도 있다고 생각함.</p> <p>○ 거기에도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나, 세종시의 비효율보다는 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p> <p>○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함.</p> <p>○ 본인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혁신도시나 세종시 아이디어가 균형발전을 위한 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너무 빨리했고,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 본인은 자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 한번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임.</p> <p>○ 가볍게나마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악관에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같이 집무하고 있음.</p> <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거의 70%가 ‘내려가도 몸만 가겠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계획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와 전용 열차를 운영하겠다.’ 혹은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보전 대책도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것 때문에 자족기능을 언급한 것 아닌가? 세종시 건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법에서는 그 목적으로 수도권 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의 시정,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아예 포기한 상황임. 계류 중인 세종시 특별법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데 총리로서 그 곳에 무엇을 담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p> <p>○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시절 업무 효율성과 중앙 관청과의 조율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충청인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p> <p>○ 세종시에 대하여 당초 원안을 존중하되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이후 발언에서는 몇 개의 부처가 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족기능이 살아야 하며, 자족기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답변을 한 것이 사실인가?</p> <p>○ 내정자는 행정 기능을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임. 행정기능을 보내지 않고 그냥 자족기능을 보완한다면 수도권 주변에 위성도시 하나 만드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p>	<p>○ 과학연구기관, 비즈니스, 대학 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음. 세종시를 좀 더 자족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22조 5,000억원 이상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목표는 자족도시이며, “그것이 원안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p> <p>○ 그러함.</p> <p>○ 나라 전체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만들 것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예산은 물론 더 쓸 수도 있음. 서울의 위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도시 하나를 좋은 것을 만들겠다는 뜻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 돈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임.</li> <li>○ 현행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는데 고시에는 14부 4처 2청을 옮기게 되어 있었던 것이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음. 지금은 위법상태이며, 총리가 확정된다면 위법상태부터 면하기 위해 변경 고시부터 먼저 이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음. 9월 1일에 내정되고, 9월 3일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와 교감 끝에 하시는 그 말을 너무 구애를 받아 가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음.</li> <li>○ 국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국가의 의사결정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법률로 만든 것임. &gt;</li> <li>○ 2008년 2월 이후 정부 부처가 바뀌었으므로 즉각 변경 고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변경고시를 안함으로써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이제 와서 총리로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 여러분을 설득하겠다는 말이었음.</li> <li>○ 아무런 선입관도 없고 아무런 사전 교감도 없었음. 법을 지키겠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지키는 것과 정말로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li> <li>○ 변경고시를 해야 일이 시작될 텐데 변경고시를 하기 전에 정말로 세종시를 위해서 좋은 길이 무엇인지 의논한 후에 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것임.</li> <li>○ 될 수 있으면 빨리 변경 고시를 하겠음.</li> </ul>
<p><b>【4대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정량적 고려 외에도 정성적 고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전체에 대해서 '일자리 34만, 그리고 40조 경제효과' 이렇게 전체를 놓고 지금 정부는 홍보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잘라서 함. 그러면 도대체 전체를 놓고 하는 이 홍보의 근거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여쭙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림 키우기 나라를 앞으로 훌륭한 강 키우기 나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계량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플랜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부분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음.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경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신지?</li> <li>○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 4대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을 보았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산림 키우기처럼 강을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보지 못했음. 정말 이것이 후보자가 4대강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인지?</li> <li>○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1월 달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꽤 많은 여론조사임. 좀 믿기 어렵다고 했던 그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절반 이상, 64%가량까지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음. 국민들이 과연 왜 이 4대강이 대운하의 1단계다, 대운하 같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지?</li> <li>○ 낙동강에 원래 4대강, 대운하 사업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5개의 보가 지금 4대강 사업에서 그중에 3개가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건 알고 계신지? 똑같은 지점에?</li> <li>○ 2009년 1월 달, '뉴딜이라고 하면 대규모 취수사업을 떠올리게 된다. 녹색뉴딜은 토목건설 중심의, 과거에 많이 봐 왔던 패러다임이다' 이런 비판을 하셨음. 그리고 3월 달에는 '토목공사 하면 성과가 금방 나타나 돈을 쓰려고 생각하겠지만 교육.관광.의료.보육에 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 안에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인 방향만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진들이 쓴 것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예, 그게 커다란 이유임. 홍수 피해가 정말 대단해서 피해액보다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감. 그래서 피해액이 3조 원이면 복구비가 4조 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또 거기다가 하나 보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운하를 반대했음. 따라서 4대강도 한 번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좀 소극적이었음. 그러나 가뭄과 홍수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저를 크게 움직인 것은 수질 문제임. 수질이 나빠서 4대 강 유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아주 소극적인 데서 좀 적극적인 데로 의견을 바꿨음.</li> <li>○ 전 잘 모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갖고는 대운하를 만들 수 없다고 얘기 들었음.</li> <li>○ 예. 똑같은 지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음.</li> <li>○ 그건 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잘못됐음. 그리고 봄에 녹색뉴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뉴딜을 갖다가 그냥 토목사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바꾸고……</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래를 위한 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음. 그런데 이번에 서면답변을 하실 때는 '뉴딜정책은 SOC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보육 또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그런 내용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음.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지?</p> <p>○ 내정자님 이 답변이, 서면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p> <p>○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최종 보고서가 2009년 7월에 나왔는데 거기 물 부족량이 2011년 8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고 계신지?</p> <p>○ 40년 넘도록 4대 강의 하상이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홍수 나고 넘침. 그래서 차제에 준설을 해서 수심도 어느 정도 깊게 하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것임. 그리고 보라는 것은 가동보로 환경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울산의 태화강이 그렇게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나서 수질과 모든 것이 좋아진 그런 경험이 있음. 그래서 반드시 친환경 4대 강 사업만큼은 하나의 의지를 갖고 후보자께서 나중에 총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잘 만드셔서 대한민국의 불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임.</p> <p>○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창근 참고인께서는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파괴되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하게 하라는 법률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토에 관한, 하천에 관한 신중한 평가체계들 계획체계들을 만들어놓는 이유임. 절차와 평가.조사.토론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 4대강 사업은 거기 교육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은 제가 자신은 없음.</p> <p>○ 잘 모름</p> <p>○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의 동감임.</p> <p>○ 수질이나 홍수 문제 등에 대해서 대체적인 지식은 지난 한 2주일 동안 습득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고, 또 짧은 업무파악기간을 감안해 볼 때 상세한 답변이 쉽지 않음.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자세하게 업무 파악한 다음에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설공사가 시작하는 게 10월 초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음. 추석 끼고 이러면 상세하게 업무파악 하시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돼 버릴 우려가 있음. 그리고 업무파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의 시간들이 필요함. 한번 시작해 놓으면 그것이 일부 구간에서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를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업무파악과 토론이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중단하시는 것이—일단 좀 미루는 것이—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사안에 따라서는 빨리 해야 될 것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도 있는 것임.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 중에 특히 4대강 사업은 여기에 부합된다는 견해인지 질의</li> <li>○ 4대강 사업을 왜 추진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li> <li>○ 4대강 사업의 3대 목적은 첫째가 재해 예방, 둘째,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수변 공간 활용함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임</li> <li>○ 후보자가 수질 개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질 개선 문제는 사실은 이미 그동안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고 또 실제로 90% 이상 이행이 되었음.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랄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임에 대해 알고있는지 확인요청</li> <li>○ 서면답변에서 ‘현재 4대강 살리기 예산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파악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함, 강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그러나 규모나 속도 이런 데 대해서는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음.</li> <li>○ 본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음</li> <li>○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큰 것은 50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산림녹화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산하고 강하고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강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에 찬성함</li> <li>○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사업의 결과 강까지도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강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li> <li>○ 대강 알고 있음. 대운하는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고 확실히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믿고 싶음.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과 관련시켜서 많이 됐다고 그러지만 역시 강뿐만이 아니라 지천도 있으므로 이런 데 대한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음</li> <li>○ 방향은 제시해 주었음. &lt;이정희 의원&gt;</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반복되는 홍수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내정자가 직접 보고 맞다고 판단해서 내 보낸 것인가?</p> <p>○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서 아직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잘되어 있지 않음. 서면답변에서의 판단근거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고 총리실 인사청문회준비팀에서 답변하였는데,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한국은행의 06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해서 취업유발계수, 건설업, 그리고 생산유발계수 등을 곱해서 계산된 것임. 이 근거로 답변을 낸 것을 알고 있었는가?</p> <p>○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p> <p>○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자전거도로하고 생태하천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가 있었을 뿐,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p> <p>○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수는 있으나, 정책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만큼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p> <p>○ 34만명 취업유발효과와 40조원 생산유발효과는 예산액인 19.6조원에 취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나온 것임. 이러한 경우 비용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생산유발효과가 커지고 고용이 늘어나게 됨.</p> <p>○ 10월초부터 준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준설공사도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한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p>	<p>○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몰랐음.</p> <p>○ 그것만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음. 다만, 지난 50년 동안 산림녹화를 열심히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강 정비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함.</p> <p>○ 좀 더 검토해 보겠음.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도 따져야 하고, 문화재 보존도 잘 따져봐야 함.</p> <p>○ 동의함.</p> <p>○ 임명된다면 자세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p>○ 준설공사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속도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번 강바닥을 파면 생태계는 무너짐. 일단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음.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하는 것임. 그러나 단순한 곱셈을 통하여 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면 누가 동의하겠는가?</li> <li>○ 후보자는 4대강이 대운하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li> <li>○ 대운하는 반대하였는데 4대강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li> <li>○ 무엇이 달라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li> <li>○ 4대강 정비공사가 대운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li> <li>○ 기술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있는가?</li> </ul> <p><b>【감세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세정책에 대해 연기 또는 일부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li> <li>○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라디오 연설에서 하셨음. 이 발언에 동의하는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li> <li>○ 똑같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보이는데 그러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해보겠음. 다만 정량적 보다는 정성적 고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봄.</li> <li>○ 대운하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데 반해서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함. 대운하에 들어가는 비용과 4대강에 들어가는 비용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li> <li>○ 그러함.</li> <li>○ 대운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대운하는 필요 없는 것이고 4대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li> <li>○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음.</li> <li>○ 깊이 공부 안해 봤음.</li> <li>○ 감세정책은 단기적이라고 느낄 경우 경기진작에 별로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소득분배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감세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못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처럼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함.</li> <li>○ 최근 경험적 연구를 하지 못해 감세 혜택의 중산층 귀속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음.</li> <li>○ 아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확실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경</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2009년 4월 8일에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감세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어느 정도 상황을 보시면 이것이 어떤 계층에게 효과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통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이런 글을 쓰신 것이 아닌지?</p> <p>○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근거 자료가 이것임. 기획재정부에서 감세액을 '중산·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기타는 고소득층'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65.4%가 중산·서민층에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 때 중산·서민층의 계층 구분이 8,800만원임. 8,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기타'에 들어감. 기타는 0.5%였음. 대한민국 1%~0.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인 것임.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임.</p> <p>○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도 보니까 일인 그리고 기업당 감세 혜택을 비교했음. 중산·서민층에 돌아간 한 사람 앞의 감세액, 물론 면세는 제외임. 아까 말씀처럼 빼니까 일인당 감세액이 120만원임. 그런데 고소득층의 감세액은, 0.5%의 감세액은 4,000만원임. 33배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했더니 대기업은 감세 정책의 효과로서 기획재정부 통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20배 정도됨. 10배가 넘음.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것임.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홍보와 대통령이 잘못 집행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가실 것인지, 바로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으시겠는지?</p>	<p>험적 연구를 잘 안 해 봐서 그 결과가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다는 것임.</p> <p>○ 그러함.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쓰게 되면 별로 경기 진작 효과도 많지 않고 또 분배도 좋지 않고 또 재정에도 어려울 것이 틀림없지만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음.</p> <p>○ 고치도록 하겠음.</p> <p>○ 말씀하신 것을 십분 참작해서 통계를 잘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소수가 상당수의 세금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공공의 적으로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경쟁 상대국들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지?</li> <li>○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하게 해야함. 그렇게 되려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는 세금을 좀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li> <li>○ 다른 조건들을 보면,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지가가 높고, 이자가 높고, 노사관계가 복잡함.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다른 조건이 다 나쁘지 않은지?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높게 해서 되겠는지?</li> <li>○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감세 논쟁이 있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럼 증세를 하면 투자가 더 늘어나고 소비가 더 늘어남?</li> <li>○ 모든 소득계급에 2%p씩 인하해 주기로 했고 그것도 야당과 협의해서 첫 해에는 저소득층만 해 주기로 하고 고소득층은 내년 부터 해 주기로 했음.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네 소득계층에서 제일 부자는 4%p 인하해 주고 그다음에 3%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감세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는 종소세를 많이 내는 분 또 법인세를 많이 내는 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서 사회 불안으로까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음.</li> <li>○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임.</li> <li>○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고 나라가 사정이 급박하다면 그 말씀을 이해함.</li> <li>○ 지금 한국이 잘 살려면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투자가 부진했었음. 투자 부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음,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음, 투자 마인드를 키워주지 않음, 이른바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이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첨단기술이 있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짐. 따라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자는 것임.</li> <li>○ 증세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음.</li> <li>○ 아마도 이른바 진보정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부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듬.</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인하해 주고 2%p, 1%p 이렇게 인하해줬음. 그때는 아무도 부자 감세라는 말을 안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도 좀더 하고 R&amp;D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민.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것임.</p> <p>○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국가부채는 100조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운영이 올바르게 생각하는가</p> <p>○ 내년에 추가로 감세하도록 되어 있는 몫이 무려 13조 2,000억인데 그 중 부자들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부분이 5조에 이르는바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부자만을 위한 대책을 쓰는 정부는 없음. 부자를 위해서 어떤 감세나 규제 완화할 수 있으나 그것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를 살려서 궁극적으로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것임. 이 진심을 좀 총리후보자께서는 알아야 함</p> <p>○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음. 후보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철회 내지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음에 대한 확인 요청</p> <p>○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가 전가돼 갖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음.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것을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p> <p>○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왔음. 감세가 실제 경제효과 없이, 소비 진작이나 투자 효과 이런 것도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p>	<p>○ 감세를 하는 경우 큰 기업들이 투자를 좀더 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학자적 양심으로 한 말씀임.</p> <p>○ 좀더 건전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p> <p>○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음</p> <p>○ 알겠음</p> <p>○ 방향은 그렇지만 실상을 더 파악할 사항인 것 같음</p> <p>○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음</p> <p>○ 총리로 지명받은 후에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커다란 방향만 스텝들한테 정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그냥 당신들이 써 보라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음. 그러나 제 의견은 이 청문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렇게 답변하였음. 왜 이렇게 답변 기초가 180도 달라졌는지 해명요구</p> <p>○ 후보자의 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부자 감세하면 안 되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거로 삼는 중요한 말이다. 평소에 언행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임</p> <p>○ 8800만 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보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참여정부 때 써먹은 얘기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바로 8800만 원 이하의 중산층.서민에게 65.2%의 혜택을 준 것으로 나옴. 좀 더 현실에 근거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p> <p>○ 강만수 장관, 윤증현 장관에게 비판적 조언을 많이 하였는데, 그 분들의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성과가 가장 좋은 것은 것 아는가?</p> <p>○ 두분에 대하여 학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 주겠는가?</p> <p>○ 참여정부는 증세, 규제강화, 개방화 반대 등의 정책을 폈지만, 한나라당은 감세, 규제완화, 개방화 확대 등의 정책을 폈음. 이에 대한 견해는?</p> <p>○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하여 야당이나 진보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음.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p> <p>○ 세금은 무조건적인 감세가 아니라 우리 경</p>	<p>○ 답변불요</p> <p>○ 무슨 정권을 가리지 않고 건설적 비판을 하려고 애써 왔음.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쓸 것임을 믿어 주시기 바람. 대신에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관성을 지켜야 되고 또 바꾸더라도 너무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람.</p> <p>○ 동의함.</p> <p>○ 본인이 건설적 비판을 할 때는 단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적 성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설적 우호적 비판을 한 것임.</p> <p>○ 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함. 다만, 자유주의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p> <p>○ 정확히는 모르나 경제학 교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돼서 감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음. 감세에 대하여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임. 또한 감세를 할 경우 부유한 사람들이 득을 보므로 결국 부와 빈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함.</p> <p>○ 다른 것과 따져봐서 생각을 해야 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쟁국보다 높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p> <p>○ 우리 경쟁국보다 규제가 높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p> <p><b>【용산사건】</b></p> <p>○ 용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하여야 하고,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하며, 수배자들이 추석 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줘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후보자는 용산참사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경찰과 서울시가 반발하면 해결할 의향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p> <p>○ 용산사태는 현정부를 공안정부로 가는 정부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때, 사례로 드는 경우임.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용의는 없는가?</p> <p>○ 후보자는 용산참사에 대하여 “화염병이 참사 원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p> <p>○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이 되면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들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는가?</p> <p><b>【서민정책】</b></p> <p>○ 총리 지명을 수락하신 다음에 친서민정책으로서의 미소금융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하는데, 혹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p> <p>○ 지금 이 마이크로 크레딧(미소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함.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그리고 이 미소금융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총리가 되신다면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p> <p>○ 개인채무탕감제도를 과도하게 이용한다거</p>	<p>○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그러함.</p> <p>○ 총리에 임명된다면 빨리 유족들을 만나는데까지는 확실히 약속을 드리고, 지금 저에게 주문하는 것은 경청을 하고 의논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음</p> <p>○ 총리로 임명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 용산참사의 유가족들과 만나서 현실을 파악하겠음.</p> <p>○ 정말로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겠음. 총리가 되면 용산의 유가족들과 한번 만나서 위로를 해드리고 실상을 파악하겠음.</p> <p>○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부분을 써놓은 것임.</p> <p>○ 유족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실상을 살펴볼 생각임.</p> <p>○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음.</p> <p>○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만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서민금융 또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관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음.</p> <p>○ 본인은 아직까지도 패자 부활전이 좀 있어</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나 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p> <p>○ 만약에 1억의 빚을 졌다, 그것을 유예를 시켜 주는 것임. 평생 갚아 나가라, 이런 것은 되지만 그것을 아예 소멸을 시켜 준다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p> <p>○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서민 정부로 평가받으려면 최소한 네 가지가 있어야 됨. 첫째는 부자 감세 철회. 두 번째는 재벌에 대한 잘못된 정책, 재벌에게 텔레비전 방송국 주고 또 은행 주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 허용하는 것 고쳐야 되고, 세 번째는 내년 예산, 엄청난 팽창예산임. 그것도 국가 재정이 거덜 나 가지고 국가 빚이 400조가 넘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년 재정 고쳐야 되고, 그리고 서민들 주택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함.</p> <p>○ 서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명을 받으시고 또 그 이전에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듣고 싶음.</p> <p>○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실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p>	<p>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음. 신용회복위원회를 패자부활전의 기회로 삼고 그 대신에 다른 면에서는 아주 엄격한 금융 집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훌륭한 신용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임.</p> <p>○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임.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큰 금액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는 요새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미소금융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함.</p> <p>○ 예, 충고의 말씀 대단히 감사함.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그냥 허수아비는 하지 않을 것임. 기대해 주시기 바람.</p> <p>○ ‘전세난’에 대해서는 역시 방법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함. 동시에 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수요 측 정책도 있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과 차선에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함.</p> <p>그리고 청년실업과 관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를 좀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함.</p> <p>○ 비정규직이 2년 후에 꼭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법은 반드시 옳지는 않았다고</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게 된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p> <p>○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가져오게 된 노동 시장,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p> <p>○ 2기 내각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서민·빈곤층 대책이 될 것이고 그것에 찬성하셔서 총리후보자로 수락한 것인지 확인 요청</p> <p>○ 서민·빈곤층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려서 또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다음에 서민·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되고 이것이 서민·빈곤층 대책의 요체라고 생각함</p> <p>○ 후보자가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서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그리고 재정지출에서도 토목보다는 중산층, 서민층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훨씬 더 중요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p> <p><b>【규제완화】</b></p> <p>○ 후보자가 쓴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저서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를 강하게 주장하셨음. 그런데 현 정부가 재벌에게 은행도 주고—은행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텔레비전 방송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p>	<p>생각함. 단지 어떤 회사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정도에서 정해 주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또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임금을 주고 이런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함.</p> <p>○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서서히 없애고 그 대신에 정규직, 각 직장 에서 정규직의 비중은 높이고 동시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p> <p>○ 예, 그러함</p> <p>○ 동의함.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업을 얻어서 돈을 벌도록 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p> <p>○ 그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음.</p> <p>○ 미디어법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음. 금산분리에 관해서는 그 책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것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금산분리의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음. 지금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총리가 되시면 그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p> <p>○ 금산분리를 세계에서 가장 약하게 완화했는데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음. 몇 % 지분을 가져야지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p> <p>○ 소유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음.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4%를 10%까지만 한 것임. 야당이 반대를 해서 타협해서 9%로 낮췄지만 그 대신에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많이 도입했음.</p> <p>○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후보자는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가 지금도 소신인가</p> <p>○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는 ‘재벌은 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오늘날 정경유착은 이미 사라졌고, 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p> <p>○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몇 가지 기고문에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저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금산분리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한 후보자 의견</p>	<p>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법이 4%에서 9%로 났으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p> <p>○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제가 교수의 입장이었을 때로 말씀드리자면 퍼센티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 여러 재벌들이 힘을 합하면 그냥 재벌의 은행으로 만들 수도 있음.</p> <p>○ 사후적 감독 또는 사후적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p> <p>○ 지난 50년 동안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이 한 역할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부작용도 또한 많이 있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임.</p> <p>○ 그것이 있으나 마나 큰 차이가 없었던 법으로 알고 있음.</p> <p>○ 경제학자로서는 아직도 소신이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생각 중임</p> <p>○ 금산분리 완화나 은산분리 완화의 장점도 있으나 잠재적으로 입는 피해가 많이 있으므로 총리로 취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음</p> <p>○ 금산분리 완화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건전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데 대한 후보자 의견</li> <li>○ 은행은 아니고 다른 비은행권들 아닌가</li> <li>○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 완화해 나가자는 것인데 반대론자들은 신자유주의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간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대한 후보자 견해</li> <li>○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두 가지 정책 추진 중임. 하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서민대책을 강화하고 있음.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요청</li> <li>○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가능하면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지원은 서민층이나 중소.영세 기업에 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사전적 규제는 경쟁국보다는 높지 않게 해야 되고 사후적 규제는 일벌백계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한 후보자 견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li> <li>○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의 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은행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미 법은 통과했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기에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음.</li> <li>○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규제는 미국보다 당연히 훨씬 강한데,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에 관해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관행을 보면 금융과 산업의 분리와 관한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음.</li> <li>○ 그것은 오랫동안 근대국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마당에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좀 배우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이자율을 낮추어 주었던 것과 비슷함</li> <li>○ 경쟁을 촉진하고 권장하되 경쟁에서 뒤진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li> <li>○ 사후적 규제에 대해서, 어떤 사후적 감독에 대해서 자신만 있다면 사전적 규제는 없앤다, 또 줄여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후적 감독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사전적 규제를 마구 없애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b>【금융정책 관련】</b></p> <p>○ 후보자는 어느 때쯤 경제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출구전략은 어느 때쯤 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p> <p>○ ‘총리가 되신다면’ 하는 전제하에서 후보자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p> <p>○ 최근에 한국은행법 개정 특히 한국은행에 조사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p> <p>○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단기투자자본이 환율시장을 교란시키고 환율 차익을 보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p> <p>○ 금융기관장들의 과도한 인센티브에 상한을 두는 것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지금 우리 시스템이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을 담당을 하고 기재부는 국제금융을 담당을 하고 있음. 어느 한쪽으로 모아야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지?</p> <p>○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는가</p>	<p>○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는 참 말하기 힘들. 출구전략을 마련해 뒀다가 어느 때가 적당한지 현명한 판단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출구전략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p> <p>○ 금융감독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세계 전체가 금융감독을 강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것을 주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p> <p>○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얼마큼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좀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 의견을 피력하겠음.</p> <p>○ 아직 총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총리가 환율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그것의 높낮이 또 그것을 움직이는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p> <p>○ 총리가 환율이나 이율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p> <p>○ 교수 때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었는데 역시 총리후보자로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삼가겠음.</p> <p>○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서 듣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음.</p> <p>○ 미국 경제의 근본 원인은 생산보다 소비가 많다는 것, 소득분배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놓고 한국은행하고 정부하고 상당히 상충된 의견이 있는데 대한 후보자의 의견.</li> <li>○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돈은 없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우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데 지금 갑자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뛰고 이렇게 하니까 과감하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li> <li>○ 우리나라 경우에는 확일적으로 더 이상 6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신용이 우량한 분들도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하는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li> <li>○ 한국은행에 대해서 거시금융 감독 기능을 좀더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권한과 역할을 주자고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 했고, 또 제한적 범위 내에서나마 단독 조사와 검사권을 부여했음.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종의견을 요청함</li> <li>○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 맞이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G20에 속한 나라들은 감세, 재정 지출, 재정 지출에서도 토목과 중산층.서민 지원,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통화량 증발, 이 모든 정책을 동시에 다 썼음.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후보자처럼 어떤 게 더 효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미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므로 분에 맞는 경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li> <li>○ 국민들이 총리로 임명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음</li> <li>○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묻지마 대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소득도 안 물어보고 직업도 안 물어보고 대출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경우는 그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년간 DTI나 LTB 같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그나마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함</li> <li>○ 결국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하나는 은행원들이 대출받아가는 사람의 신용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좋은 뜻에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했을 때 유동성이 넘쳐흐르면 한국 경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됨</li> <li>○ 한은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단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성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음</li> <li>○ 지금은 세계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들 함. 오바마 정부를 보더라도 재정 지출도 늘리고 세금도 줄이고 돈도 더 뿌리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 미국뿐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대개 그렇게 하고 있음. 감세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상적</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적인가,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이, 그중에서도 토목보다는 중산층·서민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모든 정책을 다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질의</p> <p><b>【개헌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제 또 의원 집정부제 그 다음에 4년 연임인 정·부통령제 중 어느 것이 가장 현실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li> <li>○ 개헌에 관하여 후보자는 본인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소신 있게 장단점에 대하여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li> <li>○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이든 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개헌논의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li> </ul> <p><b>【공무원 노조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그 여부가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람.(이혜훈 위원)</li> <li>○ 한승수 총리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해서는 안되는 부당한 노동행위이고 이는 처벌대상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li> <li>○ 민노총에 가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li> </ul>	<p>인 상황에서는 역시, 감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임. 또 재정 지출 중에서도 당장 토목공사하는 것보다는 역시 R&amp;D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쓰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헌문제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통령제 4년씩하고 연임 가능하든지 내각책임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li> <li>○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음. 공개석상에서는 삼가도록 하겠음.</li> <li>○ 어제 그 보고를 받았습시다라는 아직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음.</li> <li>○ 고뇌를 아직 안 해 보았으나 앞으로 해 보겠음</li> <li>○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 한승수 현 총리는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함. 이에</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공무원노조법 4조에 의해서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법의 집행을 정확하게 하겠다든지 아마 그런 의지의 표명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음</p> <p>○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였음. 우리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근로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내정자가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단결권과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혼동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이 너무 개념이 없으시면 총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함.</p> <p><b>【교육정책 관련】</b></p> <p>○ 우리나라 교육이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 식이었다면 현재는 '대치동에서 이무기 난다'로 바뀌었을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천편일률식 대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이라고 보며, 고교평준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본고사를 치르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내년이면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됨. 전 세계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데는 대한민국뿐임을 알았는지 질의</p>	<p>대해서 민노총은 부당한 권리침해행위라고 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음.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활동과 단체행동을 많이 하는 민노총 가입은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공공의 안정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가 먼저라고 생각함</p> <p>○ 지금부터 좀 더 공부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음.</p> <p>○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하여 자율성이 있다고 보며 한국의 교육이 이제라도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함</p> <p>○ 몰랐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만약에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고 임명제가 도입된다면 직선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지 의견요청</p> <p>○ 대학에 입학하기 쉽게 문호를 좀더 많이 열어주고 그 대신 대학에 와서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해서 졸업할 때는 일정 학점 이상이 된 학생에 한해서 졸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문은 많이 열어 놓고 졸업은 좀 엄하게 함으로 해서 좋은 대학, 시설 좋은 학교에서는 그만큼 학생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의 중심을 대학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정부 교과부에서는 그러한 학과 중심에서 특성화 쪽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대학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요청</p> <p>○ 현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교육 등 입시준비를 부추기고, 입시의 공정성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p> <p><b>【FTA 관련】</b></p> <p>○ FTA의 기준을 눈앞에 두고 있고 미국이 자기 나라 사정은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FTA에</p>	<p>○ 교육감은 시장 또는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음.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게 좋은지 임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드리겠음</p> <p>○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둘을 뽑자면 사교육과 전세난이 아닌가 생각함. 사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교육을 좀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동시에 공교육을 좀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 대학을 지금보다 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함. 동시에 걱정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대학을 직업양성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므로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경제인데 이러한 경제에서는 이제는 대학을 직업양성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학문 또는 기술을 길러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떤 대학은 오히려 정원을 좀 줄여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함. 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학을 좀더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찬성이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p> <p>○ 입학사정관제 자체는 좋지만 규모가 너무 커지면 부작용이 커져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함.</p> <p>○ 경제학자로서 FTA에 대해서 찬성임. 그러나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또 비준할 때는 국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된다고</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대해서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국이 FTA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소신이 무엇인지?</p> <p><b>【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고 국회 특위에서는 법안이 계류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li> <li>○ 지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li> <li>○ 지금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li> <li>○ 어떤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li> <li>○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li> </ul>	<p>생각함. 그래서 지난번 체결되기 바로 전에 쌀은 예외로 하고 개성공단의 물건은 국산품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기고한바 있음. 미국과 캐나다나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서 모든 경우에 다 미국이 캐나다하고도 멕시코하고도 이겼음. 그러니 우리가 아주 세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음.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는 것하고, 또 동시다발적 FTA 이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함. FTA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FTA가 우리나라 먹여 살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에 경기도 몇 도시들이 서로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의 효율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확장을 하자면 지역주의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li> <li>○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별로 못 하고 있음.</li> <li>○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함.</li> <li>○ 각 지방에서 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나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아주 활발하게 내고 있음. 그런 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 분권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함.</li> <li>○ 지방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함.</li> </ul>



#### (4) 기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리 자리를 발판 삼아 나중에라도 기회가 생기면 당적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대선후보가 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li> <li>○지금 초.중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해서 징계위에 회부되고 있음. 과연 국가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국가에서 자의적 내지는 건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li> <li>○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이미 얘기를 하였는데 법률에 대하여 ‘문헌해석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업무는 아예 금지되는 것이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비영리 직무라도 겸할 수 없다는 것임.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해석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두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겸직 문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조에 따라서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허가를 안하는 경우와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전혀 없는 사안임.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선후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음.</li> <li>○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잘 모르겠음. 대학교수는 그 정도의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었음.</li> <li>○ 문헌 검토를 더 해보겠음.</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는 언론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시장 만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 이런 경고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나, 좌파나 진보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시장만능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나 금방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될 것처럼 비판하고 있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가?</li> <li>○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정부 중에서 신자유주의적·시장만능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져 본 정부가 있는가?</li> <li>○ 보통 좌파학자들이 신자유주의로 언급하는 것은 미국식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를 의미하고 있음. 그것도 완전한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가까운 것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해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 성격상 그런 것을 허용할 수가 없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강한 나라이므로 이를 조금씩 완화해 가자는 것임. 그런데 마치 많은 학자들이 당장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 경제체제를 따라가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생각함.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 폐쇄경제하에서의 경제력 집중과 완전개방 경제하에서의 경제력 집중은 다름.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일 수 있으나 세계 경제에서는 독점이 아닐 수 있음. 또한 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쳐 왔음. 옛날 97년도 재벌과 지금 재벌은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li> <li>○ 시장주의자들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음, 시장주의자라고 해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규제를 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나쁨이라고 생각함.</li> <li>○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li> <li>○ 교수들이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규제의 강약을 떠나서 한국에서의 경제력 집중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함.</li> <li>○ 동의함. 그동안 구조조정도 많이 해서 영업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고, 현금도 많고 해서, 물론 도태된 그룹도 있지만 훨씬 상황이 좋아진 그룹이 많이 있음.</li> <li>○ 알겠음. 그 원인은 본인이 보기에 자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투명성이 부족해서 오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봄.</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되 적절하게 하고 그게 지나치면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음. 규제 완화에 대한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의 부정확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논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p> <p>○ 우리는 천연자원 없이 수출로 사는 나라이므로 개방 확대는 계속 필요하지 않은가?</p> <p>○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p>	<p>○ 동의함.</p> <p>○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함.</p>

(5) 증인, 참고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b>【4대강】</b></p> <p>○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둘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있는 교량에 손을 가해야 되는 정도가 둘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p> <p>○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둘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있는 교량에 손을 가해야 되는 정도가 둘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p> <p>○ 4대강과 대운하는 수심의 차이가 나는지?</p> <p>○ 보의 규모와 그 보의 형태에 있어서 4대강과 대운하는 차이가 나는지?(차명진 위원)</p>	<p>○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좀 차이가 남.(박창근 참고인)</p> <p>○ 한강에는 지금 한 66개 정도, 낙동강도 66개, 합쳐서 한 132개 교량이 있음. 운하가 되는 경우에 한 4분의 1 정도를 전면 보수를 해야 됨. 그다음에 나머지 반 정도는 기초를 보강해야 되고, 나머지 반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한 반 정도를 기초만 보강하면 됨. 우리가 전면 개축이라는 것은 거의 신설 수준인데 이 4대강 사업에서는 하천에서 바닥만 일부 보강만 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4대강과 대운하에서는 벌써 교량에 대한 어떤 부분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음.(심명필 참고인)</p> <p>○ 낙동강의 길이 하면 거의 한 400, 500킬로가 됩시다만 어디까지를 우리가 주구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도 힘들. 부산에서 출발해서 구미까지 구간은 한 6m 수심을 유지함. 구미에서 상류는, 예천 밑에 정도 되는데 4m를 수심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안동댐까지 가는 데는 한 2, 3m 정도를 유지함. 그래서 일률적인 6m 수심을 유지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계획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심명필 참고인)</p> <p>○ 보의 높이는 낙동강은 한 10m, 12~13m가 맞습니다마는 영산강이라든지 금강 쪽은 보의 높이가 10m가 되지 않음. 대운하를 하는 경우는 보의 개수를 줄이는</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4대강과 대운하를 하면서 굴착을 함. 차이가 있는지?	게 더 유리함. 보의 높이를 더 높여서 물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보 개수를 총 16개로 한 이유는 가능하면 수심을 낮게 하고 또 큰 배가 다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됨.(심명필 참고인)
○4대강과 대운하를 하면서 굴착을 함. 차이가 있는지?	○물량을 보면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물량이 8억t을 한다 그랬음. 지금은 5.7억 m <sup>3</sup> 인데 비중량을 곱하게 되면 9억t쯤 됨. 준설하는 물량은 오히려 한반도 대운하 때보다도 1억t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준설하는 고 하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4.4억m <sup>3</sup> 를 준설하는데 부산에서 안동까지가 330km인데 폭을 200m로 해 가지고 깊이 평균적으로 6m를, 그러니까 330km 구간을 폭을 200m로 해서 깊이를 평균 6m로 쭉 다 파야 4.4억m <sup>3</sup> 가 됨.(박창근 참고인)
○4대강과 대운하를 하면서 굴착을 함. 차이가 있는지?	○일부에서 6m를 판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과 다름. 일례로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6m를 파지 않음. 수심을 6m 유지하는 것은 보의 높이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준설하는 깊이는 평균 1.3m임. 그다음 다른 강은 1m가 되지를 않음. 그래서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함.(심명필 참고인)
○4대강에서 대운하로 바꾸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은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음.(박창근 참고인)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준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낙동강에 수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지?	○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높이 차이를 조정하려면 새로운 설계와 비용,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된 자료는 없음.(심명필 참고인)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가 필요한 지?	○보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홍수라든지 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그러기 위해서 준설까지 같이 필요한 것 인지?</p> <p>○ 홍수와 가뭄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와 준설이 꼭 필요한지?</p> <p>○ 가뭄을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모자라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인지?</p>	<p>그러다 보니까 물을 모으면 혹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9조 원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임. 이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은 아님.(심명필 참고인)</p> <p>○ 준설은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기존의 제방이라든지 댐 쌓는 대신에 새로운 개념으로 오랫동안 쌓여 있던 흙을 제거하는 것임.(심명필 참고인)</p> <p>○ 홍수도 막아야 되고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물도 확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함. 그렇지만 그것은 본류 구간이 아니고 지류 구간임.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10명의 인명 피해와 2300억 원의 홍수 피해가 났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지류에서 났음. 그리고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홍수 피해액의 3.6%가 국가하천에서 일어났고 나머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났음. 그러니까 본류에다가 홍수 공간을 많이 확보해 봤자 지류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전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박창근 참고인)</p> <p>○ 기후 변화라는 것은 결국 가뭄과 홍수, 물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예전과 달리 지금 이런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 그래서 홍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뭄이라든지 물 부족 문제, 물은 수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음. 2006년도 당시에 세운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2016년도에 한 10억 m<sup>3</sup> 정도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 자료들만 해도 지금은 대폭 수정이</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p> <p>○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서 가동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 후보자께서는 준설공사는 일단 시작을 해도 속도조절을 통해서 신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준설을 먼저 시작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또는 준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내용이 있는지?</p>	<p>필요한 그런 상황임.(심명필 참고인)</p> <p>○ 통계 자료를 너무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현상을 말씀드리면 낙동강과 한강 유역에 지난 30여 년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안동, 구미, 대구, 김해, 부산, 양산과 같이 대하천 옆에 있는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한 적이 없고 독극물 및 수질오염 때문에 제한급수를 했음. 그래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부터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 62개 시.군인데 이것은 전부 산간 농촌 도서 지역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정부의 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이 400만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산간 농촌 지역, 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임.(박창근 참고인)</p> <p>○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로 들어서는 보 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영산강 하구언도 보라고 볼 수 있음. 영산강 하구언도 가동보임. 그런데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하천바닥, 그러니까 영산강 보 바로 위에 저질을 떠보니까 썩어있고 거의 무산소, 산소가 하나도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었음.(박창근 참고인)</p> <p>○ 제가 어제 남한강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해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남한강 같은 경우도 대규모 준설이 일어남. 그런데 문제는 준설을 하고 다음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는데 그것이 팔당상수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돼 있다는 것임. 다시 얘기해서 준설이 필요하고 보를 설치해서 수질이 개선된다</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p> <p>○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는 수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p> <p>○ 낙동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줄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은데 재해예방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또는 낙동강의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은 지금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계획된 것인지?</p> <p>○ 참고인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음. 4대강이 기술적으로 대운하로 가기 어렵다고 보는가?</p>	<p>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박창근 참고인)</p> <p>○ 4대강 살리는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음. 현재 방향은 전혀, 조금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속도만 내고 있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4대강 살리기를 제대로 하자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카운트파트너로 같이 앉아 가지고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혀 그러한 논의가 없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임. 22.2조 원의 국책사업이 이와 같이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할 경우에는 만약 그것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되었을 경우에는 환경파괴 그리고 엄청난 국가재정낭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박창근 참고인)</p> <p>○ 정의하기 나름입니다만 당시의 계획에는 신설 수로가 포함이 돼 있었음. 갑문과 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없음.(심명필 참고인)</p> <p>○ 낙동강 혹은 한강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는 기존의 계획도 있고, 하천기본계획 등 국가에서 정하는 많은 계획들이 이미 있음. 계획은 오랫동안 세워왔고 다만 예산 관계로 실질적인 집행은 별로 없었음.(심명필 참고인)</p> <p>○ 본인은 운하 1단계 내지 전 단계라고 봄. 2008년 말에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하의 보 높이는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섰는데</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운찬후보자는 ‘산림녹화를 50년 동안 해서 성공했듯 이제는 강을 정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참고인은 어떻게 보는가?</li> <li>○ 4대강 살리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 2001년이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태풍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기간 동안 4대강 범람 또는 홍수 등등 피해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 복구액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파악하고 있는 통계가 있는가?</li> <li>○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5년간 예방 투자 1.1조, 피해는 2.7조, 복구액은 약 4.2~4.3조에 달하고 있음. 결국 연 평균 하천 범람이나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예방투자액은 연간 5.5조~6조에 달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의 목적중 하나가 재해 예방 아닌가?</li> <li>○ 두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첫째는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임. 다음은 사업시</li> </ul>	<p>10m~14m 가까이 됨. 작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운하를 염두에 둔 보 설계임. 또한 운하를 하게 되면, 6m 수심을 확보하게 되는데 낙동강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6m 수심을 유지함. 운하가 아닐 경우 그렇게 수심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박창근 참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녹화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음. 그것은 친환경적인 국토개조사업이었음.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보를 설치하고 거의 하천을 다 끊어내는 정도의 대규모 준설로서 반환경적임. 2년만에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함. 엄청나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박창근 참고인)</li> <li>○ 우선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물 문제 해결이 첫 번째임. 다음은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또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음.(심명필 참고인)</li> <li>○ 피해가 한 1.7조 정도 되고, 복구하는데 연 평균 약 2조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심명필 참고인)</li> <li>○ 그러함.(심명필 참고인)</li> <li>○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수질악화</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질 개선에 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임.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p> <p>○ 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차단되면 침체된 물이 썩고 오염이 가속될 것이라라는 지적이 있음.</p> <p>○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가?</p> <p>○ 한강개발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가?</p> <p>○ 한강 개발이 낙동강 내지 4대강 살리기의 선행 모델케이스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p> <p>○ 한강 개발 이전에 가장 큰 홍수 피해를 본 시기는 언제인가?</p> <p>○ 개발사업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가?</p> <p>○ 고수부지 등 수변공간의 활용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레저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p>	<p>의 문제만 하더라도 준설과 보를 쌓아서 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할 것임.(심명필 참고인)</p> <p>○ 한강에도 2개의 수중보가 있는데 수질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음. 또한 4대강에 설치하는 보들은 수문이 달려있는 가동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됨.(심명필 참고인)</p> <p>○ 짧은 기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왔음. 또한 실질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총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심명필 참고인)</p> <p>○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가진 적이 있음.(심명필 참고인)</p> <p>○ 일부 홍수에 대비한다든지 일부 물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심명필 참고인)</p> <p>○ 역사상 한강의 제일 큰 피해는 1925년도의 을축 대홍수임. 한강은 수년에 한 번 정도 피해를 겪었음.(심명필 참고인)</p> <p>○ 피해는 많이 줄었음.(심명필 참고인)</p> <p>○ 일종의 다목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음.(심명필 참고인)</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화강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수 있는가?</li> <li>○ 태화강 사례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화강의 일부를 준설하고, 여러 가지 하수처리 등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심명필 참고인)</li> <li>○ 태화강은 분명히 5급수에서 2급수로 살아났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된 준설토를 걷어낸 것임. 거기에 왜 오염된 준설토가 있었는가 하니 거기에 방사보가 있었음. 보가 하나 설치돼 있었는데 오염물질이 바다로 못 나오고 쌓였던 것임. 그래서 태화강의 오염물질을 걷어내고, 다음에 방사보를 철거 한 것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사보를 철거했고 오염물질을 걷어냈다는 건데 지금 현재 한강 낙동강 같이 4대강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에 모래가 잘 살아있음. 극히 일부 구간만 오염돼 있다는 것임. 그래서 준설을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봄.(박창근 참고인)</li> </ul>
<b>【용산 참사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월 20일 새벽 용산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한 일이 있고, 그 곳에서 6명이 사망하였음.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찾아와 사과나 또는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li> <li>○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li> <li>○ 지금도 책임은 무조건 철거민들에게만 돌아가고 경찰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음. 이런 현실을 볼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차례도 없었음.(권명숙 참고인)</li> <li>○ 생존권·주거권을 외치고자 마지막 선택한 것이 망루였음. 한 차례의 대화도 나눠보지 않은 채 공권력으로 저희를 탄압했던 것임. 강경진압으로 무고하게 6명이 희생됐음. 안타깝게 생각함.(권명숙 참고인)</li> <li>○ 모든 탄압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영안실에서 8개월을 지내고 있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마다 도대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떠한가?</p> <p>○ 정부나 서울시와 대화가 전혀 없는가?</p> <p>○ 유가족이 병원에서 또는 용산에서 나서서 어딘가 가려고 하면 경찰들이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말을 들었음. 사실인가?</p> <p>○ 여러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8개월이나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정말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p> <p>○ 신부님들이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 천막을 부수고 신부님들을 폭행했던 일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p> <p>○ 참고인은 용인에서 노점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용인 수지의 개발을 계기로 해서 용인 전철연에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권명숙 참고인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느끼고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싸우신 것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이번에 용산범대위에 같은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가?</p> <p>○ 크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농성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합 측에서의 세입자 보상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무리하게 개입해서 진압을 해서 인명살상까지 왔다는 것 아닌가?</p>	<p>임.(권명숙 참고인)</p> <p>○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정부 측에서는 조합과 유가족 간의 일이라고만 하고 있음. 사인간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공권력으로 철거민들을 탄압하였는지 모르겠음.(권명숙 참고인)</p> <p>○ 사실임. 공권력으로 경찰들이 뒤를 밟고 있음. 하물며 유가족을 한 점, 두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저희의 사생활까지 노출되고 있음.(권명숙 참고인)</p> <p>○ 없음. 정부에서 돌아오는 것은 탄압뿐임.(권명숙 참고인)</p> <p>○ 사실임. 심지어 연로한 문정현 신부한테까지 '네가 신부냐?'는 마구잡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음.(권명숙 참고인)</p> <p>○ 함께하고 있음.(권명숙 참고인)</p> <p>○ 그러함.(권명숙 참고인)</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지난 6월, 8월에 한국교회봉사단의 중재로 범대위하고 조합 측 간의 합의안을 거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망자 1인당 4억원씩 보상하고, 상가 우선 분양권을 5개 주며, 전철연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감정평가액의 150%를 지급하기로 하고, 삼성건설의 다른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2개 주기로 가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맞는가?</p> <p>○ 알기로는 가합의를 봤는데 범대위에서 추가로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보장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 때문에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 사과는 대통령이 2회 하였으며, 임시상가나 임대상가는 그 공사현장은 좀 어려우나, 다른 곳은 가능할 수 있음.</p> <p>○ 용산참사의 유가족으로서 후보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기 바람.</p> <p><b>【yes24 겸직금지 의무 위반 관련】</b></p> <p>○ 후보자가 YES 고문 겸직허가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해 온 적이 있는지, 뭐라고 답변하셨는지?</p> <p>○ 현재 서울대학교 인사지침이나 규정상 고문직에 대한 겸직허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는지?</p>	<p>○ 전혀 아님. 함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음. 저희는 들은 적 없고, 액수 문제나 상가 얘기도 전혀 들은 적이 없음.(권명숙 참고인)</p> <p>○ 아이들과 함께 가정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고, 추석 안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음.(권명숙 참고인)</p> <p>○ 후보자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걸로 보서는 총장 임기 끝나고 나서 언제쯤이지 않을까 생각함. 현재 학교에서 겸직허가를 하고 있는 게 사외이사나 벤처기업의 이사나 감사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감사 직책에 관한 건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고 겸직허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고문 같은 자문위원 활동 그런 건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음.(이혜경 증인)</p> <p>○ 없음.(이혜경 증인)</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운찬 후보자께서 예스24의 고문직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신청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는지? 그래서 신청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li> <li>○ 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청 대상이 서울대 규정에 특정돼 있기 때문인지? 상장법인 사외이사, 벤처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고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li> <li>○ 겸직해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지?</li> <li>○ 후보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교육공무원법 위반됐다는 게 아님. 서울대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입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한 포지티브한 규정임. 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은 상장법인 사외이사고 벤처기업의 임원과 직원임. 이해경 증인님 맞는지?</li> <li>○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li> <li>○ 후보자가 만약에 영리회사 고문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는지?</li> <li>○ 증인은 언제부터 YES24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가?</li> <li>○ 정운찬 후보자가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고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함. 고문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같음.(이혜경 증인)</li> <li>○ 그러함.(이혜경 증인)</li> <li>○ 겸직해도 좋다는 답변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겸직허가를 하고 있는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함.(이혜경 증인)</li> <li>○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영리업무는 할 수 없고 다른 것들은 다른 직무를 겸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비영리법인에, 아까 말씀 나왔던 하나학원 같은 그런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이혜경 증인)</li> <li>○ 예, 그러함.(이혜경 증인)</li> <li>○ 고문 같은 것들은 교수님들이 자문위나 이런 활동은 많이 하실 것으로 봄. 그 고문이 자문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고, 이제 그것은 어떤 직무 아니면 책임,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닐 걸로 제가 생각을 했을 것임.(이혜경 증인)</li> <li>○ 본인은 이번 9월 1일부터 취임했음.(김진수 증인)</li> <li>○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김진수 증인)</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강연회 형태라든가 혹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가?</li> <li>○ 제출한 자료 외에는 아무 것도 안했는가?</li> <li>○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었는가?</li> <li>○ 증인은 근무한 지 얼마 안돼서 모를 테지만 그런 것 들어 본 적은 없는가?</li> <li>○ 제출한 자료 외에는 공식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인가?</li> </ul> <p><b>【병역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년 전후해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입영한 그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li> <li>○ 제가 찾아본 병무행정백서에 따르면 '구법상 징집연기라는 말은 일반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입영연기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신병역법에서는 징집연기라는 용어를 징병검사 연기로 바꾸었거니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요청</li> <li>○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의 해가 1967년으로 돼 있고,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 다음에 부선망 독자로 의가사로 징집을 23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집연기라 함은 입영연기가 아니라 징병검사 연기가 분명히 맞는지</li> <li>○ 정 후보자는 1970년에 징집연기 즉, 징병검사 연기를 한 번 받아 가지고 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으로 어떤 그러한 활동,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개적인 그러한 활동 외에는 없음.(김진수 증인)</li> <li>○ 그 외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없음. 회장님과 개인적인 어떤 자문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음.(김진수 증인)</li> <li>○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김진수 증인)</li> <li>○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함.(김진수 증인)</li> <li>○ 그러함.(김진수 증인)</li> <li>○ 총리령 44호에 의해서 실제 관계 병무관계 서류가 보존기간이 다 지나서 파기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 어려움.(박경규 참고인)</li> <li>○ 당시 병역법에서 징집연기로 표시돼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징병검사 연기차로 표시하기로 돼 있었음(박경규 참고인)</li> <li>○ 그러함.(박경규 참고인)</li> <li>○ 1970년도에 2차로 징병검사를 받게 됨.(박경규 참고인)</li> </ul>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징병검사를 받게 되는데 맞는지?</p> <p>○ 71년에 보충역으로 편입이 된 것이 맞는지?</p> <p>○ 1971년의 병역법에 의하면 '가사 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및 입영 등 연기' 해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아서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지?</p> <p>○ 정 후보는 징병검사 결과 1을종이었기 때문에 보충역에 편입된 것인지?</p> <p>○ 78년까지 유학생활동을 했고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 체재 중인 자는 그 소집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확인</p> <p>○ 소집을 보류한다라는 말은, 또 여기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보류라는 말하고 연기라는 말이 다른 것인지?</p> <p>○ 후보자가 '통지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p> <p>○ 만일 이것이 연기라 하면 예컨대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연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후보는 연기가 아니라 아예 보류였다는 것인지?</p> <p>○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학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선망 독자의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규정이 맞는지?</p> <p>○ 후보자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p>	<p>○ 그러함.(박경규 참고인)</p> <p>○ 그러함.(박경규 참고인)</p> <p>○ 정확하게 표현하면 징병검사 결과 1종 체격등위를 받았지만 그해 말 종결처분에서 가사 사유, 그러니까 부선망 독자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것임(박경규 참고인)</p> <p>○ 당시 병역법에 방위 소집 대상자는 국외 여행 하거나 국외체재 중일 경우에 방위 소집 통지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돼있음(박경규 참고인)</p> <p>○ 연기는 어떠한 통지서가 나갔을 때 연기를 하는 것이고 보류는 통지 자체가 나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함.(박경규 참고인)</p> <p>○ 당시 병역법에는 보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지서가 나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함(박경규 참고인)</p> <p>○ 맞음.(박경규 참고인)</p> <p>○ 70년도 12월 30일 공포된 병역법에 의하면 부선망 독자 보충역의 경우에는 기간에 불문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박경규 참고인)</p> <p>○ 70년 12월 30일 공포된 병역법에서는 부</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오면 입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의혹에 대한 해명</p> <p>○ 이론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후보는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알고 또 충분한 여비가 있어서 들어왔다 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는, 또는 병역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인지?</p> <p>○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라는 내용을 보면 1년 내에 통상 60일 이상의 급료를 받는 사람은 영리활동을 하는 자고 영리활동을 하는 자는 당장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규정인지?</p> <p>○ 후보자의 병역과 관련하여 71년도에 보충역으로 1급 을을 받아 보충역 방위에 편제되었음. 방위에 편제되면서 당장 방위를 받는 게 아니라 6개월 보류가 됐는데 미국으로 간 것임. 간 다음에 다시 와야 하는지, 다시 온 사례가 있는지, 사실상의 면제인지?</p> <p>○ 부선망독자에 대하여 병역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p> <p>○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으셨으니 아들이 남아서 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p>	<p>선망 독자의 경우에 국외여행 허가를 할 때 나머지 일반 자원들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24세 연령을 정해서 나갔지만 부선망 독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었음(박경규 참고인)</p> <p>○ 현재 병역법에는 중간에 일시 귀국했을 때는 문제가 없음. 그런데 당시의 병역법은 43년 전의 얘기라 서류들이 다 파기돼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음(박경규 참고인)</p> <p>○ 현재 병역법(당시의 병역법도 마찬가지임)은 국외 이주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사는 조건으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음. 그래서 36세 1월 1일부로 병역을 면제시킴. 다만 해외 이주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귀국해서 취업을 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부과함.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허가를 받고 나가서 영리활동을 하느냐의 여부는 병역법과는 관계가 없음.(박경규 참고인)</p> <p>○ 총리 후보자의 경우 부선망 독자 보충역이기 때문에 당시 법규에 따라서 국외여행 허가를 할 때, 기간에 불문하고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 71년도 당시에 국외여행 허가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국외 체재하는게, 그 이상 다른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박경규 참고인)</p> <p>○ 당시에 아마도 가게 보전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생각함.(박경규 참고인)</p> <p>○ 당시 병역법의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함.(박경규 참고인)</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는 것이 부선망독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근본 취지임. 맞는가?</p> <p>○ 부선망독자가 유학용 혜택은 아니지 않는가? 양자로 입적해서 법적으로 부선망독자가 되어 병역이 연기됐고, 그것으로 해외 유학 가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p> <p>○ 문교부령 제14조에서는 ‘해외 유학생은 그 유학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법 이전의 상식 아닌가?</p> <p>○ 최근의 법령을 추론해서 보면 박사과정은 28세가 지나면 병역미필자는 더 이상 해외에서 공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맞는가?</p> <p>○ 학위별로 연령제한을 해서 허가를 해줄 때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유학 후 귀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398명에 이르고 있다는데 대략 맞는가?</p> <p>○ 예전에 30세까지로 되어 있던 기준이 지금은 35세로 상향되어 있어서 35세까지 국내에 들어오면 병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p> <p>○ 참고인은 유학을 갈 때 병역을 필하고 갔는가?</p> <p>○ 함께 유학 갔던 학생들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채 온 학생들은 없었는가?</p> <p>○ 본인이 유학을 갔을 때는 병역을 필하지 않고 온 경우도 많이 있었으며, 병역 미</p>	<p>○ 본인은 병역 법령에 정한 사항만 답변할 수 있음.(박경규 참고인)</p> <p>○ 병역법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음.(박경규 참고인)</p> <p>○ 지금 현재 유학 허가를 할 때, 학위별로 그렇게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박경규 참고인)</p> <p>○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박경규 참고인)</p> <p>○ 말씀하시는 35세는 병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음. (박경규 참고인)</p> <p>○ 병역을 필하고 갔음.(전성인 참고인)</p> <p>○ 당시 해외유학 자유화 조치가 있어서 본인보다 먼저 떠난 대학교 4학년 때 수속을 해서 떠난 사람 중에는 병역 미필인 상태에서 유학을 간 사람들이 있음.(전성인 참고인)</p> <p>○ 정확한 절차는 모르나 일종의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서류를 제출하면</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필인 경우에도 보증인의 동의가 있으면 병무청장의 허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가?</p> <p>○ 병역 미필의 상태로 절차를 밟아 유학을 오는 것이 아주 희귀해서 특별한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의 어려운 일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는가?</p> <p>○ 미국에서 경제학박사를 하고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가?</p> <p>○ 부선망독자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자로 가면서까지 병역 기피를 획책했다는 얘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p> <p><b>【논문 표절, 이중게재 의혹 관련】</b></p> <p>○ 표절과 이중게재의 차이는 무엇인지?</p>	<p>그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음.(전성인 참고인)</p> <p>○ 본인 때는 그것은 특혜나 그런 사항보다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요건에 충족하면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함.(전성인 참고인)</p> <p>○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콜롬비아대학 조교수로 갔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시에는 더욱더 굉장한 성취라고 생각함.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단적인 방법으로 쉽게 채택하거나 사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함.(전성인 참고인)</p> <p>○ 본인이 아는 후보자는 병역비리문제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진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기 어려움.(전성인 참고인)</p> <p>○ 표절은 남의 표현이나 남의 지식을 자기의 것처럼 공연히 쓰는 행위를 말함. 즉 훔치는 행위임. 여기에서 자기 표절과 표절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 왜냐하면 자기 표절은 자기가 자기 것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표절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들어가 있음. 그래서 자기 표절과 표절의 기준이 엄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자기 표절의 기준과 표절의 기준을 혼동을 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학문의 발전에 저해도 되고 또 학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음. 다른 독자군을 상대로 할 때는 자기 것을 재</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네이처지에서 중복게재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화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사용하게끔 허용을 함.(독고운 참고인) ○ 예, 맞음.(독고운 참고인)

※ 제6차위원회(9.25)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발언 요지

위원명	발 언 요 지
강운태위원	○가계수지 분석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첫째, 후보자가 1차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4억 5,900만원이 총수지 증가액으로 제출된 반면, 2차 제출자료에서는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되어 총 1억 900만원의 차이가 있고, 둘째, 그 동안 후보자 측에서는 사업소득필요경비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세법상 의제된 경비라고 주장했으나 2차 자료에서는 2008년의 경우 실제 집행한 경비임을 인정하여 그 동안 허위보고했음을 자인하였으며, 셋째, 1차자료와 2차자료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 넷째,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산정방법도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음
나성린위원	○1차 제출자료와 2차 제출자료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인 것으로 보임.
차명진위원	○강운태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실수가 있는 것처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음
최재성위원	○국세청 제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의 주장이 허위임은 분명한 사실임
손범규위원	○위증죄는 고의범이므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것을 위증이라 할 수 없음
이진삼위원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문제가 있고, 후보자는 안보 문제 등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등 경솔한 판단을 하였는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바람

백원우위원	○임시회의록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가 회의 중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어서 이는 위증으로 보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경석위원	○위증여부에 대하여는 상반된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음
양승조위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선서를 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를 범했고 이에 대하여 의결을 해야 함
김금래위원	○회의록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의 주장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백원우위원	○후보자는 분명히 위증을 했으며, 이 문제의 핵심은 소득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어딘가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김동성위원	○후보자는 총리로서 인준되어야 하는바, 그 이유는 첫째,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언급되던 사람인 점, 둘째, 이 시대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 셋째, 하자보다는 능력과 장점이 크다는 점 등임
최재성위원	○위증문제는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고, 2차자료를 작성한 이정희 회계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함
강운태위원	○법률적 의미에서 후보자가 위증을 했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거짓말을 한 점은 사실임
권경석위원	○후보자가 착오에 의해 잘못된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시정하였으므로 위증을 했다는 확증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인마다의 주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수록하는 것으로 종결했으면 함
양승조위원	○위증 여부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면 함

손범규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의결은 필요없다고 봄
최재성위원	○후보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장전입, 1,000만원을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장남에게 미국 국적 포기 재고 권유, 아마추어 화가인 부인이 고가에 그림을 판매한 사실, 특히 가계수지에 대하여 거짓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는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과 흠결이 있는바, 이런 후보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야당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야당 위원들은 퇴장하겠음

## 5. 요약 및 종합 정리

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정운찬)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증을 하였는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통할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국정현안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과 자질, 병역기피의혹 및 국가공무원법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가계수지 관련 검증 및 소득세 등 세금의 누락신고 및 탈세여부 등 최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신상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인 세종시 건설 추진 방향과 4대강 사업, 감세정책,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문제, 금융감독 및 정책의 추진방향, 재벌정책 그리고 개헌과 지방행정구역 개편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 가.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

#### (1) 병역기피 의혹 관련

정후보자의 병역기피의혹과 관련하여 여야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병역기피의혹을 부인하는 논거로는,

첫째, 정후보자의 양자 입적이 1965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1967년의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부선망독자에 대한 징집연기 혜택과 무관하고,

둘째, 정후보자가 마이애미 대학 입학원서상의 병력사항을 연기가 아닌



면제로 잘못 기재한 것은 그 당시 미국의 월남전 참전상황(징병제)에서 미국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착오에 따른 것인바, 이러한 입학원서의 작성이 미국유학비자 발급 및 병역 연기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해외 도피성 유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셋째, 국방부 병무국장을 지낸 장인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하여 병무국장으로 장인이 68년에 재직하였고, 결혼은 73년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장인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넷째, '68년 부선망독자로 인한 병역연기와 '70년 재신검에 따른 보충역 을종(6개월 방위) 판정 및 '71년 병무청 정당한 허가를 거친 미국유학, 그리고 '77년 고령으로 인한 병역면제과정은 장인과는 무관하게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으며,

다섯째, 정후보자는 '70년 징병검사로 을종을 받고, 부선망독자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기간에 관계없이 취득하여 '71년부터 '78년까지 미국유학생활동을 하는 동안 소집보류로 분류됨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별도의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는,

첫째, 70년대에는 정후보자가 연령을 초과(23세)하여 부선망독자로 인한 병역혜택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70년 12월 마이애미 대 입학원서에 연기가 아닌 면제라고 허위 기재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피성 해외유학이라고 볼 소지가 있고,

둘째, 73년에 모친 사망시 귀국하지 않은 점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76년 콜롬비아대학의 조교수가 되어 유학비자가 취업비자로 전환되어 유학생 신분이 종료되었다면 교육부 규정에 따라 즉시 귀국하여 병역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고 콜롬비아대 조교수로 일하고 고령에 의한 병역면제 기준시점인 '77년 1월을 도과한 78년에야 귀국하여 고령에 의한 병역 면제를 받은 점은 적절치 못하며,

셋째, 설령 양자입적에 따른 부선망독자로 인한 보충역 편입과 해외유학시 고령에 의한 병역면제 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고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해외 유학과정 중 병역을 면제받은 점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해외 거주 유학생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욕을 저하시키는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넷째, 병역면제사유가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고령에 의한 면제가 아닌 부선망 독자로 인한 면제로 기재되어 있어 그 사유가 불분명하며,

다섯째, 후보자 장인이 국방부 병무국장과 주요 군사요직을 거쳐 병무관련 막강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병역이 면제('77년 1월)되는 시점까지 과연 병무청으로부터 소집통지서 연락이 실제로 없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2) YES 24 고문직 수행 등 겸직금지 관련

정후보자가 YES 24 고문직 수행이 국가공무원의 영리활동과 겸직금지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겸직금지위반으로 보는

근거로는,

첫째, YES 24로부터 22개월 동안 9,500만원을 급여대장의 봉급(근로소득)으로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은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고, 교육공무원법 특례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 사외이사과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결과, 영리기업의 고문직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국가공무원법 겸직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고,

둘째, 이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없는 고문직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학교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의 위반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며,

셋째, 정후보자의 모습이 YES24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홍보활동에 활용된 결과 기업의 영리활동에 관여하게 된 점은 대학 교수라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반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논거로는,

첫째, YES 24의 고문으로 받은 금액은 급여가 아닌 단순 자문에 따른 자문료에 불과하고, 1년 총액을 산정하여 월별로 단순 나누어 받은 것이며, 고

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공부원 법상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와 벤처기업의 임직원과 달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직무의 연속성이 없이 단순자문을 하는 고문직의 경우에는 대학총장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영리기업 고문직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상장법인 사외사와 달리 법률에서 겸직허용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을 받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음.

### (3) 가계수지 분석 관련

강운태위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근 3년간 정후보자 가계수지와 관련하여 수입(9억 100만원)보다 지출(9억 4,300만원)이 4,200만원이 많고, 금융자산이 3억 2,000만원 증가한 결과,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이 최소 3억 6,200만원 이상 존재하므로 총리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정후보자는 강운태위원의 자료에 나타난 필요경비(3년간 합계액 2억 8,175만원)는 실제 지출되지 않은 세법상 의제된 경비로서 실제 지출된 금액(추정)은 700만원으로 그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8,500만원)과 2009년도에 발생한 소득증가분(1억 2,000만원)까지 감안할 경우, 수입이 지출보다 4억 5,900만원 많아 금융자산 증가(3억 2,000만원)를 초과하여 소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이에 대해 강운태위원은 정후보자의 필요경비 등 소득 및 지출세부내역의 미제출로 인해 가계수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정후보자의 해명 중 인정할 수 있는 소득 증가는 2,930만원으로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소득 3억 3,270만원(3억 6,200만원-2,930만원)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이를 인사청문회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경과보고서의 중요증거서류를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국세청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작성한 소득신고 서류를 제출토록 촉구하였음.

#### (4) 재산등록 및 종합소득세 누락 및 탈세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소득세 누락 및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음.

- ① 대만 국립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2000\$ 종합소득세 누락
- ② 부동산 임대 소득, YES 24 고문직 수입(6,250만원) 종합소득세 누락 : 9월 15일 수정신고
- ③ 외국연구소 등에서 받은 강연, 세미나 수입, 자문료 소득(8,500만원)의 종합소득세 누락 : 9월 21일 수정신고(1,000만원 정도 납부- 외국에서 받은 소득도 한국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나 누락함)
- ④ 정후보자의 배우자 그림 판매 소득인 2004년 이후 6,156만원<sup>1)</sup>의 종합

---

1) 총 4점의 그림 가격이 아마추어 화가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과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 내역에 대해 밝혀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정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팔았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함.

소득세 누락(원천징수로는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누락되었으며 향후 사후 신고 계획)

- 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세 수입의 종합소득세 누락의혹 제기(정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되었다는 주장)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의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납세의무 해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내용으로,

- 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인세 1억 5,000만원중 7,980만원 재산등록신고에 누락
- ② 배우자가 창작한 미술품의 경우 500만원이상인 경우 재산등록을 해야 하나 누락(정후보자는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등록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밝힘)
- ③ 2006년 배우자 화실의 보증금 역시 재산등록에 누락

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5) Y모회사 회장으로 받은 금전(용돈) 관련

2008년 정후보자가 미국에 나갈 때 국정감사 위증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Y모회사 회장으로부터 2번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 청렴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서 파면에 해당될 수 있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며, 1,000만원을 소액이라 표현한 것이 일반 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부적절한 인식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해 정후보자는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없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솔했다고 시인을 하고, 돈을 준 Y모회장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소액이라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밝힘과 동시에 그 이외에 추가적인 수수가 있을 경우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임.

또한, 현 D그룹 회장이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당시 정후보자의 서울대총장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정후보자는 한 표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향후 총리직 수행에 D그룹과의 관계에 있어 부담이 되지 않는지의 지적에 대해 정후보자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6)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관련

지난 '88년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포천으로 주소를 옮긴 사유와 이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당초에 실제 주거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되돌아 왔다고 해명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음.



### (7)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후보자는 2002년말 방배동 아파트 분양권을 9억 9,500만원에 매입하고 1억 4,000만원(토지부분)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당시 기준시가가 2억 9,600만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례적으로 용인된다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낮춰서 신고한 것은 관례에 비추어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5,200만원이 탈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정후보자는 국토부 자료에 나타나는 가액은 법무사에 의해 신고된 것이고 이중 1억 4,000만원은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5년 재건축아파트 준공후에는 구청에서 일괄 고지 과세하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8) 논문의 이중게재관련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내가 본 한국경제-’97년 위기 이전과 이후”논문은 ’98년 서울대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의 50% 이상을 무단 인용하고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후보자는 정당한 이중게재라고 답변하고 표절을 부인하였음.

### (9) 정후보자 장남의 국적논란

정후보자의 장남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법정 기한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최근 총리 지명과정에서 장남의 미국 국적포기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상태

인 바, 한국국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음.

**(10) 삼성화재 관련 문제**

정후보자가 삼성화재의 비공개 자문위원을 맡은 적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후보자는 부인하였고, 삼성측으로부터 비공개 자문위원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안은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음.

## 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및 자질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탈이념적 실사구시적 방법론인 현정부의 “중도실용론”을 국정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및 빈곤층을 적극 지원하는 “친서민적 정책”을 시행해 줄 것과 사회위험과 갈등관리의 조정기능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이념·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총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인권 및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총리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가 있었음.

이에 대하여 정후보자는 현정부의 “중도실용론”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시장경제하에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적극 기여하는 한편, 민주주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국민의 기본 인권 신장을 위해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국무총리로서의 제청권, 해임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정후보자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국민에게 구할 것은 구하는 방식으로 총리로서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또한, 총리에 지명되기 전에 정후보자가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제철학

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경제철학의 차이로 인해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정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적 중도실용론”은 정후보자의 경제철학과 부합되는 것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 다. 주요 국정현안 및 정책과제 등에 관한 사항

### (1) 세종시 건설 관련

세종시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건설이 혁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서, 지난 정권 때 국민에 대한 약속과 함께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어 예산도 20%이상 이미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서 현재까지 그 건설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9부2처2청의 변경고시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총리의 기본 책무이며, 만일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원안을 바탕으로 교육·산업·복지 등의 측면을 보완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반면,

현재의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에 국가적인 행정의 비효율성과 국가 위기시에 국가안보의 위기공백에 대한 우려, 통일 이후의 수도이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유령 도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종시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되었음.

이에 정후보자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의 부족문제에 우려를 표명

하면서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되, 자족기능을 갖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범위 등을 포함한 세종시를 채우는 기본 구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총리가 되면 이런 논의를 진행시켜 변경고시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음.

## (2)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과 무관하며, 이를 통해 홍수 피해·복구비용을 절감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장래에 닥칠 물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단순 토목공사가 아닌 복합투자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으로 볼 소지가 있고,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본류 구간이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음.

이에 정후보자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과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거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를 통해 성공했던 것처럼 4대강사업도 우리의 훌륭한 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 (3) 감세정책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여당측은 현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은 우리 경쟁국들

에 비해 조세부담을 높게 하지 말자는 취지이며, 낮은 조세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기술 R&D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빈곤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소득분배문제를 고려하여 소득세율을 모든 소득계급구간에 대해 2% 낮추되,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인하는 내년 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강조하였음.

반면 야당측은 소득상위 계층이 조세부담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상위계층과 대기업에게 그 혜택이 주로 돌아가고,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율인하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인하를 유보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에 정후보자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감세는 경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계층을 위한 감세정책과 경제위기하에서 신축적인 감세정책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또한, 내년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보 요구에 대하여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 (4)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관련

용산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장례까지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정부, 그리고 총리후보자도 수사기

록의 공개와 보상 등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유족들을 만나서 실상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 (5) 교육정책

대학선발의 자율성 확보 등 대학입시개선방안, 사교육비 절감대책, 입학사정관제, 기여입학제 도입문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문제가 논의되었음.

#### (6) 주택정책

전세난 해소 대책이 논의되었음.

#### (7) 경제 및 금융정책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문제, 우리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정책, 개방 확대, 금산분리규제완화문제, 금융위기에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금융시장 질서 재편과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기능문제, 한·미 FTA 등 확대 문제, 환율·금리에 대한 조정문제 등이 논의되었음.

#### (8) 개헌 및 행정 정책

개헌 및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 확대 문제가 논의되었음.

(9) 노동정책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의 가입문제에 대하여 정후보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우선이므로 권고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공권력 개입문제가 논의되었음.

(10) 기타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명예훼손 소송문제



## 라. 공직후보자(정운찬)의 마무리 발언 요지

높은 경륜과 경험으로 청문회를 격조 있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정희수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 나성린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귀중한 충고와 대안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따끔한 질책과 편달 겸허하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위원님, 고향을 사랑하시는 마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과 해안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원칙과 대의를 지키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으면서도 때로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그리고 때로는 좀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흠집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이 반쯤 찬 유리잔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손쉽게 손가락질 하던 처지에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며 끌어 주고 밀어주는 역할로 제

입장이 바뀌더라도 훌륭한 시민이 되겠다던 학창 시절의 각오를 늘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봉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회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 갈등을 조정하고 양극이 균형을 이루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서민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큰소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낮은 곳을 보듬고 흩어진 민심을 한데로 모으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께도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정의화)의 마무리 발언 요지

오늘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이 조금 길니다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이틀 간 품격 높은 청문회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리 후보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내일의 천자보다는 오늘의 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래의 막연한 일보다는 비록 좀 모자라더라도 당장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더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가 한때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위원장 입장에서 내일의 천자 못지않게 당장 오늘의 재상이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다소 좀 과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매섭게 각종 의혹을 몰아붙인 것은 그만큼 오늘의 재상 자리가 절대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들은 정운찬 공직후보자에게 국정 수행 능력뿐만 아니고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운찬 공직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은 녹듯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동료 의원들께서 조만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가부를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운찬 공직후보자에게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로 겸허히 인정하시고 더욱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올린다면 국무총리로 인준되신다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관할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찬 공직후보자가 반추했던 곤궁했던 어린 시절처럼 이 순간에도 밥을 굶고 식사시간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삶의 끈을 놓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이들을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신다면 오늘의 재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오늘의 재상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재상으로 후보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운찬 공직후보자께서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고생하신 정부 관계자와 그리고 의원 보좌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경과(9월25일 제6차 위원회)

제6차 위원회(9월 25일)에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강운태 위원이 제기한 가계수지 분석 및 검증과 관련하여 여당위원들이 국세전문가로 추천한 이정희 공인회계사의 감정결과와 야당위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음.

강운태 위원 등 민주당위원들은 정후보자가 9월 22일 제출한 1차 소명자료(총수지 증가액이 4억 5,900만원으로 금융자산 증가분 3억 2,000만원을 소명한 자료)와 9월 25일 제출하여 이정희 회계사의 감정을 받은 2차 소명자료(총수지 증가액이 3억 5,000만원으로 금융자산 증가분을 소명한 자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제1차 소명 자료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2008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경우 정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필요경비 1억 7,465만원을 실제 지출된 경비가 아니라 세법상의 의제된 경비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소명자료와 국세청에 의해 기장방식에 의한 실제 지출된 경비로 확인된 만큼, 정후보자의 청문회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으므로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2차 소명자료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반면에 권경석, 나성린 위원 등 여당위원들은 정후보자가 회계사를 확신한 결과에 의해서 또는 급하게 이루어진 청문 답변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위원회 차원의 위증죄 고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

다음, 심사보고서의 종합의견 작성과 관련하여 야당 일부 위원들은 정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인해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심사경과서에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위원 개인별 적격여부 판단을 포함하자는 의견(강운태 위원)이 제시되었으나, 정의화 위원장은 행정 각부 장관은 달리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이를 보고서에 그대로 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전체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러한 여야 위원들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권경석 한나라당 간사의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재성위원 등 야당위원들은 서울대 연구용역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겸직금지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정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동의할 수 없고, 아울러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에도 동의할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처리할 경우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에 따라 민주당위원 등 야당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제6차 위원회는 산회되었음.

사. 증인 불출석 사유 및 고발 현황

구 분	성 명	불출석사유	비 고
증인	김 동 녕 (45. 9. 6)	증인과 관련 있는 (주)한세실업의 베트남공장 운영 관련 주요 바이어의 공장방문에 따른 베트남 출장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하려 하였으나 일정변경이 어려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	고발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



## 6. 첨부자료

가. 공직후보자(정운찬) 이력서<참고자료 1>

나.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다.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참고자료 3>

라.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참고자료 4>

마. 강운태의원등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관련  
국세청 답변자료<참고자료 5>

바. 공직후보자(정운찬)의 재산소명자료에 대한 강운태의원 등 민주당  
의원의 분석자료<참고자료 6>

사.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자료에 대한 감정의뢰·답변 및 해명자료  
<참고자료 7>

아. 공직후보자(정운찬)의 서면질의 답변서[별 첨 1]

자.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회의록  
[별 첨 2]

참고자료 1

공직후보자(정운찬)  
이 력 서

□ 생년월일 : 1946. 2. 29

□ 학력사항

- 1966. 1.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0. 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2. 8.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1978. 1.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주요 경력사항

- 1970. 2. ~ 1971. 8. 한국은행 행원
- 1976. 7. ~ 1978. 12.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조교수
- 1978. 12. ~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83. 7. ~ 1983. 8. 미국 하와이대학교 초빙 부교수
- 1998. 7. ~ 1999. 6. 한국금융학회 회장
- 1999. 3. ~ 1999. 5. 독일 보쿰대학교 초빙연구교수
- 1999. 3. ~ 2001. 3. 경제사회연구회 이사
- 2000. 3. ~ 2001. 3.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2002. 2. ~ 2002. 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2002. 7. ~ 2006. 7.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
- 2006. 2. ~ 2007. 2.      한국경제학회 회장
- 2006. 11. ~ 현      재      동경대학교 총장 자문위원
- 2008. 1. ~ 현      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2008. 11. ~ 현      재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참고자료 2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명단

< 위 원 명 단 >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위원장	한 나 라 당	정의화 위원
간 사	한 나 라 당	권경석 위원
	민 주 당	백원우 위원
위 원	한 나 라 당	나성린 위원, 이해훈 위원, 정옥임 위원 정희수 위원, 차명진 위원
	민 주 당	강운태 위원, 김종률 위원, 최재성 위원
	비 교 섭 단 체	박상돈 위원, 이정희 위원

< 직 원 명 단 >

직 위	직 원 명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손준철
전문위원	정재룡
입법조사관	조의섭, 오정두, 박태형, 정홍진, 이진구, 이선주, 홍정아, 이상준, 한성진, 이정미, 김안나, 표승연, 강세욱
입법조사관보	장만수, 남경훈, 이제정, 손성규
사무원 등	이금주, 김정혜, 송경희, 이지연, 조동남, 이은미, 김남경, 최선아, 지성훈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 1. 목 적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 2. 안 건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3. 개최기간

2009. 9. 21 ~ 22(2일간)

###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실)

### 5. 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회 대상자	비 고
'09. 9. 21(월) 10:00	국무총리 정운찬	
'09. 9. 22(화) 10:00	국무총리 정운찬	※ 증인·참고인 출석, 증언 및 진술

## 6. 운영방침

-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행한다.
-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7.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8. 소요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9.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전에 국회게시판에 「붙임 2」와 같이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당해 방송사의 요

청에 의해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영상자료 상영신청

- 위원의 발언 등을 보충하기 위해 영상자료 등을 상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상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중 음성 또는 음향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협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회의장 배치

- 회의장의 의석은 「붙임 3」과 같이 배정한다.
- 위원휴게실 및 증인대기실을 설치·운용한다.

마. 방청권 배부

- 회의장 방청의 편의를 위해 방청권 배부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방청을 허가하도록 한다.
-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b>&lt;제1차&gt;</b> '09. 9. 14(월) (15: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자료제출요구의 건	※ 장소 : 특위회의장 (의원회관 101호)
<b>&lt;제2차&gt;</b> '09. 9. 21(월) (10:00)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 개의선포 ▪ 인사청문회 상정 ▪ 위원장 인사 ▪ 공직후보자 소개 ▪ 공직후보자 선서 ▪ 공직후보자 모두발언 ▪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 위원장 인사 ▪ 산회선포
<b>&lt;제3차&gt;</b> '09. 9. 22(화) (10:00)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장소 :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 개의선포 ▪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계속) ▪ 증인·참고인 신문 ▪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 위원장 인사 ▪ 산회선포
<b>&lt;제4차&gt;</b> '09. 9.24(목) (15:00)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 특위회의장 (의원회관 101호)

※ 의사일정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양당간사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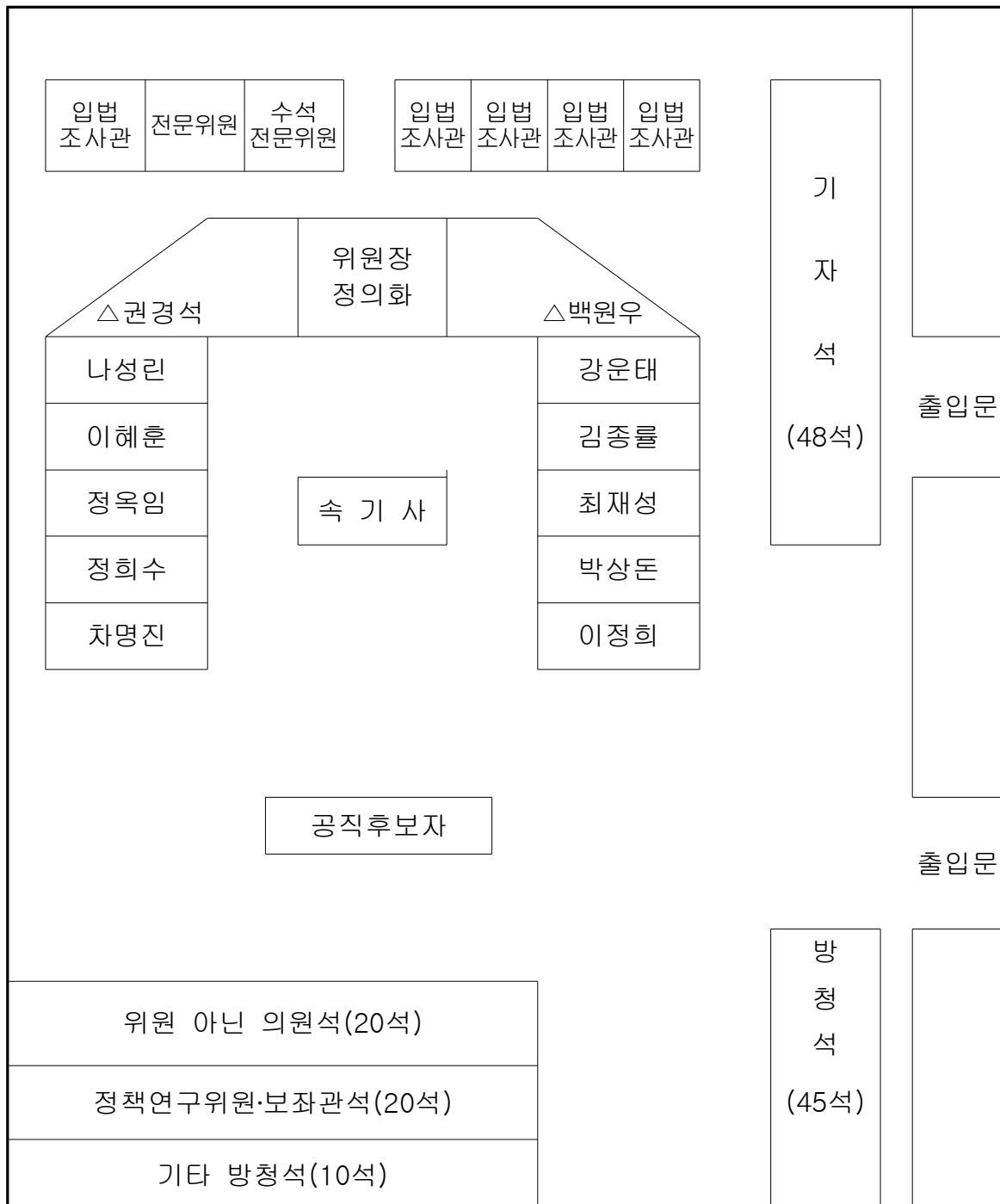
##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 안 건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 2009. 9. 21(월) 10:00  
○ 2009. 9. 22(화) 10:00
3.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실)

2009년 9월 14일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

### I.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사항(31건)

#### ◇ 국무총리(1건)

1. 후보자의 초, 중, 고, 대학교 생활기록부, 학적부 사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 제출

#### ◇ 법무부(7건)

1.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형사사건 내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이를 회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제출할 경우 위 법률에 저촉되어 제출할 수 없음.
2.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출입국 내역
  - 출입국기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기 어려움.

### 3. 배우자, 자녀의 국적 및 국적변동관련 신고내역

- 국적변동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사청문회법」 등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제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음.

### ◇ 금융감독원(10건)

1. 금융거래내역
2. 주식거래내역
3. 2009년 8월 양도성 예금증서 1억원에 대한 수입처와 출처

- 위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유자료 아님. 금융감독원이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여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장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를 지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 한국은행(2건)

1. 국무총리 내정자 본인, 배우자, 자녀의 외환거래내역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라 외환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집중된 정보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상기 요청 자료는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

#### ◇ 경찰청(6건)

1.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교통과태료, 범칙금 부과·납부현황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을 동의하지 않음.
2. 직계비속의 음주운전현황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을 동의하지 않음.

#### ◇ 교육과학기술부(2건)

1. 자녀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직계비속의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제출을 동의하지 않음.

#### ◇ 대통령실(1건)

1. 청와대 민원인 출입 자료  
○ 보안 목적 외 대외공개 곤란

#### ◇ 국방부(1건)

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의심된다고 밝힌 장병 8인 명단  
○ 수사 중 공개 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출 곤란

◇ 환경부(1건)

1. 미군기지 김포우편기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  
○ SOFA 협정상 양측 합의 없이 공개 불가

II. 보존기간 경과·미보유 등(53건)

◇ 국무총리(27건)

1. 내정자의 논문, 저서, 외부에 기고한 기고문과 강연 원고  
○ 기고문·강연 원고는 별도 자료 관리 안함.
2. 내정자의 석사, 박사 논문 사본  
○ 석사학위 논문은 추후 제출 예정
3. 공·사 가입단체 활동내역(가입단체, 목적, 활동기간, 직책, 참석현황, 수당 등 일체의 비용 수령 및 기부내역)  
○ 참석현황 및 수당 등 수령내역은 구체적 자료 미 보유
4. 세종시, 한반도대운하, 4대강, 감세, 금융, 녹색성장, 규제, 공기업개혁, 한미FTA 정책 관련 인터뷰, 언론보도, 발언내용 일체(이명박 정부 이후, 일자, 보도매체, 발언 요지 등)  
○ 별도 자료 관리 안함.
5. 정운찬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재직 중 에스이십사주식회사 고문직 겸직 관련
  - (1) 당사자간 계약서 등 주고 받은 서류 일체의 사본
  - (2) 회의참석·자문 등 활동 실적

- 당사자간 계약서 등 주고 받은 서류 일체의 사본 미 제출
- 6. 정운찬 후보자의 콜럼비아대학교 근무 기록
  - 근무일자, 근무지, 직위 및 직책, 가족동반 여부, 월급명세서, 세금명세서 등 포함
  - 월급 및 세금명세서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 7. 2006년~2009년 현재 후보자 및 배우자의 예금거래내역 각 1부
  - 관련자료 미 보유
- 8. 후보자의 장인 ‘최훈섭’ 씨의 공직근무내역(소속, 직책, 근무기간, 주요업무 등 상세)
  - 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므로 미 제출
- 9. 후보자의 2004~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소득공제명세내역
  - 구체적 내역을 알기 어려움.
- 10. 후보자 장남, 정준택,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소득공제명세내역
  - 구체적 내역을 알기 어려움.
- 11. [장남] 농협중앙회 가계일반자금대출(2009. 4. 20) 과 관련하여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및 대출을 받은 사유 및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
  -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미 보유
- 12.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정운찬 후보자 및 가족의 전체 금융거래명세서
  - 2003년~2009년까지 정운찬 후보자 및 배우자와 자녀의 연도별 금융잔액 내역
  - 정운찬 후보자 및 배우자와 자녀의 금융이자수입 현황(최근5년간)
  - 금융이자수입현황자료 미 보유

13. 정운찬 후보자가 신고한 2008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 소득세 신고서 사본(부속서류 포함)
- 사업소득의 수입과 지출 세부항목 제출.  
(인건비, 조사비, 교통비, 식대 등 구체적으로 구분명기 할 것)
- 관련자료 미 보유

14. 정운찬 후보자의 가계 수입·지출 상황(최근 5년간)(정보관리)

- 정리된 자료 없음

15. 정운찬 후보자의 근로소득 소득공제와 관련,

- 2004년~2008.12.31까지의 신용카드 등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세내역  
(본인 및 배우자)
- 상세내역 보관하고 있지 않음.

16. 2004년~2009년 종합소득신고 사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구분 명기 종합소득세신고서
- 관련자료 미 보유

◇ 서울대학교(8건)

1. (서울대 재직 중) 윤리강령준수 각서, 보안 각서 등 업무관련 서약서
2. 총장 재직 시 청와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에 업무·현안 보고 내용
3.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 시 정부기관, 단체 참여 및 활동내역
4. 후보자의 국내외 학술대회 발제문 및 토론문  
○ 위 4건 보유정보 없음
5. 정운찬 내정자의 신규채용 및 승진심사 시 제출된 서류 및 심사결과  
○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자료 없음.



6. 총장재직 시 재산공개 내역

- 서울대학교가 공직자 윤리업무 등록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자료 없음.

◇ 대법원(5건)

1. 1950년 이후 친인척간 입양된 자의 통계

- 자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자료 없음

2.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루된 민사사건 내역

- 민사사건은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지 않아 동명이인 구분이 어려워 해당자료를 송부하지 못함을 양해 바람.

◇ 환경부(1건)

1. 반환기지 환경치유를 위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전문 등

- SOFA 규정 등에 의거 SOFA 문서로 간주되는 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병무청(2건)

1. 총리 내정자의 병적기록부, 신체검사증명서,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근거

- 해당자의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존기간으로 폐기되어 자료 없음.

◇ 국세청(2건)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9 역삼하이츠 제14층 제6호 관련 사업자등록서 사본

- 보존기간(10년) 경과로 자료 없음.

2. 2004~2005 연말정산 관련 소득/지출내역 신고서류

- 2004년~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공제 항목별 실제 지출한 금액을 알 수 없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실제 지출한 금액은 서식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 제출되었음.

◇ 관세청(2건)

1. 국무총리 내정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내 및 공항 면세점 구입내역
  - 면세점 구입내역은 해당 면세점이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과세목적을 위해 참고자료로 필요한 경우 면세점에 해당 자료를 의회하여 지원받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보유처인 면세점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

◇ 국토해양부(2건)

1. 국내선 탑승기록
  - 보유정보 없음.

◇ 국방부(2건)

1. 신근섭 대위의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외근 복귀 후 활동보고서, 직계상관 업무보고서 사본
  - 수사관들은 활동 결과를 구두로만 상급자에게 보고할 뿐 별도 자료 작성하지 않아 관련 자료 없음.
2. 01다7344 칼로스 승용차의 일간 주요일지, 배차일지, 탑승자 명단

○ 배차일지, 탑승자 명단을 유지 하지 않아 자료 없음.

◇ 행정안전부(1건)

1.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정운찬내정자의 병역기록카드 사본

○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임.

◇ 한국은행(1건)

1. 정운찬 후보자의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보존기간(5년)경과로 자료 없음.

참고자료 5

강운태의원등 민주당의원이 요구한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관련 국세청 답변자료

강운태·백원우·백재현·최재성의원(민주당 '09.9.25)

1. 2008년의 경우 정운찬 후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억2,920만원이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는 1억 7,465만원이라고 신고 되어 있는데 사실여부 및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의 구체적 내역

- 정운찬 후보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2억2,920만원이고, 필요경비는 1억 7,465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 정운찬 후보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접대비 1,826만원, 기타경비 1억5,638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2. 2006~2008년(3년간) 동안 정운찬 후보자가 신고한 사업소득 3억669만원 중 필요경비는 2억2,883만원{=2008년(1억7,465만원)+2007년(3,806만원)+2006년(1,612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처리 되어 있는바 사실 여부

- 최근 3년간(2006~2008년 귀속분) 후보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수입금액 3억669만원 중 필요경비는 2억2,883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2008년의 경우 정운찬 후보자가 2억2,920만원의 사업소득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필요경비는 2백만원 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미 공제받은 1억7,465만원과 실제 지출액 2백만원의 차액인 1억7,265만원에 대하여 세금추징 및 허위 보고에 따른 가산금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청의 의견

○ 현재로서는 세금 추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런상황에서 2008~2006년까지 3억669만원의 사업소득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7백만원{=2008년(2백만원)+2007년(3백만원)+2006년(2백만원)} 밖에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항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실제 지출이 작다고 주장했으니 당연히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추징세액

○ 위 3의 내용과 같습니다.

5. 기타 이밖에도 강운태 청문위원과 정운찬 후보자의 자료를 비교 검증한 내용과 필요한 참고자료

○ 현재 우리청에서는 강운태 청문위원의 자료와 후보자의 자료를 비교·검증한 내용은 없습니다.

※ 자료작성자 : 국세청 소득세과 행정사무관 김상윤 397-1732

참고자료 6

공직후보자(정운찬)의 재산소명자료에 대한  
강운태의원등 민주당의원의 분석자료

정운찬 후보자 1차(9.22일)자료와 2차(9.25일) 소명자료:  
차이점 및 문제점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운태·백원우·양승조·최재성(민주당)

1. 1차(9.22) 소명자료에서는 4억5,900만원이 총수지 증가액으로 제출된 반면, 2차(9.25) 자료에서는 3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되어 총 1억900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2차 제출자료를 정운찬 후보측의 최종자료로 접수한다면 1차 자료는 허위문서에 해당되어 「인사청문회법」 19조(준용규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위증 등의 죄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1차 제출자료와 2차 제출자료 소명내용상의 차이점

- ① 배우자 소득: 1차(2,200만원) → 2차(1,000만원)
- ② 기타소득필요경비: 1차(700만원) → 2차(3,500만원)
- ③ 2009년 소득: 1차(1억2,000만원) → 2차(1억7,000만원)

2. 그동안 정운찬 후보측에서는 사업소득필요경비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세법상 의제된 경비라고 주장했으나, 2차 소명자료에서는 2008년의 경우 실제 집행한 경비임을 인정하여 그동안 허위보고했음을 자인하였음

\* 1차 제출자료(200만원) → 2차 제출자료(1억7,500만원)

3. 1차 제출자료와 2차 제출자료의 결정적인 문제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임.

\* 예컨대, 해외소득을 8,500만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구체적 증빙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고, 2009년 소득도 2억7,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중 해외소득 3,800만원과 기타사업소득 7,800만원의 근거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특히 2009년 해외소득의 비고란에는 해외자문료를 명기하였는데, 그동안 정운찬 후보자는 수차례의 질문에 해외자문수입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됨.

4. 그밖의 필요경비 등의 산정방법도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음.

\* 예: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집행한 경비를 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한 반면 해외소득의 경우는 세법상 동일한 기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집행경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논리상 맞지 않음. 끝

#첨부

1. 정운찬 후보자 1차소명자료(9.22)
2. 정운찬 후보자 2차소명자료(9.25)



1. 정운찬 후보자 1차소명자료(9.22)

정운찬 후보자 금융재산 증가내역 소명

세금 증가액 원천 분석

항목	계	2008	2007	2006
수입 계 (A)	901	461	217	223
비용 계 (B)	669	296	229	144
• 생활비	465	209	167	89
• 제세금	113	56	28	29
• 필요경비 (별첨 설명 참조)	7	2	3	2
• 기타	84	29	31	24
수지 (C=A-B)	232	165	Δ12	79
해외소득 (D-별첨 설명 참조)	85	5	43	37
배우자 소득 (E)	22		22	
2009 연도소득 (F-별첨 설명 참조)	120			
총수지 증가액 (C+D+E+F)	459			



## 2. 정운찬 후보자 2차소명자료(9.25)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강의원님의 분석대로 지출항목으로 인정한 토대위에, 정후보자의 예금증가액을 다음과 같은 7개항의 조정항목에 의해 소명드립니다.

### 예금증가액 소명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08	2007	2006
수	입	901	461	217	223
지	출	943	470	274	199
수지		-42	-9	-57	24
조정 항목	1. 해외소득	85			
	2. 배우자소득	10			
	3. 연금저축 등	31			
	4. 기타소득필요경비	35			
	5. 수정신고소득세	17			
	6. 2009 년 소득	170			
	7. 중복계산	44			
조정항목 계		392			
예금증가 소명분		350			

- 위의 각 조정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첨부 설명 자료 참조.

참고자료 7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자료에 대한 감정의뢰·답변 및 해명자료

수신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제목 :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자료에 대한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

2009. 9. 25 요청하신 공직후보자(정운찬)에 관한 불입  
자료에 대하여 감정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불입 자료중 정운찬 후보자 예금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는  
후보자의 2006 ~ 2008년도의 종합소득세 계산서와 2009년도  
발생소득의 내역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분석되고 계산된  
것이며, 첨부 설명자료에 기술된 제반 내용은 관련 조세법의  
규정과 일반적 해석에 부합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9. 9. 25

공인회계사 이 정 희 (인)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수신자 ~~임정희~~ 이정희  
(경유)

제목 공직후보자(정운찬) 재산자료에 대한 감정의뢰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공직 후보자(정운찬)에 관한 불임자료에 대하여 ~~국무총리~~ 감정을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민주당 강운태의원의 분석자료 1부.  
2. 공직후보자(정운찬)의 재산 소명자료 1부. 끝.

##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수신자

입법조사관보 손성규

입법조사관 조 위 성

수석전문위원 노준하  
직무대리

위원장 정운찬

협조자

시행 국무총리(정운찬)인사청문특위-24 (2009. 9. 25.)

접수

우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본관 6층 610호)

/ <http://policy.assembly.go.kr>

전화 (02)788-2075

전송 (02)788-3354

/ [insa2075@assembly.go.kr](mailto:insa2075@assembly.go.kr)

/ 공개

## (해명자료에 대한 분석)

### 정운찬 후보자 가계수지 : 두 주장의 비교(06~08)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강 윤 태 (민주당)

#### 1. 문제의 제기

- 1) 수입보다 지출이 4,200만원 더 많고
- 2) 금융자산은 2005년말 대비 3억2,000만원 증가해
- 3) 결국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이 3억6,200만원 존재

#### 2. 정운찬 후보자의 해명 (9.22 자료)

- 1) 수입이 지출보다 4억5,900만원 많아
- 2) 금융자산 증가(3억2,000만원)를 초과

#### 3. 두 주장의 차이분석

① 3년간 사업소득수입(3억669만원) 및 기타소득수입(6,054만원)과 임대 소득수입(2,049만원)에 따른 지출(필요경비)의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음.

○강운태 의원

2008년 사업소득수입의 필요경비는 장부기장 내역(2억2,920만원 수입중 1억 7,465만원)을 토대로 하였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세법상의 정해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음.

○정운찬 후보

필요경비는 의제비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3년간 필요경비를 단 700만원만 계상함.

○판 단

필요경비는 본인이 일일이 지출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실제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분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700만원만 계상하는 것은 상식 이하임.

\*예) 3년간 사업소득수입(3억669만원, 주로 용역수입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필요경비가 아닌가?

## ② 9.21 추가로 신고한 해외소득부분에 차이가 있음

○강운태 의원 없음

○정운찬 후보 8,500만원(9.21신고)

○판 단

인정하나 필요경비(6,800만원)와 세금(750만원)을 합한 7,5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 증가 인정.

## ③ 9.21 추가로 인정한 배우자 소득부분에 차이가 있음

○강운태 의원 없음

○정운찬 후보 2,200만원(2007년분)

○판 단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 판매금액(2,300만원)에서 필요경비(1,840만원: 그림도구, 물감, 전시회비, 화실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제외한 460만원 증가 인정.

## ④ 2009년 소득증가분에 대해서

○강운태 의원 없음

○정운찬 후보

2009년 수입금액 1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차감한 1억2,000만원 증가.

○판 단

과거 3년간 공식적인 지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보험료 등)은 월평균 1,310만원이고, 8월말까지 누계하면 1억480만원이기 때문에 1,520만원(= 1억2,000만원-1억480만원) 증가 인정.

#### **4. 종합결론**

정운찬 후보의 주장 중 인정할 수 있는 소득증가는 2,930만원(=해외소득 950만원+배우자 소득 460만원+2009년분 소득 1520만원)  
따라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소득 3억3,270만원 존재(=3억6,200만원-2,930만원)

#### **(청문회 종료시점의 최종결론)**

##### **민주당)**

후보측의 일관된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부족, 인사청문 특위의 차원에서 국세청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의뢰 촉구!

▷ 강운태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늘어난 금융자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수입원을 밝혀야 하며 그에 따른 소득신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

▷ 후보측의 주장이 맞다면 공제받은 세금 전액환수!

##### **한나라당 정의화 특위위원장)**

국세청 검토의뢰를 고려해 보겠음.

## 정운찬 후보자 예금증가액에 대한 소명

정운찬 후보자의 예금 증가 내역에 대한 강운태 의원님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와 설명을 제출합니다.

### 수입 • 지출 내역 요약

(단위: 백만 원)

항목		계	2008	2007	2006
수입	근로소득 수입금액	514	225	155	134
	임대소득 수입금액	19	7	7	5
	사업소득 수입금액	307	229	45	33
	기타소득 수입금액	61		10	51
	수입계	901	461	217	223
지출	신용카드사용액	450	202	163	85
	현금영수증	15	7	4	4
	제세금	113	56	28	29
	임대소득필요경비	6	2	2	2
	사업소득필요경비	229	175	38	16
	기타소득필요경비	47		8	39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	52	17	20	15
	보험료 및 기부금 등	31	11	11	9
	지출계	943	470	274	199
수지 (수입 - 지출)		42	9	57	24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강의원님의 분석대로 지출항목으로 인정한 토대위에, 정후보자의 예금증가액을 다음과 같은 7개항의 조정항목에 의해 소명드립니다.

### 예금증가액 소명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08	2007	2006
수입		901	461	217	223
지출		943	470	274	199
수지		<b>42</b>	<b>9</b>	<b>57</b>	<b>24</b>
조정 항목	1. 해외소득	85			
	2. 배우자소득	10			
	3. 연금저축 등	31			
	4. 기타소득필요경비	35			
	5. 수정신고소득세	17			
	6. 2009년 소득	170			
	7. 중복계산	44			
조정항목 계		<b>392</b>			
예금증가 소명분		<b>350</b>			

⌚ 위의 각 조정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첨부 설명 자료 참조.

### 1. 해외소득

해외자문료 등으로 지난 9월 21일 청문회에서 설명된 대로 9월 21일 수정 신고한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지출 항목으로 계산하신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80%, 68백만 원)는 세법상 인정되는 의제경비로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차감하신 세금 7.5백만 원도 수정 신고 시 (9월 21일) 지출된 것으로 소명 대상 금액에는 영향이 없어 해외소득 전액 85백만 원을 예금증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 2. 배우자 소득

이는 2007년도에 발생한 그림 판매대가로 당해 활동에 필요한 그림도구 및 물감 등은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전량 2006년 이전 구입한 것을 계속 사용한 것입니다.

2006년에 한번 열린 전시회의 화랑임차료 등 10백만 원과 화실임차료 등 소액 지출 약 2백만 원 등 지출 금약 12백만 원을 감안하면 수입금액 22백만 원 중 10백만 원의 예금증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3. 연금저축 등

의원님이 작성하신 자료상 지출 항목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료는 예금 항목으로 금번 재산신고서상 예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예금잔액 증가분석 목적상 지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하면 31백만 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 4. 기타소득 필요경비

2007년 및 2008년의 신고된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61백만 원 (2006년 51백만 원 + 2007년 10백만 원)으로 세법에 따라 동 수입금액의 약 80%로 신고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의제경비이므로 지출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수입금액의 20% 정도에 상당하는 12백만 원 (61백만 원 x 20%)의 실제 지출 (도서비, 기타 자료비, 회의비 및 교통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분석 자료상 실제지출 금액으로 계상된 47백만 원의 필요경비 중 실제지출 금액 12백만 원을 제외한 35백만 원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5. 수정신고 소득세

2009년 9월 15일 2008년도 소득을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한 소득세

17백만 원은 금번 재산신고서상 포함된 예금액에서 사후 지출된 것이므로  
상기 수지표상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조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 6. 2009년도 소득

(단위: 백만 원)

구분	금액	비고
후 보 자 소 득	99	서울대 및 YES24
자 녀 소 득	55	미래에셋 및 SK Energy
해 외 소 득	38	해외자문료
임 대 소 득	5	오피스텔 임대료(월 65만 원)
기 타 / 사 업 소 득	78	자문료, 인세, 원고료 등
계	275	

상기 총 수입금액 275백만 원 중 의원님이 배포하신 분석 자료상 제시된  
생활비 등 105백만 원을 차감하면 예금 증가로 연결된 금액은 170백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 등 105백만 원의 산출내역은 의원님이 분석하신 월 평균생활비  
13.1백만 원에 의거하여 2009년 8월 말까지 8개월 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13.1 (월 평균 생활비) X 8개월 = 105백만 원].

## 7. 중복계산 - 신용카드사용액과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중복

9월 22일 제출된 소명 자료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부분은 후보자의 당초 2008년도 사업소득 신고가 가장 방식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율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신고서상 기록된 174백만 원의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경비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서를 재검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 동 필요경비는 가장된 실제 경비이고, 본 소명은 이러한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아래의 분석과 같이 일부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중복 차감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개요

2006년 - 2008년 당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는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부여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15% (2008년은 2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의 15% (2008년은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공제 한도액이 5백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이 모두 포함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연도별로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

2006-2008년 중 후보자와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계
후	보	자	32	63	72	167
배	우	자	17	39	50	106
소		계	49	102	122	273
자		녀	36	61	80	177
계			85	163	202	450

### 후보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후보자는 2006-2008년 중 신용카드회사가 연말정산용으로 발행한 신용카드사용금액 자료를 근로소득 지급자인 서울대학교에 제출하였고 서울대학교는 이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하였는바 매년 5백만 원의 소득공제가 부여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신용카드소득공제액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연도별로 산정하면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 153백만 원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매년 1백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이들이 카드사용금액은 아래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고, 배우자도 2007년에는 1백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당해 연도에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도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 잔여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배분

후보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153백만 원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후보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실현을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따라서 동 잔여금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양 소득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계
근로소득 대응부분	배 우 자	17				50		67
	후 보 자	31		50		5		86
	계	48		50		55		153
배부대상 소득	후 보 자 사 용 액	1 (32 31)		13 (63 50)		67 (72 5)		81
근 로 소 득 배 부 액		1		9		27		37
사 업 소 득 배 부 액				4		40		44
근로소득 수입금액/배부율		104	76%	111	71%	151	40%	366
사업소득 수입금액/배부율		33	24%	45	29%	229	60%	307
계		137	100 %	156	100 %	380	100 %	673

결론적으로 상기 배분 내역 중 사업소득에 배분된 금액 44백만 원은  
수지분석표상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되어  
중복 차감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44백만 원의 예금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업소득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후보자의 사업소득의 발생 내역을 알지 못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총액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재하는 내용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는 후보자와 같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로 이는 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단순 착오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기재 착오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계산 목적상 신용카드공제는 상기 분석과 같이 이미 한도금액인 500백만 원에 걸쳐 있어 근로소득세의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서 면 질 의 답 변 서

2009. 9.

국무총리 후보자 정 운 찬

# 목 차

## □ 한나라당

### 【 차명진 위원 】

1.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방향 및 향후 대북관계에 대한 견해는? .....
2. 통일에 대한 견해와 통일전망은? .....
3.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은 어떠해야 하는지? .....
4.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잘한 점과 미흡한 점? 향후 처리 과정? 조기비준에 대한 입장? .....
5.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대응에 대한 견해?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
6. SSM에 대한 견해 및 해결방안 .....
7. 새만금 개발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방안 .....
8.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방안? .....
9. 용산사태 발생원인 및 견해, 해결 방안? .....
10.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 중징계에 대한 견해? .....
11.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

12. 이명박 정부 세금감면정책에 대한 견해? 부자감세다 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
13. 저출산이 심각한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
14.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
15.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 .....
1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 17-1. 세종시에 대한 견해 .....
- 17-2.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사유는? .....
- 17-3.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
18. 세종시에 이전할 정부부처 및 기한을 명시한 법률에 대한 견해? .....
19. 논문 이중게재에 대한 입장은? .....
2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방안? .....
21. 국정과제 추진경과와 이에 대한 견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5개 제시한다면? .....
22.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견해? .....
23.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
24. PSI 확대 참여에 대한 견해? .....
25. 새터민 정책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 .....
26.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에 대한 이상적인 외교방향? .....
27. 6자회담의 역할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
28.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
29. 개성·금강산·백두산 관광에 대한 견해, 재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과 우리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30.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 .....
31. 독도의 주권확립을 위한 방안? .....
32.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와 방향 .....
33.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적절성과 도폐지에 대한 견해와 이상적인 개편 방향은? .....
34.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변경하는데 대한 견해와 적절한 시기? .....
35. 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견해? .....
36.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견해는? .....
37.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
38.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견해? .....
39. 고교등급제에 대한 견해? .....
40. 사교육 과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
41.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은? .....
42.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 .....
4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견해? .....
44.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6.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
47. 징병검사 연기사유? 병역면제 사유? 병역기피에 대한 입장? .....
48. 대운하 추진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는?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사업의 차이는? 4대강 사업의 추진방안? .....
49. 사외이사·고문활동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입장? .....
50. 소득탈루(사외고문료, 인세, 강연료 등)에 대한 입장은? .....

5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다”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감세 정책의 필요성은? .....
- 52-1. 본인의 학자적 성향은 어떠한지? .....
- 52-2.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는? .....
53.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면? 해결 방안은? .....
54. 서울대 총장시절 황우석 관련 사건을 매몰차게 처리해 황우석죽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55.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견해와 지역균형 개발정책 방안은? .....
56. 폴리페서에 대한 견해는? .....
57. 탈규제와 작은 정부에 대한 견해는? .....
58.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
59. 친서민적 정책 추진방안은? .....
60.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방안은? .....
61. 부인의 포천 주소이전 사유와 “위장전입이다”에 대한 견해는? .....

## 【 이해훈 위원 】

1.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처능력과 정책들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평가는? .....
2. OECD 국가중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
3. 경제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견해는? .....

4.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견해는? .....
5. 총리 후보자가 감세정책에 대해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은 무엇인가? .....
6.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감세정책을 추진함.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평가는? .....
7. 2009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세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평가와 보완해야 할 사항은? ·
8.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재정건전성에 대한 학자로서의 견해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
9.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
10. 한국경제에 있어 금융권의 대출행태, 부실 경영 등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이에 대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 경제위기 하에서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온 MB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서민정책의 방향은? .....
13.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이것은 일면 물가상승의 효과를 가져옴. 최근 엔겔계수가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생활물가 안정방안은? .....

## 【 나성린 위원 】

1.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면서 고소득층·대기업 위주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 정비하는 것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올바른

-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2.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의 대표적인 공과 과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3.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내수시장의 비중확대를 통한 대외충격 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
  4. 교육에 있어서 3불정책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이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은 각각 무엇인지? .....
  5. 북한 군인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 개성공단 직원 억류사태 등 남북교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는지? .....
  6. 과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군인들이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경찰이 폭행당하는 등 공권력이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는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응책은? .....

## 【 정옥임 위원 】

1.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북 직접협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 자위수단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핵주권론이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보유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입장은? .....
4. 북핵 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
5. 북핵 우발사태 등 국가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은? .....
6. 후보자의 대북관은? .....



7.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을 알고 있는가? .....
8. 「비핵 · 개방 · 3000구상」에 대한 평가 및 선택폐기 조건론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9. 6.15/10.4 선언에 대한 입장은? .....
10.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
11.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
12.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은? .....
13.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입장은? .....
14.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은? .....
15.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16.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7.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18.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19.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증가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20. 국내입국대기 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
21. 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22. 북한의 사전통보 없는 임진강 댐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
23.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평균 7.6%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한 데,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2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25. 해외 파병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26. 특히, 아프간 파병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27.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8. 일본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과거사 등 역사 문제 해결 전망 및 대응에 대한 견해는? .....
29.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견해는? .....
30. 총리후보자께서는 과거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A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1.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나 론커크 USTR대표, 힐러리 국무장관 등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입장은? .....
32.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국회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33.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는? .....
34.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총리실의 역할은? .....
35.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은? .....
36.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는? .....
37.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평가는? .....
3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소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
39. 보육정책이 ‘공보육’의 개념을 넘어 ‘국가 책임보육’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0. 육아문제 해결은 직장문화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1. 직장 여성의 육아문제를 돕기 위한 대책은? .....

42. 「국제입양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가입에 대한 견해는? .....

## □ 민 주 당

### 【 백원우 위원 】

1.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야당과 국민이 반대할 때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 등 정책을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3. 국민의 다수가 반대함으로 인해 국민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률 등 정책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 .....
4. 18대 국회 들어 12월 임시국회에서 16건, 3월 임시국회에서 1건,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등 5건,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4건 등 총 3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했고 총 21건을 직권상정 처리했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 공·사석을 막론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
6.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쫓기 위해 무리한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대책은? .....
7. 후보자가 알고 있는 “대운하 사업” 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이점? ....
8.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9.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0.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1. 세종시로 당초 계획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은 변경없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원안 추진을 위한 대책은? .....
12. MB정부 들어 잠재성장률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
13. 747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4.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MB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한 입장은? .....
15.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6.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8. 금융안정 목적조항 추가, 한은의 단독조사권 부여 등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19.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정책 이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 .....
20. 법인세/소득세의 예정된 세율인하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21.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한 견해는? .....
22.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747정책’에 대한 견해? .....
23. 최근의 경기침체를 경기순환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구조상의 문제로도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경제구조적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24.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은? .....
25. 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설정하여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적정이자율에 대한 대안은? .....
26.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중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정책적 대안은? .....
27.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28. 최근 유통대기업의 SSM 무차별 확산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붕괴 위기에 직면. 대형마트·SSM의 허가제 전환 등 혁신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29.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법안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비 인상을 초래해서 결국 주민부담을 가중 우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주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
30. 도시가스 경쟁도입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결국 가정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중단이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 생각,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31. MB정부 들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2. MB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 규모는 적절한 것인지, 적절한 국가채무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
33. 균형재정은 필요한 것인지, 언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34.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과부 지방교육특별 교부금 등은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장관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적절한 대안은? ....
35. 업무추진비로 경조비·경조화환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의 표시는 경조화환으로 족하며, 현금으로 경조비를 집행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36.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뿐 아니라 문화부 등 일반부처도 특수 활동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는 수사활동비·업무 추진비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수활동비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
37.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법정휴가는 100% 보장하고, 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급사유나 지급일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38.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한 대책은? .....
39.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대책은?
40.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
41. MB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반 사이의 세제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
42.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규모와 근거는? .....
43. 중앙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
44.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보건복지가 족부의 각종 현안에 비추어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5. 최근 7명이 사망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
46.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47. 사회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48. 현행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후보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개선을 위한 방안은? .....
49. 현 정부가 추진한 작은 정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작은 정부는 무엇인지? .....
50.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 가 본 복지현장은? .....
51.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된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즉각적인 무효화 선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52. 신문법 등에 대해 위헌여부가 제소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기정 사실화를 위해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
53.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는 일단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54.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언론관련법의 무효화 서명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러한 국민적 의사에 대한 후보자의 수용 의사 및 대책은? .....
55.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56.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검찰 수사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7. 방송을 비롯한 언론과 정권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58.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정부광고나 기업 광고의 통제를 통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방지 대책은 ? .....
59. MBC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0.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의 겸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1. 재벌이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62.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는? .....
63.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
64. 통합신설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방 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통합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규모의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방이전 대상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 ‘구로구’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중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이전 완료 후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66.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사무총장 선임 관련,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동일인이 “선임-사퇴-재선임”하는 우여곡절을 겪음. 체육단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67. 노후된 야구장의 개보수 및 신축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임. 중앙정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수익금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68. 체육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분산된 정책 및 집행기구를 “국가체육위원회나 체육청” 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69.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은?
70.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대사는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기도 하고, 학자나 국민들 간에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대사를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71.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72.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권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73. 반복적인 이전을 통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행복도시 이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당초 종합계획대로의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75. MB정부 출범후 문화예술기관장 등 교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사과의향, 손해배상소송 제기 중단 의향은? .....
76. 국회의원 모욕, 국민 모독 발언을 한 유인촌 장관의 언행에 대한 견해와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
77. 국립 문화예술 인프라의 지방분산과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적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견해와 대책은? .....
78.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79. 가장 최근에 본 한국 영화는? .....
80.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 .....
81. 문화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국제행사(상주 세계대학생승마대회)에 대해 행안부 등에서 국회의 사전통제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동 행사를 지원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82. 고위공직자들의 종교차별적 언행 방지와 종교적 중립 유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83. 고교평준화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84.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85. 대학의 기여입학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86.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
87.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88.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수정압력을 가하고, 재판부는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 발간 행위에 대해 교과서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89.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
90.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절은 물론, “자기논문 표절”, “자기논문 이중 게재”등 표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1. 대학교수들이 갖추어야 할 학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후보자의 기준은? .....
92.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93. 초등학교에서의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94. 대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한 견해는? .....
95.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법인화는 대재앙이라고 하는데 법인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9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무엇인지 아는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실적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97. 현 정부 여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98.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후보자의 생각은? .....

99. 현 여성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여성부를 개편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예산 679억원의 여성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
- 100-1.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스페인등과 1위를 다투는 지경으로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 100-2.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것이 적절한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야 하겠는지, 총리 후보자의 견해? .....
- 100-3. 실태조사 결과 그간 100만명 대량해고 주장이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보는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 100-4.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사용기간 2년에서 4년 연장)에 대한 견해 .....
- 100-5. 지난 7~8월중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1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 101-2. 일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향후 3년동안 2조 7천엔 투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 102-1.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 102-2. 내년 최저임금(금년보다 2% 인상)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소회는? .....
- 103-1.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하는 것이 옳은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 학자로서 국제적관행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거하여 밝혀달라 .....
- 103-2. 우리 노사관계, 더 나아가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재계의 힘이 센가, 노동계가 힘이 센가, 경제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사관계의 과제는? .....

104. 국가가 시민사회 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05. 국가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106.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07. 후보자가 보기에 현행 헌법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항과 그 이유 및 개정의 방향은? .....
108.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09. 헌법 제10조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110. 헌법 제11조 제1항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111.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이의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
112. 현재의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방과 방재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을 신설하고, 방재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3.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그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3교대 근무’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안은? .....
114.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15. 현행 지방행정체제에 대하여 후보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
116.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시정을 위한 대안은? .....
117.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은? .....

118.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척결을 위하여 별도의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119. 용산참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 119-1. 용산참사 현장이나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병원을 방문할 생각이 있는지?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는지? .....
- 119-2. 용산범대위가 지난 6월 국무총리실에 제의한 요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 119-3.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미공개 수사기록 3천쪽 공개)를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0.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121.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무리한 해산 또는 방해를 지속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경찰이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집시법으로써 해산 또는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22. 경찰 등 수사당국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23. 차관 등 하급자가 소위 실세라는 이유로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를 위한 대책은? .....
124. 소위 “실세차관 5인방”하는 등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 대책은? .....
125.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는 양 선언이 있던 날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생각은 없는지? .....
126.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27.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 등 세계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대통령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할 용의는? .....
128. 현재 해당 연구용역이 ‘비공개’ 상태인데 그동안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민적 이익과 관련된 해당 연구용역은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29. 한미FTA의 성과 중 하나로 정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내세웠는데, ‘미국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의 증감현황’ 및 ‘비자쿼터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
130. EU는 총 GDP가 18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한-EU FTA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다. 한-EU FTA 역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1. 현행 한미조세협정에 대한 개정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개정해야 할 주요내용, 양국의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132.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모욕, 국민 모독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던 유명환 장관의 언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
133.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후보자의 기준 및 본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 .....
134. 과거정부 시절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하는 총리나 장관 등에 대한 견해? .....
135.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이 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36.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행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 .....

137. 탈세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38.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이나 신고 등을 실수나 고의에 관계없이 허위 또는 누락한 경우, 공직취임이나 임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 .....
139.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 납세하는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40. 세금포탈, 소득의 불법적인 취득 등을 위하여 자녀를 위장 취업시키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141. 현재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해소를 위한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은? .....
142. 본인과 자녀의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4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도덕성 포함)은? .....
144.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행정각부의 장”의 자격(도덕성, 전문성 포함)은? .....
145.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격(도덕성 포함)은? .....
146. 이명박대통령(한나라당)의 선거 공약 중후보자의 평소의 견해나 철학에 비추어 합치하지 않는 공약은? .....
147. 국무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은? .....
148.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한다면 내부 검증을 위하여 “재산 등(인사 검증)”에 대하여 소명(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을 요청받은 시기는? .....
149. 현 정부 출범 초기 시중에 회자되었던 “만사형통”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와 방지 대책은? .....
150. 후보자가 1971년 미국으로 유학가는 시점부터 귀국시까지 시기별 비

자의 종류(유학비자 또는 취업비자)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비자사본을 제출하시오 .....

151.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

## □ 민주노동당

### 【 이정희 위원 】

1. 한미FTA 협상 과정, 국내 논의 과정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한미FTA에 대한 학계의 접근과 논의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지)
2.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 금융부문의 탈규제와 대형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4.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 경향에 대한 후보자의 원인 진단과 대안은? .....
5. 이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론과 현 정부의 금융선진화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 후보자는 지난 6월 “금융의 과도한 대형화, 탈규제화로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등의 금융선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7. 작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 왔다고 보는가? .....
8.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학계의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동걸 前금융연구원장의 사퇴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9.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녹색뉴딜이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떠한가? .....



10.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1. 2008년 12월 10일, 뉴욕강연 보도의 사실여부, 정부의 녹색뉴딜과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12. 쌀시장 개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3.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4. 이 정부 들어와 추진한 감세정책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근거는? .....
15. 대학 교육이 응용분야와 기초분야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
16. 현 정부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7. 3불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8. 후보자가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받는다면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는지? .....
19. 후보자는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용산 참사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 잡을 의사가 있는지? .....
20. 후보자는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들께 사죄할 의향이 있는지? .....
21.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 말살의 주범인 땅투기-막개발 “뉴타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
22. 쌍용자동차 노동자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는 각계의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
23. 쌍용자동차 노동자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농성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폭행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었

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또한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찰관과 그 지휘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처벌, 징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

24. 쌍용자동차 노동자 농성 당시 쌍용자동차 사측 직원과 용역들이 농성 노동자와 그 가족, 정당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소속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처는 적극 방조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는데 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와 처벌, 징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
25. 정부는 PSI 전면 참여로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6.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 6월 이후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남한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
27. 후보자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28.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극 관철시킬 의향이 있는지? ..
- 29-1.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 29-2.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30.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이 있었는데, 후보자의 이에 대한 견해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31.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 32-1.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공무원 통합노조 출범은 공직자의 양심을 저버린 불법행동"과 "특히 정치적 투쟁을 무기로 하

는 민노총과 연계를 시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2-2. 이 장관의 발언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취임 한다면 당장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게 될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불법으로 보시는지? .....

32-3. 행안부의 9월 10일자 지침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불법이 아닌지, 갈수록 노동조합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 나선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

32-4. 공무원 노조의 통합 결정 및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투표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중 하나이고 긴요한 활동인데 이를 사용자인 행안부가 근무시간 중 투표 금지라고 하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지? 총리 후보자의 의견은? .....

32-5.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에 대해 지침에서 정치적이다, 탈퇴 노조가 늘고 있다는 등의 반감을 드러내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여부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위 지침은 아래와 같은 2007년도 총투표에 비해 볼 때 이번 투표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평등원칙 위반의 공권력행사가 아닌가 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32-6.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 뒤에 동일한 총투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실 것인지? 허용하시겠는지? .....

33-1. 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분석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한 견해 .....

33-2. 현재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평가를 취임후 중단시킬 의사가 있는지? .....

34. 후보자는 2007년 월간조선 4월호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 시절 서울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거칠

고 독선적이었다. 이 전 시장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장 출마를 집요하게 권유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칠고 독선적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는데, 이의 사실 여부? .....

35. 후보자 부인께서는 ‘88.2.5 주소지를 경기도 포천으로 옮겼다가 이후 50여일이 지난 4.1 다시 서울 방배동으로 원위치 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아닌지? 당시 왜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옮겼는지? .....

36. 후보자가 매매한 주택에 대한 거래 내역.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르게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그 이유는? ...

37. 후보자께서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자문료로 9583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미합산 신고한 이유는?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얼마인지? 최근 국세청에 납부했는지? .....

38. '04~'07년 소득 중 인세, 자문료 등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

39. 병역 면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학업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

40-1. 성폭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면 총리로서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은? .....

40-2. 최근 성인지 예산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행 계획은? .....

40-3. 여성 교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자 교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게 하는 할당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

40-4. 프린스턴 및 마이애미의 경우와 당시 서울대의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 여자교수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지? .....

41. 세종시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한 나 라 당**

**차명진 위원**

1.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및 향후 대북관계에 대한 견해는?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과 과가 다 있다고 생각함
  -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합의 미흡 등의 비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모든 남북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봄

## 2. 통일에 대한 견해와 통일전망은?

- 통일은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함
  - 통일은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없애며,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토대를 확충한다고 봄
-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구축되고, 통일에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함



3.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은 어떠해야 하는지?

- 국무총리 역할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내각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도 이러한 차원에서
  -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리는 이러한 비전이 충실히 실현되도록 내각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 4.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잘한 점과 미흡한 점? 향후 처리 과정? 조기비준에 대한 입장?

- 한·미 FTA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저는 과거에 FTA가 주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의 필요성과 법률·제도의 변화에서 오는 FTA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었음
- 현재로서는 한미 FTA는 이미 타결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타국보다 빨리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

5.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대응에 대한 견해?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금융기법 발달로 인한 파생상품의 급격한 증가, 금융감독 규제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함
-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는 선제적이고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등의 정책조합을 통해 비교적 무난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고 있다고 생각함
- 아직 투자·고용 등 민간의 경기회복력이 미약하므로 앞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봄

## 6. SSM에 대한 견해 및 해결방안

- 최근 SSM이 확산됨에 따라 인근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SSM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산업 발전, 영세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 WTO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7. 새만금 개발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방안

- 쌀 생산량 증가, 국가간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농지로 개발하려 했던 새만금 개발 기본방향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현 정부의 방침에 견해를 같이함
  - 정부도 지난 7월말 경쟁력 있는 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및 세계 속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8.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방안?

-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생수준에 적합한 교육 제공 미흡 등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평준화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9. 용산사태 발생원인 및 견해, 해결 방안?

- 국민 6명이 사망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장례문제가 매듭되지 않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경찰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하였지만, 이러한 불상사없이 수습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족과 조합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0.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 증정계에 대한 견해?

- 언론보도를 통해 동 사안을 접해보았으나 총리 내정자로서 어떠한 견해를 말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11.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국가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
- 다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 및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면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12. 이명박 정부 세금감면정책에 대한 견해? 부자감세다 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부자감세가 아니더라고 했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 현재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기초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초에서
  -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특히, 중산·서민층·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따라서, 부자감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13. 저출산이 심각한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 저출산 현상은 젊은 층의 혼인 지연, 아동 보육·교육비 부담, 보육시설 문제, 여성경제활동의 어려움 등 사회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됨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업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4.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 노인의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인력활용 방안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함

## 15.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

- 청년실업은 최근의 경기부진 요인 뿐 아니라 고학력자 공급 과잉과 청년층 선호일자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봄
-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최근 경기적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 등 단기적 고용촉진대책과 아울러,
  -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현행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제도는 인구 고령화, 연금선택률 상승 등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구조적인 적자를 겪고 있음
  - 이와 관련 정부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수급구조를 적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1.7)
    - 사학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08.11.28)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기본틀에서 군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17-1. 세종시에 대한 견해

-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족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함
-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17-2.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사유는?

- 정부가 현재 마련중인 자족기능 보강방안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17-3.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 정부에서는 목표인구 50만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을 위해
  -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8. 세종시에 이전할 정부부처 및 기한을 명시한 법률에 대한 견해?

- 세종시에 이전할 정부부처 및 이전기한을 명시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09.9월) 되어 있으므로
-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함

## 19. 논문 이중게재에 대한 입장은?

- 개별 논문의 이중게재 판단 여부는 이중게재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2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방안?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함
- 총리로 인준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상생협력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음

## 21. 국정과제 추진경과와 이에 대한 견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를 5개 제시한다면?

-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은 양호하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일부 과제의 실질적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현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 미래인재 육성,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과제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2.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견해?

-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 금산분리를 불가피하게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금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민간영역을 침해해 온 시장 마찰을 해소하고,
  - 별도의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 23.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상황에 맞게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한 시장구조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

## 24. PSI 확대 참여에 대한 견해?

- PSI 참여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 PSI 참여로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기존 남북간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우리의 PSI 참여(5.26) 이후에도 남북해운합의서가 이행되고 있으며, 경협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25. 새터민 정책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

-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 입국 후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26.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에 대한 이상적인 외교방향?

### (미 국)

-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자 동맹국으로, 한·미 관계는 지난 50여년간 우리 대외 관계의 근간을 이루어 왔음
- 이러한 한·미 관계를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 및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중 국)

- 지난해 한·중 양국 정상간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구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제반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일 본)

- 한·일 협력은 양국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아울러, 9.16(수)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한 만큼 총리로 임명되면 신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양국 관계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음

( 러 시 아 )

- 러시아와는 2008.9월 대통령의 방러 계기 격상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E U )

- 정부는 G20 및 G8 정상회의, 한·EU 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 EU 정상외교를 적극 펴나가고 있고,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도 EU와의 정치·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27. 6자회담의 역할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틀로 이해하고 있으며,
-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도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 우리 정부도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28.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서
- 정부는 사명감을 갖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봄

29. 개성·금강산·백두산 관광에 대한 견해, 재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과 우리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백두산 관광과 관련하여 항공안전 강화 문제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30.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

- 고구려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에 관한 사안으로 중국측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봄
- 이와 동시에, 중국측 학술논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측 학술대응체제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31. 독도의 주권확립을 위한 방안?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 독도 주권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며,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32.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와 방향

-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밝히신 바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주기를 기대함

33.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적절성과 도폐지에 대한 견해와  
이상적인 개편 방향은 ?

-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10여년 전에 짜여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도제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운영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함.

34.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변경하는데 대한 견해와 적절한 시기?

-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추후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면, 행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35. 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견해?

- 작년 상반기에 유가가 급등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였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작년과 다른 유가 동향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전세계적인 에너지세 강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 일반적인 유류세 인하보다 영세민, 자영업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36.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견해는?

- 이동통신요금 수준과 가계통신비 비중이 선진국 대비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 정부가 해당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총리로 인준 받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음

### 37.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 우리교육이 과거 산업화시대 성장동력이었던 '모방형 인적자본\*' 육성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 외국의 다양한 선진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주입시키는 암기식 교육인재

○ 복합적인 문제상황에서 신축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창조형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교육과제임

\* 스스로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재

○ 이를 위해 수업방식을 탐구·토론식으로 전환하고 창의성과 잠재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편, 다양한 학교를 공급하여 학생들이 실력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음

### 38.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견해?

○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고, 국민 정서에 비추어볼 때 보다 폭 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39. 고교등급제에 대한 견해?

- 대학입시에 있어 고교등급제 금지조치는 현행의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 하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다만,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사  
립고,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고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봄



40. 사교육 과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 과도한 사교육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심화,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사교육이 비대해지면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사교육 억제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봄

#### 41.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은?

- 우리 고등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학벌 중시 풍조로 인해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한 반면, 질적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대학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주도할 창조형 인력양성에 주력해야 함

## 42.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

- 현재까지 교원에 대해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으므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과제임
- 교원평가제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4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견해?

-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 놓여 있고,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44.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일자리창출 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점점 약화된다는 것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민간부문 투자확대, 창업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45.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난 10년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이 많이 강화되었으나,
  -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알고있음
- 이러한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 빈곤층이 일을 통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46.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봄
-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 지난해('08.10.30.) 발표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47. 징병검사 연기사유? 병역면제 사유? 병역기피에 대한 입장?

- '66년 최초 징병검사(대학 1년)에서 2을중 판정으로 '67년 보충역에 편입된 후
  - '68년 징집영장 발부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부선망 독자'('66.10 양부 사망)의 경우 징집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 자식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모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려면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징집 연기를 신청하고('68~'69),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행하였음('70.2)
- 그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룬 것이 아니라 석·박사과정 마무리를 위해 미국대학 재학 중에 고령으로 징집이 면제됨
  - \* 유학기간 중 소집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음
-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



48. 대운하 추진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는?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사업의 차이는? 4대강 사업의 추진방안?

- 대운하 사업에 반대한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 화물선 운항을 위한 대운하와 달리,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 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며,
- 총리로 임명되면 정부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 나가겠음

#### 49. 사외이사·고문활동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입장?

##### <비상임이사 활동 등 관련>

- 하나학원·덕성학원 이사와 경암학술상 위원장은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직위이고
  -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수상후보자를 심의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직을 수락하고 활동하였음
- \* 총리후보로 내정된 후 3개 직위 모두 사퇴

##### <예스 24 고문 활동 관련>

- 학자로서 좋은 책을 널리 보급하는 일은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고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문에 응하는 자리로만 생각해 직을 수락했음
- 당시 대학 사무국에 질의했는데,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함
- 총리후보 내정 후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국립대 교수로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함

50. 소득탈루(사외고문료, 인세, 강연료 등)에 대한 입장은?

<예스 24 고문료 관련>

- 예스24 소득에 대한 갑근세(413만원)는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 다만, '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총 1,352만원의 세금을 과소 납부하였음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정신고 후 납부하였으며
- 탈루목적이었다면 '07년도에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07년도 분 신고시는 합산신고를 했음

<인세·강연료 등 관련>

- 인세·강연료 등에 의한 소득은 충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음
- 추후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겠음

5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다”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감세정책의 필요성은?

- 금년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조하에
  -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를 부자감세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감세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 진다면 경기진작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52-1. 본인의 학자적 성향은 어떠한지?

- 학자로서 객관적 시각과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식인으로서의 학문적·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음

## 52-2.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는?

-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고 있으나,
  - 시장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보완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자유와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간의 효율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53.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면? 해결 방안은?

-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고유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함
- 다만, 아직도 어려운 고용상황을 조속히 개선시키고, 구조조정, 부동산 버블화 방지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54. 서울대 총장시절 황우석 관련 사건을 매몰차게 처리해 황우석죽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당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임



## 55.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견해와 지역균형 개발정책 방안은?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이 미흡한 지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광역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한편,
  -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토재창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56. 폴리페서에 대한 견해는?

- 학자가 정치와 정부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사회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봄
  - 각기 입장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음
-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도 정치권에 나가는 교수들에게 사직을 권유했으며, 본인도 평소의 소신대로 총리에 내정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음
  - 학자로서 정년을 다하지 못해 아쉽지만 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마음임

## 57. 탈규제와 작은 정부에 대한 견해는?

- 시대상황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책목적에 비해 과도한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하나,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하는 일을 명확하게 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 또한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도 시대에 맞지않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임.

58.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 소득양극화 심화 현상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의한 전세계적인 현상인 측면이 있음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취약계층 등 서민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59. 친서민적 정책 추진방안은?

- 최근 정부가 서민정책에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다각적인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총리에 취임하면 관련 정책들을 점검해 보고 서민들에게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음

## 60.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방안은?

- 저는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조조정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
- 기업구조조정은 민간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원칙을 준수하되,
  - 정부는 정책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권 구조조정은 현재의 상황이 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므로
  - 금융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적극적인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61. 부인의 포천 주소이전 사유와 “위장전입이다”에 대한 견해는?

- ‘88년 당시 지인이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고
  - 거기에 땅과 집을 마련하려면 현지 거주자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부인이 그해 2월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옮겼음(‘88. 2. 5)
  - \* 현지 6개월 거주요건 규정은 그 후인 ‘88.11월 시행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 신설
- 그러나, 승용차가 없어 버스 편으로 포천에 가봤는데 너무 멀었고, 여러가지 불편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거이전을 포기했으며
  - 부인은 두 달 만에 다시 주민등록을 서울 방배동 집으로 옮겨 왔음(‘88. 4. 1)
- 추후도 위장전입 의도는 없었으며, 본의 아닌 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혜훈 위원**



1.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처능력과 정책들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평가는?

-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는 선제적이고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등의 정책조합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비교적 무난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친서민 정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음

2. OECD 국가중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 최근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2.6%를 기록하는 등 경기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이나,
  - 상당부분 정부정책 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투자·고용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금년 하반기의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 하방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회복세가 지속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임

3. 경제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효과와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투자 등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므로
-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세가 일정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견해는?

-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는 이미 이전 정부부터 지속되어 온 추세였으나, 지난해의 경우 일부 지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취약계층 등 서민층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총리 후보자가 감세정책에 대해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  
신은 무엇인가?

-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감세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다면 투자촉진과 소비진작 효과를 유발하여
  - 경기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6.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감세정책을 추진함.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평가는?

- 급박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투자확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7. 2009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세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평가와 보완해야할 사항은?

-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조에서
  -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와 재전건전성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인준이 된다면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없는지 점검해 보겠음

8.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재정건전성에 대한 학자로서의 견해와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세출 조정을 통해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증액된 한시적 지원은 조정을 검토해 나갈 필요



## 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 금융규제 완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음
- 다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금융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

10. 한국경제에 있어 금융권의 대출행태, 부실 경영 등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이에 대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
-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행정시스템, 정부조직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 G-20 등 국제적 논의 추이를 지켜본 후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11. 경제위기 하에서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직접적 언급은 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12.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온 MB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서민정책의 방향은?

-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중산층과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고 생각함
- 서민정책의 방향은, 정책목표를 국민복리의 증진에 두고
  - 중산층을 두텁게 하며,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13.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이것은 일면 물가상승의 효과를 가져옴. 최근 앵겔계수가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생활물가 안정방안은?

- 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통구조 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물가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아울러 기상이변 등 단기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기 쉬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수급조절 등을 통한 가격 완충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고 봄

**나성린 위원**

1.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면서 고소득층·대기업 위주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 정비하는 것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초에서 소득세·법인세율을 낮추며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임
- 아울러, 세율인하의 경우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있으며,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임

2.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의 대표적인 공과 과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는 선제적이고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등의 정책조합을 통해 비교적 무난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고 있다고 생각함
- 다만, 금융위기 초기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관계기관간 의견을 조율하는데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함



3.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내수시장의 비중확대를 통한 대외충격 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건전한 소비의 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며,
- 기업 투자·경영환경 개선,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4. 교육에 있어서 3불정책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이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은 각각 무엇인지?

- 3불정책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함
- 다만, 3불정책으로 인한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대학의 학생선발권 침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율형 고교,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고, 3단계 대학자율화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북한 군인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 개성공단 직원 억류사태 등 남북교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는지?

-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당국 차원에서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신변안전 보장 장치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6. 과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군인들이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경찰이 폭행당하는 등 공권력이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는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응책은?

- 법질서 확립은 국가 브랜드가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우선시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옥임 위원**

1.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북 직접 협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6자회담 틀내의 미·북 양자 접촉은 가능하다고 봄
- 우리정부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2. 자위수단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핵주권론이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에 우리가 표명해 온 비핵화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보유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입장은?

- 2014년 3월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73.3 발효, '74.5 개정)이 만료될 예정인 바,
- 지난 40여년간 발전되어 온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 및 변화된 국내외 원자력 환경을 반영한 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4. 북핵 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봄

## 5. 북핵 우발사태 등 국가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은?

-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 우발사태 등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6. 후보자의 대북관은?

- 북한은 통일을 이뤄야 할 동반자이자 안보측면에서는 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북한에 대해 동포애를 발휘하여 평화공존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봄
  -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함
- 남북관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7.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을 알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1989년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일국가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8.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평가 및 선택폐기 조건론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비핵·개방·3000」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 「비핵·개방·3000」구상이 선택폐기 조건론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 동 구상이 큰 틀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발전을 도와주는 단계적 구도이며, 반드시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음

## 9. 6.15/10.4 선언에 대한 입장은?

- 6.15/10.4선언을 포함하여 남북한간 모든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그 이행과 관련해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0.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서
  - 정부는 사명감을 갖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봄

## 11.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 북한인권은 남북한간 문제를 넘어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편,
  -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2.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은?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봄
- 다만, 당국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북핵상황,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13.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입장은?

-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적 측면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기 추진중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 입주기업들의 사업 편의를 위한 통행·통신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14.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은?

-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15.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봄

## 16.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대북특사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여러 대화방식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17.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북한의 최근 유화공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 18.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 남북한간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19.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증가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는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 하나원 시설규모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선, 정착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20. 국내입국대기 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보는지?

- 재외 공관 등에서 보호중인 한국행 희망 탈북자들의 대기기간 단축 및 신속한 국내이송처리를 위하여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1. 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이미 남북 당국자 간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급에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측에 구체적인 대화를 제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2. 북한의 사전통보 없는 임진강 댐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 우선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북한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당국간 협의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남북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3.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평균 7.6%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한 데,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국방예산은 안보환경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내정자로서 구체적인 국방개혁 예산 규모에 대해 당장 입장을 제시하기는 곤란함

## 2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활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간 동맹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25. 해외 파병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우리 국력에 걸맞게 해외파병 등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창출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함

26. 특히, 아프간 파병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아프간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외파병은 국내외 제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봄

27.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 지난 50여년간 한반도 평화·번영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음



28. 일본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과거사 등 역사 문제 해결 전망  
및 대응에 대한 견해는?

- 일본 민주당이 과거사 및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 진보적 자세를 표방하여 온 것을 평가하며, 과거사 관련 현안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함

29.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견해는?

- 지난해 한·중 양국 정상간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구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임

30. 총리후보자께서는 과거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A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그동안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 FTA가 주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의 필요성과 법률·제도의 변화에서 오는 FTA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임

31.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나 론커크 USTR대표, 힐러리 국무장관 등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입장은?

- 한·미 FTA는 양국 간의 모든 통상이익을 고려하여 상호균형을 맞춘 협정이므로 자동차 등 어느 한 분야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은 불합리
- 특히, 자동차 문제는 이미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분야라고 생각
- 따라서, 정부는 재협상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32.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국회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한미 FTA는 이미 타결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타국보다 빨리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

### 33.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는?

- 최근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09.6.19)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34.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총리실의 역할은?

- 다문화가족정책은 그 성격상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므로 다수부처가 관련됨
  - 현재 8개 부처가 기능에 따라 5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35.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은?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됨에 따라, 그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 금년에 「다문화가족학생교육 지원방안」을 수립·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학습단계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36.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는?

-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언어·정서발달지체 문제가 우려됨
  - 이와 관련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5)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아동 등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언어·정서발달을 위해 보육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37.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평가는?

-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06. 8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현 정부들어 주요 국정과제 등을 수정·보완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OECD 회원국으로서 출산율 수준과 GDP 대비 가족지원 재정규모를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정책의 추진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소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그 중요성이나 정책의 포괄범위를 볼 때, 한 두 개 부처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됨
- 현재 위원회가 복지부 소관으로 있지만 11개 관계부처 차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선 현 위치에서 위원회가 충실히 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한나라당 유재중의원, ‘09. 7. 17)

39. 보육정책이 ‘공보육’의 개념을 넘어 ‘국가 책임보육’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현 정부 들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0. 육아문제 해결은 직장문화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은 직장문화의 변화, 즉 여성친화적 직장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41. 직장 여성의 육아문제를 돕기 위한 대책은?

- 직장보육시설 운영,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탄력근무제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앞으로 부모 및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봄

42. 「국제입양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가  
입에 대한 견해는?

- 헤이그협약은 입양아동의 기본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은 중앙국가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론적으로 협약 가입 필요성은 공감함
- 다만,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이 규정한 절차에 맞게 국내 관련법(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민주당 공통

(백원우·김종률·최재성·김운태 위원)



1.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야당과 국민이 반대할 때 후보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함
- 야당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국민과는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모든 정책은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정책이 실기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 등 정책을 국민적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 국민의 다수가 반대함으로 인해 국민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률 등 정책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

-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시급하고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 설득을 통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4. 18대 국회 들어 12월 임시국회에서 16건, 3월 임시국회에서 1건,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등 5건,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4건 등 총 3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했고 총 21건을 직권상정 처리했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운영과 국회 의장의 고유 권한에 대해 총리후보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5. 공·사석을 막론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나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음

6.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쫓기 위해 무리한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대책은?

-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해 감사, 조사, 수사 등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음

7. 후보자가 알고 있는 “대운하 사업” 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이점?

- 화물선 운항을 위해 갑문과 터미널 등이 필요한 대운하 사업과 달리,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 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음

8.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추진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9.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일부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업취지나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함
-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음



## 10.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
-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11. 세종시로 당초 계획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은 변경없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원안 추진을 위한 대책은?

- 행정도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함
- 다만, 자족기능 등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12. MB정부 들어 잠재성장률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 고도성장기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금번 경제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잠재성장률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제위기시에는 자본 및 노동투입 저하, 자본축적 저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 13. 747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747 공약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4.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MB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한 입장은?

-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 방향도 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음

15.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과거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공급부족과 집값불안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 규제보다는 저렴한 주택을 필요한 곳에 많이 공급하여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정부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도심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고
  - 특히,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등 수급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

16.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정부는 금년 세제개편을 통해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조하에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현 상황을 부자감세라고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봄
- 이미 발표된 법인세·소득세 개편내용을 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컨센센스를 통해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함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조기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 매년 연장되어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고 수혜대상도 대기업에 집중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별도의 보완방안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18. 금융안정 목적조항 추가, 한은의 단독조사권 부여 등 한국은행법 개정 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 다만, 한은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심도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19.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정책 이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

- 감세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면 경기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봄
- 정부는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조에서
  -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런 방향의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봄

20. 법인세/소득세의 예정된 세율인하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이미 발표된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은

-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국제사회의 추세를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컨센선스를 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 21.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금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기초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초에서
  -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 녹색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재전건전성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22.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747정책’에 대한 견해?

- 747 공약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3. 최근의 경기침체를 경기순환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구조상의 문제로도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경제구조적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건전한 소비의 창출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24.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은?

-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가계부채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낮은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가계대출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25. 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설정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적정이자율에 대한 대안은?

-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제도권 금융이용시 애로가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다만, 그 구체적인 이자율의 수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26.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중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정책적 대안은?

- 최근 정부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정책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 등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보완해 나가겠음

27.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수수료 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여러 차례의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총리로 인준될 경우, 국회의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8. 최근 유통대기업의 SSM 무차별 확산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붕괴 위기에 직면. 대형마트·SSM의 허가제 전환 등 혁신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 최근 SSM이 확산됨에 따라 인근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SSM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산업 발전, 영세상인 보호, 소비자 후생, WTO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29.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법안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비 인상을 초래해서 결국 주민부담을 가중 우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주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선진화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25%)을 증시에 상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이후에도 주주만 변동될 뿐 기업실체가 동일하여, 이로 인한 열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30. 도시가스 경쟁도입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결국 가정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중단이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 생각,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도시가스 경쟁도입은 발전용 물량만을 대상으로 경쟁을 도입한 내용으로, 산업·가정용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봄
-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진행함으로써
  - 불필요한 요금인상의 의구심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봄

31. MB정부 들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어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 일자리 유지·창출 등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함
-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실물경제의 흐름이 회복된 데는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경기회복 가시화 이후에는 추경편성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32. MB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 규모는 적절한 것인지, 적절한 국가채무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현재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상태는 아직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 여타 선진국과 비교시에도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으로 알고 있음

\* 국가채무(GDP 대비 %) : G20 평균 75.7, 한국 35.6

○ 국가채무 적정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정부계획은 가능한 지켜져야 한다고 봄

33. 균형재정은 필요한 것인지, 언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함
- 균형재정 달성의 목표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34.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과부 지방교육특별 교부금 등은 국회의 통제를 전혀받지 않고 장관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적절한 대안은?

- 특별교부세, 지방교육특별교부금 등의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지방재정여건,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35. 업무추진비로 경조비·경조화환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의 표시는 경조화환으로 족하며, 현금으로 경조비를 집행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경조사비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 여건에 따라 화환, 조화, 경조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36.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뿐 아니라 문화부 등 일반부처도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는 수사활동비·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수활동비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 특수활동비는 정보·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조사 및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37.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법정휴가는 100% 보장하고, 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급사유나 지급일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공무원의 복지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함
- 다만, 공무원의 휴가제도의 개선은 공무원의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직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8.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한 대책은?

-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를 당연히 존중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예산안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총리가 될 경우 구체적인 침해사례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보겠음

39.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대책은?

- 현재 정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산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 국회동의를 거쳐 총리로 임명된다면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40.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임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현 경기회복 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세출조정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증액된 한시적 지원은 구조조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1. MB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반사이의 세제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기조에서
  -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와 재전건전성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42.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규모와 근거는?

- 국가채무 적정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정부계획은 가능한 지켜져야 한다고 봄

43. 중앙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자주 재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발표된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개편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44.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각종 현안에 비추어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봄

45. 최근 7명이 사망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 정부는 사태 발생 즉시 비상태세를 갖추어 방역 및 환자치료 등 확산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역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정된 병·의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맞춰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정부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6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생계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상황임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47. 사회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지난 10년간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로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고
  - 빈곤층이 일을 통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48. 현행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후보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개선을 위한 방안은?

- 그간 복지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급여 수혜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복수급을 없애고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11일 정부에서 복지사업의 통합·정비, 인력·조직·전산망 개선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9. 현 정부가 추진한 작은 정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작은 정부는 무엇인지?

- 작은 정부 논의는 시대적 상황, 정책여건,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 정부조직·인력규모만을 가지고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 정부·민간·자치단체가 할 일을 구분하여 인력과 사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배치하여 정부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생각도 동일함



50.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 가 본 복지현장은?

- 후보자는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서울 신림동 난곡에 있는 ‘사랑의 밥집’을 매년 방문해 왔음
-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51.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된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즉각적인 무효화 선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국회 표결처리의 적법성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총리후보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52. 신문법 등에 대해 위헌여부가 제소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기정사실화를 위해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53.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는 일단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법이 시행일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함
- 다만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법률의 효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함

54.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언론관련법의 무효화 서명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러한 국민적 의사에 대한 후보자의 수용 의사 및 대책은?

-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봄
- 국가가 행한 표결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총리후보자가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55.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로서 기본적으로 교육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감안할 때, 정부는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56.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검찰 수사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연주 前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해 총리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57. 방송을 비롯한 언론과 정권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고, 언론은 여론형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8.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정부광고나 기업 광고의 통제를 통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방지 대책은 ?

- 정부 광고의 경우는 광고료,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체를 선정하고,
- 기업광고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므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59. MBC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그 동안 MBC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MBC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자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봄

60.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의 겸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 다만 여론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61. 재벌이 신문과 방송(뉴스보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 대기업이 신문과 방송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법개정에서는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2.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63.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지 않으며,
-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64. 통합신설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방 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통합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규모의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이전대상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비이전대상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

- 공기업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 정부는 既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통합신설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최종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음

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방이전 대상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 ‘구로구’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중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이전 완료후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세계적 예술거리인 대학로 활성화 차원에서 예술위원회 본관을 예술창작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66.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사무총장 선임 관련,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동일인이 “선임-사퇴-재선임”하는 우여곡절을 겪음. 체육단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 체육단체는 자기 책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7. 노후된 야구장의 개보수 및 신축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임. 중앙정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수익금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타종목과의 형평성을 감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68. 체육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분산된 정책 및 집행기구를 “국가체육위원회나 체육청” 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 ?

- 우리나라 체육은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봄

69.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은?

-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70.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대사는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기도 하고, 학자나 국민들간에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대사를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역사 해석에서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71.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 정부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72.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권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에 의해 문화체육 관광부도 이전대상 부처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73. 반복적인 이전을 통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행복도시 이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 문화부청사 리모델링은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7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당초 종합계획대로의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75. MB정부 출범후 문화예술기관장 등 교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사과의향, 손해배상소송 제기 중단 의향은?

- 문화예술기관장 등 교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들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가 될 경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76. 국회의원 모욕, 국민 모독 발언을 한 유인촌 장관의 언행에 대한 견해와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본적이 있음
- 향후 공직자들은 보다 겸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77. 국립 문화예술 인프라의 지방분산과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적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견해와 대책은?

-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78.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79. 가장 최근에 본 한국 영화는?

○ “태극기 휘날리며”임

80.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

- 최근 한국형 블록버스터인 ‘해운대’, ‘국가대표’의 흥행성공 등 한국영화산업은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 등 영화시장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81. 문화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국제행사(상주 세계대학생승마대회)에 대해 행안부 등에서 국회의 사전통제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동 행사를 지원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 총리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82. 고위공직자들의 종교차별적 언행 방지와 종교적 중립 유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정부의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3. 고교평준화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생수준에 적합한 교육 제공미흡 등의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84.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금지로 대학의 학생선발권 침해우려가 일부 있어왔으나, 현 정부의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 등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교등급제 금지는 일부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어왔으나, 최근 자율형 고교,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가 제공되고 학교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85. 대학의 기여입학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고, 국민 정서에 비추어볼 때 보다 폭 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86.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신분보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현 정부에서는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강의로 정보공시를 통한 보수의 현실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총리가 될 경우 보다 차분히 검토해 볼 예정임

87.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88.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수정압력을 가하고, 재판부는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 발간 행위에 대해 교과서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행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89.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 우리 고등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학벌 중시 풍조로 인해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한 반면, 질적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대학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주도할 창조형 인력양성에 주력해야 함



90.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절은 물론, “자기논문 표절”, “자기논문 이중게재”등 표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표절은 타인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연구 부정행위라고 생각함
- ‘자기논문 이중게재’등은 학술지와 대중서 또는 교양잡지 등 게재된 출간물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판단될 사안임

91. 대학교수들이 갖추어야 할 학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후보자의 기준은?

- 대학교수는 우리시대의 지식인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므로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92.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보육은 저소득 서민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 국가재정상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봄

93. 초등학교에서의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한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수업료 면제, 교과서 무상공급,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완전한 무상의무교육 실시는 국가 재정 형편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봄

94. 대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학교 경영의 비효율성과 열악한 재정구조 등에 기인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정부의 직접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의 경영혁신 지원과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 우수한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저리 대출과 장기 상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95.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법인화는 대재앙이라고 하는 데 법인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9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무엇인지 아는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상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력직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비율을 제고토록 독려하고
-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평가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97. 현 정부 여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견해

- 현 정부 들어 여성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음



98.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후보자의 생각은?

- 임원 및 관리직의 여성비율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아직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각 분야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여성부의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조사(2008.12)

□ 여성임원 비율 : 8.7%(상임 2.2%, 비상임 11.7%)

99. 현 여성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여성부를 개편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예산 679억원의 여성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여성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부에 대한 평가나 개편에 대한 의견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앞으로 여성부가 보다 더 다각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0-1.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스페인등과 1위를 다투는 지경으로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외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음
- 다만, 비정규직 개념과 범위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각 국가별로 상이하어 국가간 비정규직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100-2.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것이 적절한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야 하겠는지, 총리 후보자의 견해?

-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대화와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100-3. 실태조사 결과 그간 100만명 대량해고 주장이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보는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현재 총리후보자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100-4.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사용기간  
2년에서 4년 연장)에 대한 견해

- 비정규직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100-5. 지난 7~8월중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1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비정규직이 직업능력향상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한 시장구조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



101-2. 일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향후 3년동안 2조 7천엔 투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일본의 비정규직 대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일본 내에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시에는 그 효과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봄

102-1.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여야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02-2. 내년 최저임금(금년보다 2% 인상)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소회는?

-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103-1.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하는 것이 옳은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 학자로서 국제적관행  
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거하여 밝혀달라

-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입법예는 나라마다 다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법 제정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이제는 국제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03-2. 우리 노사관계, 더 나아가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재계의 힘이 센가, 노동계가 힘이 센가, 경제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사관계의 과제는?

-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 규모별, 여건별로 다르며 일률적으로 어느 한편이 세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보다 더 상생·협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노사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04. 국가가 시민사회 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배상 소송 등 국가도 소송을 당할 수 있듯이 국가가 인적·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105. 국가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함

106.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제적인 동향,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07. 후보자가 보기에 현행 헌법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항과 그 이유 및 개정의 방향은?

- 총리 후보자의 입장에서 개헌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다만, 개인적으로 87년에 개정된 헌법이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국가의 틀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개헌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봄
- 추후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전되면 행정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108.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헌법 제3조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를 영토조항으로 반영한 것이며,
- 헌법 제4조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상과 그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함.

109. 헌법 제10조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근본규범이 되는 최고가치라고 이해하고 있음
- 국가는 위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봄

110. 헌법 제11조 제1항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은?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이자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
- 국가는 이러한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을 실현할 기본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며,
  -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법적·제도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 정책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봄

111.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이의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 개인적인 의견이 없지 않으나, 총리 후보자임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추후 국회의 개헌논의 진전에 따라 행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봄

112. 현재의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방과 방재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을 신설하고, 방재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소방방재청의 직제와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동기관의 개편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총리로 임명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음

113.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그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3교대 근무’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안은?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제의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114.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지방자치의 수준으로 보아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함
-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시 現 치안시스템의 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현재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운영과정을 보면서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15. 현행 지방행정체제에 대하여 후보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함
-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고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16.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시정을 위한 대안은?

- 현재 검찰이 기소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건 결정의 전국적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제도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117.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은?

-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문제는 참여정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수년에 걸쳐 관련부처간 협의가 있었으나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어떤 시스템이 국민의 인권보장에 보다 충실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 생각함

118.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척결을 위하여 별도의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기본적으로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119. 용산참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 발생원인이 어쨌든 국민 6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장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경찰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하였지만
  - 이러한 불상사없이 수습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119-1. 용산참사 현장이나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병원을 방문  
할 생각이 있는지?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가족을 위로  
할 생각이 있는지?

- 사고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총리로 임명되면, 총리로서 할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119-2. 용산범대위가 지난 6월 국무총리실에 제의한 요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후보자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함

119-3.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미공개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들은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로
  - 검찰은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검찰의 공개거부에 대해 희생자 변호인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5.12)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20.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법과 원칙’이 우선시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21.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무리한 해산 또는 방해를 지속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경찰이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집시법으로써 해산 또는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통상적인 1인시위나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니나,
- 기자회견을 병자하여 다수인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여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 다수가 릴레이식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경우에는 집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22. 경찰 등 수사당국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부는 숭고한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 수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내외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23. 차관 등 하급자가 소위 실세라는 이유로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를 위한 대책은 ?

-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는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실 여하를 떠나 그렇게 비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엄중히 문책하고 단속하겠음

124. 소위 “실세차관 5인방”하는 등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 대책은?

-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알지 못하고,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나, 만의 하나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난 자의적인 권한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함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각을 통할해 나가겠음

125.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는 양 선언이 있던 날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생각은 없는지?

- 6.15/10.4선언을 통해 다방면에 걸쳐 당국간 대화가 진행되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국민적 합의 미흡 등의 비판적 견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기념일 지정 문제는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봄

126.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합의 미흡 등의 비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127.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 등 세계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대통령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할 용의는?

-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봄
- 대북특사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여러 대화방식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128. 현재 해당 연구용역이 ‘비공개’ 상태인데 그동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민적 이익과 관련된 해당 연구용역은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말씀하신 연구용역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과 합동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공동연구가 끝나면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129. 한미FTA의 성과 중 하나로 정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내세웠는데, ‘미국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의 증감 현황’ 및 ‘비자쿼터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 미 이민법은 미 의회의 직접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 협정문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미·호주 FTA 발효 이후 호주 정부가 미 의회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호주 사례를 참고하여,
  - 향후 미 의회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의 전문직비자(H-1B)의 연간 쿼터는 65,000건이며, 이중 매년 H-1B 비자를 발급받는 우리 국민의 수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인에 대한 연도별 H-1B비자 발급건수>

(단위: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급건수	2,899	2,989	2,892	3,422	3,838	3,924	3,788	3,257

\* 출처: 미 국무부

130. EU는 총 GDP가 18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한-EU FTA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다. 한-EU FTA 역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한·EU FTA 특위구성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서,
- 총리후보자가 특위구성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현행 한미조세협정에 대한 개정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개정해야 할 주요내용, 양국의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9년 발효된 현행 한미조세조약은 그간 변화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음
- 현재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세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자세한 사항은 인준이 된다면 세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음

132.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모욕, 국민 모독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던 유명환 장관의 언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 본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내정자의 입장으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133.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후보자의 기준 및 본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
135.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이 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청렴·신중·성실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리가 있겠으며,
  - 아울러, 법률 등 각종 사회규범에 위배됨 없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인 또한 ‘상식’과 ‘신의’를 평생동안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삼아 왔음

134. 과거정부 시절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하는 총리나 장관 등에 대한 견해?

136. 고위공직자들이 자녀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행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

- 과거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지켜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에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137. 탈세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39.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 납세하는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납세의무는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임
- 동 의무의 준수여부와 관련한 문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임



138.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이나 신고 등을 실수나 고의에 관계없이 허위 또는 누락한 경우, 공직취임이나 임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재산등록 또는 신고 의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 등록 또는 신고사항 누락시 소명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허위 등록(신고)이나 누락시 공직취임이나 임명 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40. 세금포탈, 소득의 불법적인 취득 등을 위하여 자녀를 위장 취업시키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42. 본인과 자녀의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세금포탈이나 병역기피 등으로 인해 국민적 의혹을 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함
- 납세 및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적인 의무로써, 공직자에게도 성실한 준수가 요구되는 의무임

# 141. 현재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해소를 위한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은?

- 이념·지역·계층간 갈등과 대립,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발전 동력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 사회안전망 강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143.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도덕성 포함)은?

- 국무위원은 확고한 국가관과 국정철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비전을 겸비하여야 하며
- 청렴성 · 도덕성 등 기본적 소양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144.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행정각부의 장”의 자격(도덕성, 전문성 포함)은?

- 행정각부의 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관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어야함
- 또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할·지휘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며, 청렴성·도덕성 등 요건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145.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격(도덕성 포함)은?

-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며,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아울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
- 또한 청렴성·도덕성 등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146. 이명박대통령(한나라당)의 선거 공약 중 후보자의 평소의 견해나 철학에 비추어 합치하지 않는 공약은 ?

- 지난 대선기간 중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공약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며, 추후 개별 사안에 대하여 물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7. 국무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안은?

- 총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각종 정책현안의 해결과 사회통합 관련 직  
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148.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한다며 내부 검증을 위하여 “재산 등(인사검증)”에 대하여 소명(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은 시기는?

○ 9월 2일경 정보공개 동의와 관련한 요청이 있었음.

149. 현 정부 출범 초기 시중에 회자되었던 “만사형통”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와 방지 대책은 ?

-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더욱이 이상득 의원께서는 지난 6월 “당무, 정무, 정치현안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150. 후보자가 1971년 미국으로 유학가는 시점부터 귀국시까지 시기별 비자의 종류(유학비자 또는 취업비자)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비자사본을 제출하시오

- 처음 유학비자로 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 준비 과정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이때 체류비자를 변경(F1→H1)한 기억은 있음
- 정확한 내용은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가 확인되면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151.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이정희 위원**

1. 한미FTA 협상 과정, 국내 논의 과정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한미FTA에 대한 학계의 접근과 논의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지)

- 한·미 FTA 협상은 과거 어느 FTA 협상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컸던 협상으로서, 협상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계·재계·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 한·미 FTA의 불가피성과 효과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체결된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더 나아가 전체 국익에 이바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2.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금융기법 발달로 인한 파생상품의 급격한 증가, 금융감독 규제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함

3. 금융부문의 탈규제와 대형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금융부문의 탈규제와 대형화는 경제 여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 다만, 최근에는 선진국들의 지나친 규제완화가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 상황을 보다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봄



#### 4.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 경향에 대한 후보자의 원인 진단과 대안은?

-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투자대상 발굴이 곤란한 상황 등이 원인이라고 보며,
  - 지속적인 기업 투자·경영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신성장동력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이전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론과 현 정부의 금융선진화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 변화된 금융환경과 G-20 등 국제적 논의 등을 고려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봄
- 총리가 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음

6. 후보자는 지난 6월 “금융의 과도한 대형화, 탈규제화로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등의 금융선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과거 본인의 발언은 학자적 입장에서 규제완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임
-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금융 규제는 잘 정비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 이를 통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

7. 작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 왔다고 보는가?

- 국민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정부도 국민들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봄

8.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학계의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동걸 前금융연구원장의 사퇴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 이동걸 前 금융연구원이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 평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녹색뉴딜이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떠한가?

- 본인이 경제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뉴딜정책이 SOC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함을 강조한 것임
- 현 정부의 녹색뉴딜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0.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검증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제방보강 및 준설 등에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함

11. 2008년 12월 10일, 뉴욕강연 보도의 사실여부, 정부의 녹색뉴딜과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작년 12월 뉴욕강연을 통해 뉴딜정책은 SOC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보육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현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은 정보인프라 구축, 청정에너지 보급, 폐자원 재활용, 산림자원 조성,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함
- 아울러 4대강 사업도 물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고 봄



## 12. 쌀시장 개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제 쌀 가격의 상승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쌀을 조기에 관세화로 개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으로, 쌀 시장의 조기 개방(관세화 전환)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13.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기업에 대한 감시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율체제가 적절하게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이러한 맥락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고 사후적 규제인 기업집단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
- 또한, 환상형 순환출자문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 향후 지주회사체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이중 대표소송은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있으나 법리상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14. 이 정부 들어와 추진한 감세정책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근거는?

-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귀속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5. 대학 교육이 응용분야와 기초분야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 대학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므로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봄

16. 현 정부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글로벌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영어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러나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므로 국어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국어를 잘 해야 생각을 잘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생각들이 사고·사상으로 이어지면서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임

17. 3불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3불정책을 일시에 폐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정부에서 다양한 보완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보완대책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 보겠음
-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고, 국민 정서에 비추어볼 때 보다 폭 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8. 후보자가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받는다면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는지?

- 용산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장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총리로 임명되면,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로서 할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함

19. 후보자는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용산 참사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 잡을 의사가 있는지?

-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들은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는 서류들로
  -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검찰의 공개거부에 대해 희생자 변호인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 (5.12)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0. 후보자는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들께 사죄할 의향이 있는지?

○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나,

-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21.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 말살의 주범인 땅투기-막개발 “뉴타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 노후화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내 필요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일시 집중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므로 개발시기의 조정, 순환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2. 쌍용자동차 노동자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는 각계의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상태를 방치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함

23. 쌍용자동차 노동자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농성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폭행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또한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찰관과 그 지휘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처벌, 징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 노사간 평화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아쉽게 생각하며
- 총리 후보자로서 경찰의 과잉대응 부분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24. 쌍용자동차 노동자 농성 당시 쌍용자동차 사측 직원과 용역들이 농성 노동자와 그 가족, 정당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 소속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처는 적극 방조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는데 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와 처벌, 징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 총리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25. 정부는 PSI 전면 참여로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PSI 참여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 PSI 참여로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기존 남북간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우리의 PSI 참여(5.26) 이후에도 남북해운합의서가 이행되고 있으며, 경협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26.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 6월 이후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남한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 정부는 6.15/10.4 선언을 포함하여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미 남북 당국자 간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급에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27. 후보자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 북한이 대남적화전락을 유지하는 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생각함.
-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동법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28.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극 관철시킬 의향이 있는지?

-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29-1.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인권위도 국가기관의 하나로 효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지난번 조직개편은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08.10월)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본질적으로 인권위의 인권증진 역할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9-2.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91.1%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되었음
- 인권위의 정당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30.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이 있었는데, 후보자의 이에 대한 견해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국회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총리후보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함

### 31.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제적인 동향,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2-1.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공무원 통합  
노조 출범은 공직자의 양심을 저버린 불법행동"과 "특  
히 정치적 투쟁을 무기로 하는 민노총과 연계를 시도한  
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에서 총리 후보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32-2. 이 장관의 발언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취임한다면 당장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게 될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불법으로 보시는지?

-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32-3. 행안부의 9월 10일자 지침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불법이 아닌지, 갈수록 노동조합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 나선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봄



32-4. 공무원 노조의 통합 결정 및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투표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중 하나이고 긴요한 활동인데 이를 사용자인 행안부가 근무시간 중 투표 금지라고 하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지?총리 후보자의 의견은?

- 행안안전부 장관의 지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

32-5.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에 대해 지침에서 정치적이다, 탈퇴 노조가 늘고 있다는 등의 반감을 드러내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위 지침은 아래와 같은 2007년도 총투표에 비해 볼 때 이번 투표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평등원칙 위반의 공권력행사가 아닌가 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32-6.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 뒤에 동일한 총투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실 것인지? 허용하시겠습니까?

- 총리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33-1. 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분석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한 견해

- 노사자치원칙은 적법·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주관부처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적정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여짐

33-2. 현재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평가를 취임후  
중단시킬 의사가 있는지?

- 주관부처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여짐
-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등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개선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4. 후보자는 2007년 월간조선 4월호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 시절 서울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거칠고 독선적이었다. 이 전 시장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집요하게 권유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칠고 독선적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는데, 이의 사실 여부.

-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에 만난 적이 있고, 시장 출마 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음
- 그러나, 당시 인터뷰에서 ‘거칠고’ ‘독선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음

35. 후보자 부인께서는 ‘88.2.5 주소지를 경기도 포천으로 옮겼다가 이후 50여일이 지난 4.1 다시 서울 방배동으로 원위치 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아닌지? 당시 왜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옮겼는지?

- ‘88년 당시 지인이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고
  - 거기에 땅과 집을 마련하려면 현지 거주자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부인이 그해 2월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옮겼음(‘88. 2. 5)
  - \* 현지 6개월 거주요건 규정은 그 후인 ‘88.11월 시행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 신설
- 그러나, 승용차가 없어 버스 편으로 포천에 가봤는데 너무 멀었고, 여러가지 불편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거이전을 포기했으며
  - 부인은 다시 주민등록을 서울 방배동 집으로 옮겨 왔음(‘88. 4. 1)
- 추후도 위장전입 의도는 없었으며, 본의 아닌 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36. 후보자가 매매한 주택에 대한 거래 내역.

같은 주택에 대해 매입당시 매입금액을 취득세 신고시와  
이후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르게 신고한 내  
역이 있다면 그 이유는?

	계약서상 매매 금액	사면서 취득세 신고시 기재한 매입금액	이후 팔면서 양도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매도금액
방배동 경남아파트 (‘83.10.27~’94.2.6)	※ 과세 제척기간(최장 10년, 지방세법 §30조의 4①)이 경과하여, 관할 구청에서 보관·관리하지 않아 확인 불가		
일원동 목련아파트 (‘94.1.21~’02.12.24)	(매입) ※ 과세 제척기간(최장 10년, 지방세법 §30조의 4①)이 경과하여, 관할 구청에서 보관·관리하지 않아 확인 불가		
	(매도) 875,000,000원		매도시(‘02.24) 이미 양도세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3년 보유, 1년 거주)을 충족(8년 11월 보유, 8년 거주)함
방배동 방배대우아파트	※ 未 소유 (서울대 총장공관 공사 관계로, 총장 공관으로 임시 사용) (임대보증금 6억5천만원)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05.3.29~ )	(매입) 995,000,000원		해당 사실 없음



37. 후보자께서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자문료로 9583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미합산신고한 이유는?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얼마인지? 최근 국세청에 납부했는지?

- '09.5월 '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탈루목적이었다면 '07년도에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07년도 분 신고시는 합산신고를 했음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정신고 후 1,352만원을 납부하였음

38. '04~'07년 소득 중 인세, 자문료 등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인세 소득 관련>

- 모든 인세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음

<예스 24 고문료 관련>

- 예스24 소득에 대한 갑근세(413만원)는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 다만, '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총 1,352만원의 세금을 과소 납부하였음
- \* '07년도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했음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정신고 후 납부하였음

39. 병역 면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학업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 '66년 최초 징병검사(대학 1년)에서 2을중 판정으로 '67년 보충역에 편입된 후
  - '68년 징집영장 발부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부선망 독자'('66.10 양부 사망)의 경우 징집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 자식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모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려면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징집 연기를 신청하고('68~'69),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행하였음('70.2)
- 그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룬 것이 아니라 석·박사과정 마무리를 위해 미국대학 재학 중에 고령으로 징집이 면제됨
  - \* 유학기간 중 소집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음
-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

40-1. 성폭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면 총리로서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은?

- 여성정책 추진에 회의적일 수 있다는 의원님 의견은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겠음
- 여성정책은 그 내용과 추진체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해야 할 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여성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40-2. 최근 성인지 예산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행계획은?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음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우리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는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40-3. 여성교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자 교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게 하는 할당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 현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총리가 될 경우 할당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40-4. 프린스턴 및 마이애미의 경우와 당시 서울대의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 여자교수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지?

- 교수채용 결과 여교수 합격비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임
- 서울대 여성교수 비율이 특별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타 대학간 채용과정과 채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41. 세종시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족기능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
-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와 충청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임 시 회 의 록

2009. 9.

第284回國會  
(定期會)

# 國務總理(鄭雲燦)任命同意에 관한 人事聽聞特別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9月14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 議事日程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자료제출요구의 건

## 審査된案件

- |   |    |
|---|----|
| 1. 위원장 선임의 건 .....                          | 1  |
| ○ 위원장(정의화) 인사 .....                         | 2  |
| 2. 간사 선임의 건 .....                           | 5  |
| ○ 간사(권경석·백원우) 인사 .....                      | 5  |
| 3.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                    | 5  |
| 4.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 | 5  |
|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 9  |
| 6. 자료제출요구의 건 .....                          | 11 |

(보고)

(15시09분)

### ○입법조사관 조의섭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9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국회법 제46조의3 및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10일자로 동 임명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동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13인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국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권경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권경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석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권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백원우 위원입니다.

풍부한 원내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야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계신 4선의 정의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추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석 백원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시고 조금 전에 백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야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한나라당 정의화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화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소임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정의화) 인사

(15시14분)

○위원장 정의화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헌법에 따라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국회가 선출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개인적인 품성이나 또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실시되었던 인청문회들을 통해서 마련된 우리 특별위원회의 좋은 전통과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역량 있고 도덕성을 갖춘 국무총리인지를 검증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인사청문회가 원만하면서도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백원우 위원님부터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국민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과 총리로서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강운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강운태 위원입니다.

우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몇 차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원컨대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에서부터 능력·자질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검증을 해서 후보자가 올바르게 평가 받는 그런 알찬 청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만하고 덕이 많으신 위원장님이 계셔서 적이 안심스럽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위원들에게 최대한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제대로 청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이 청문자료가 확보되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서야 이 청문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5년간의 세금납부 실적을 내도록 법에 명

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정되신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대학교수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책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인지세 수입이 2008년분이 대략 한 3100만원 되어 있는데 2008년 딱 한 해밖에 안왔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런 자료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회에 보내는 인사청문자료에 5년간 분을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는데 그냥 2년밖에 덜렁 붙이지 않았어요.

또 놀란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서가 죽 붙어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얼마하고 현금 사용을 얼마하고 하는 등등이 죽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7년, 2006년 3개년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2005년, 2004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락시켜 버렸어요.

내가 지금 세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여합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기본적인 자료는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 뭘 좀 추가로 요청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위원장께서 따끔하게 질책도 하시고, 실무자들은 이것은 다른 자료가 아니고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강운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자료는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할 수 있

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따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출신 김종률 위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2기 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리 청문회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전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총리실 자료제출담당 공직자께서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의화** 따로 아마 안 오신 모양입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직무대행 손준철** 예.

○**김종률 위원** 앞으로 회의가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총리실 정부 쪽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공무원 좀 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결정이 되셨으니까 협조 차원에서라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청문위원으로 내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실에서는 아주 간단한 자료조차도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하면 보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

지 중요한 그리고 주요 인사청문회에서 개별 청문위원으로 지정이 되면 개별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합리적이고 무리하지 않은 한 다 제출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출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 준비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개별 청문위원들 요청에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당부를 정부 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 자료제출 요구시간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구를 하겠다라는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인사청문에 필요한, 그 취지에 합당한 자료라고 하면 바로바로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 제출한다는 명분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말씀 드리는 기회에 특별히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료제출 건은 오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의결되고 나면 제출할 것이고요. 물론 법적으로 기한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나 완벽한 청문회를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바로 전달이라도 또는 회의 중에라도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출

신 최재성입니다.

총리 청문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내정자께서 얼마나 자기 소신껏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그런 자질이 되는지 이것은 다른 어떤 기준에 각각의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정운찬 내정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떠나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사실상의 자격이 되는지, 적격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도 있는데 그런 것 다 떠나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다 하더라도 같은 기준과 같은 관점 또 같은 열정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운찬 내정자와 같은 분을 총리로 내정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료 문제와 같은 것은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 있게 자료를 내놔서 정운찬 내정자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인위적인 어떤 방어막을 치지 않고 국민 앞에 뚝뚝이 검증받았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정에 위원들끼리 많이 협조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청문위원으로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총리로서 책임자인지를 밝혀내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이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도덕성에 관한 또 자질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또 정책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마이크 두 번 잡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한나라당 나성린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능력 검증의 장이 되고 또 도덕성 검증의 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이해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훈 위원 청문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옥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지명된 총리후보인 것 같습니다. 자질이랄든지 도덕성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리더십을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구요. 특히 우리 인사청문회가, 물론 예전에도 많은 청문회가 있었지만 한껏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수 위원님.

○정희수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옥임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여느 청문회와 다르게 그야말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관심이 높은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국무총리청문회는 좀 다른, 그야말로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 스스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야당위원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보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야당위원님께 역지사지를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준철 수석전문위원직무대행입니다.

다음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이밖에 입법조사관 등 여러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인사한번 하십시오.

(직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

(15시28분)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한나라당의 권경석 위원, 민주당의 백원우 위원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경석 위원과 백원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간사(권경석·백원우) 인사

(15시30분)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두 간사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인사말씀이 있겠습니까.

먼저 한나라당 간사이신 권경석 위원님



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훌륭하신 정의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 우리 백원우 위원님!

○**백원우 위원**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 3.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 4.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5시30분)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9월 9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미리 교섭단체 간사위원 내정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는 9월 24일에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채택하도록 하는데 만

약에 나중에 채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인사청문회는 첫날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또 둘째 날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및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청문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실시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간사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견이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 위원** 김종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기 실시계획서에는 언제…… 심사경과보고 채택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아까 별도로 구두로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의화** 아니, 조금 전에 김종률 위원님께서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 아닙니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24일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이렇게 이날 채택하기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건……

○**위원장 정의화** 양당 간사님께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률 위원** 일반적으로 청문회 끝난

다음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그 일정하고는 좀 이례적이라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렇습니까?

○김종률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일정은 우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어차피 심사 후에, 우리 청문회 후에 경과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이 좀 빨리 되고 원만하게 되면 뭐 23일에도 될 수가 있을 테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률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된 건가요?

○백원우 위원 예.

○김종률 위원 뭐 백원우 간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른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제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원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운영방침은 아까 제가 못 봤는데, 일시 및 대상자는 맞고요 운영방침에서 위원 1인당 오전 7분, 보충질의 오후 10분 이것은 아까 간사협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서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하고 권위원님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백원우 위원 예, 방송시간과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다, 아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서(안) 2쪽에 보면 6번 운영방침 ‘나’에 질의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 질의시간은 지금 공영방송들이…… 또 다른 방송 포함해서, 우리 국회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전에 10시~12시 또 오후 2시~4시까지 방송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협의를 해서 방송국에서 시간을 좀더 연장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질의시간은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골고루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7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까 아침에 간사회의를 하면서, 간사 예정자와 얘기하면서 이것은 한 30초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게 나중에 블랭크(blank)가 10분이라도 생기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딱 두 시간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되 전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하는 원칙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권경석 위원 이 부분은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안에 방송시간이 더 늘어나면 1인당 발언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강운태 위원입니다.

방송시간에 대비해서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방송에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나’항 문맥을 보면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위원 1인당 주질의 7분, 보충질의 10분으로 끝내버린 것처럼 다분히 오해가 되도록 문장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조정하시고요.

우리 위원장의 취지는 알겠고, 생방송 시간에 청문위원들이 고루 돌아가도록 배분한다 그런 원칙 하나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해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저녁도 들고 그다음에 저녁 11시, 12시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두 잘라서 써 버린 것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하지요.

‘나’항에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사님이…… 또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과 협의를 할 것이고요 두 분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꼭 여러분과 같이, 다른 교섭단체 위원님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뭐 차수변경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건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하게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의견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승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실시계획서의 운영 방침 구체적인 안까지 간사 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혹시라도 그런 원래의 취지가…… 철저하게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식적으로 운영이 될까봐 그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것처럼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10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방송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에 노출되는 그것에 대해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또 그것과 별도로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방송에 관계없이 위원들한테 청문에 필요한 시간, 기회는 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충질의까지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추가질의, 추가 보충질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그것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인사청문회의 어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위원장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와 같은 취지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지금 시간이 7분,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후도 10분이 맞지 않거든요. 루즈(loose) 타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9분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무튼 아까 우리 백원우 위원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차 질의(오전), 2차 질의(오후) 그리고 3차 질의, 4차 질의까지, 필요하면 보충질의가 다 가는 것까지도 백원우 위원님과 권경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요 그에 대한 논의가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지요. 1인당 주질의 오전 7분,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고요 보충질의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두시고요. 1차, 2차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질의 3차, 4차도 가능한 것을 서로 그렇게 문안을 완벽하게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성린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 마무리 짓고 말씀을…… 그래야 이 이슈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먼저 하세요.

○김종률 위원 제가 여기 실시계획서의 7분, 10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추

후에 필요하다면…… 철저한 청문을 위해서 필요한 질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주질의 7분으로 할 거냐, 보충질의 10분 할 거냐 9분 할 거냐 그것은 앞으로 생방송 일정이 나오면 각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서 간사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기회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경석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16시까지는 생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이 계획대로 하되 1인당 발언시간도 방송 시간에 따라서 연장 내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시 이후에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계획을 짰습니다. 16시 생방송 이후에는 자유롭게 추가질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짰 겁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이 문안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성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잠깐 우리 나성린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국회방송은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생중계를 하도록 제가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률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좀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열두 분의 위원이 그것이 3차가 되건 4차가 되건 골고루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동일하게 드리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할 것이고요, 만약에 개개 위원님들이 따로 그런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양당 간 간사협의를 따라서 대표를 정해서 한다면지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성린 위원 철저한 청문회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이틀간 계속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의화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저는 첫날은 어느 정도 시간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첫날도 밤새면서 하고 둘째 날도 밤새면서 하고…… 무리지요. 그러니까 첫날은 어느 정도 시간제한을 뒤 가지고 간사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둘째 날에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철저한 게 아니라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질문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틀날은 안 되면 24시까지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양당 간사님이 양당 위원님과 잘 협의하셔서, 그리고 박상돈, 이정희 위원님도 의견이 계시면 위원장이나 또는 양당 간사에게 직접 잘 개진해 주셔서 가능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제가 가결……

예, 정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수 위원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초과가 됩니

다. 그러니까 7분 하더라도 1분, 2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정의화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7분이 예를 들어서 정해지면 7분이 되면 마이크가 끝날 것이고, 그 마이크가 끝나면 발언을 해도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기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철저히 지켜 주셔야 되고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한 10초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가능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틀간 네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총리 인준 청문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날 2차로써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룰을 정하는 것도 저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문 계십니까?

강운태 위원님.

○강운태 위원 마음이야 같고 이렇게 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객관적인 문서인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김종률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장 그대로 보면 그냥 두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주질의 한 번, 보충질의 한 번 해서 두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께서 필요에 따라서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내가 잘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

니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믿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적어도 문서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다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10분' 이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말로 청문 위원들에게 고르게, 충분하게 배분한다, 구체적인 횟수와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강운태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위원장 정의화 오해 소지를 없애시다, 없애고.

그래서.....

○강운태 위원 굳이 주질의 7분, 보충질의 10분.....

○위원장 정의화 이걸 그냥 두고 자꾸 끼워 넣어 가지고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보고 새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오늘 말씀하신 이 취지를 담아서 나항을 새로 만들어서 주기로 하고요. 그렇게 의결해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하고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놔두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다들 알 만한 분인데 이런 문구를 갖고 여기에서부터 진을 빼고 그래요.

○백원우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항은 간사 협의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권 위원님, 정 위원님 계실 때 나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 쪽에서 안을 갖고 오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저는 이걸 지금 봤는데 원칙적으로만 하면 그 나항은 다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정희수 위원 우리가 열두 분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향은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두루뭉술하게 해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위원장 정의화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강운태 위원 간사 간에 협의해서 다시 하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우리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명시를 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아마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과 간사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항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5시50분)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2일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증인 3인, 참고인 8인으로 총 열한 분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여 9월 22일 청문회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률 위원** 추가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의화** 추가 신청 필요하면 하십시오.

지금 가결이 되어도요, 더 추가하실 분이 꼭 계시면…… 내일 양당 간사님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김 위원님. 그러니까 합의하도록 안을 주시면 내일 중으로 합의하셔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의결은 지금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어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이 주로 22일 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5일입니까, 7일입니까?

5일 아닙니까?

○**위원장 정의화**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5일이면 아직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인이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위원회 결의로 그것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토되는 증인하고 참고인 명단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요구할 수 있게끔……

○**위원장 정의화** 위임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예, 위임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22일 날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혹시 추가가 계시면……

내일이 16일입니다. 16일이지요, 내일이?

(「15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일입니까?

송부할 날짜가 하루가 필요하합니다. 그러니까 6일이 필요한데……

○**최재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나 이런 데도 증인 출석할 때 며칠 전에 한나라는 규정이 있는데 본인이 거부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내일이 청문회인데 이틀 전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거나 해서 결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의화** 제가 지금 알 때는 그 규정에는 그렇게 5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가능하면 지켜 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만약에 갑자기 돌변할 상황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긴급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지요.

○**김종률 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례가 많이 있는데 그 5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지 이틀 전이라도 되고 하루 전이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위원회로 요구하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 어떤 그 증인이 안 나오더라도 그것은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을 안 해 주었는데……

○**위원장 정의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인데……

○**김종률 위원** 그런 차이지 우리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는 것을 제가 유권해석을 한 번 더 받아 보고 싶었는데 어때요,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손준철** 자진출석 하겠다면……

○**위원장 정의화** 자진출석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시면 양당 간사와 협의하고 박상돈, 이정희 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아까 가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24시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 결정하면 되니까요, 김종률을 위원님께서 그런 분이 계시면 백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양당 간사께서 합의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증인·참고인이 나왔는데 그 질의시간에, 그

러니까 후보자 답변하고 우리 하는 게 7분이면 7분, 10분이면 10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증인이 답변하는 것도 그 시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의화** 물론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면 둘째 날 오전은 증인·참고인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인과 참고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도 나중에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자료제출요구의 건

(15시55분)

○**위원장 정의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따로 제출일시를 정하는 경우 외에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는 9월 18일 금요일 15시까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각



연도별로, 예를 들면 2009년은 '0원'이라든지 또는 2007년도 '0원'이라든지 그렇게 5년간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아까와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 또는 누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각 위원실에서 송부한 자료제출 요구를 취합한 결과 모두 3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의 자료준비 기간을 감안하셔서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십시오.

○김종률 위원 사실은 이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을 수용하면서요, 지금 18일까지 요구된 자료도, 실제로 기왕에 자료 요청한 것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제출하기 쉬운 그러나 꼭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새로, 여기 명단에 없는 것?

○김종률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 사실은 자료제출 요청에는 5년 이내의 부동산 관련 거래,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후보자가 제출할 의무

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온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검증에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는 일체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몇 가지만 특정할 테니까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아파트 매매계약서 그리고 취득할 때 세금 납부 관련 신고 서류 일체 그리고 래미안방배아트힐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서, 두 번째 강남구 일원동 716번지 목련타운아파트 103동 902호에 9년 동안 거주를 했는데 매도계약서, 매입계약서, 역시 세금 납부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다음 서초구 방배동 847-34번지 방배대우아파트 203호에 2년 6개월 거주를 했는데 역시 매도·매수계약서 및 관련 세금 납부 신고 서류 일체, 또 세 번째 역삼동 역삼하이츠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와 역삼동 오피스텔 임대계약서를 아직까지 관련된 매매계약서라든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나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5년 그리고 2007년, 현재까지의 임대계약서와 세금 납부 내역을 제출해 주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년 동안의 소득 관련 자료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까 강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외에도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09년 인지세, 인세 소득이 누락돼 있고 또 2004년에서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에서 소득공제 명세 내역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05년 동안의 소득공제명세

내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정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장남 정준택의 2005년도 소득 공제명세 내역도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것들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제출하기에 아주 손쉬운 자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에 따라서 원래 자료제출하기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 청문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를 하는 취지에 비추어서 바로 자료제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을 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된 것을 전문위원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앞에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뭐였지요, 제가 들어 보니 기간이 없는 것 같은데?

○김종률 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강남구 일원동 목련아파트는 94년 2월부터 2003년까지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 방배대우아파트는 2003년부터 2005년 7월 14일까지 거주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김종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간사님에게 사전에 주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원우 위원님, 방금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제출에……

김 위원님, 특별히 한 건이 트럭 한 차 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김종률 위원 지금이라도 당장 낼 수 있는 것인데 안 내는 거거든요.

○백원우 위원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속도를 빨리 해서 해 주십사……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 위원회에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건도 특별히 그렇게 방대한 분량이 아니라면,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 합니다만 아니라면 그대로 자료제출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간사님들을 통해서 취합해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가급적이면 추가로 많이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지요.

○위원장 정의화 물론 그렇지요. 제가 지금 김종률 위원님 말씀 들으면 대충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가능한한 빨리, 한 몫 다 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고 준비되는 대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일찍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13인)

강운태 권경석 김종률 나성린  
박상돈 백원우 이정희 이  
혜훈 정옥임 정의화 정희  
수 차명진 최재성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손준철  
전문위원 정재룡

第284回國會  
(定期會)

國務總理(鄭雲燦)任命同意에 관한  
人事聽聞特別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9月21日(月)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審査된案件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1

(10시00분)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로 저희들끼리는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와는 첫 상견례인 만큼 인사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오늘 위원님들이 누군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서 해서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백원우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운태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종률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재성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박상돈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우리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권경석 위원님이십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위원님이십니다.

한나라당 이해훈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님이십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위원님이십니다.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을 맡게 된 정의화 위원입니다.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2분)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그 임명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가 꼭 갖추어야 될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과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국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관할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런 법적 권한과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세계위기로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세 주체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경제적 난제들을 극복해서 일단 한시름을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실용과 통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최고 사령탑인 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저명한 거시경제학자로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학교 총장 재직시절 지방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해서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의 과거의 경력과 정책 집행 능력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회생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 통할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계층간 지역 간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 분들은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입니다. 국민들은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청문회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망에 어긋나지 않는 품격이 아주 높은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게도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동안 후보자에게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심 없는 질문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516건이고 이 중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84건입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미제출 사유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오전에 먼저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출석하신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 총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하신 바가 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자료요구와 관련되어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자료의 제출 요구와 관련된……

○위원장 정의화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백원우 위원!

○백원우 위원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자료가 허위로 도착하거나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와 정부 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자료 제출 요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후보자 장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후보자의 장인과 관련된 자료가 왔습니다. 후보자의 장인은 일반 사인이 아니십니다. 국방부 병무국장을 역임하셨고 군의 주요 사령관들을 역임하셨던 공인이셨습니다. 후보자의 자료들을 개인과 관련된 자료라고 그래서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인터넷 제보에 의해서 확인된 바로는 후보자의 장인은 주요한 공직들을 역임한 공직자였습니다.

반드시 후보자 장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이러한 허위 자료들을, 또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는 후보자에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마이애미대학에 입학원서를 쓰면서 입학원서에 허위를 기재했습니다. 후보자는 병역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도 마이애미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이렇게 허위의 기록으로 입학원서를 써서 마이에미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증명할 수 있는 프린스턴대학의 입학원서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시길 바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후보자가 부선망 독자로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고령에 의한 소집 면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의 자료는 조작되었거나 허위의 자료입니다. 이것을 다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실무자의 실수라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했거나 또는 자료 조작의 의심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처벌의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운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강운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광주 남구 출신 강운태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후보자가 올바르게 평가받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해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문회가 통과 의례가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청문회 진행이 과연 되겠는가……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컨대 후보자 배우자께서 화가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전시회 횡수 또 작품을 판매했다면 판매한 내역 등등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결과 지난 금요일 온 자료가 “현재 확인 중”, 딱 이 네 글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제 다시 재차 또 요구를 했더니 어젯밤 늦게 자료가 왔습시다마는 “세금 납부에 관해서는 원천징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내로부터 이번에 확인하였음”, 세금을 냈으면 낸 것이고 안 냈으면 안 낸 이유가 뭐고 안 냈으면 앞으로 이렇게 내겠고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저 스스로 이것을 보면서 지극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5년간 후보자의 세금 납부 실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2004~2008년까지 세금 납부 실적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4년과 2005년 분은 세금 납부내역, 예컨대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어떻게 제출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강운태 위원님, 시간……

○강운태 위원 그 자료는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머지는 질의할 때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저를 좀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문 위원들이 청문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자료가 제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

에 늦어도 오전까지는 이런 자료가 제출되도록……

○**위원장 정의화** 저에게 주시고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아마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추측건대, 생각건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관계법령 등의 제한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제출 안 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가능하면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김종률 위원** 하나만 자료 제출……

○**위원장 정의화** 지금 시간이……

○**김종률 위원** 아니, 자료를……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제가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니까.

○**김종률 위원**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만 특정하려고요, 오후 질의를 위해서.

○**위원장 정의화**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률 위원** 마이크 넣어 주세요.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부실 자료 제출, 거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후의 질의를 위해서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특정을 해 드릴 테니까 바로 제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년도부터 77년까지 후보자께서 징병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소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위 소집 대상자 명부, 방위 소집 명령서 그리고 응소자 명부가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 병역 기피 의혹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제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자료들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역종별 명부 73년 것을 보내 오셨는데 해당 페이지만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73년도 역종별 명부입니다. 해당 페이지뿐만 아니라……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그것은 명시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김종률 위원** 이렇게 안 하면 제출을 안 합니다. 바로 마무리할게요.

73년도……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마이크 잠깐 드리세요.

○**김종률 위원** 73년도 역종별 명부를 후보자 해당 페이지뿐만 아니라 73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거액의 세금 탈루 의혹이 지금 실제로 제기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필요성도 있으신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했던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연도별 소득금액 명세서 그리고 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료를 바로 오후 질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제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른 위원님들도 30초 정



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총장 재직 시절에 연구용역을 수행하신 것이, 수주해서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공동 연구자들의 명단 그리고 경력 그리고 총장 재직 시절에 그것으로부터 얼마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말씀보다도.

○**최재성 위원** 저는 말 안 하고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역시 최재성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8-2(23/7) 래미안방배아트힐  
110-2002

주민등록번호 460229 - xxxxxxxx

공직후보자 정운찬

○**위원장 정의화** 서명·날인하셔서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새 국무총리후보자로서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서며 저는 지금 무한한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청문회에 임하는 저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국립대학교 총장을 거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우리 사회로부터 이루 해야 할 수 없는 은덕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한 봉사로서 그것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국무총리후보 지명을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러한 부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망설이게 한 것은 다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능히 감당할 만한 역량과 자질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발표한 글이나 말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지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 나갈 뿐 아니라 내각이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비슷한 대통령님의 뜻을 살피 춰고 어두운 구석을 두 팔로 보듬고 삶에 지친 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가꾸는 데 열과 성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는 해묵은 남북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국민통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계층·세대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자랑스러운 선진 한국으로의 도약은 그만큼 늦어지고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권리와 책임이 동반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세계로, 미래로 웅비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기보다 조화와 균형으로 나아가야만 창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화와 균형은 학의 다리는 자르고 오리의 다리는 늘리는 것과 같은 강제적 획일이나 산술적 평등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분야는 경쟁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서민층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인 조화와 미래지향

적인 균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 행정을 맡고 있을 때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하여 산간 오지와 낙도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한 것이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가정,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층균형선발제를 계획했던 것도 이러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저에 대한 임명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각자의 몫을 키우고 사회정의를 확립하여 강자와 약자의 간격을 좁히며 모두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던 학창시절부터 저는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떳떳한 나라, 먹고 입고 자는 것 정도는 별걱정이 없는 따뜻한 나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무대를 주도해 나가는 똑똑한 나라를 마음 속에 그려 왔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바른 사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밝은 사회, 배경과 학벌보다 신용과 성실로 승부하는 맑은 사회를 열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청년실업 문제부터 각박한 서민생활, 과도한 사교육비, 노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불안한 국제경제와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까지 실로 버거운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저에게 총리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겠습니다.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100년, 200년이나 걸려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한 위대한 나라, 저력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0만 명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하는 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회하는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6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입니다. 5000만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이 시대, 이 땅의 영웅이요,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특별한 업적을 남긴 교과서 속의 위인들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며 모은 것을 나누어 주고 몸을 낮추어 봉사하는 분들이 모두 위인이요, 성인입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직원들의 밥을 챙기는 크고 작은 기업인들,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인들, 한여름 띄약별과 한겨울 삭풍도 마다하지 않는 농부와 어부들, 단잠을 떨치고 일터로 나가는 셀러리맨과 거리의 환경미화원들, 밤낮이 따로 없는 연구원과 기능공들,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과 민주주의를 꽃피운 시민들,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이 땅의 희망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총리로서 봉사하는 기회를 국회에서 제공해 주신다면 바로 이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성공 스토리를 함께 쓰는 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일 작정입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고 국회를 국민의 대표로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을 위해 총리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꿈을 심어 드리는 국민희망본부,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대통령님의 비전을 설명하는 국가경영지원본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책서비스본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도약의 기회인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의 티끌은 대들보처럼 보면서 저의 눈의 대들보는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대학 강단에 서 있었 으면서도 남을 가르치기에는 수양이 부족했고 남을 비판하기에는 수신이 미흡하지 않았나 제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찰과 각오를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정과 편달을 바로 국민의 말씀으로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고 가슴 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오전 질의는 7분이고 오후 질의는 9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권경석 간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한나라당 창원갑 출신 권경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총리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본질이 아닌 문제를 왜곡해서 파헤치는 이런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야당의 지적에 의하면 후보자는 징집연기 목적으로 대학 재학 시에 숙부의 양자로 입적을 했다 또 유학 중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다가 고령으로 소집 면제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양자입적 시기는 언제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학 시절이 아

니라 고등학교 시절인 1965년입니다.

○권경석 위원 양부께서는 언제 사망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양자 수속 이후 얼마 안 돼서 사망하셨습니다.

○권경석 위원 66년도에 사망을 하신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첫 신체검사는 언제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966년에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입적한 이후에 신체검사 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징집연기신청은 언제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66년에 신체검사를 받고 67년에 보충역으로 배정된 후 68년에 징집영장을 받았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징집영장을 받고 논산으로 갔었습니다. 논산에서 징집관이 몸이 아픈 사람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징집관이 제 서류를 살펴본 다음에 “당신은 군대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왔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경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양자입적 시기가 65년도이다, 그리고 병역연기신청은 68년도에 했다 그리고 신체검사도 66년도에 했다 그래서 후보충역으로 편입이 된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다시 말해서 부선망 독자라는 사유는 징집연기 사유와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부선망 독자에 대한 징집연기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68년에는 이미 그 법이 적용됐었습니다. 부선망 독자들이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67년 병역법 개정 이후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67년도에 병역법 개정으로 부선망 독자는 징집연기 혜택을 받았는데 양자입적을 한 시기는 65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양자입적과 부선망 독자의 혜택을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관계없습니다.

○권경석 위원 관계없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래서 대학 재학 시에 숙부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징집연기를 목적으로 양자로 입적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차 신체검사를 70년도에 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유학을 언제 갔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71년 8월에 갔습니다.

○권경석 위원 유학 갈 그 당시에 병무청장 허가를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병무청장 허가를 받고 갔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 기억이 맞다면 만으로 25세가 되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할 때 병무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허가한 내용은 부선망 독자는 허가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합법적으로 유학을 갔다 이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 당시에 양부는 돌아가셨습니까, 생존해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벌써 6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권경석 위원 모친은 누가 부양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희 생모는 저를 키울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셨고, 양모께서는 제 고향에서 또 역시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고 계셨습니다.

○권경석 위원 학비는 누가 조달했습니까? 후보자의 학비는 누가 조달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죽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가정 형편은 부모가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이었고, 모친이. 그리고 본인은 고학으로 학업을 계속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유학 가서 마이애미대학 입학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왜 면제받았다고 기재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입학지원서에,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밀리터리 스테이터스(Military Status)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아마 병적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군대가 지원제입니다만 당시만 해도 월남 전으로 징병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병적사항이 어떠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면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대학 졸업 후 금방 영어로 된 공문서를 처음 봐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는 당신 나라 군대 안 가도 된다’ 해서 I wa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이렇게 썼었는데……

○권경석 위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간단히 한 말씀만……

○권경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또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병역 연기를 신청한 그 사유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였고 부선망 독자라고 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신체검

사를 한 이후에 제도가 생겨서 부선망 독자의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진 것이지 후보자는 그 당시에, 입적할 당시는 전혀 이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입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경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를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리하십시오.

시간을 지켜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해주십시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유사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운태 위원입니다.

한 이틀 수고 좀 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데 1차적 관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준법과 도덕성의 잣대부터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다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평균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장관후보

자들에 대한 청문회 지켜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에게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열심히 다는 못 봤습시다라는 장관후보들이 열심히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운태 위원 대답은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 그 얘기인데요. 예컨대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에는 합격하고 면접시험 과정에서 병역비리 또 탈세 또 위장전입 이런 것이 나왔다면 그 사람 합격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탈락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탈락시킬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도가 아주 심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지금 국민들께서 개탄하고 계십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하나같이 탈세에 부동산투기에 재산 축소 신고에 온갖 문제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어서 어째서 꼭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만 고르는 것인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과연 이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 아니냐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장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섯 사람 전부 제청 서류에 도장을 다 찍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자세히 검토한 후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제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강운태 위원 후보자에 관한 기본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연간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강운태 위원 제가 보니 말이지요, 개략적으로 교수 월급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 밖에 강의료, 자문료, 인지세, 용역 수입 등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지출은 대략 기억나세요? 역시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2008년의 경우에 우선 신용카드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부부간에 1억 2000만 원 이상 쓰셨고, 또 장남도 함께 살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장남은 보니까 수입이 연간 5000만 원 되는데 이래저래 신용카드만 8000만 원 넘게 썼대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후보자 탁자 위에 ‘정운태 후보자가계수지 분석’ 이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자료는 후보자께서 국회에 냈던 서류 또 국세청 자료, 관보에 게재된 것, 지극히 공식적인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후보자 가족 전체가 대략 수입은 9억인데 지출은 9억 4300만 원 그래서 4200만 원 정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들어 온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것은 그러면 금융소득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자산

이 줄어야 되는데 3년 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무려 3억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살펴보니 그 기간에 무슨 부동산을 판 것도 없고 다른 자산을 처분한 것도 없어요. 들어온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은데, 거기에 또 얹힌데 댔친 격으로 금융소득, 금융 예금이 더 증가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 해석이 안 된다 말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대략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말하자면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이 최소한 3억 6000만 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여기에서 말한 지출이라는 것은 지극히 공식적인 지출입니다. 예컨대 후보자 가족이 세무서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한 신용카드 지출액, 현금영수증,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예컨대 무슨 경조사 비용 또 후보자께서 종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내시는 헌금 또 이렇게 저렇게 쓰는 활동비 이걸 감안하면 훨씬 더 지출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4억보다도 훨씬 더 넘게 됩니다.

지금 자세한 1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위원장 등등 청문 위원 전부 나눠 드렸습시다마는, 제가 묻겠습니다.

도대체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이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총리 지명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회계 자료를 봤더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지난 2주일 동안 열심히 제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강운태 위원 시간이 없거든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포함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하시지요. 기회는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이 예금의 증가입니다.

○강운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간에 3년 동안에 4억이 넘는 돈이 비어 있는데 이것을 제3자로부터 받으셨든, 선의로 받으셨든 어쨌든, 아니면 후보자께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세금을 조금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탈세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든 또는 전혀 모르는 제3의 수입원이 있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실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이러는 건데, 오늘 오전까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답변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후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위원입니다.

우선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나성린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전문가가 총리로 지명되어서 다행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최근에 후보자께서 세종시 문제 때문에 많이 곤혹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최근에 부산이 위축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고향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후보자의 고향이 어디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충남 공주입니다.

○나성린 위원 공주지요? 공주·연기가 앞으로 세종시가 들어설 곳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후보자께서 한 세종시에 대한 발언의 진의는 세종시가 올바르게 발전해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자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세종시가 2030년까지 50만 인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아무리 옮겨 봤자 3만에서 5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5만~47만을 옮기려면 무수한 국민혈세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테니까 그때 대답해 주시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자로 계시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학자로서 비판적 견해를 여기저기에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정책 혼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편의상 한승수 총리 정부를 1기 정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기

정부에 재정부장관이 둘 있었습니다. 강만수 장관 윤증현 장관,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똑심 있게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였거든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좋은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학점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대학교수로서 건설적 비판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총리에 임명되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써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적 비판을 할 때는 단기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적 성장력을 키워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건설적 그리고 우호적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장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장기적인 국정비전은 선진화입니다, 선진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왜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난 50~60년 동안 상당히 발전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민주국가도 만들고 또 지속적 경제성장도 하

고 또 나라의 품격도 높이려고……

○나성린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선진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선진국으로 가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도 후진국의 부자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우리가 일단 선진국이 되어야지 서민빈곤층도 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화·민주화를 거친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한 수단으로서 한나라당은 정당정책의 공동체 자유주의를 못 박고 있습니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전혀 아닙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못 박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잠재경제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한 것이 뭐냐 하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증세, 규제강화, 개방화 반대하고 이런 정책을 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로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화 확대 이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유주의는 굉장히 좋은데, 자유주의의 폐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도 실

용, 또 친서민정책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자유주의의 약점을 공동체주의로 보완하려는 것이지요. 절대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리의 경제철학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유주의에다가 사회 통합의 개념을 집어넣게 된다면 필요 없는 오해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후보가 후보로 되셨을 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나성린 위원 지금 관건이 2개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대책도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우리가 참여정부 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민지원 대책도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 세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야당이나 진보시민단체들이 부자 감세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감세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경제학

교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감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경기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생각한다면 경기 회복에 커다란 도움을 못 줄 것입니다. 또……

○나성린 위원 나중에 우리가……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감세를 해 갖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득을 보므로 결국은 부와 빈의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성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감세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질의 응답을 하기로 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는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검증무대는 아주 가혹하고 힘들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되고, 대답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세종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안, 원안 하는데 원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원안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정해진 안이 아니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이미 정해졌고요, 원안은 행복도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이전해서 계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를 축소·변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 주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걸 다르고 속 다르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행정기관 이전변경 고시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될 수 있으면 빨리 계획을 확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 서면답변에서 보면 자족기능 보완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족기능 보완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해 오면 그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산업기능, 과학기술기능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니까 세종시 민간사업자들도 현재 사업을 불확실하게 보고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 유령도시를 걱정하는데 저는

이명박 정권이 세종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게 정확한 지금 현황 아니냐, 이렇게 사태를 좀 바로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직까지 변경 고시가 되지 않은 것은, 제가 들어가서 업무 파악을 한 2주일 동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국제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경제도……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물을 때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사정 변경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도 세종시 건설사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불가피, 뭐 수정한다, 수정한다가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는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족도시,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자족도시가 되려면 당초 계획대로 중앙행정부처 9부 2처 2청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김종률 위원 세종시는 지금 이미 법과 예산이 한창 집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세종시 수정’ 운운하는 말씀은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이 한 22조~23조 배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미 한 4, 5조가 집행이 되고 총리실을 담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 봐 가지고서는 그 도시가 자족도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도……

○김종률 위원 이미 국민하고도 약속을 한 거고 법이 집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행정부처 이전 변경 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족 기능 보완을 검토를 해야 된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위원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그동안 참 많이, 충분히 토론했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행복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지금 22조 중에 5조 이상, 4분의 1 이상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미 법과 예산이 한창 집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후보자께서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아주 엉뚱맞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총리 지명 받은 날 그동안에 평소에 생각했던 지론을 그냥 말씀한 것이고요.

○**김종률 위원** 아니, 평소의 지론, 학자적 소신이라 그러시는데 언론이 후보자에게 학자적 소신을 물었겠습니까? 총리로 내정됐으니까 총리후보자로서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정을 총괄해야 될 총리로서 국정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저는 총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총리는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김종률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를 그렇게 작은 현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다가 말아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도시를 정말로 크고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작으면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는 국정을 총괄해야 되는 총리로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는 집적의 이익을 넘어서 아주 비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 지역경제 피폐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후보자의 눈에는 죽어 가는 지방,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후보자의 귀에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의 목소리, 외침이 안 들리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대학총장 때 지역균형선발제며 또 계층 균형선발제 등을 도입해서 또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부천 소사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세종행정도시가 비효율적이다.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향이 공주시지요, 충청도?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충청도 공주에서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많이 받았습니다.

○**차명진 위원** 좀 괴로우실 정도로,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전화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훌륭한 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종시를 자족

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후보자께 제가 여쭙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세종행정도시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어 보냐면, 비효율의 정도에 따라서 뭐 그것이 우리가 그저 눈감을 정도면 원래 법으로도 있으니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비효율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비효율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종시로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장관 모임이든지 차관 모임이든지 할 때 많은 인력들이 한 군데에서 다른 군데로 옮겨 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는 독일입니다. 본과 베를린 간에 행정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과 비효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주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으로 약 20년간 22조 5000억, 아니면 더 이상의 돈을 써 가지고서 세종시가 정말로 바람직한 도시, 뭐 제 표현으로는 자족적인 도시가 못 된다고 한다면 그 22조 5000억을 쓴 데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와서 비효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총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충청도를 고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대해서 불리하게 어떤 일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도시를 정말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본뜻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 낭비 문제하고 세종시 자체의 어떤 자족도시 기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행정 낭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지금 과천에 있는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과천에 있는 부처들의 서울 사무소가 비공식으로 따로 있는 것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차명진 위원 기획재정부는 여기 여의도 은행회관에 그리고 정부청사, 중앙청사에도 있고요, 지식경제부는 한전 그리고 여의도 우체국에, 그리고 대전에 있는 청들은 전부 다 공식적으로 지금 여의도 부근에 분소가 있습니다, 서울 분소.

제가 이 한 예만 들었는데 이게 이동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이중으로 지금 청사를 사실상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제가 보니까…… 여의도에서 세종시까지 얼마 걸리는지 좀 재보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의도에서 세종시까지요?

○차명진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면……

**○차명진 위원** 1시간 40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시간 40분 동안 보통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제가 따져 보니까 그쪽이 공무원 1만 명이 내려간다는데 1만 명 중에서 하루에 최소 한 200명, 특히 이런 정기국회 때는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루에 4시간을, 소위 말하면 KTX를 사무실로 두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합리적이라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자숙성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과천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과천에 청사가 과천 도심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청사에서 과천에다 내는 세금이 보통 얼마인지? 세수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차명진 위원** 면적은 4분의 1인데 세수는 20분의 1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과천에 이렇게 정부기관이 들어서 그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낮에는 서울로다 밤에는 기숙사에 가기 힘들니까 어디 서울에 있는 자기 1가구 2주택으로 가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디 밥집이나 술집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시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자족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종의 유명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만 나중에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각한 안보 공백이 있습니다. 아

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예컨대 환율이 아주 급등 급락을 하는 환율 비상이 있을 때 그 비상대책회의에 기재부장관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북에서 금강산댐 열어서 수공을 펼쳤다, 한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비상대책회의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있어야 되지요?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번져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국을 휴교를 해야 될 건가, 사무실을 전부다 닫아야 될 건가,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있어야 되지요.

**○위원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는 총리로 내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비록 학자적 입장에서 개인 의견을 말했다 하더라도 발언내용이 사려가 깊지 못했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 발언에 충청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요? 야당이 들고 일어나자 여권은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충청권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정자 발언에 충청권이 더욱 분기하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축소음모론의 실체가 총리내정자 입을 통해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던 고향 출신의 내정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악역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관중 씨가 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조조의 아들 조식, 조식이 쓴 시 아시지요? ‘자두연두(煮豆燃豆)’ ‘콩 삶는 콩깍지’ 이런 연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개각 발표 직후에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비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묻겠습니다.

내정자가 얘기하는 효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적 효율을 얘기합니까? 정부 효율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행정 효율을 얘기합니까?

우선 그 답변부터, 셋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경제적 효율이건 정부 효율이건 행정 효율이건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만 신뢰라든지……

○**박상돈 위원** 아니, 신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효율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도 문제고……

○**박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이나 정부 효율이나 행정 효율이나 셋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경제 효율도 있고 행정 효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저는 총리내정자가 뭔가 혼란을 가져 왔구나, 개념상의 혼

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 효율을 얘기하자면 그건 우리 내정자가 더 잘 알다시피 균형 개발론이냐 아니면 비균형개발론이냐, 불균형개발론이냐의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내정자는 절대로 불균형개발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균형개발론자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시간 없는데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행정효율을 얘기하는 건데, 정부효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 효율인데 도대체 행정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한 청사에 여러 개 부처가 전부 들어가 있으면 행정효율이 높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이를테면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 같은 것은 여러 개 부처가 한 청사에 들어가 있지요? 70년대 자원이 빈곤할 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정부청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사 형태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도 비효율이 있겠지만 아마 말씀드린 비효율 보다는 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육해공군 참모총장하고 대통령하고 어디 갈 때 한 헬리콥터에 타고 가는 것 봤습니까? 왜 같이 안 타고 가는지 아십니까? 9·11테러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정부종합청사, 얼마나 안보에 취약점을 노출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9·11테러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일거에 국무총리서부터 여러 개 부처 장관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한번쯤 따져 보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정자께서 과거 발언과의 일관성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대총장을 하실 때 신입생들 지역균형선발제도 같은 것 말이지요, 이 개념이나 국토의 균형개발론 그 연장선상에서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는 패키지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말하자면 선도사업이 세종시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혁신도시거든요.

예컨대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부산하기관, 공기업들은 전부 다 지방에 내려가라 말이야. 한전이고 KT고, 광업진흥공사고, 농촌공사고, 내려가서 각각 혁신도시를 구성하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공무원들 자기들은 안 내려가고 정부산하기관들보고만 내려가라면 거기에 노조 없습니까? 거기에 공기업 산하 직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내려갑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행정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도 누구보다도 균형발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아이디어나 또 세종시 아이디어나 균형발전을 위한 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는 너무 빨리했고 또 깊게 생각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얘기를 했어야지 내정되자마자 아직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저는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이 과거에, 2002년도에 내정자께서 서울대 제2캠퍼스론 또 한번 제기한 적 있지 않으니까, 12월 30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추가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허용해 주시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간략하게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박 위원님은 마치 세종시에 관한 저의 논평이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하게 이 문제를..... 제가 원안

대로 하자, 하지 말자, 수정하자, 수정하지 말자 그런 의미보다 조금 문제가, 자족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 좀 한번 논의하자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 위원입니다.

정운찬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도 칭찬을 들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을 꺼안으라고 1년 반 동안 요구하신 야당의 승리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선도하는 담론가에서 이제 소신과 능력을 활짝 펼치셔서 행정의 달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단, ‘검증’이라는 산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서전을 좀 읽어 보았더니 ‘케인즈의 스승인 마샬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차가운 머리’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제가 차가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충남 명사 모임에 다녀오셨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다녀왔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그 명사 모임에서 ‘공직에 있을 때 고향을 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도 받으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나라와 세종시를 위해서 모두 위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진 1장을 가져왔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미 말씀하셨듯이 세종시에 건설될 국무총리실 건설 현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총리는 세종시에 있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완공이 되면은요. 이것은 차명진 위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인간의 머리를 반으로 쪼개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도 국정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갖고 오게 되지만 위기 때, 이 위기 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이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안보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헌을 해 가지고 정·부통령제가 된다는지 아니면 의원집정부제가 되면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부통령 내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총리가 세종시에 있게 되는 이러한 상당히 역기능적인 현상이 도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가볍게나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이게 단순히 정부 효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미국의 예를 들어 주신 위원님도 계신데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같이 집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입수한 연구보

고서인데요. 이게 보고서가 나왔다가 슬그머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세종시로 옮겨갈 관청의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의 26% 이들은 ‘행정도시로 이사 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한 38% 정도는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이 혼자 가서 독신으로 있든지 가족의 일부만 가겠다’, 그러니까 거의 70%가 ‘내려가더라도 몸만 가겠다’라는 얘기고 ‘서울에서 자동차나 기차로 출퇴근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활이 불편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잠시 살펴봤더니 실제로 자가용과 철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아예 계획에다가, 이 행복청 계획에다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와 전용 열차를 운행하겠다’ 또 심지어는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보전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족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세종시 건설의 모범이 행복도시건설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鄭玉任 委員 총리후보자로서 그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낙은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으나 위헌 판정을 받아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옮길 것이 아니라 부분, 거의 반 정도 옮기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이 세종시 건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법에 의하면 그 중요한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겠다’ 그다음에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아예 포기한 상황이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충청도 수도 이전으로 재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내년이 지방선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신이 그리고 세종시를 위해서 그리고 충청인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차가운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 배정된 예산이 23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니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진정한 자족 기능이 있는 그런 세종시, 지금 이제 계류 중인 세종시 특별법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릇 속에 총리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라 총리로서 대정부질문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리가 되신다면 과연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서 과학 연구기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시를 좀더 자족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22조 5000억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쓰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려고 그러합니다.

목표는 자죽도시지 ‘그것이 원안이다. 원안이 아니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충청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가장 차가운 머리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시절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바로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중앙 관청과의 조율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충청인을 위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떠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민주당 남양주 갑 출신 최재성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후보자가 병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세금 탈루를 했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흠결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후보자의 철학, 가치관 또 평소의 처신, 공직 사회나 우리 사회의 파장 이런 것이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첫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yes24에 1년 10개월 동안 약 1억 가까운 그런 급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후보자의 해명은 ‘이것 국

가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라는 본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단순히 자문을 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자문을 했다면 자문료를 받으셔야지 왜 봉급을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재성 위원 아니, 봉급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된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봉급을 받고 yes24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봉급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운찬 후보자는 당시에 직업이 2개인 셈입니다. 서울대 교수이고 yes24에 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원입니다. 다만 이름만 고문인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말씀이……

○최재성 위원 아니,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봉급을 받은 것은 맞고 봉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 내면 직원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봉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최재성 위원 아니, 근로소득세…… 아니, 후보자께서 이것은 기본적인 국민적 상식인데 그냥 일반회사 다니는 샐러리맨들도 다 아는 겁니다. 봉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그 회사 직원 아닙니까?

자문은 자문료라든가 강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봉급이 나간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줄 때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연 얼마씩 주기로 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자, 후보자께서…… 급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대장? 정운찬 후보자 급여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설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인정 못하면 저 질의할 의욕이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깐요, 정운찬 후보께서 이것은 변명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년의 수당을 12번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합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정운찬 총장께서 이것을 왜, 대학 당국도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무국에 질의했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정운찬 총장께서 총장 재직 시절에 수십 건의 겸직허가를 결재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봉급이 없습니다. 이 사외이사들은 전부 봉급이 없어요. 이렇게 실비제공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습니다. 보수수령 여부는 ‘없음’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급여대장에 정운찬 후보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정운찬 후보자가 총장 시절에 결재를 한 겸직 신청한 교수들은 전부 봉급 받지 않았던 교수였고 따라서 규정을 몰랐다는 것도 사무국이 그렇게 얘기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서울대 총장으로서 직접 결재한 분으로서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기준 직전 총장이지요, 정운찬 후보자가 총장 하시기 직전 총장이 모 그룹의 사외이사 4년 해서 1억여 원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것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억납니다.

○**최재성 위원** 당시 총장 낙마 사유였고 서울대 민교협에서 성명을 냈고 총장을 중도하차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된 것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억합니다.

○**최재성 위원** 정운찬 후보께서는 민교협 교수 언제 탈퇴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억이 안 납니다.

○**최재성 위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최재성 위원** 이게 2002년 5월 2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일간지나 각종 언론에도 보도됐던 일입니다. 정운찬 후보께서 총장 하시기 직전 총장이 같은 사유로 물러났고 그 당시 서울대 민교협 소속이었던 정운찬 총리께서도 그 민교협에 성명이 나온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이미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뒤로 총장을 하시고요.

올 2009년도에 제주대 강지용 총장 후보지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똑같은 사유로 인가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고 겸직금지조항 위반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보도 보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못 봤습니다.

○**최재성 위원**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기준 전 총장과 또 강지용 제주대 총장 후보자는 낙마를 하거나 반려를 당했고 지금 정운찬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최 위원님, 앞에 사외이사하고 고문은 다른 겁니다. 사외이사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고문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이나 여러 대학에……

○**최재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아시지요? 서울대 규정에 벤처기업의 임원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임원이 등재 임원일 때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고 급여대장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다시 한번 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이것 나중에 다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쪽에서 한꺼번에 주는 건데 그냥 편의상 나누어서 준 것에 불과합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에 질의하고요.

무슨, 고문이라 그러셨는데 이 답변자료에 보면 야구 관람한 것, 야구 인터뷰한 것, 또 저자 사인회한 것, 축하한 것, 총 6건 외에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억 원 가까운 돈을 수령했다 말이지요. 이것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yes24……

○**최재성 위원** 아니, 명확한 사실만 얘기

를 해 주시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책을 좋아하고 책 보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맡아 달라고 해서 맡았었고 워낙은 사외이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외이사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문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고문료를 얼마 주냐고 저한테 의논한 적도 없고 제가 얼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것보다 편리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주변에서 참 훌륭한 학자로서 참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자기관리를 잘해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저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총리후보자로 내정되게 된 대통령의 의중은 경제도 어렵고 또 사회갈등으로 인한 통합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대통령의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저 보고 와서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 보니, 그전에도 여러 번 만나 뵈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만나 뵈니 최근의

우리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경쟁이 중요하다, 그런데 경쟁이 중요하되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은 따뜻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서민정책을 쓰겠다고 하셔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모시고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희수 위원 특히 그중에 후보자께서는 참 소신이 뚜렷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많이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글로벌환경이고 국가경쟁력과 또 치열한 세계시장 환경하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공주 출신이지만 충청 출신 국무총리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총리로서 앞으로 국정을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경제 분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평가기관도 부정적인 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징조는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다, 국제적인 공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과연 어느 때쯤 경제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출구전략은 어느 때쯤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으나, 평소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희수 위원님도 경제학자시라 잘 알겠습니다만 경제의 예측은 틀리려고 한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는 참 말하기 힘듭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많은 고

위 경제관료도 걱정하시고 일반 국민도 걱정하시니까 출구전략을 마련해 뒀다가 어느 때가 적당한지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출구전략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아마 다른 경제학자들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감세정책에 관해서 감세가 좋다, 증세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꽤 일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도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께서도 학교에 계셨을 때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힌다고 하면 결국 그동안에 세금 안 내던 사람이 또 세금을 내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율을 낮춰서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면 세출을 거기에 비례해서 줄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계속 세출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좀 유예하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도 있지만 과연 감세를 했을 때, 법인세의 지금 수준은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지금 낮은 편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에 OECD 평균이 27%이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25%에서 22%까지 되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20%까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조절할 만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세율을 낮추어 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진 다 했을 때는

누구한테는 분명히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출구전략 아니겠습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율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조정할 만한, 연기를, 일부 유예를 한다라든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제가 감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감세정책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게 되면 경기 진작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감세한다고 그래서 득 보는 사람이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은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금방 걱정을 좀 하셨지만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국민 부채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도 쓰고 저 정책도 쓰고 또 감세정책까지 써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당에 감세를 한다고 하고 나서 금방 또 유보한다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아직 교수 티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세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 찬성을 못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처럼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간사이신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인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2000년인 것 같습니다.

○백원우 위원 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장인이 66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금방……

○백원우 위원 그것도 실무자의 실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66년에 돌아간 것은 저의 양부이십니다.

○백원우 위원 실무자의 실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어제 밤늦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인의 경력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개인의 뭐요?

○백원우 위원 개인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 제공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백원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는 제출 못 할 게 없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온 자료는 본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이런 엉망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반드시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의화 착오가 있으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답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후보자가 66년도에 장인이 사망했다고 제출했던 첫 자료에 66년도, 당시에 장인은 국방부 병무국장을 하셨습니다. 68년도에는 2군 부사령관을 하였고 69년도에는 5관구 사령관 하셨습니다.

이때는 후보자가 병역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는 1973년에 결혼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뭐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백원우 위원 ‘고령’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고령이지요? 고령이라고 제출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백원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만. 저는 문서에 의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제가 나중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답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병적증명서에 분명히 고령이라고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죽연기받을 수 있다가 어떤 연령에 도달해서 이제는……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고령으로 면제받으셨지요?

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부선망 독자로 면제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요……

○백원우 위원 이것은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출한 어떠한 서류를 보고 실무자들이 작성했을 텐데, 이것도 실무자의 실수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부선망 독자이므로 68년 연기를 받은 이후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보충역으로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백원우 위원 그 사실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다음에 연기를 하다가……

○백원우 위원 왜 서류가 다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왜 서류가 다르지요?

고령으로 면제받았다라는 서류와 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는 달라야 하는지 해명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백원우 위원 자료로써 해명해 주시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백원우 위원 이것을 더 이상 실무자의 실수라고 그렇게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31세에 면제를 받았지만 31세까지 계속 소집 연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원우 위원 그런 과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부선망 독자 때 문이었습시다.

○백원우 위원 아닙니다. 도피성 해외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병역이 연기되고 나중에 고령으로 면제받으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백원우 위원 자, 70년도에 급하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

○백원우 위원 마이애미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는데……

○위원장 정의화 후보자께서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마이애미대학으로 유학을 가십니까,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70년 12월 15일 날 입학원서를 작성하십니까,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쯤 됐을 겁니다.

○백원우 위원 예.

후보자가 언론에 해명한 것은 소집 연기된 보충역이었다…… 소집 연기된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것은 71년 2월 8일입니다. 70년 12월 15일 당시에는 후보자가 보충역이 될지 안 될지 재신검받은 바에 의하면 확정되어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왜 마이애미대학의 입학원서에 ‘나는 병역이 면제되어 있다’고 썼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백원우 위원 몰라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미국의 입학지원서는 미국 학생들한테……

○백원우 위원 영어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면제되었다고 썼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야 되는데……

○백원우 위원 연기되었다고 쓰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연기되었다고 쓰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잠깐 말씀……

○백원우 위원 후보자께서는 마이애미대학에 9월 21일 날, 71년 9월 21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8월 25일까지 11개월 만에 석사학위를 마치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11개월 만에, 첫 번째 유학 가시는 분이 11개월 만에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까지 받으시는 분이 입학원서에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나는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렇게 쓴 것을 어느 국민이 믿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본 미국 공문서입니다.

군대는 어떻게 됐느냐, 나는 미국 군대 안 간다, 그런 말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원우 위원 이것은 후보자께서 급하게, 당시 70년도와 71년도의 상황은 월남전에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들이 1년에 5만

여 명씩 파병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이 파병됐습니다.

○백원우 위원 4만 8000에서 4만 9000씩 매년 파병되던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분명히 허위의,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하셨다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면제되지 않은 분이 면제되었다고 썼다고 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마이애미대학교는 1971년 9월에 입학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번……

○백원우 위원 그때도 면제되어 있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그래서요……

○백원우 위원 자꾸만 거짓말을 하시면, 후보자의 자서전에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셔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십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후보자가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한 것은 자료에 의하면 78년 12월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위증의 죄를 범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78년 12월까지 콜럼비아대학 조교수로 근무하신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후보자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원우 위원님의, 장인 관련되는 개인정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후 2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훈 위원 서울 서초갑의 이혜훈입니다.

후보자께서 이틀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백원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 질문은 잠깐 미루고 후보자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아까 장인이 병무국장으로 재직

했던 시점과 결혼한 시점, 그다음에 마이애미대학의 입학원서에 기재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후보자께서 좀 해명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우선 백원우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1978년 8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강사로서 했습니다. 아직 서울대학교에서 고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 7일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조교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콜럼비아대학교 조교수 자리가 그 날짜로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애미대학과 관련시켜 가지고서, 이것은 백원우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단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 해서 그랬건 어떤 뜻으로 했건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원서에다가 병역 상태를 쓰라고 그러는데 나는 미국 군대 갈 필요 없는데 뭐…… 여기다가 사실은 정답은 ‘해당사항 없음’ 또는 ‘non-applicable’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그냥 ‘I wa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제가 어릴 때 쓴 거고 공문을 처음 봐 갖고 어리둥절해서 쓴 것이고, 또 사실은 한국은행 다니면서 갑자기 유학을 가게 돼서 좀 잘못 쓴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얼마 전에 해명 기사를 언론에 뿌린 것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생각이 안 났는데 하여튼 제 어린 마음속에는

미국 군대는 해당 안 되고 한국 군대는 부선망 독자는 보충역으로 되면 계속 소집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또 역시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경력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군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1973년에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국방부 병무국에서 일하셨다고 하는 경험은 있는 것도 알았고 여기저기 야전 사단장 또는 사령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대 결국 안 간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한다, 군대 안 가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영장을 받고, 사실은 제가 가정교사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내가 군대를 가면 가정교사 월급 받은 걸로…… 입주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제 생활비는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사 월급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그때 3학년이니까 빨리 졸업해서 취직해 갖고 어머니를 도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논산에 갔는데, 논산에서 당신 군대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왔냐고 거의 반 야단치기도 하고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그때 제가 일생일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군대 가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는 안 와도 좋다고 하는데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 서울로 올라와서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해 갖고, 다시 또 징집 연기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집 연기를 한 번 하면 신체검사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받았는데, 제가 70년 2월부터 71년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일했습니다마는 그때 저의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이 오셔서 ‘이봐, 미국 갈 기회가 참 흔치 않네, 지금 자네가 배운 것만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네, 미국 갔다 오지’ 그래서 ‘아닙니다. 어머니가 계신데요, 좀더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 ‘아니야, 한번 녀를 산을 넘어야지’ 그러시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우시면서 ‘갔다 와라’……

또 마침 저희 생부모의 큰아들이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부양을 할 수가 있으니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가고 나서 계속 공부를 하느라고 결국 못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1년 하고 프린스턴에서 빨리 하면 4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논문 제목을 아주 이론적인 걸 해 가지고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77년 말에 논문을 끝내고 학위는 78년에 받고 그리고 78년 8월 말에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거짓말은 안 합니다. 와서 보니, 저의 이해로는 소집 연기하다가 35세까지도 연기되면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형님 댁에 있는 서류를 보니까 벌써 77년 1월에 면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혜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장인께서 병무국장으로 재직하셨던 66년, 67년 그때는 지금 결혼하신 부인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73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일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혀 무관합니다.

○이혜훈 위원 그리고 또 병역에 대해서 마이애미대학의 입학원서에서 쓰신 부분은 미국 학생들에게 주는 란으로 당시 미국이 모병이 아니고 징집이니까 병역 상태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쓰지 않고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군대에서 면제됐다는 뜻으로 쓰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률 위원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정의화 조금 이따가 마지막 질의를 끝내시고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감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경제학자로서 티를 못 뱃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라디오연설에서 하셨습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최근에 경험적 연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감세 혜택이 중산층 또는 그 이하로 더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을 긍정도 부

정도 못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정희 위원** 긍정도 부정도 못 하신다, 제가 서면질의로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라고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귀속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이 연설 내용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이라고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친 서민정책을 쓰면서 감세정책을 쓰건 또는 어떤 다른 정책을 쓰건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확실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경험적 연구를 잘 안 해 봐서 그 결과가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희 위원** 경험적 연구는 못 하셨는데 2009년 4월 8일에 매경과 인터뷰를 하신 게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감세 문제에 대해서 ‘감세 문제가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길이 아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작년 11월 12일에 기고를 하셨는데 “감세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위기 대

응책이다” 이것은 감세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경험적 연구는 안 하셨지만 적어도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어느 정도 상황을 보시면 이것이 어떤 계층에게 효과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통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이런 글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쓰게 되면, 금방…… 일률적으로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정희 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별로 경기 진작 효과도 많지 않고 또 분배도 좋지 않고 또 재정에도 어려울 것이 틀림없지만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작년에 조선일보……

○**이정희 위원** 제가 좀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시간이니깐요.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선의를 믿으시는 역할을 하시는 존재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총리의 직위는 대통령의 선의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대로 검토하고 그 선의가 제대로 정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바꿀 의무가 있는 직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험적인……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통령께 할 말은 하겠다……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험적인 통계를 늘 총리께서 스스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학자로서 일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실무자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보고가 국민들에게 홍보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지는 않는지 또는 과장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그리고 정 총리께서 믿으신다는 대통령의 선의가 과연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되고 해설되고 있는 것인지, 홍보되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따져 봤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근거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70%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자리에 놓아드렸는데요. 감세액을 정한 겁니다. 감세액을 ‘중산·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기타는 고소득층입니다. 이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08년 09년 해서 여기 보니까 65.4%가 중산·서민층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중산·서민층이란 누구냐를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층 구분이 88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이 ‘기타’에 들어갑니다.

이 ‘기타’는 몇%일까요? 몇%라고 보십니까? 8800만 원 이상.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5%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0.5%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 1%’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 1%’라는 것은 그만큼 특권층이고 대단히 누리기 힘든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한 이 통계, 대통령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전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 1~0.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르면 서민인 겁니다. 중산층인 겁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납득 못 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당연히 고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도 보니까 일인당 그리고 기업당 감세 혜택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류에 따르더라도 정말 심각하지요. 중산·서민층에 돌아간 한 사람 앞의 감세액, 물론 면세는 제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니까 일인당 감세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감세액은, 0.5%의 감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33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했더니 대기업은 감세 정책의 효과로서 기획재정부 통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도 몇 배입니까? 20배 정도 되지요? 10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정운찬 총리께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홍보와 대통령이 잘못 집행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

실 겁니까? 바로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으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십분 참작해서 통계를 잘 살펴보고 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이런 식으로 청문회 진행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법 위반입니다.

인사청문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시간을 후보자에게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해명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더라도 청문회법에 일문일답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위원의 질문 시간을 통째로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입니다. 이럴 거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런 인사청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잘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후보자 위증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백원우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백원우 위원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부선망 독자의 사유로 병역이 연기되어서 지나다 보니까 면제됐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위증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면제받을 당시의 병역법 제44조1항에 의하면 부선망 독자로 연기받으실 수 있는 나이 한도가 있습니다. 23세입니다. 후보자가 유학을 갈 시기에는 이미 부선망 독자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67년도의 병역법 44조입니다.

후보자의 계속된 거짓말 증언, 부선망 독자이기 때문에 징집이 연기되었고 그래서 나이가 차서 면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위증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청문회법 7조에 있는 일문일답에 따른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후보자 장인 관련된 경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백원우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불만을 위원님들이 많이 토로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오후 2시 청문회 다시 재개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만부득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오전 첫 인사청문회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9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한나라당 나성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질의를 좀더 계속하겠습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감세 논란을 보면서 작년 광우병 파동 때가 생각납니다. 미국 소고기만 먹으면 다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선동적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나라가 엉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부자감세도 근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거가 없이 이렇게 이제 선동적인 발언을 해 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현혹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클리어(clear)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팩트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총리후보자께서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견이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기왕에 이제 하기로 한 것은.

그런데 이제 우선 이렇게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10%가 전체 세수의 얼마 정도를 낼까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시 그것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인의 10%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90% 이상을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체 상위 기업 0.1%가 전체 세수의 80%를 납부합니다. 아마 상위 0.2%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90%를 납부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도둑이 아니고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납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소수가 상당수의 세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자꾸만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공공의 적으로 해 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감세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는 중소세를 많이 내는 분 또 법인세를 많이 내는 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 과거에는 성장을 잘했고 지금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지만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서 사회 불안으로까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성린 위원**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감세를 하려는 건데 우선 감세의 핵심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양극……

○**나성린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드릴게요.

감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경쟁국들보다 세 부담을 높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낮게 내고 있는 부자들을 더 낮게 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경쟁국들보다 세금

을 지금 많이 내고 있으니깐 조금 더 그걸 낮추자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야당과 타협해서 감세를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까지 경쟁국들보다 높습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경쟁 상대국들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세금이나 금융상의 지원을 기업에 해 줌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려면 세금을 좀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고 나라가 사정이 급박하다면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기업들이 처한 다른 조건들 봅시다.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요. 지가 높지요. 이자 높지요. 노사관계 복잡하지요. 규제 강화되어 있지요. 다른 조건이 다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높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강조했던 것은 지금 한국이 잘 살려면 투자를 잘해

야 되는데 오랫동안 투자가 부진했었습니다. 투자 부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내거는 원인은 규제가 많다,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또 투자 마인드를 키워 주지 않는다, 이른바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는, 한국이 이미 굉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도 굉장한 나라가 되었고 미시적으로도 아주 6, 7개 분야에서 산업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첨단기술이 있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자, R&D를 좀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고 R&D를 좀더 기초적인 것에서 할 뿐만 아니라……

○나성린 위원 좋습니다.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그쪽의 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어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경쟁 상대국보다는……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고요.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감세 논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세를 하면 투자가 더 늘어나고 소비가 더 늘어날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증세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감세에 대

해서……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 분명히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 감세는 필요조건이지요. 감세한다고 해서 다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조건이니깐 이것을 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가 무작정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보다는 세 부담이 높지 않게 해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부자 감세 논쟁을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고 합니다.

우선 소득세 같은 경우 봅시다. 우리가 네 소득계급이 있는데 다 2%p씩 인하해 주기로 했고 그것도 야당과 협의해서 첫째에는 저소득층만 해 주기로 하고 고소득층은 내년부터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네 소득계급에서 제일 부자는 4%p 인하해 주고 그다음에 3%p 인하해 주고 2%p, 1%p 이렇게 인하해 줬어요. 4, 3, 2, 1…… 그때는 아무도 부자 감세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마도 이른바 진보정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부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성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지요.

부자만을 위해서 감세해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정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만을 위해서 감세해 주는 바보 같

은 정부가 있겠어요? 앞으로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부자가 몇 %입니까, 전체 인구의? 저는 그런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부자만을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정부는 있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정부, 우리 현 정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법인세도 그렇습니다. 법인세도 지금 2년에 걸쳐서 대기업도 해 주고 중소기업도 감세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해 주는 것, 대기업 혜택 보라고 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도 좀더 하고 R&D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민·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필요조건이라고 그러셨지만 감세를 해서 부자들이, 소위 큰 기업들이 투자를 좀더 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재정이 악화되고, 악화되어서 사실은 정부가 이런저런 좋은 일,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서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어 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학자적 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지난 10년 동안 걱정을 해 왔고 사회복지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지요, 그렇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

히 감안하고 있고 재정적자를 메우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도 성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서 그걸 줄여야지요, 증세를 해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추가발언에서 좀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성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지금 도덕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도덕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정법 위반과 함께 정직성, 얼마나 정직하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정직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운태 위원** 오전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엇갈리는데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후보자의 가계수지 상황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입이 지출보다도 오히려 4200만 원이 적다, 지출이 더 많다 하는 점, 지출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이 줄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야 되는데 부동산 팔지도 않고 금융자산은 오히려 늘었더라 그래서 미니멈, 최소한으로 따져서 대략 3억 6000만 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4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우선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말하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조금 설명드리고……

○**강운태 위원** 아닙니다. 설명드릴 충분한 기회를 드립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하는 것?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계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이 3년 동안 3억 2000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인정합니다. 금융……

○**강운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별도의 수입원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그런데 금융자산은 늘어, 도대체 별도의 수입원이 됩니까? 이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께서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강운태 위원** 짧게 하세요. 어차피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하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을 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금융자산은……

○**강운태 위원** 글썄, 그건 반복하지 마시고요. 결론만 말씀하시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금융자산 증가액과 수지 적자액은 제가 3년간 지출총액 중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이 상당 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중첩되어서 지출이 중복 계산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증거를 내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세무적인 것 전부 확인했습니다. 중복된 게 없고요.

두 번째, 금융자산 늘어난 것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은 금융재산 증가 부분과 지출 부분에 이중 계산되어 있어서 지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후보자께서 자꾸 물어물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3년 전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3억 2000만 원이 늘었다니까요. 늘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저절로 통장에 들어가지 않는 한 어디선가 수입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출이 수입보다 많더라 이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외국에서 강연을 했다거나 세미나를 했다거나 해서 수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양국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상대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운태 위원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산정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 신고 완료하고 오

늘 아침에 세금을 냈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침에 세금을 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얼마 내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이 지금 들은 바로는 100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게 수정 신고하면 다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디로 탈세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때 가서 수정 신고하면 되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는……

○강운태 위원 이쯤 되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도 수정 신고, yes24 고문료도 수정 신고 다 하셨잖아요, 9월 15일 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수정 신고하셨군요? 그것 잘하신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저도……

○강운태 위원 자,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서울대총장 되실 때 D그룹 오너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야구도 팬도 되시고요.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강운태 위원 그분이 서울대총장 되실 때 서울대병원장 자리에 계셨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어느 월간지를 어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강운태 위원 김종인 전 의원께서 증언하셨고, 김종인 전 의원은 우리 후보자와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부인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두산 그룹으로부터, D그룹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강운태 위원 자, 또 묻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모자 회사로 성장한 Y모자 주식회사의 회장이 용돈을 간혹 간혹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또 후보자께서는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에 걸쳐서 가서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은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얼마나, 얼마나 받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얼마나 받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두 번에 걸쳐서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운태 위원 총리가 되시면 여기 저기서 용돈 받으시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용돈이라 하더라도 지금 세법상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무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돈 주고 받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세금을 많이 추징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받은 강연료 등등을 “수정 신고했습니다, 또는 이중 계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 위원이 질문한 3억 6000여만 원의 차액에 대한 해명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착각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4억여 돈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로 계산하면 6800만 원 정도, 또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계산하면 1억 74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오해이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어떻게 해서 3억 62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최소한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서 수정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정 신고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에 이따 질문에 해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지금 해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단체나 기업이나 학교에 무슨 자문을 하시고 그 자문료를 받으신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에서 저한테 강의나 세미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주었고, 또……

○강운태 위원 대만 국립대학에 자문하셨지요? 대만 국립대학에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 가서서 자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문료를 좀 받으셨던데 기억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느 대학, 대만 국립대학입니까?

○강운태 위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2000불을 직접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정

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강운태 위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학에서 2000불을 받으셨는데, 이 서울대학에서 출장을 가시면서 여비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좀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왜 작동을 안 했는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의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 분야 학계의 존경을 받으시는 전문가시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되신다면’ 하는 전제하에서 후보자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최근 10년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또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금융감독인들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 세계 금융위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소위 첨단 금융상

품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그 피해는 직접은 많이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세계 전체가 금융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것을 주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보면 금융감독이라는 것이 개별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는 미시건전성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로 보면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이 부채가 과연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위기가 왔고 그래서 그 위기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미시적인 감독도 물론 하지만 별도로 거시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시감독을 강화하자, 그리고 그 강화하는 거시감독의 역할을 중앙은행에 주자 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다음에 다른 금융회사들까지 중앙은행에게 필요하면 은행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시스템, 중앙은행과 감독청을 분리한 우리의 현행 시스템이 사실 영국이 원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델의 원조인 영국조차도 감독청을 폐지하고 중앙은행에게 그 감독권을 넘겨주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을 공약한 보수당이 곧 있을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흐름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청와대에서 TF가 있었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나, 우리는 이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와 권한이 4개 기관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인데 그런데 이 4개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업무조정이 어렵고 서로 지금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TF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고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관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옛날 같으면, 부총리라도 있으면 금융당국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부총리도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누가 조정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조정을 총리가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총리가 되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하셔야 될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4개 기관을 두고 한국은행법 개정 특히 한국은행에 조사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의 세계 금융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BIS비율만 주로 따졌습니다. 자산에 비해서 몇 %를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됐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채의 성격도 잘 따지지 못하고 자산의 성격도 잘 따지지 못하는 결함이 있어서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를 한번 바꿔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와대 테스크포스에서 났다는 보고서를 읽어 본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제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해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경제부처의 수장격인 부총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만약에 여지가 있다면 역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큼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좀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해훈 위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TF가 낸 보고서를 못 보셨다니까 차제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2008년 상반기에 유동성 흐름이 좀 수상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이것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요청했는데 묵살이 됐습니다. 그



리고 하반기에도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또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11월 달이 돼서 위기가 깊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때서야 공동검사가 수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보면 국민의 혈세로 15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초부터 한국은행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150조 원이라는 돈이 과연 현장에 돈 줄이 제대로 풀리고 있는지 현장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4월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금감원은 계속 정기인사가 있어서 어렵다, 아니면 지금은 검사 인력이 없다 이런 이유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금감원은 4월이 되도록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금감원, 특히 금융당국 간의 협조 그다음에 긴밀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은 위기니까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 위기가 지나고 나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에게 총리가 만약에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챙기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후보자께서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그 여부가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어제 그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아직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시다.

○**이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또, 지금은 시간이 다 가서 오후에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민주당 김종률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종시 건설사업의 효율성 문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현재 법과 예산이 한창 집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후보자가 이렇게 효율성 운운 하는 것은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위반하겠다는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법을 지키시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셔야 될 총리로서 근본적인 자격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사과하시고 좀 취소하실 용의가 있으십

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김 위원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23조 정도의 예산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한 번도……

○김종률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는다’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하신 말씀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동의하지……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질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김종률 위원 법을 위반하는 발언이고 앞으로 법을 지키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총리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사과하실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취소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향 출신이니까 세종시 맡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후보자를 총리 내정한 그 당일 오전에, 10시에 내정 소식을 듣고 후보자 고향 출신 주민들이 환영을 하다가 오후 5시에는 세종시 수정발언, 후보자의 그 말씀을 듣고 ‘에라, 고향 팔아 잇속 챙긴다.’ 그래서 배신감 느끼면서 환영 현수막을 철거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의 총리 내정을 놓고 이이제이를 빗대서 ‘이충제충’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들어봤습니다.

○김종률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충청도 사람을 시켜서 충청도를……

○김종률 위원 그렇습니다. 충청 출신 국무총리 내세워서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자 이명박 정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를 입맛에 맞게 축소·변질시키겠다, 충청 출신인 후보자가 세종시를 무산시키는 데 총대를 댔다 이 말입니다. 왜 총대를 댄니까? 후보자의 소신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가 만약에 이명박 정권의 이런 이충제충에 끌려간다면 저는 오백만 충청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보자는 총리직이 탐나서 고향 세종시를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닐 것입니다. 감수할 용의가 있으세요?

아까 후보자께서 “세종시 고향 출신이니까 맡겨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국노 이완용이도 나라 팔아먹을 때 내건 명분은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환기하시고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권이 헌법상의 의무로 되어 있는 국가 균형발전, 지역발전 포기 선언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그동안에 경제적인·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철학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이런 상생의 철학은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산업·사회계층 간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간 불균형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으로 온갖 질병을 앓고 있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농민, 서민들, 지방의 많은 지역민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게 실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후보자 모두발언으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통합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수도권-지방 어떤 상생의 방안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김종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그건 뭐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종시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을 것인데 제가……

○김종률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바른말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률 위원 이미 법에 어떻게 추진하라고 정해진 사항을 지금 자꾸 법에 위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종시 발언보다도 도덕성 질의에 대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정 후보자께서는 yes24라고 하는 민간회사 영리업무, 겸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22개월 동안 매달 월 급여로 1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은 서울대 교수로서 받는 후보자 급여의 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 yes24 후보자가 받은 급여대장이,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자료로 받은 겁니다. 맞지요? yes24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대장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사례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만 급여로 받지는 않았습니니다.

○김종률 위원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영리업무를 했는지, 겸직 여부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후보자가 고문이니깐 괜찮다, 매달 나눠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후보자는 소득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9월 15일자로 소득을 수정 신고 해서 세금 4326만 원 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낸 자료도 안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제 말씀은 yes24 때문에 더 낸 것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률 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이 급여대장을 보면 매달 단순히 나눠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 4대보험 다 냈고 매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차인지금액 맨 끝의 항목을 보세요. 매달 이

게 같은 액수로 그냥 n분의 1로 나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다음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후보자께서 yes24 인터넷 업체에 저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 업체—도서 판매 업체입니다, 인터넷도서 판매업체—선전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김종률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정도도 관리를 못 하십니까? 후보자를 팔아 가지고 이렇게 책 팔아 먹으려고 선전하고 있는데? ‘정운찬 교수님의 쓰신 책들’ ‘정운찬 교수님의 추천도서’ 홈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을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김종률 위원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저렇게 돈을 받으시면서 영리행위 하면서, 이중으로 겹직 소득 올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공문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저 교육부 공문은 이번 3월 29일자 공문인데 저게 후보자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 허가, 영리행위 금지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총장 추천 취소하고 다시 추천해 달라는 과학기술부의 3월 29일자 공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지침을 2004년도 만드셨는데 그때 서울대총장으로 재직하실 때입니다. 그때 보면 총장으로 사직할 때 후보

자가 만든 지침에도 월정보수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보충해서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모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외교지죠? 포런폴리시(Foreignpolicy)라는 잡지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국회로 뽑혀 가지고 저 스스로도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총리인준청문회는 기존의 청문회보다는 훨씬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증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공직자에 맞는 그런 잣대를 대야 되고 또 아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청문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든지 의혹 또 억박지르기, 특히 후보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할 말을……」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의화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저는 의회를 대표해서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점을 전하면서 본인의 의견 시간에, 질의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인 양심이 없어」 하는 위원 있음)

(「본인 발언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보다 더 경제정책을 잘 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런 비슷한 말을 어느 대학의 강의에서 했습니다. 어떤 청중 중의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경제정책을 잘할 수 있나?’ 물어보길래 이명박 후보지요. ‘이명박 후보는 현장에서 강한 분이고 저는 이론가이고, 누가 잘 할지 모르겠으나 정리는 이론가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평생 경제학자로 사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위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으나 거절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시장이 좀 거칠고 독선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참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정 교수도 서민 출신이고 나도 서민 출신인데 서민 위하는 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움직인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해 보더라도 참 두 분 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서 또 이명박 대통령의 모친은 국화빵 장수를 하시고 또 정운찬 후

보의 모친은 샷바느질을 하시면서 오늘날의 정운찬 후보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자질과 관련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기보다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삶을 일궈온 엘리트로서의 도덕적인 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친서민 정책으로서의 미소금융입니다. 총리 지명을 수락하신 다음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로 크레딧(미소금융)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시면서 과연 이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금리를 낮게 운용할 경우에 미수금이 쌓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그리고 이 미소금융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총리가 되신다면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만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서민금융 또는 마이크로 크레딧, 이것은 성공을 그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다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세난 문제하고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제가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에 나온 제목들입니다. 그 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세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밑 부분에 청년실업은 정운찬 후보께서도 대학총장직을 역임하셨고 교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 그런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안은 말은 쉽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결혼 적령기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차가운 머리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러한 서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명을 받으시고 또 그 이전에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전세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서민 문제를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오신 후 초등학교 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절하고 제삿날 빼놓고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로 외국 원조로 가져온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떡, 저녁에는 옥수수죽을 먹고 살았습

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어서 중1부터는 가정교사를 했고 고1부터는 입주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점심을 물론 싸 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뒷동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비가 오는 날은 갈 데가 없어서 참 학생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서민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을 펼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개발하는 동안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가야 되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전세 살던 사람은 또 사글세로 가야 되고 해서 그런 전세·사글세의 난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시 방법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시에 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주요 측 정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과 차선에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관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를 좀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지금 84를 넘어서 88까지 돼 가지고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니까 대학 나와서 손에 기름 묻히기를 싫어해서 굉장히 높은 샐러리를 주는 직장에 가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실업 문제는 일방적으로 자리가 없는 것

이 아니라 어떤 데는 구인난이고 어떤 데는 구직난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이지만 청년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또는 인포메이션을 잘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직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분인지 우리 청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직 후보자에게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후보자께서도 영어 이니셜로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 끄트머리에 제가 한번 여쭙았는데요, 2002년 12월 30일에 우리 후보자께서 ‘국가정책상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면 국립대로서 행정수도에 제2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 당시 동아일보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아마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석간, 문화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박상돈 위원 오보였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만 후보자께서는 국토 균형발전은 찬성하고 있는 균형발전론자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럼요, 너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사 분산을, 정부 청사의 분산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이나, 비효율적이나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다분히 청사의 분산을 놓고도 행정 비효율을 얘기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사가 많이 이격이 돼 있으면 집적화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청사 분산의 비효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시가 목표해야 될 것은 자족도시로 해야 된다 그게 제목……

○박상돈 위원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러면 저도 그걸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동안 정부 여당은 늘 이것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능과 그 나머지 복합기능, 교육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기업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을 경우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보완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왔거든요. 이해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뜻이란다면 그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다고 봤는데 후보자께서 9월 3일날 내정되시자마자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오해일 뿐이지 결국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 이상은 아니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상의 비효율도 있다, 세종시 차원에서 자족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자족기능을 채워 줘야, 만족시켜 줘야 혁신도시건 세종시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벌써 세 번째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세종시를 자족시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그런 것 하나 이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요컨대 그것은 행정기능을, 정부부처를 그리 넣는 계획을 취소하고 과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여타 기능을 통해서 그냥, 예산은 줄이지 않을 테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세종시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행정부서를 제가 알기로는 9개 부, 2개 처, 2개 청 정도로 옮겨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주

시를 위해서……

○박상돈 위원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종시를 위해서 행정부서가 10개 가면 뭐 하고 5개 가면 뭐 하나 그런 의미를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족시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나 지금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에요. 고시를 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만든다고 공약을 할 때 이미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렇게 이미 사실행위로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사실행위로 전체 예산의 24%가 이미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말씀의 취지를 지금 듣고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족기능을 앞으로 보장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를 옮기는 것은 행정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국가 전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부처를 옮겨도 옮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는 전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은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기본 도리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쪽으로 확확 그냥 바꿔 놓으면 그로 인한 사회비용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내정자께서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과 자족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라 같은 차원이라는 답변을 지금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묶음으로 이해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집적화의 대상지가,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공간에 집적시키는 것이 그 부근만 보면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맥락에서 혁신도시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세종시가 궤도를 제대로 못 가게 되면 사실상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키로 한 혁신도시도 그 자체로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내정자께서 십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자세로, 말하자면 원안을 존중하되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총리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종시의 역사 또는 현재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깊게는 몰라도 좀 공부를 해 봤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자족도가 한 6~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 정도 올릴 길이 없나 하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족도 시로 만들기 위한 전체 토지 배분이 약 6.7%인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전체의 50% 이상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생각이 있는 공주 사람들은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지를 줄여 가지고 뭘 집어 넣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공주…… 미안합니다, 세종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로 괜찮은 녹색도시로 만들어서 좋은 녹색도시 아이디어를 거의 표준화해서 세상에 좀 팔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쓸모없는 도시를 만드느니 그 돈이라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진한 것

은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정희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OECD국가로 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는 전문가들은 아직 그렇게 이야기는 않고 있거든요.

선진국 하면 법질서가 잘 되어 있다, 신용사회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민주주의가 성숙하다일 수 있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하나 더 보태자면 국가의 품격이 높은 것입니다.

○정희수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국가의 품격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도 품격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해외여행 할 때도 본받아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의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국격, 즉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고 외쳐올 정도였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대통령께서 지명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경제 부분이고 하나는 사회통합 문제에 대해서 숙제가 주어졌고 총리 2기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회통합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희수 위원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요한, 이기적인 ‘국가야 어떻게 됐든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살아야 되겠다’ ‘지역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통합이 어렵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정희수 위원 그래서 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27%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총리 내정자로서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당당하게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께 소신 있는 그러한 직언과 경제 운용과 국정을 총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후보자께서는 금융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가 월가의 자본가들의 탐욕, 너무나 지나친 이기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불거진 금융파산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주의의 거두라 할 수 있는 시카고학파의 노벨상을 받으신 루카스 교수님 같은 분도 이제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도 외환보유고가 한 2400억 불이 조금 넘습시다마는, 전 세계 6위라고 이야기하지만 6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모의 문제입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단기투자자본의 빈번한, 금융자본시장이 워낙 자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투자자본, 나쁜 말로 하면 투기자본이 되지요. 그분들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통화선물로 3개월 옵션을 걸고 한국의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차익이라든가 금융에서 환율 차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아예 환율을 고정을 시켜서 환차익을 못 보게 한다면 단기투기자본으로 인한 환율시장의 교란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사실 태국은 IMF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대해서는 ‘토빈세’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일대학에 있던 토빈 교수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는지 잘 모르겠으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환율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총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총리가 환율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그것의 높낮이 또 그것을 움직이는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엄청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동시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것입니다. 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또 다른 금융위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G20 회의에서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장들의 과도한 인센

티브는 상한선을 두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의 어느 기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분을 하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규제를, 단기수익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늘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상한, 이미 유럽은 ‘상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도 교수 때는 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었는데 역시 총리후보자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을 담당을 하고 기재부는 국제금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글로벌 환경에 국내·국제 금융을 굳이 다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모아야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서 듣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사실 오전에도 출구전략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은 2011년, 국제적인 공조를 고려한다면 한 2년 후가 출구전략이 본격적

으로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렇게 잘 정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성 위원 후보자께서는 개인적 해석은 가급적 다른 기회를 빌려서 하시고 법률적·사실적 관계만 간결하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질의 때 yes24의 고문직을 총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때 법률 검토를 하시고 그 당시에 판단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법률 검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최재성 위원 아니 이것이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는 것이지요. 법률을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후보자께서 당시에 ‘아, 이건 안 받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러 동료들의 관행을 보고 나도 안 받아도 되겠거니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하지만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기에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쯤은 평소에 알고 계셨겠지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오전에 주장을 하셨는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도 있으시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 그 응분의

책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재성 위원 아니 오전에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해석이 맞는지 간결하게 좀 동의를 하시면,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은 공무원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것은 영리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는데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러면 모든 직종을 다 금지하냐, 공무원은 겸직을 못 하느냐,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19조의2입니다.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총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부교수·전임강사 등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특례규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리업체인 사기업의 사외이사 외에는 아예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 고문으로 내락하신 yes24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모든 공무원은 금지를 했는데 예외적으로 규정

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보수를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성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계속 받으신 것은, 그게 고문료가 되었던 급여의 형태가 되었던 계속적으로 받으신 것은 영리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최재성 위원 급여를 받든 자문료를 받든 그것은 영리활동이 아니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급여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자문료도 영리활동 아닙니까, 자문료라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

○최재성 위원 영리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자문료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겸직할 때 이 판단은 기관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무원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고문을 했

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고문이……

고문은 아예 겸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사외이사밖에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중소기업법 어딘가를 인용을 해서 서울대에서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벤처기업의 임직원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겸직 못 하게 하는 게 국가공무원법 64조1항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최재성 위원 그런데도 이 법률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 말씀만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재성 위원 아니, 제 말씀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후보자, 답변만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께서 이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나 행안부에서 제주대 강지용 교수 사건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자문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수입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세금도 내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수입을 받고 세금을 냈습니다.

○최재성 위원 yes24에서 1년 10개월 동

안 세금을 받으셨는데요. yes24가 인터넷 서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사교육업체입니다. 인터넷 사교육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의 규모, 60개 제작업체를 모아서 사이버 강의 동영상 이런 것을 포털화 시켜낸 것이고요. 그래서 요금 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중등수학 총정리’ 그다음에 ‘회화와 내신을 동시에 잡는 기초’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가격 ‘2만 8000원’ ‘4만 원’ 써 있는 인터넷 사기업체입니다.

정운찬 후보자께서…… 아까 김종률 위원이 보여 주었던 패널인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기업을 위해서 인터넷 사교육업체이기도 하고 물론 서적도 인터넷에서 거래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선물도 팔고 이런 업체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여기에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2007년 3월 22일 yes24는 이러닝(e-learning) 이북(e-book) 관련한 신설 조직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됩니다. 동년 10월 30일 김동녕 대표께서 역시 이러닝 음원서비스 등으로 취급 품목을 한정하고 콘텐츠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전자상거래를 추구한다는 방침으로 보도되고요. 2008년 10월 29일 또 언론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공연과 이러닝 부분이 다라고 보도가 되고 2007년 11월에 정운찬 후보자께서 yes24에 취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업체가 인터넷 서적을 거래하는 업체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본격적인 역점 사업으로 인터넷 사교육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 후보자께서 거기에서 급여 받기도 시작하고 또 소위 말해서 후

보자 주장대로 자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대형 입시학원에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급여를 받고 혹은 자문료를 받고 활용을 당했거나 혹은 용인했다는 그런 결론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정일학원이나 종로학원의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지하셨든 안 하셨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공교육의 영역에 계셨지 않습니까? 대학교육도 공교육 아닙니까? 국립대학 총장을 하셨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다가 총리내정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양자로 잤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의 양자로 간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최재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 질의에서는 해명을 하시고 또 책임질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지나친 확대 해석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따로 방금 yes24에 대한 최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하시겠습니까? 한 1분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지금 yes24를 저는 인터넷 책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사업 다각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일도 한 모양입니다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취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그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가끔, yes24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은 주고 그 회사에 도움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취업을 했다 또는 꼭 비유하자면 사실 학원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최재성 위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누가 사실 학원에서 일했다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다시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세종행정도시 비효율의 내용과 관련해서 명백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세종시 자체의 자족성이 상당히 의문시된다, 유령도시의 위험이 있다, 또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 길거리정부 탄생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짧게 얘기하신 것인데요. 저하고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끝졌는데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미 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동의합니다.

○**차명진 위원** 경제학자 입장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실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북한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도 군은 저에게 총과 장비를 주고 저의 시간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안보 문제는 정말 혹시 만에 하나 일어날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상시에 무시하다가 마치고 군대와 소방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주셔서 됐고요.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효율성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추가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특별히 생각이 안 납니다.

○**차명진 위원** 한 2030년도쯤 되면 행정도시가 완성된다는데요. 우리가 2030년 정도 되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통일이 되면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좋습니다. 수도를 안 옮길 수가 없어요. 특히 수십 년 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거의 백 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인데 수도를 남쪽에만 둘 수는 없지요. 그러면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여의도, 광화문, 과천, 세종 또 아마 예상컨대 개성,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야 됩니다. 세종에 있는 것, 지금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세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옮겨 가게 되지요. 경제학적으로는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22.5조를 들인 행정도시의 행정기관들이 옮겨 가야 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점도 행정도시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염두에 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제가 표출은 못 했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제가 왜 이 행정도시 비효율성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여쭙 보느냐 하면,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의향을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자족성이 문제가 된다면 세종도시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도록 터를 다시 닦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기존의 행정기관 옮기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6% 정도 24만 평이 공장용지로 있으니, 파주 LG필립스 보면 한 100만 평이 필요하거든요. 100만 평을 따로 닦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겠지요. 발전소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저는 그 돈 들어가지도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거론했던 행정도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뭘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자꾸 제안하는 훌륭한 대안을 한번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 확실하게 해 두십시오.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어떤 형태든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세종시에 행정부 옮기는 것 별것 아니라고, 거기 좋은 공장들, 대기업의 깨끗한 공장들 세워 갖고 세종시 사람들 훌륭하게 편히 살도록 해 주면 된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지켜야 되는데, 단지 지금까지 알려진 계획이 공주를 자족시키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 보는 것이지 지금 옮기지 말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내일부터 다 백지로 하고 돈 50조, 100조 줄 테니 우리한테 와서 새로 계획하자,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네스북에나 오를 수 있는 엄청난 행정 비효율, 안보 실종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렇게 굉장한 천문학적 비용을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명진 위원 제 생각에는 총리후보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마 대충 보셨을 것인데 주도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인을.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인데 왜 이것을 번복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저도 그 말씀에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어떤 정략적인 이유에서 건 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다만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행정도시의 문제점이 한 번 약속했으니까,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대로 하자 할 만큼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헌법 있지요? 유신헌법 통과될 때 국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고칠 때 “한번 법 만들어 놓고 왜 고치느냐?”라는 얘기 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말씀이지요 이명박 브랜드로 삼았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 있으니까 그만 뒤라” 해서 지금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공약인데? 1번 공약이에요, 이명박의 1번 공약.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분의 임기 중에 안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헌법과 대통령 공약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 위원님, 이 문제를 유신헌법 만들고 폐지하는 것에 비교 또는 응용하시는 것도 역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게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헌법도 이렇게 잘못되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인데 지금 세종시의 문제점은 단순한 경제수치에 의한 어떤 스펙트럼의 차이는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서 비난을 받습니다. 이완용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제가 생

각합니다. 10년 후에는 당신께 이완용이라는 그 오명이 돌려질 것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의 비난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간사이신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후보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가 오전에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세 가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제’라는 단어와 ‘연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중학교 필수단어였습니다.

후보자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국은행에 근무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한국은행 어느 부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외환관리부입니다.

○백원우 위원 외환관리부에 70년 2월 2일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원서를 쓸 당시에 적어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외환관리부에 근무하시면서 외국환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이 원서의 영어 의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이렇게 쓰셨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장인어른을 안 것은 결혼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 후 장인이 국

방부 병무국에 근무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결혼은 정확하게 73년도가 아니라 72년 10월 30일 날 혼인신고를 하십니다. 72년 10월 30일 날 혼인신고를 하시고요, 이게 맞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아마 저희 처가에서 미국을 보내려고 혼인신고를 미리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73년 6월 23일에 결혼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혼인신고는 그때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부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후보자의 자서전에 의하면 후보자의 부인을 만난 것은 6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69년입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69년도에 만나시고 후보자의 부인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잠깐 만요.

○백원우 위원 후보자의 부인을 69년도에 만나시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자꾸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만 헛갈립니다. 이걸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9년도부터 만났다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계시고 72년 10월 30일 날 혼인신고를 하십니다. 73년도에 결혼식을 하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당시에 후보자의 장인은 5군 군수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두 분의 병무

청장, 60년대 후반부터 70년도까지의 병무청장 두 분은 장인의 육사 2기 동기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입니다. 이 점 또한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간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님 질의에 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가 양자로 입적된 것은 65년도이고 신검을 받은 것은 66년도이고 부선망 독자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67년도에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선망 독자가 병역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양자로 입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런데 부선망 독자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67년도에 맞는데 부선망 독자가 받는 병역 혜택은 후보자가 자꾸만 착각을 하시는지 의도적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면제 사유가 아니십니다. 부선망 독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병역이 6개월 보충역으로 줄어드는 혜택만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을 한번쯤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이미 65년도나 66년도에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는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부선망 독자로 해서 후보자께서 양자로 입적하셨고 그 혜택을 노리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양자로 입적하시면서 6개월 보충역으로 병역 혜택이 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혜택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답변하셨던 것은 최근

에 그러한 규정을 찾고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7년도에 부선망 독자 규정이 생겼다고 그래서 혜택이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후보자께서는 양자로 입적하실 때 병역이 소위 6개월 방위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양자로 입적했다고 추정되어 집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백원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꾸 부선망 독자를 위해서 입양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원우 위원 아니라는 겁니다. 부선망 독자는 67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후보자가 양자로 입적하실 때는 그 규정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양자가 되고 독자가 되면,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부선망 독자와 똑같은 병역 혜택을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67년 법 개정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부선망 독자가 되든 안 되든 양자로 입적하시면서 6개월 방위로서의 병역 혜택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선망 독자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노리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밑에 분들이 해 주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고 둘째 아버지는 없고 셋째 아버지는 하나고 넷째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백원우 위원 그런 해명은 나중에, 아까 이해훈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셨고

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도 마찬가지로 부선망 독자가 면제 사유라고 계속 주장하십니다. 부선망 독자로 인해 병역이 계속 연기되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령으로 연기되었다, 이것이 지금 후보자님의 주장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역법 44조에 의하면 부선망 독자는 연기만 할 수 있고 면제는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나이가 23세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44조, 76년도 병역법입니다. 그것 확인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71년 출국할 때 국방부 허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것은 뭐 똑같은 사실 반복하실 필요 없고, 부선망 독자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후보자는 이미 한국은행에 취직하실 때 나이가 스물네 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선망 독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기 때문에 연기했던 병역이 70년도에 다시 신검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도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수만 명의 대한민국 젊은이가 월남전으로 끌려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엉터리의 마이애미 입학원서를 급하게라도 만들어서 입학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될 필요성이 생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선망 독자로 연기할 수 있는 시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연기할 사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연기하실 수가 없어요. 부선망 독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병역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급하게 유학을 가시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마이애미 대학에 입학원서를 이렇게 조작하셔서라도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질의를 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건 빼 주십시오.

후보자의 모친이 73년도에 사망하시는데도 후보자는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자서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귀국하시는 78년도까지 진짜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그 다음해 알았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런데도 귀국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백원우 위원 만약 귀국하시게 되면 병역 미필자로 출국이 금지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1971년에 출국해서 1978년 귀국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일시귀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73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무리해서라도 귀국을 해서 장례식에 참석했겠지만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다음에……

○백원우 위원 대학 유학생일 때는 그랬을 수 있다고 치고요, 유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콜럼비아대 교수가 되셨습니다. 신분도 이제는 교수가 되셨고 월급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여유도 약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묘소에 한 번 찾아보지 않을 정도였다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그것은 저의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7년 동안……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

나 1970년대에 비행기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국은행 1년 반 동안 받은 월급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비쌌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엄두를 못 낼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병역 관계인데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두 번이나 신체검사 하셨지요? 군대에 가고 싶어서 신체검사 한 것 아닙니까, 가기 위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66년도도 하고 70년도도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두 번 한 사실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기피할 의사는 없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양자 입적은 분명히 병역 연기와 무관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절대 무관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병역 연기의 주된 이유는 신체검사 결과 을종을 받았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했던 것이지 을종…… 1을종, 2을종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기가 됐습니다.

○권경석 위원 됐어요. 그때 보면 그래요. 갑종은 거의 다 같고 을종, 병종, 무종 이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을중을 받았기 때문에 병역 연기가 가능했다 또 부가적인 사유로 부선망 독자도 해당이 됐다, 주된 사유는 신체검사 결과 을중이었기 때문에 병역 연기가 됐다, 그런 결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2을중, 1을중은 보충역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기된 겁니다. 70년 당시에 병역 자원이 말이지요, 꽤 많았습니다. 징집 인원과 신체검사 인원 비율을 따져 보니까 70년도에는 53%만 징집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연기되거나 면제되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후보자가 면제받은 77년도에는 무려 67%가 면제됐습니다. 연기됐어요. 33%만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 후보자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제로서 향학열에 불타던 그 학도들, 우수한 영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도층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대생, 60년, 70년 그 당시에 젊은이로서 학업에 열중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징집 연기가 되거나 면제됐다, 그 숫자 중에 후보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통계가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러나

하여간 저는 그후로 지금까지……

○권경석 위원 아니에요, 지금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애미대학원 입학신청서에 면제라고 쓴 이 사유가 입학신청서에 기재는 돼 있지만 병역 연기에 영향을 줘니까? 안 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일입니다.

○권경석 위원 전혀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후보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병역 연기 조치와 면제라고 쓴 이 기재 상황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에 어려운 가운데 고학으로 학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노모 모시고 있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면제받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논란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왜 이 문제가 이 시점에서 논란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깊이 명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권경석 위원 세종시 관련 질문입니다.

후보자는 명품도시, 자족도시 건설에 대

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래서 후보자의 비효율 발언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키에는 행정기관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진력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주 똑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세종시설치법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헌신 투구해 왔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충청권과 정치권과 정부와 깊이 논의해서 아까 말한 명품도시, 자족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깊은 고민과 아울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권경석 위원 겸직 금지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es24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지침에 보니까, 그게 03년 3월 21일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앞에는 규정이 없어요,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을 뿐이지. 그 규정에 의하면 사외이사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일반 생활할 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권경석 위원 그것은 확인 못 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규정 확인은 제

가 안 해 봤습니다.

○권경석 위원 오늘 논란의 초점은 yes24의 고문직이 과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직무라 함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 직무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사외이사, 고문 한번 따져 보세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직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수시로 자문해 주고 돈 받는 것…… 직무의 권한·책임이 명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직무의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보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공무원법상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하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술한 논란이 있지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영리행위를 했다, 그것에 대한 위반,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첫째, 권한과 책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직무의 연속성은 하나도 없

었는데 보수는 받았습니다. yes24 기록에 따르면 매년 보수를 정할 수 없어서 그냥 1년에 얼마 주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월별로 나누어서 준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제가 총리후보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다운계약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자질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배우자께서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 구입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2002년도 12월 6일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9억 95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맞습니다.

○권경석 위원 문제는 종부세 탈루 목적으로 매입가격을 8억 6300만 원으로 기재했다, 9억 미만이 되도록 기재했다. 그래서 종부세를 탈루했다는 지적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권경석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2002년 당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작성했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실거래가격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와 그때의 잣대가 다

른 겁니다. 세무 대리인은 당연히 그때에 적합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래가격은 공시지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억 6300만 원이기 때문에 9억 미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yes24 검직 문제를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리 업무의 범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공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또는 어떤 회사에 이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특례를 두어서 기업의 사외이사로 교수가, 교육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공익적인 시각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벤처기업도 역시 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서 벤처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예외적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공무원법에 있지 않은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외이사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바로 밑에 26조가 있습니다.

그 26조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정자께서 계속 ‘yes24를 다녔지만, 보수를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직무에 지장을 준 것도 아니고 고문일 뿐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때 해석을 잘못해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공무원법을, 그때 당시에 어땠는가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사전 허가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도, 돈을 안 받아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피해 가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yes24가 하는 업무가 인터넷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지식은 없으나 그때 저한테 제의가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책, 보급해야 되는 책……

○이정희 위원 책 보급 좋은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뿐만 아니

라 그것이 우리 교육 연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정희 위원 책 보급은 물론 좋은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주저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그 목적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다른 일을 겸직할 때는 영리건 아니건 허가를 받으라는 게 취지인 겁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일반은 아예 할 수가 없지만 교육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허용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나마도 서울대학교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외이사 허가 해 주셨던 기록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봤는데 비록 실비, 연구료, 자문료 이렇게 받기는 해도, 그 액수가 상당히 되기는 해도 보수 명목으로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예 신청서 자체에 ‘보수 없음’ 이렇게 서식으로 인쇄되어 있는 단과대학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보수는 안 된다, 어디 국립대학교 교수가 밖에 가서 보수 받는다고 하겠느냐, 이것은 겸직이라는 원칙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자 하셨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은 분명한 것입니다. 허가가 없었다면.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5조인가요 그 법을……

○이정희 위원 26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26조를 말씀하



했는데 교육공무원법 25조의 적용을 받아도 똑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위반인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예외적인 허용이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이 자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실 좋은 일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 저는 선의로 받아들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터넷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책을 파는 인터넷 업체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업의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외이사나 고문을 하는 이유는 공익적 시각을 넣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문을 하시겠다고 수락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쌓은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륜이 있으니 이것을 반영시켜서 이 회사가 좀더 건설하고 공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신 것은, 결과는 광고모델 하신 겁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인터넷 첫 화면에 정운찬 총장님의, 전 총장님의, 더군다나 서울대 전 총장님의 얼굴이 나오고 추천하는 책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 올라가지요. 그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은 안해 보셨겠으나 최소한 광고효과는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보수건, 명목이 보수인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수이건 아니건 간에 연 4000만 원, 5000만 원 수준의 돈이 간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전 국

립대 특히 서울대, 제1위 대학이라는 서울대 전 총장 좋기는 좋구나. 하는 것 없어도, 특별히 하는 것 없어도 가서 사인회 한번 하면, 책 한번 골라 주면 광고모델료로 연간 수천만 원 받을 수 있구나’ 절차법적 위반 말고도 이런 서민의 심리와 괴리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좋은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정운찬 총장님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총장님께서 문화관광부라든가 또는 군의 장병들에게라든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천도서 써 주겠다, 골라 주겠다, 사인회 하겠다 했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리업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더군다나 가령 이것을 허가를 받으시고 또는 허가를 못 받으셨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도 주겠다.’라든가 최소한의…… 아무리 법 위반이 있더라도 그런 일을 하셨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냥 개인 소득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광고모델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그만 일은 하나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있는 스코필드장학기금에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을 냈는데……

○이정희 위원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 소득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을 제가 시

기 구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사실은 외부에서 돈을 얻어다가, 돈이 생기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생각은 났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 위반은 분명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정희 위원** 국가공무원법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요? 누구의 잘못에 의했든지 간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노조 말씀을 여쭙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한승수 총리께서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인 것 같은데 긴급회의를 하셔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서 장관들 몇 명을 모아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뒤면 내정자께서 이것을 담당하셔야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여쭙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입장을 못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승수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노동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81조4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급단체가 누가 되든 민주노총이 되든 한국노총이 되든 또는 상급단체가 없든 간에 그것은 노조와 노조원들이 알아서 결정

할 일이지 결코 공직자가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총리가 일국의 공무원들을 모두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뇌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정희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나성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의화** 한나라당에 3분, 1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국의 총리가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총리가 1주일 뒤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 입장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톱뉴스로 뜨고 있습니다. 입장이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 내용을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가장 뜨거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감세문제를 여쭙 보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강제……

○**이정희 위원** 감세. 감세효과 문제를 여쭙 봤습니다. 그때 직접 통계 분석을, 경험 분석을, 경험적인 연구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통계를 자세하게 보여 드렸고, 통계의 오류를 인정하셨습니다.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또는 홍보의 방법을 바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머지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에서 누가 3분……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께서 감세를 주장하셨고, 후보자께서는 감세 반대론자지요?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신중론자로 해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신중론자.

본 위원도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이 한 세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금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또 준조세 부담 아닙니까? 세 번째는 규제인데, 이 3개를 같이 완화 내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법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세는 한나라당이 여태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 현재의 수준까지 꽤 많은 정책적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전력투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도 완화시켜야 됩니다.

준조세 부담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강 알고 있습

니다.

○권경석 위원 양성화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음성적인 거래 때문에 기업인도 지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토착 비리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총리체제하에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조치해 나가야 사회정의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오랫동안 준조세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중도 실용, 실용 중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일생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또한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맞습니다.

제가 중도적인 입장을 항상 취해 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저를 진보적이라고 그러고 또 진보적인 분들은 저를 보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비난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누가 뭐래도 중도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과학자로서 실용을 주창해 왔습니다.

○권경석 위원 요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2차 질의 과정에서 Y모 회장한테 1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대략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받은 일이, 작년입니다.

○강운태 위원 작년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Y모라는 게 어떤 P모라는 말씀이지요?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모자 만드는 회사……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후보자께서 아주 활동이 다양해서서 기업활동도 기업체 사장들하고도 친근하시고 그러는데, 결국 그 Y회사 회장한테만 받으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런 돈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강운태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외국 가서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내정자께서는 외국의 학교나 단체, 기업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경대학 자문은 자문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외국에서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외국의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았거나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 강의나 세미나 때……

○강운태 위원 그런데 기록을 보면 대만 국립 청쿵대학교에서 자문을 해 주시고, 2006년 6월 5일 날 대만을 가서서 자문료를 이렇게 준 것으로 대만 대학교에서 저

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부인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성공대학입니까?

○강운태 위원 청쿵대학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게 우리말로 성공대학인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강운태 위원 여기 보면 “US달러로 2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는 자문인들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 것은 그때 바로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이었는데 총장으로서 대만출장 여비를 1139만 50원 받으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쪽에서요?

○강운태 위원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서울대학에서요?

○강운태 위원 서울대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가는 여비를 받으시고 저기 가서 자문하시고 자문료는 또 2000달러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공대학에서 세미나가 있던 것은 확실한데 성공대학에서 저한테 자문료를 준 것은 정말 말씀드립니다만 기억은 안 납니다.

○강운태 위원 글썄, 개념상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청쿵대학교에서 보낸 서류에 보면 분명히 자문료로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추가신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의 1차 질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0분간 정회하였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방금 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간단하게, 자료 요청입니까?

○김종률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66년부터 77년까지 후보자 입영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관련된 방위 소집 대상자 명부하고 응소자 명부를 요청을 드렸더니 답이 오기를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서 제출할 것을 통보조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청문회 내일까지입니다. 이것 확인이 되면 금방 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후보자께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역종별 명부 73년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종합소득세 세부신고내역을 보내 오셨는데 이것은 기왕에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소득금액명세와 거기에 첨부 제출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 자제분 있지요?

그 자제분, 정준택, 국적 및 국적 변동 관련 신고내역 서류 한 부에 대해서 이것 아주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후보자의 장남 정준택이 상실했다는 의혹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 이 자료만 되면 쉽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하게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가지 여쭙 볼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종률 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물을 때 후보자께서 충실하게 그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렇게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자료를 주셔야 내일 청문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또 접니까?

○차명진 위원 저예요.

○위원장 정의화 아, 차명진 위원이세요?  
또 바뀌었습니까?

○이혜훈 위원 아까 했으니까 돌아가야지요.

○위원장 정의화 죄송합니다.

먼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오후 질문과 관련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오전·오후 말씀하시는 걸 죽 들어 보니까 세종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비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인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청문회에서 얘기되는 과정 속에서 또 추가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관련된 문제, 안보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관련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여쭙았는데 후보자께서는 ‘원안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굳이 비효율성 문제를 뭐 하러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원안대로 한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세종시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종시를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들, 생각해 낸 가능한 계획들로는 자족적 도시를 만들기 힘들어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 보자,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런 뜻이지 원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 더 많이 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은 더 들더라도, 돈은 23조 원이 더 들더라도 세종시를 자족적인 도시로 만드는 노력을 다 같이 한번 하자, 이게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차명진 위원 이렇습니다. 세종시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고, 이 그릇이 특별시가 되고 이 그릇의 어떤 터를 닦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만 내용을 채우는 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도 다 드리고 세종시를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세종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정말로 좋은 자족시를 만들자, 이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차명진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의 도시 입장에서 자족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 효율성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그리고 통일 이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어떤 얕은 표심에 의해서 이 세종도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10년, 앞으로 20년, 진짜 세종시가 그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자 한 것은 원안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명진 위원 그다음에 오늘 상당 부분 후보자의 병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죽 들었던 얘기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고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후보자의 병역사항이 나옵니다. 20세 때 나이가 되어서 아마 소집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보충역이 됩니다. 검사를 받으니까 2을종이 되어 가지고 그때의 보충역은 뭐냐? 보결, 그러니까 죽 줄 서 있다가 언제 부르면 와라, 이런 보결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결이 아마 22세 때, 1968년도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으로 갔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미 1967년도에 바뀌어진 병역법에 의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독자는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군대를 면제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논산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조금 고치겠습니다.

68년에 영장을 받고 논산을 갔더니 ‘당신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독자니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왔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이왕 왔는데 갈까, 아니면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 ‘우리 어머니가 65세인데 내가 군대 가면 어떻게 사시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당분간은 안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래요. 제가 법에 보니까 그것도 2년입니다, 2년. 연기가 되는 기간이, 영원히 연기가 아니라. 2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되는 24세 때, 1970년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고 이때는 또 보충역이, 1을종을 받아 가지고 보충역이 됩니다.

이때의 보충역은 뭐냐? 6개월 복무대상자, 방위지요. 6개월 복무대상자인데 이 방위를 받고 후보자께서는 그다음해인 197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죽 계시면서, 8년간 있으면서 35세까지는 군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마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고 나이를 먹었지만 ‘군대 복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이미 31세 때 고령으로 면제가 되었던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전반적인 말씀은 다 받아들입니다만 방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당시에 방위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차명진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4세 때 새로운 병역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독자는 2년 면제를 받았다가 24세 때 다시 받게, 2년만에 법에 의해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그게 25세인데 보충역이 되는데 그때의 보충역은 과거 보충역과 달리 6개월 복무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어 보는 것은 기억을 더듬어보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미국으로 78년도에 유학을 가실 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71년도에……

○차명진 위원 71년도에 유학을 가실 때 기왕이면 6개월 방위니까 그 의무를 다하

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방위 제도가 있는 것도 우선 몰랐고 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970년대에 문과에서도 다른 문과는 더욱 그럴지 모르지만 경제학 한 사람이 미국에 유학한 자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가 처음 미국을 가게 됐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대학의 교수가 누구를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입학지원서는 거의 형식상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오자 저는 ‘이렇게 미국 가도 될까,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서 가지고 꼭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나갔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실 때는 병역에 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갔다 와서 내가 병역을 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셨다 이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동료들이 다 군대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을 71년 9월에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 길이 없을까 생각 중, 아까 그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선망 독자의 경우는 만 25세가 되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어디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계획을 했던 것이고, 미국에 가서는 또 공부를 죽 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서 오래 있다 왔는데 76년 정도에 끝냈더라면 그냥 왔을지도 모르지만 박사 학위를 77년 말에나 끝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명진 위원 예, 제가 본 서류에 의하면 미국 가기 전에 6개월짜리 방위를 받았

는데 그것도 대기 상태였다가, 제가 조소한 바에 의하면 대기 상태였다가 미국 유학을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갔다 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차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오전, 오후에 걸쳐서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 이제 좀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총리후보자가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혀 지금 해명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선 후보자는 3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4200만 원 더 많고, 상식적으로 보면 예금이 줄어야 되는데 예금은 오히려 3억 2000만 원 늘었고, 그래서 최소한 3억 6200만 원 이상이 뭔가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요지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께서 첫째는 “중복 계산의 가능성이 많다. 필요 경비와 신용카드 지출액을 중복 계산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참모가 그렇게 써줬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로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 자료 자체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기관인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더더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보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그 126조의2제3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제할 수 없도록 명기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1호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것은 중복계산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신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두 번째, 어찌됐든 간에 예금이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를 “외국에서 강연도 많이 했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어서 바로 오늘 아침에 수정신고를 했다” 그러셨단 말이지요. “그래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략 한 1000만 원 가깝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금을 낸 것이 1000만 원……

○강운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뒤에 배석해 있는 실장한테 그러면 전체수입이 얼마인지를 내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줘요. 안 주면서 계속 “세무대리인한테 연락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역산해 봤어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받은 강연료, 세미나 수입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종합소득세로 해서 1000만 원을 냈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입이 됐을까…… 추산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추산해 보니 대략 한 6000만~7000만 원쯤 됩니다, 그게.

지금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강연료, 세미나 수입, 전부 합계가 얼마인지 가르쳐 줄 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운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나, 이상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좋습니다.

6000~7000이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 빈단 말이지요. 그래서 3억이 빈 부분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하면서 제가 Y 모자 회사 얘기를 했더니 ‘두 번에 걸쳐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란 말이지요, 현재까지.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강운태 위원 그러면 해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말하자면 3억 이상이 비는 것인지 그 해명을 못하면 도덕성 잣대의 제1차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총리가 되겠다는 분이 그분께서 국회에 낸 청문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더니 ‘3년 동안에 4억 이상이 빈다. 그런데 해명을 못 한다’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세 번째 입니까? 네 번째 또 질의가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는, 지금 적당히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말하자면 몇 날 며칠 고생해서 10페이지짜리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길 바라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지요.

우선 아무리 선의로 생각하더라도 국가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청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총리가 되서 가지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 그 사람하고 친해 가지고 내 생활이 조금 어려우니까 뭐 한 5000만 원 줘서 받았습시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닙니다. 뇌물 같은 얘기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왜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싶지가 않아요.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법 위반이고 또 이제 세법을 갖고 따지면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증여세는 금년 3월 달에 내셨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벌써 보십시오. 9월 15일 날 수정신고 했지요. 그때 수정신고는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그다음에 yes24 고문료 종합소득세 누락 신고했지요. 오늘 아침에 또 외국에서 받은 강연료·자문료 해서 한 6000만 원 또 신고했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1000만 원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증여세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물었더니 안 주더니 어젯밤 늦게 배우자에 대한 소득내역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일체 ‘확인 중, 확인 중’ 하더니 어젯밤 늦게 나오기를 배우자가 미술품을 판매한 내

역이 2004년에 1300만 원, 2005년에 2400만 원, 2007년에 2200만 원 이렇게 판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그래서 ‘세금을 냈나’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세금 납부는 원천징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내로부터 이번에 확인하였음’ 이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번 본인이 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제가 확인했더니 또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5900만 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안 했단 말이지요. 또 누락됐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대만 국립대학 컨설팅 비용으로 자기들은 2000불 줬다고 명기돼 있는데 그것도 안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모르고. 기본적으로 나는 그것을 무슨 뭐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세금을 완전히 빼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이라 그 말이지요.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의냐 아니냐’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태도를 보면 ‘나는 그것 잘 몰랐으니까’, yes24 고문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실정법 위반인데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예, 짧게 하세요. 어차피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시기로 해요. 짧게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첫째 번 예금이 는 데 대해서 제가 쓴 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예, 짧게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이 제시하신 2006년~2008년의 총 지출액 9억여 원 중 필요경비로 계산한 2억 8000여만 원은 상당 부분 신용카드로 사용되어……

○강운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범조문까지 읽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쓴 사람이 말하자면 무지의 소치라니까요. 조세제한특별법에 이중으로 공제가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방금 설명까지 드렸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연구비를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연구원들하고 회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예,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크레디트 카드를 썼습니다.

○강운태 위원 자, 그러면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세청을 불신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강운태 위원 제가, 이 강운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준 자료라니까요. 그리고 거듭 확인했더니 조세제한특별법을 이렇게 딱 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공제를 이중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또 질의하면 그때 짚막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다음에 어떤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얼마 받았다고, 1000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증여세를 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뭐 좋습니다. 그러나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한 수십년을 같이 했고요.

○강운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세요.

○강운태 위원 마이크 주세요.

내가 증여세를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언제 증여세를 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 가지고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게 뭡니까? ‘형제 같은 사이다’ 그러면 공무원들, 수많은 공무원들이 뇌물죄로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청렴 의무가 있는 건데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친부자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 적어도 이쯤 되면 참 어찌됐든 간에 ‘내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이게 정당하지. '뭐 증여세 내라면 내지요, 뭐'.....

○**위원장 정의화** 강운태 위원님 일단 거기서,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강운태 위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배우자 문제는 저희 집사람이 10년 전부터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그리고 2004년, 5년, 7년에 걸쳐서 전부 4점인가 5점의 그림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 간 사람들이 모두 다 세금을 자기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원천징수 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미술품에 대한, 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저희 그림을 사 간 사람이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일단 이렇게 가면 오늘.....

○**강운태 위원** 자, 저기 말이지요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시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시고 그다음에 정히 그러시면 다시 한번 세무대리인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것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원천징수.....

○**위원장 정의화** 공직후보자 잠깐만요.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시간을 따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리된 답을 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늘 이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10분을 꼭 좀 지켜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다시 나성린 위원입니다.

아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죽 알아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제가 이것 가지고 서울대학에도 질의했고 법제처에도 질의했습니다. 그 답안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아까 후보자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면 위법이 아니겠느냐?'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국가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비영리행위 겸직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가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 금지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영리행위 겸직을 사외이사에 한해서 허가받고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것보다 더 영리성이 약한 고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 서울대학에서 온 답변서와 법제처에서 온 답변서가 있는데 지

금 약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위법이다 이렇게 시인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20~30초만 하면 팬썰겠습니까?

○나성린 위원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정희 위원님, 아까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그렇겠지요’ 하고 답변했습니다만 저는 결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그렇…… 말씀에 따라서, 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 이정희 위원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다고 한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었고 저한테 상응하는 답변시간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과세 또 탈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업소득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3%. 그다음에 기타소득은 훨씬 많이 합니다, 20%, 이십몇%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업소득도 3%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세법을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0.001% 정도 세법을 알 겁니다, 국세청 공

무원과 세무대리인.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탈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지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20만 원을 받았다, 2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소득신고를 하느냐 하면 소득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다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교수 때 외국 가서 하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주는 강연료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원천징수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버리면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어디 외국 나가는데 비행기 값에 보태 쓰라고 100만 원, 200만 원 줬다, 그러면 소득신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격하게 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탈세로 몰아붙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99.9%가 탈세범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공직자의 최고 지위인 총리 후보로서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총리가 될지 몰랐으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가 몰랐으니까, 세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용인해야지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 자체도 다 탈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하시는 분들 자체도 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볼 수가 있겠지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법을 만드는 사

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0.00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궁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이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제가 정책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두 가지 투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서민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어느 한쪽 정책에 너무 치중하다가 다른 쪽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는 세 부담 높지 않게, 다른 나라보다는 규제가 강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경쟁국들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이자율을 낮추어 주었던 거랑 비슷하지요.

○나성린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요.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가능하면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지원은 서민층이나 중소기업에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권장하되 경쟁에서 뒤진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08년 10월 7일 조선일보 기고에서 ‘사전적 규제 완화는 몰라도 사후적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한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사전적 규제는 경쟁국보다는 높지 않게 해야 되고 사후적 규제는 일벌백계식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은 사후적 규제에 대해서, 어떤 사후적 감독에 대해서 자신만 있다면 사전적 규제는 없앤다, 또 줄여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후적 감독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사전적 규제를 마구 없애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마구 없애지는 않지요, 우리가. 마구 없앨 수가 없어요. 규제 완화 하나 하는데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마구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적 규제를 금방 강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규제 완화와 사후적 규제 강화는 동시에 가는 겁니다, 천천히. 나중에 들어오셔서 행정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익단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

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몇 가지 기고문에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저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금산분리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간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 이런 뜻입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금산분리를 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금산분리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에서 4%까지만 할 수 있지요, 다른 나라는 다 15% 이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해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금방 사금고화가 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건전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자

본이 금융자본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

○나성린 위원 은행은 아니지요? 다른 금융이지요, 비은행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썬요, 그러나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의 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은행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기업 정보의 저수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미 법은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에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우리나라 지금 금산분리 완화법이 통과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보다도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 완화를, 다 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 완화해 나가자는 것이지 반대론자들은 마치 우리가 신자유주의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간다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규제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규제는 미국보다 당연히 훨씬 강한데, 제가 지금 금산분리 은산분리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관행을 보면 금융과 산업의 분리 이것이 상당히 전통이 강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근대국가를 해 본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마당에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좀 배우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성린 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 정의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강운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성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한 사람도 탈세를 하고 있다……

○**나성린 위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강운태 위원** 글썄…… 내 귀가 좀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속기록 삭제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만 원, 20만 원 강의료 받은 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10만 원, 20만 원 강의료 그거 원천징수합니다. 지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신고 대상은 필요경비를 제하고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저도 강의 많이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받은 거 그거 다 강의 원천징수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탈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특히 발언한 이 강운태를 탈세자인양 이렇게 발언한 것은 대단히, 대단히 부적절하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성린 위원……

○**나성린 위원** 그것은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속기록 삭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세법이 워낙에 어렵고 또 국민들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서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탈세범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나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우리 강운태 위원님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률 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7985만 원의 인세 수입을 재산신고하지 않았지요? 그거 확인해 보셨지요? 제가 미리 지적을 했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안 한 것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위증으로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당시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 관보, 우리 정운찬 후보자께서 재산신고했던 관보 재산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6년 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적재산권 인세 수입을, 지적재산권을 신고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정정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할 때 이걸, 여기 관보가 있는데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그거 준비될 동안에 다른 질문 계속하시지요.



○**김종률 위원** 아니, 이걸 시인할 줄 알고 물은 건데……

○**위원장 정의화** 잠깐 시간 조금 주고……

○**김종률 위원** 이거 제가 관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대 총장 시절에 재산등록했던 그 서류입니다, 5년 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김종률 위원** 쉽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후보자 부분 표시까지 다 해 놨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지금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까 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위증죄로 거짓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쉽게 답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걸 들으면서 바르게……

○**김종률 위원**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김종률 위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거짓말하면 안 되시는 거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갑자기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김종률 위원** 쉽게 대답하실 부분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아닙니다’ 말씀……

○**김종률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그건, 관보에 재산등록 안한 건 확인해 보시고 이따 답변하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저희가 관보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때 7985만 원 인세 수입을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미술품, 조금 전에 이게 어제 밤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확인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 배우자 미술품에 대해서 함께 59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거니까 당연히 재산신고 안 하셨겠지요.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걸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률 위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거를 판 건데요?

○**김종률 위원** 팔았으면 재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니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니까 그 돈으로……

○**김종률 위원** 미술품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제 말씀은요……

○**김종률 위원** 지금 판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의미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팔기 전에 말씀입니까?

○**김종률 위원** 예.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그걸 지금까지 늘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해 오셨거든요. 세세한 데까지 신경 안 쓰고 그런 고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서울대 총장 그리고 또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 후보자 자료제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화실 보증금도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이거 2006년도 보증금인데, 총합계……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임명동의안에도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시다.

인세 1억 5000만 원 중에 서울대 총장 재직 기간 동안에 7980만 원, 즉 8000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배우자 미술품 약 5900만 원 이런 등등을 합하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처는 아주 초보적인 아마추어 화가인데……

○**김종률 위원** 우리 총장님께서요, 시정의 그냥 필부가 아니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겠습니다만,

그 그림을 팔기 전에 그 그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김종률 위원** 아니, 제가 인세 수입 8000만 원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작업실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따 답변을 하세요, 그 공직자 재산등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우리가 쉽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한 행위이냐면 말이지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얼마 전에 바로 이 재산신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이 날아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 공소시효도 안 끝났습니다,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에, 2004년도부터 2008년 동안의 인세 수입,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렇게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에서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천만 원대 세금 탈루한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잠깐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차피 이걸 상당히 중요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4~2008년도 인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신고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천……

○김종률 위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8년 거는 정정했으니까 2007년까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합산 여부, 원천징수는 물론 됐겠지요.

○김종률 위원 원천징수는 당연히 하는 거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다 율곡출판사에서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그것은 율곡출판사에서……

저도 저 저작물이 많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출판사에서 저작물에 대한 인세 받을 때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다시 5월 달에 합산과세할 때, 종합소득 신고할 때 또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진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종합소득……

○김종률 위원 저기, 그러면 뒤에 일부러 후보자에게 보기 좋게 하려고……

종합소득 세부내역, 어느 항목으로 신고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들어갔답니다.

○김종률 위원 사업소득이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은 저도표의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항목을 보세요.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8938만 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인데, 이게 꼭 수입과 일치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수입이라고 해서 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각종 비용도 공제되고 또 소득 공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 연봉, 후보자의 서울대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이, 바로 7689만 원이 왼쪽에 있는 원천징수 전 연봉입니다, 소위. 거기서 원천징수하면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768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8900만 원 하셨으니까 그 차이가 약 1250만 원이 좀 안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다고 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면 종합소득 세부내역에 사업소득 얼마입니까? 59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김종률 위원 총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실무자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기 자료가 좀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연도별 소득금액명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슨 말이나 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다고 하는데 59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왼쪽에 2004년도 인세 수입이 215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각종 비용 다 신고해도 소득신고 할 때는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안 맞는 거예요. 다른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세 수입을 재산신고할 때도 빠뜨린 금액입니다. 더구나 인세 수입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는데 소득세만 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인세 수입을 재산신고하는 것은 과거 것도 전부 써냈더니 최근 것만 써 내라고 해서……

○김종률 위원 후보자님, 저도 사회과학도서 많이 나가는 책 저자예요. 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합니다.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보면 그동안에 근로소득 4750만 원을 추가 신고하면서 여기에 예스24가 탈루했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자문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이상 그것은 당연히 영리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신고한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뭐 하러 후보자께서 예스24 자문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까?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김종률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답변은 나중에 정리 좀 하셔서 가지고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제학 중에 특히 어느 분야를 전공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화폐금융 분야입니다.

○鄭玉任 委員 화폐금융이십니까? 세법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세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질문 중에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아마추어 미술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인이 그린 그림을 왜 사전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자기 가족 또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가격을 책정하기가 좀,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희 집에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는데 그냥 저희 집사람이 그린 거구나 하지 그 그림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미 판 그림이 있구나, 그것도 저쪽에서 원천징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셨군요. 저도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앞 시간에 병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좀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대학의 유학이 갑자기 결정된 도피성 유학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이 청문회는 국민을 향한 청문회인데 바로 이 청문회 시간에 제 사무실로 국민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본인은 익명을 요구하시

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은행에 잠시 근무한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년 7개월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근무 부처가 외환관리부라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혹시 말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바로 위의 상사였던 계장님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억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분 성함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말씀드려도……성만 말씀드릴까요, 장 씨였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분이 익명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병역기피와 관련해서 하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 상사되시는 분이 청문회 보시다 답답해서 전화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즉 “한국은행 입사 당시부터 유학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된 도피성 유학이 아니라 입사 때부터 유학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이게 상사 되시는 분의 말씀인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유학 가서 공부 더 하고 올 재목이다”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참 어렵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저의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이 “공부 더 해야 한국은행에

서라도 일할 수 있지,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학부 4학년 수준으로 끝나네. 미국 유학 갔다 오지”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한국은행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유학 준비를 하신 것으로 이 상사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물론입니다. 유학 준비하다가 국사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한국은행에도 “평소에 일찍 출근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녁에는 유학 비용도 마련해야 되니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후보자 본인이 얘기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밤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유학 비용 벌기 위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겠습니까? 가정교사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가정교사 하셨군요.

그래서 이 국민 한 분의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은 입사 당시부터 유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유학 비용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피성 유학이냐라는 요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1971년에 보충역에 편입이 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편입이 되는데, 당시에 월남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급하게 유학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본인의 병역 문제 때문에 당시의 병역법 시행령이라든지 병역법을 찾아보셨

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안 찾아봤습니다.

○鄭玉任 委員 저는 제가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969년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은요, “부선망의 독자 및 2대 이상의 독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대상이 아니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월남전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요.

또 병역법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부선망의 독자 조항인데요, ‘그 제한연령이 지나도 부선망이라는 사유가 계속되면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법 62조에 의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집연기가 가능했던 것이고, 또 시행규칙 171조에 의해서 부선망 독자이기 때문에 무한연기가 가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마이애미 대학교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영어 표현 얘기가 나오는데 면제를 받았다고 썼건 아니면 소집 연기가 됐다고 썼건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썼건 마이애미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 데 문제가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거의 초청받은 겁니다.

○鄭玉任 委員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그것이 당시의 병역 상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양자 입적 당시에 양부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910년생이니까 55세이셨을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55세, 56세인데요. 사실 당시 병역의 면제 내지는 특혜 해당자는 60세 이상의 독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처음부터 안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양자로 입적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다 잘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병역도 제대로 마치시고 이런 분이 총리후보자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볼 때 적법한 이유로 또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대기자로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으셨을 것……

제가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늘 다른 동료들과 같이 군복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군복무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늘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양자 문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양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시려고 그러신지, 돌아가시기 전에 양자 수속을

하려고 그러셨는지 그냥 갑자기 양자 수속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해에 돌아가셨습니까.

○鄭玉任 委員 항간에 ‘지금 대통령도 병역면제자이고 또 국무총리 되실 분도 병역면제자인데 분단국가고 국가 안보가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별 대답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鄭玉任 委員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 수행 능력이라든지 애국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라면 전 세계에 여자 대통령도 있고 또 여자 국무총리도 있고 여자 국방부장관도 나오는 세상이고, 특히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군사적 선택을 해서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리는 마거릿 대처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저라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鄭玉任 委員 오늘 총리 청문회에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에 총리가 ‘얼굴마담 총리’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총리라는 직위가 참 어정쩡하거든요.

본인이 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어떤 총리가 되고 싶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총리는 대통령

을 보필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께 할 말은 하고 또 국민한테는 구할 것은 구하고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

○鄭玉任 委員 마음에 안 드는 장관 있으면 해임을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마음에 안 드는 장관 있으면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박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내정자께서는 9월 3일 내정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결과 ‘국가 전체로 보아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정부가 약속했으면 어떻게든 실천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족 기능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는 전의 말씀은 자족 기능을 그동안 정부여당이 늘 문제를 삼아 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비효율의 문제를 더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물었던 결과 그것은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바로 그 자족 기능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행

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제가 “또 다른 문제냐, 자족기능과 또 별개의 문제 제기냐?” 한 결과 그런 것은 아니고 자족기능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누가 했든지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있는 모양들로만 자족도시 만들기가 힘들어 보이니 같이들 의논해서 자족도시로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도 생각하기에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플러스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자는 취지로 얘기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당초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들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부 2처 2청이 간다, 또 뭘 신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박상돈 위원 의견이 아니라 그것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고시한 것이 9부 2처 2청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은 “세종시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아직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양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말은 아니라고 차명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부연설명 한 것은 당초 계획에다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자는 말에 가까운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은 감안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자는 얘기에 가깝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질문이 좀 모호한데요, 사실은.

○박상돈 위원 저는 답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모호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박상돈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내정자의 말씀은 원안에 플러스해서 알파하자는 얘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원안의 마이너스 알파에 가깝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세종시는 반드시 만드는데 세종시를 자족기능이 있는 시로 만드는 것은 총리가 반드시 지켜 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사실은 자족기능 자족기능 하는데요, 그 자족기능은 별것 아닙니다. 아까 내정자께서도 현재는 자족기능이 6%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 정도까지는 올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런데 그때의 6%가 뭐냐, 20%가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시설용



지가 있는데요, 시설용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부지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시설 의료시설 이런 부지가 현재 6.2%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족기능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한 20% 정도로 더 늘려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주로 그런 뜻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것이 사실상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그래요. 그것을 늘리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늘려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현행 법률에 의한 고시 내용은 14부처 4처 2청인데 이게 정부 개편에 의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변경고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고시를 빨리하라는 요구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자족기능에는 지금 내정자의 말씀처럼 부족해 보인다 그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알파를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빙빙 돌리니까 정부가 자꾸 이 계획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아서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박상돈 위원 조금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직도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기에는 박 위원님은 9부 2처 2청은 빨리 와라……

○박상돈 위원 그것 가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충해라……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리고 그다음에 플러스 더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상돈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충청권을 위해서 부처다 옮기고 또 엑스트라도 더 주고 그런 것은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한번 다시 의논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옮겨 올 행정부처는 다 옮겨 오고 자족을 위해서 더 달라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렇게 해야 자족 기능이 산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제 생각 같아서는 또 자족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상돈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정자께서는 분명히 저희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답변을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부처 옮겨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정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아무런 그림을 그려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또 누구하고 사전적으로 의논한 적도 없고, 단지 제 고향의 일부가 세종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유령도시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직적 사고를, 법이 이미 있기는 하지만 너무 경직적 사고를 하지 말고 좀 신축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서……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없잖아요.

1분 더 주실 것이지요?

효율을 이야기하자면 중앙부처가 얼마나 이격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효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행정 효율을 이야기하려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얘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 중앙부처가 약간 이격되어 있어서 저희들끼리 약간 불편한 것 정도야 조금 지나서 적응되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효율이 없어서 이걸 재고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년 전 다르고 20년 전 다른 얘기거든요. 도로·교통 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가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회의도 얼마든지 있어요. 과거 관행대로 하면……

1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1분 더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차명진 위원** 1분이잖아요.

○**박상돈 위원** 아까 1분을 더 추가로……

○**위원장 정의화** 예, 하십시오.

○**박상돈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사소한 불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효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께서 무슨 4, 5개 지역으로 통일 후에 분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서울시내에서 일부 분산되어 있거나 1시간 거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저해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포함한 효율성 또 나라 전체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다시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늘면 늘다 하는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총리로 지명된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총리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총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총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역주의자는 절대로 아니나 제 지역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수 위원**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위

원입니다.

늦은 시간 많이 피곤하시지요, 후보자에게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처음 경험이라 좀 어렵습니다.

○정희수 위원 대학총장 시절 때는 지역 균형선발제를 아마 처음으로 시도를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정희수 위원 그만큼 대학이라 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요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리가 되시고 나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를 접근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에 후보자께서는 교육에도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내년 되면 교육감 직선제가, 전 세계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데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 그렇습니까?

○정희수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몰랐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선은 너무 왜곡도 생기고 또 선거비용도 많이 드니 임명제로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면 오히려 선거비용도 줄어들고 양당 간에 큰, 여야가 충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고 임명제가 도입된다면 직선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또 제3의 안을 내는 분들도 계시대요. 교육감은 시장 또는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게 좋은지 임명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아무튼 교육은 헌법에 중립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헌법의 중립 거기에도 훼손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빠른 시간 안에 총리로 취임되신다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잘 검토를 해서 교육이 정쟁화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통합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또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패가 나뉘진다면 후세에 학생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던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정희수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놓고 한국은행하고 정부하고 상당히 서로 약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한은 입장은 물론 금리는 금통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가계부채가 690조가 넘습니다. 가구당 4000만 원이 넘는 그런 부채를 지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더욱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 아니냐, 또 겨우 내수 소비를 살리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하여금 소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이 또 정부 측 입장인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워낙 시중에 풍부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빨리 흡수를 하려면 금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 위원님,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임명되진 않았으나 사람들은 임명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환율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어떤 위원께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속으로는 어떻게 가는 방향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으시겠지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개인으로는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출구전략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정희수 위원** 또 하나 사실 주택, 부동산 경기 과열이다 또 뭐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LTV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를 해 나가는데 사실 저희 나라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자기가 평생 그야말로 월급으로 저축해도, 30년 걸려도 제대로 된 주택을 마련하기도 힘든 그런 구조가 있는데 결국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소유하게 해 주려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줘서 자기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할부로 갚아 가는 이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보다는 좀더 은행의 건전성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좀더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남 지구 경우에는 40%, 50%, 또 서울 수도권은 60%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좀더 높여 준다 하더라도 큰 집을 갖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찬스가 왔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돈은 없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우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데 지금 갑자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뛰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 문제 있다’ 해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대출을 규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 원리에도 좀 잘 안 맞고 이것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묻지마 대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도 안 물어보고 직업도 안 물어보고 대출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경우는 그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년간 DTI나 LTV 같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그나마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건설적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주택 문제는 그것이 수요 규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공급도 더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또 답변할 능력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는 거의 100% 넘게, 관계없이 했지만 우리는 최고 60%까지 묶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비율을 60%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비율을 예를 들어서 70% 간다 하더라도, 80% 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줌으로 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이 신용자를 체크를 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확실히 너는 더 이상 6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신용이 우량한 그런 분들도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행원들이 대출받아 가는 사람의 신용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좋은 뜻에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동성이 넘친다고들 하는데 유동성이 넘쳐흐르면 한국 경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직도 동의 안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좀더……

○최재성 위원 아니,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그러셨다가 또 번복을 하셨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동의하지 않은 상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후보자께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했는데 대부분 후보자의 연배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랐습니다. 폼뻤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콜럼비아대학 조교수 하신 지가 78년 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76년 7월부터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 뒤로부터는 사실은 어렸을 적 그런 가난에 해당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4년 동안은 최소한 중산층으로서는 살아오게 된 개인적인 역사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집을……

○최재성 위원 80년도 후반이라 그러시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처음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80년도 후반이라 그러시자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서울 대학 교수로 살아오고 또 총장 또 여러 가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은 가난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의 서민관이 의심스럽습니다. 고문료로 2년이 채 안 되는 22개월 동안 9583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 회사가 어딘지도 잘 모른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10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수령하면서 회사가 어딘지도 모른다, 제가 알

기로는 대표이사하고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맞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Y모자라는 회사의 백 모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 여행경비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주셨다고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 차례 걸쳐서 1000만 원 받은 게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최재성 위원 그것은 속기록을 보면 되고요.

배우자의 그림 실력이 아마추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림 판매를 빈번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몇 점 안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의 없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마추어 화가인 배우자가 2004년도에 1300만 원, 2005년도에 2400만 원, 2007년도에 2200만 원, 각각 3점인 것 같은데요. 고가의 그림입니다. 만약에 6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고요.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화가들도 받기 어려운 그런 아주 고가의 그림으로 거래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감각이 이미 특권적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건 국민들 몫입니다.

스폰서 총장 아니냐는 전화를 제가 조금 아까 받았습시다. 공무원 행동강령 또 공무원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기능직에

제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최재성 위원 그냥 교수가 아니고 국립 서울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교수께서 지인이라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소액을 가지고 외국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련법에 위반이 되거나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위반이 된다면 이것도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몰랐다는 이유로 무감각하게 지나가신다면 가난을 얘기했던 총리 후보자 답변은 또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작년에 미국에 가서 6개월 살고 왔습시다.

○최재성 위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을 했고 대가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나갔지만 직무상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시다.

○최재성 위원 그건 신문을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에 의한 뇌물죄가 아니고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이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운찬 후보자께서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이 Y모자 백 모 회장으로부

터 받은 돈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산업·금융·경제 관련 자문 활동을 했든가 위원회 활동을 했든가, 그래서 이 사업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적 활동을 했거나 그런 공직에 준하는 활동을 했거나 그런 직무상 관련이 있는 활동을 했다면 일단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후보자의 책임 범주 안에 든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가 한 사업가로부터 많은 스폰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스폰서 총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분은 대가성으로 낙마한 것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아서 낙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스폰서 총장 아니었나요?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었나요? 소액이라서 받았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지금 생각 없이 받은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죄송하나 스폰서 총장이라는 이름은 좀 빼주십시오. 저는 누구한테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배우자가 아마추어 화가인데 이 고가의 그림을 판매한 것은 그것은 좀 아마추어 화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서민적 관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1300만 원, 2400만 원, 2200만 원이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사실은 그

그림을 팔았는지도 잘 모르다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5점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5점으로 계산을 해도 점당 12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점당 1200만 원. 적어도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도 많은 미술가들이 살고 계신데요, 1점에 이렇게 받는 화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는 남양주에 사시는 분 중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yes24에는 절대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전 근로자로서 고용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나 쉬운 말로 돈을 받으신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거보다 조금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받았습시다.

○최재성 위원 9583만 원을 22개월로 계산해 보십시오. 넘습시다. 2년이면 1억이 넘습시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이미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보여 드렸던 급여명세서에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전 그건 전혀 몰랐습시다.

○최재성 위원 자문료나 강연료 받으실 때 보험료 내고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얼마 떼고 줘서 그냥 원천징수 한 줄 알았습시다.

○최재성 위원 원천징수 하고 4대 보험을 내는 것과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보험료를 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최재성 위원 후보자가 2년에 1억 넘는 돈을 수령하면서, 22개월에 9583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총 6건의 야구 관람하고 야구 관련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시상식하고, 6건의 활동만 저에게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그걸 타하는 것이 아니고요—9583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에게 왔는지, 이 명세서는 무엇인지, 이런 것 전혀 확인 안 하고 이 거액의 돈을 수령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과외수입이 너무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재성 위원 요 말씀만 하고요.

2007년 11월 달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격신고, 무슨 말씀이에요?

○최재성 위원 이걸 아까 속기가 됐으니까요, 건강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이미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꾸 주장하시는, yes24의 급여대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급여대장을 본 적도 없고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급여명세서라면 저한테 주지 않았겠습니까? 회사 회계상 어떻게 처리됐는지 몰라도 결코 급여로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위증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그것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급여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이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훈 위원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법 관련된 것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게 풀 네임인데 사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는 “100만 정도 해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한 37% 정도가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이렇게 노동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는 어떻게 보면 숙련된 노동력의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노사가 다 좀 어려운 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기 내각을 한 승수 총리 하의 내각이라고 보면 2기 내각이 후보자가 총리가 되시면 이끄셔야 되는데 2기 내각이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실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총장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비정규직이 2년 후에 꼭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어떤 회사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정도에서 정해 주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또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임금을 주고 이런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한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년 후에 바꾸어 줘야 한다고 하는 룰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은 다시 또 해 줄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

에서 바꾸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요약하면,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가져오게 된 노동 시장,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치는 것은, 바꾸어 주는 것은 서서히 없애고 그 대신에 정규직, 각 직장에서 정규직의 비중은 높이고 동시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위원 하여튼 생각하신 대로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좀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라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노조 문제가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한승수 총리께서 회의를 소집하셨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우리가 전공노라고 알고 있는 것, 민공노라고 알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그다음에 법원노조라고 이름 붙여지는 법원공무원노조 이 3개가 지금 투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노총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인 것으로 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상급단체에 노조가 가입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노총이 그동안 해 온 많

은 활동을 보아 왔건대 단위사업장의 노사 관계 문제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정치적인 파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은 정치적인 활동을 금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긴 것인데 정치활동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는 민노총의 산하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쪽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벌써 의원입법을 내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들을 지금 제출을 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2기 내각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총리가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큰 난관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한승수 현 총리는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노총은 부당한 권리침해행위라고 또 고발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혜훈 위원 예, 맞아요.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데 지금 이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금지 규제를 받고 있지요, 공무원들은?

○이혜훈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활동과 단체행동을 많이 하는 민노총 가입은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공공의 안정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아마 듣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치파업에 동원이 된다면,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공백이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누구나 예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는 이것을 금지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법 조항은 현재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만류하기도 쉽지 않고, 일단 민노총에 가입이 된다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 어떻게 그 부분을 가려내고 현장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기 총리가 되실 수 있는 분

의 강력한 입장이랄까, 분명한 입장이랄까 그런 것들을 아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굉장히 법에 따라, 공무원법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법 4조라고 되어 있네요. 공무원노조법 4조에 의해서 그게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법의 집행을 정확하게 하겠다든지 아마 그런 의지의 표명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께서 비슷한 질문하셨을 때 깊이 생각 안 해서 잘 모른다, 깊이 생각 안 해 봤다,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좀 더 공부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끝내셨습니까?

○**이혜훈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후보자님, 만약에 인준이 통과되셔서 총리가 되시면 10월 초가 추석입니다. 총리실에서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추석 떡값 수수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백원우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추석 떡값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총리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1000만 원을 형제와 같은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걸려서 총리님한테

징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선물과 뇌물은 소액에 불과하고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 아무 대가성 없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을 징계하시겠습니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공무원 생활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니까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1000만 원을 줬어요. 징계 감찰에 걸렸습니다. 징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총리가 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까 총리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복기한 겁니다.

스폰서 총장이라는 말씀 듣기 싫다고 하셨는데 아무 대가 없이 형제와 같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저희는 통상 그것을 스폰서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통념상.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아까 강운태 위원님께도 마찬가지로 말씀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잘못을 거울삼아서 임명된다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1000만 원을 소액이라 생각하시고 부인이 아마추어 작가이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그림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총리후보자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듣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경기도 시흥시라는 곳에 살고 있고 지역의 아마추어 화가들이 작은 그림전을 열어서 그림을 가서 사줄 때가 있습니다. 비싸면 50만 원,

뭐 아주 좋은 그림이고 그림이 크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추어 작가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내 집사람은 아마추어이고 몇 점 판 것 아니다, 몇천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백 위원님, 그 그림값이 싸다는 의미에서 아마추어 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림을 시작한 지 지금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좀……

○백원우 위원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을 그렇게 비싸게 사줬다라면, 후보자의 부인이 그림전을 연 것은 2004년도 총장 재임 시절이십니다. 이해관계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림의 값어치만 따져서 한 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게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을 사줄 리가 없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아마추어라고 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좀 낮추어 말한 거고……

○백원우 위원 그림의 질이 그 정도의 가격에 해당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제 물어봤더니 저의 집사람이 그린 그림을 특별히 좋다고 자꾸……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팔겠다고 하는 걸 그냥 사갔다고 들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전시회를 하시는 목적은 그림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이나 하셨으면, 그림을 팔지 않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시회를 무슨 세 번이나 했습니까?

○백원우 위원 세 번 판매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 하신 것으로 인터넷 기록

에는 나와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개인전을 한 것은 한 번입니다.

○백원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무한테도 안 알려져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이 정말 거의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예, 한 번에 500만 원씩입니다. 그래도 저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시간에 걸쳐서 한 겁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받은 것, 두 번에 걸쳐서 받았으면 한 번에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제가 지금 의사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을 백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국민들은 아마 이 청문회를 보시면 또 다시 천성관 스폰서 총장이니 해서 정운찬 스폰서 총장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이애미대학 원서에 거짓말을 쓴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썼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거짓말을 썼습니까? 아무런 병역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입학과정에 그렇게 쓰지 않아도, 사실대로 써도, 나는 면제된 게 아니라 연기됐다 이렇게 써

도 입학과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백 위원님,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대학 나오고 한국은행 들어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것조차 못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영문 공문을 처음 본 상황에서 어떻게……

○백원우 위원 외환관리부에 있으면서 외국하고 외환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그냥 외환과에서 그 계정 처리만 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외환관리부에 계시면서도 영어로 뭔가를 하시는 활동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의 안 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참 납득이 안 갑니다.

한국은행에 있으면서 유학을 준비했다, 안 했다 이 말씀들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원우 위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친 사망했을 때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비행기 값이 상당히 비쌌다 그랬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몰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백원우 위원 몰랐고, 나중에 알고는 비행기 값이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미 장사를 치른 후에 알게 됐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당시 73년도 이후에 장인께서는 충주비료 이사 또는 남해화학 부사장이십니다. 공기업인 남해화학 부사장 정도가 아무리

미국 왕복 비행기 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는……

○백원우 위원 이것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희 처가에서 한 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권경석 위원 아까 답변에 재원이 많아서 병역이 순서대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병역법 제19조에 의하면 후보자처럼 가사 문제로 병역이 연기된 사람은 그 다음에 우선 징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병역법 19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병역법을……

○백원우 위원 이제 후보자께서는 ‘부선망 독자’라는 이유로 병역이 연기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지하셨지요? 그것은 연기사유가 아닙니다.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한 번에 걸쳐서 연기는 될 수 있지만 면제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백원우 위원 왜요? 병역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만약에 부선망 독자가 아니었다면 68년에 징집연기가 안 됐을 것입니다.

○백원우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70년도에는 다시 연기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23세 나이 제한에도 걸리시고요, 부선망 독자는 1회에 걸쳐서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기가 끝나신 거고 재학생 규정으로도 연기가 안 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백원우 위원 병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그다음부터는 후보자가 병역을 연기하는 사유는 유학에 의한 병역의 연기입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지요? 유학을 가셨으니까…… 그건 병역법에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러면 유학이 끝나면 즉시 귀국해서 병역을 마쳐야 된다, 이것은 당시 문교부령 규정입니다. 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후보자는 76년도에 유학을 마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안 마쳤습니다.

○백원우 위원 안 마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유학을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위원 박사학위 논문은 써서 제출을 하셨고요.

그러면 왜 비자를 바꾸십니까? 왜 비자를 바꾸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6년 7월부터 콜럼비아대학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교에서……

○백원우 위원 후보자의 신분이 그때가 됩니까? 후보자는 유학생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취업자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서 F 갖고는 일을 못 해서 H로 그냥 바꿔 주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취업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유학생이 아니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박사학위 논문을 못 끝냈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박사학위 논문하고 상관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하고……

이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라고 하는 병무청 서류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1년 내에 통상 60일 이상의 급료를 받는 사람은 영리활동을 하는 자고, 영리활동을 하는 자는 당장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는 병역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취업자의 신분입니다. 고로 후보자는 병역법 제82조 도망에 의해서 병역을 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역법 82조를 위반한 도망에 의한 병역을 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중에 또 답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청문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음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우선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본 위원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리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자료 안 내 놔요? 충분히 법리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산등록의 대상도 배우자의 자작 그림도 재산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이 소득합산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Y모자 관련해서 1000만 원 수수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뇌물이니 이런 것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지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영향력을 미치거나 공권력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와는 실질적으로 구분됩니다. 포괄적 뇌물죄의 당사자가 되는지의 여부를 왜 법리검토 안 합니까?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이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정치인은 포괄적 뇌물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그리고 고위공직자 당연히 미치지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돈을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교수의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 말

입니다. 이 부분도 법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국민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객관적인 잣대로 규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차장이지요?

○국무총리실사무차장 조원동 예.

○권경석 위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고 국회 특위에서는 법안이 계류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율통합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문외한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율적으로 도시들이 합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이 더 확장돼서 동서화합을 포함해서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깊이 연구는 안 해 보셨지만 평소의 소견이나 입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우선 최근에 경기도 몇 도시들이 서로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의 효율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 확장하자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만약 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려하는 바는 중앙 종속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큰 핵심 우려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 분권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60개의 통합 시를 만들면 그게 바로 중앙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자치 역량이 약화된다는 지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분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없겠네요, 모르시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디테일을 물으신다면 .....

○권경석 위원 디테일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이게 왜 디테일하다고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더 묻겠다 그러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권경석 위원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전제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어떤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각 지방에서 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나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아주 활발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 분권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저는 오늘 총리께 여러 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실망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이 뭔지, 지금 어느 정도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 평소에 파악이 안 되셨는지, 아까 지방 기업 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방분권도 당연히 패키지로 가야 될 과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행정분권 측면에서는 27% 자치입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4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사무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11월 달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추정치에 의하면 지방사무는 27%입니다. 기관위임사무 포함해서 국가사무는 73%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 3할 자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정분권은 20%입니다. 어째서 지방분권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 함은 지방이 자기가 잘하는 일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부담으로 추진하는 게 그게



지방자치예요. 그 정도를 지방분권 수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깊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의 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지방 사람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이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헌법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균형발전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의 책무는 국가적 책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혼돈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혼돈 내지 혼동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혼동하고 있어요. 지방분권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래서 지방이 자기 책임으로, 자기 부담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게 그게 지방자치고 그 역량을 키우는 게 지방자치의 신장이거든요. 물론 지방 자신의 역량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이 많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주 낙후된 지방은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지방을 발전시킬 역량이 없어요. 그런 데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은 바로 낙후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국가의 책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분권은 권한을 내려 보내 주는 것인데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세종시 문제를 설치법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입니다마는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권한의 분산이지 분권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기능의 지방 분산이지 권한 이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권은 권한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총리 입장에서 이것을 촉진시켜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더 공부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내정자님께 아까 제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해서 ‘문헌 해석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법을 많이 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4조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게 전단이고요, 후단이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리 업무는 아예 금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도, 비영리 직무라도 겸할 수 없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석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둔 것이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마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정을 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겸직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행정안전부나 다른 데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신집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 9월 21일자 회신인데요, 사안은 약간 다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겸직 문제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조에 따라서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때 허가 대상이 되고 어떤 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느냐의 법리적인 논쟁이 전혀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허가를 안 하는 경우와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법리구조를 보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문헌 검토

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내일은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해훈 위원님 답변에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33조에 근로삼권·노동삼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삼권 내용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개를 끄덕임)

○이정희 위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아닙니까?

원래 33조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 세 가지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급이, 너무 고위 공무원은 못 가진다는 얘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나마 단체행동권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내정자께서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결권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를 혼동하신 것입니다.

단결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급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에 불문하고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상급단체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치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일을 보

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혼동하시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개념이 없으시면 총리 업무를 수행하시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따로 법률적인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립니다. 한승수 총리에 대해서 오늘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아까 지배 개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81조 위반으로 이미 고소를 했습니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반복되는 홍수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서면답변은 내정자께서 직접 보시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셔서 내 보내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잘 들으시지요.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방향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문장 같은 것은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경제적 타당성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을 보내셨기에 제가 총리실 인사청

문회 준비팀에 다시 여쭙 봤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셨느냐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 6월 달에 낸 4대강마스터플랜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대강마스터플랜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체입니다. 그게 19.4조 원인데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의 06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해서 취업유발계수, 건설업 그리고 생산유발계수 곱해 가지고 3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이렇게 계산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면 다른 어떤 연구를 하셨냐 그랬더니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근거로 위와 같이 답변을 내신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성적 판단하고 정량적 판단이 있을 텐데 어떤 사업에……

○이정희 위원 조금 답변을, 이렇게 이 근거로 낸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로 이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만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 사업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그 4대강사업,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50년 동안 산림녹화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여쭙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그때 가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이제는 강도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 정비한다고 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용보다 효과가 큰 것인지, 과연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환경 파괴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 국가재정법의 발전 중의 하나가 예비타당성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보와 준설, 문화의 기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예 안 되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고.

자전거도로하고 생태하천 이것 정도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만 경제적인 타당성검토가 나온 것이지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성조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34만 명 취업유발효과가 있다, 40조 원 생산유발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아예 리플릿(leaflet)까지 만들어서 나와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도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도 따져야 되고 또 아마도 강유역이니까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

을 것이므로 문화재 보존도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 볼 만큼 따져 보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의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34만 명, 40조 원 이 문제는 딱 곱하기한 겁니다. 금액이 19.6조 들어가니까 곱하기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생산유발효과가 커지고 그리고 고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장관을 못 하고 누가 총리를 못 하겠습니까? 돈만 넣으면 다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에 임용된다면.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초부터 준설공사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거야 신축적으로 짓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준설공사 문제도 그러면 이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검토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한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말씀보다는 준설공사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속도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정희 위원** 준설공사는요 한 번 강바닥을 파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타당성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저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4대강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분들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곱하기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어떤 정성적…… 정량적보다는 정성적 또 고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내일 다시 여쭙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국무총리 공직후보자 청문회는 우리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문회입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다시 개의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보충질의 순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고요.

○위원장 정의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아까 제가 확인 부탁을 드렸던 ……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의 공직자 재산등록 때 7985만 원 인세 수입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견을 묻

는 게 아니라 재산 신고하면 한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것이예요. 그리고 그 재산 신고 안 하신 게 분명한데 아까 신고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보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질문시간보다도 당연히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이따가 시작할 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관보를 좀 드리도록 하시고요.

○김종률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한 1분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권경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예, 잠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 Y기업 관계 문제에서 제가 1000만 원을 소액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소액이나, 가서 연구비에 보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제가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마치 제가 소액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때 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MB정부가 발표한 중도실용론, 또 이것을 친서민 정책으로 표방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서민, 중소기업, 소외 계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총리가 되시면 앞으로 전적으로 그 부분의 정부 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즉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간에는 ‘극우·보수·기득권층 보호 정당’ 이런 말들이 있지만 새로운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은 분명히 이 정신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중도실용론을 표방한 것은 원래 여당의 기조에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분명히 전제를 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자는 바로 이 중도실용론이 좌우를 넘는 새로운 통합 이념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좌우는 어떤 특정한 이념에 편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실용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그 말은 탈이념적, 실사구시적 방법론이다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바로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인기주의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일반인한테 인기 있는 정책은 상당히 많은 경우 포퓰리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도실용론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책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포퓰리즘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법치주의하고 대북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북정책이요?

○권경석 위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또 법치주의 이것과 어긋나는 그런 원칙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렇

게…… 법치주의와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간에 일치다 또는 안 일치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치에 관계되는 문제일 것이고요 또 대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권경석 위원 그런데 중도실용론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성, 그다음에 실사구시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것은 방법론이고 중도실용론의 대전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실용노선을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기본 바탕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열거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념적 차원을 떠나서도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부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되실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중도실용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이념에다가 실사구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텐데 잘못하다가는 중도다, 실용이다 해서 그것과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회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이번 정부 초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북관계가 조금 경직적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후보자께서 판단하실 때 흔히 말하는 ‘개혁적 보수, 실용적 보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이 개념과 중도실용과는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두 개념이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같다고 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은 개혁적 보수 노선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강정책을 갖고 있고 그 기본 전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여당의 정강정책은 중도실용론과 바로 일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념적 측면에서의 어떤 혼선이나 방법론상의 어떤 다른 마찰이나 갈등 소지는 전혀 없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별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사실은 지금 정책 검증을 하고 싶은데 도덕성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묻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예금이 증가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최소한 3억 6200만 원의 갭이 생긴다는 것,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대략 세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외국 강의로 또 세미나 비용 등이 이제 봤더니 신고가 안 됐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정 신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소위 그림 판매한 것, 이것도 역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Y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하고 필요경비 사용분하고 이중으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계산하고 뜯어 맞춰 봐도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우선 첫 번째, 필요경비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용역하고 용역원들 술 한잔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을 보면 이중으로 공제를 못 한단 말이지요. 이쪽에서 필요경비 잡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공제 잡고 이렇게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 부분에서 중복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 3억 6200에서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3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국이 됐든 국내가 됐든 여러 가지 인세라 할지 또는 강의료 등등 이런 수입에서 누락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Y회사로부터 1000만 원 받으셨습시다마는 Y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또 다른 돈을 받았을 가능성,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수입원이 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0만 원 차이 난다, 이해합니다. 5000만 원 차이 난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경 3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과거를 성찰하는 데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명할 수 있으면 어디 해명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강 위원님은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침에 그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금 저녁에까지 똑같이 세 번, 네 번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운태 위원 후보자에게 제가 이것을 갑자기 아침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셨어요. 거듭거듭 요청하고 또 요청했지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이고 내일도 질의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질의할 거예요.

문제는 3억 6200을 정확히 원 단위까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듣더라도 ‘아, 그런 정도의 수입이 누락돼서 또는 그렇게 새로운 수입이 들어와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대충은 맞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제가 다 맞춰 봤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시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되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강운태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자료를 진작 주셨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다 돼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쓴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대충 아니까 좀 빨리 읽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얼마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금융자산 증가액과 수지 적자액은 본인의 3년간 지출 총액 중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이 상당 부분 신용카드와 중첩되어 지출이 중복 계산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은 금융자산 증가 부분과 지출 부분에 이중 계산되어 있어서 지출액에서는 제외시켜야 하며, 다시 말해서

연금보험료와……

○강운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간 외국 강연료 등 해외 수입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강운태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수정신고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모두 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 적자와 금융자산 증가분을 합한 금액보다 오히려 조금 많은 액수가 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무슨 소득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국내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강연료며 세미나료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하고 기타 사업소득 등으로 다 신고했습니다.

○강운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원하시면 제가 국세청 자료 전면을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전부 자료를 주셨잖아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리고 또 하나는……

○강운태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왜 혼자다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말씀하십시오.

○강운태 위원 주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6200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경비하고 신용카드가 중복 계산됐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시 제 반론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수입이 1억 이상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 한 6600만원쯤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필요경비를 제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하세요. 저녁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분석하셔서 내일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를 지금 말씀으로 적당히 하실 게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로 그냥 하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10페이지짜리 자세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준 자료 가운데 어느 페이지 어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성의껏 자료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의 의문이 국민의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강 위원님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국민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이 계

실 거예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 착오도 약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운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대로 잘 정리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오전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정의화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전에……

○강운태 위원 그래야 질의가 되지요.

○위원장 정의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총리실에 보좌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지요, 철저하게 좀 분석하셔 가지고 이 얘기는 아주 명료하게 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위원장 정의화 다음 질문……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Y회사 말고 이게 잘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Y회사체와 같은 제3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강운태 위원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지요. 어쨌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은 후보자께서 활동한 수입인데 그 자체를 신고를 누락시켰거나 두 번째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수입원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고 그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회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억이라고 한…… 잘못했습니다만 제3자로부터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운태 위원** 예, 좋습니다. 내일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정의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아마 열어 두는 것 같고요, 실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시간은 원래 개별 위원님 질의하시는 답변하는 시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해당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별도로 질의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7분 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간에 7분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김종률 위원** 아니,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후보자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따로 제가 후보자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세 신고 또 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운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대리인하고 그다음에 총리실 직원들 또 필요하면 국세청 직원들 힘도 빌려 가지고 오늘 저녁에 밤샘을 하여서라도 좀 하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작권 인세라든지 아까 김종률 위원 제기하신 외국 강연 등 이런 것들은 다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고 강연료, 라디오·TV방송 이것 다 기타소득입니다. 그다음에 문예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등등 다 기타소득이므로, 이 필요경비 80%가 일단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세금 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소득은 한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에서 여러분들 필요경비 2억 4000을 떼면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에다가 20% 곱하면 1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세금을 냈으면 3억 정도의 원래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가지고, 지금 제가 워낙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력을 받으셔서 가지고 오늘 저녁 중으로 클리어(clear)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민주당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우선 별도 시간으로 좀 물

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서울대총장 재직 시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7985만 원, 인세 수입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것, 재산 신고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총장 시절 인세 수입을 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냐는 물음이셨지요?

○김종률 위원 누락시키셨지요? 그러니까 누락시켰는데, 누락시킨 것만 우선 확인해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누락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서울대총장 재직 시, 다시 말해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인세는 신고된 예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신고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다. 당시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명시적인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공직후보 재산 신고에는 별도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문용어입니다 마는……

○김종률 위원 전문용어가 아니고요, 그 해명이 잘못됐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인세 수입을 소득신고는 했는데 재산……

○김종률 위원 지금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고한 예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김종률 위원 지금 후보자하고 토론하려

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번에……

○김종률 위원 이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총장 재직 시절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위원 소명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종률 위원 해명하셨잖아요. 그 해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 질의에…… 시간 빼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인세 수입을 재산신고에서……

○김종률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신고 안 하셨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왜 인세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소득신고는 다 했습니다만……

○김종률 위원 소득신고를 묻지 않았어요. 소득신고는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번에도……

○김종률 위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사항,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총장 재직 시절에 7985만 원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신고 안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은요, 좀 전문용어이긴 합니다만 재산은 저량 개념이고 인세는 유량 개념입니다.

○김종률 위원 세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관보에 총장님 재산신고한 항목에 인세 수입을 신고하게 되

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빠뜨렸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꼭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면 제 실수입니다. 그러나……

○김종률 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종합소득신고 할 때 합산신고 했느냐 그것은 별개의 논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은 당시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명시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김종률 위원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세 수입 저도 신고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명시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지금 위법을 두루뭉수리 넘어가려고, 아마 써 준 모양인데 그것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습시다마는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해서도 소득신고에서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다시 한번, 종합소득 세부 내역은 보내 주셨습시다마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명세서류를 뒷받침하는 첨부서류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인세 수입 소득신고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0초만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내일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2006년 10월 30일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래미안 방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에 취득가액을 허위 축소 신고해서, 세금 신고를 하면서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처음 소라아파트 재건축 할 때 분양권을 사셨고, 9억 9500만 원에 사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면서 소라아파트 토지분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분양권 매수금액인 9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도표에서 보는 대로 1억 4000만 원 임의 가액을 기재해서 매매가를 축소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축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취득·등록세 812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후보자께서 매수금액 9억 9500만 원에 분양권을 샀습시다마는, 분양권 자체가 토지분의 가액을 신고한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즉 분양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또는 입주한 다음에 취득에 소요되는 분양권 플러스 재건축 부담금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때 9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1억 4000만 원 임의가격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기준시가가 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다운계약서가 위법이 되고 처벌되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물론 그 당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고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다운계약서가 사실 관행처럼 용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기준시가보다는 높게 써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지방세법,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보자께서 이 다운계약서 9억 95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2억 6300만 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감안할 때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가액으로 축소 신고한 금액이 관행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좀 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흔히, 아마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한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개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취득세, 등록세를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후보자께서는 하여튼 2003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도합 1450만 원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올바르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하면 사실은 후보자께서는 약 5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취득세, 등록세 등을—탈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총리실을 통해서 해명서를 보내 오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통상 12억짜리 그리고 10억짜리, 후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9억 9500만 원, 10억짜리를 사면……

○위원장 정의화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률 위원 대충 세금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대답을 할까요?

○위원장 정의화 제가 2분을 더 드렸는데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이것은 추가보충질의 할 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내일 추가로 해 주시지요.

후보자 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지금 대답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방배동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입니다. 매입가격은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나타나는 가액은 법무사에 의해서 신고된 것이고 이중 1억 4000만 원은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것은 2002년 말, 2003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2005년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에는 구청에서 일괄 고지 과세하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제 질문시간이 지나서 별도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을……

○위원장 정의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김 위원님 2분을 더 드렸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

변을 또……

○**위원장 정의화** 김 위원님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추가 질의시간 주세요.

○**위원장 정의화** 양당 간사 간 합의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요령껏 하셔서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다시 병역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혹을 풀어가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혹 중에 71년 병역법 제19조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징집순서는 그 징집등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보다 우선하여 징집한다,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요. 요는 뭐냐 하면 국외거주로 인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는 그 징집순서에 있어서 우선하여 징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우선입영대상인데 실제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혹시 후보자께서는 ‘징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징집.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징집이요?

○**鄭玉任 委員**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군대 오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鄭玉任 委員**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서로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징집이라 함은 징병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병검사를 23살에 하신 것이지요, 한 번 연

기를 해 가지고. 입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을 좀 헛갈리셔서 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저도 물론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습시다만 용어상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의가사로 징집연기를 할 수 있는 23살까지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되는 해인 1970년 징병검사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징집에 응하신 겁니다. 그리고 70년에 이미 징집에 응해서 즉 징병검사를 받았던 후보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대는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징병검사와 관련해서는 23살에 받으신 것이지요. 헛갈리신 것 같아서…… 그래서 71년 이후에는 징집연기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징병검사를 한 번 연기해서 23살에 받으셨고 그다음에 보충역 판정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입대가 연기되는 것이지요, 유학생 신분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과 관련시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초에 군대, 일반적인 경우에 군대 안 하고 외국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의 많은 친구들이 외국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군대 안 했다고 불러온 친구들

이 아주 많이 있던 시대입니다.

제가, 지루하지 않으시다면 몇 말씀 써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는 유학을 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70년대는 마음대로 유학을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역 미필자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병무청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23살까지 연기가 끝났고 더 이상 연기 불가자라면 병무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출국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여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여권을 받은 것입니다.

좀 우스운 말씀 같습니다만 집안 배경도 없이 입주가정교사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 직원이었던, 어떻게 보면 촌놈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지금의 저와 40년 전의 저를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쉽게 풀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하자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가 병역이 면제된 것을 굳이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총리직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국가 과제일 수도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내각제 또 의원집정부제 그다

음에 정·부통령제, 그러니까 4년 연임제가 되겠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개헌을 한다면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아직 총리는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자율이라든지 환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대통령제 4년씩 하고 연임가능하다든지 내각책임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玉任 委員 사실은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중도실용으로 본인의 소신을 쫓쫓이 피력했고, 사실 우리 한나라당이나 정부 여당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 해도 통합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총리후보로서 제안을 받으셨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소신 있게 장단점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그러면 총리가 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공개 석상에서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마이크가 잠깐 나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무총리란 법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를 관할하는 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 총리, 얼굴마담 총리가 아닌 진정한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청권이라든지 또 해임권을 사용할 의지 그다음에 그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제청권이라든지 해임권에 대해서 총리로서 과감하게 제청권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통령께 할 말은 다 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국무위원의 임명이나 또는 그만두게 한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입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하신 말씀과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좀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후 첫 질문에서 제가 여러 말씀 끝에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자세로, 원안을 존중하되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총리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데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후속해서 “현재대로라면 자족도가 한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행정의 비능률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새롭게 제기했다기보다는 자족도시와 행정의 비능률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자 그런 뜻이지 새로운 문제 제기는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위원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다가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원안 플러스 알파냐 원안 마이너스 알파냐, 어느 쪽에 가까우냐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10개 부처가 가든 5개 부처가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자족 기능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자족 기능에 좀더 무게를 실는 답변을 해 주신 건 사실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그저 수도권에, 말하자면 위성도시 하나 더 만드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더 있냐, 말하자면 여기에 행정 기능을 빼 버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정자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행정 기능을 보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 기능을 보내지 않고 그냥 자족 기능을 보완한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건 수도권 주

변에 그냥 위성도시 하나 만드는 거나 별 차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 제가 자꾸 똑같은 답변만 드린다고 질책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도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나라 전체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예산은 물론이려니와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림을 한번,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통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 보자, 이런 뜻입니다. 서울의 위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도시 하나를 좋은 것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좀더 넣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국회에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박상돈 위원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마치 자기 돈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그거는 좀 과하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예산 권한이 국회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압니다. 제가……

○박상돈 위원 편성권만 있을 뿐이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국회의원 여러분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박상돈 위원 또 하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특히 총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현행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는데, 고시에 14부 4처 2청 옮기게 돼 있었던 것이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변경 고시해야 하는 것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생각한다면 총리는 우선 법을 지키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위법상태입니다. 정부는 정말 총리가 확정이 된다면, 총리로 임명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우선 그 위법상태부터 면해야 될 상황이에요. 변경 고시부터 우선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자꾸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하더라도요, 아무리 2주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9월 3일 날, 9월 1일 날 내정되고 9월 3일 날 이런 언급을 하시는 걸로 볼 때 뭔가 지금 현재의 청와대나 정부와 교감 끝에 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 구애를 받아 가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아무런 선입관도 없고 또 아무런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물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지키는 것하고 세종시를 정말로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위원님?

○박상돈 위원 아니, 좋은 도시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국가의 의사결정을 청와대가 합니까? 이걸 국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 형태로? 한나라당과 그 당시의 열린우리당이, 여당과 야당이 법률을 만든 거예요. 합의 결정한 거예요, 법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은, 그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인데, 그 의사를 국회가 결정했는데 그걸 누가 맘대로 바꿉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아직 그 일은 안 해 봤습니다만 변경 고시를 해야 이제 일이 시작될 텐데 그 변경 고시를 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세종시를 위해서 좋은 길이 무엇인지 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이 무엇인지 한번 의논한 후에 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정의화 1분 더 드리세요.

○박상돈 위원 지금 그런 기회를 그동안 작년 이맘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초 이래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부 들어서서 바로 변경 고시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월 이후, 2월 25일 이후에 정부 부처가 바뀌었으니까 즉각 변경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변경 고시를 안 함으로써 위법상태를,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이제 와서 뭐 총리로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연구 검토하겠다는 건,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변경 고시를 통해서 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써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좀 믿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위원장 정의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수 위원 정희수 위원입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계 수지 분석을 이렇게 죽 해 온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세금, 뭐 이렇게 하는 것 헛갈려요. 헛갈리는데, 제가 죽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이, 후보자에게 여기 변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죽 그동안에, 2006년 서울대총장 퇴임 후 3년간 재산이 증액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 재산 증감액이 퇴임 후 9월 신고 때까지는 총 6억 39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부동산이 3억 5000, 예금이 한 3억 5000, 이렇게 되고 부채가 68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소득세법 기준시가가 건교부 공시가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재산 가치만 약 3억 5000 증가한 결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3억 5000에서 부채 6800을 빼니까 나머지 증가액은 2억 한 800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해됩니다.

○정희수 위원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가축 3년간 평균 수입은 한 2억 9000만 원 되는데 이 중에 세금 납

부하고 신용카드 한 1억 5000, 현금영수증 포함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운태 위원 지적한 것과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수입 2억 9000에서 세금하고 이것 빼고 나니까 연평균 한 1억 2000 정도가 잉여금, 수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 생활비 등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연평균 한 9600만 원, 실질 재산이 증가했는데 이걸 3년간 합계를 하니까 한 2억 8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외에서 강의하고 합친 것까지 합치면 강 위원이 별도로 노출되지 않는 수입이 최소 3억 6000 된다 하는 것하고 이것 지금 2억 8000하고, 그것하고 더하기 하면 결국 해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내가 체크한 것 이외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아, 제가 남한테는 비판적이고 저한테는 관대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에서 연구비를 받거나 또는 강의해서 수입을 올리거나 했을 경우에 너무나도 당연히, 어릴 때 배운 용어입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서 ‘저쪽에서 다 냈으니 이쪽에서 낼 필요 없겠구나’ 해서 그것을 신고 안 한 게 첫째 번 잘못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비록 제 책임이기는 하지만 세무대리인한테 세무 일을 부탁을 해서 yes24에서 받은 소득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 못 한 것 또 큰돈은 아니지만 몇백만 원 임대소득 그걸 또 종합소득에 합산 못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중에 조금이라도 좀 예의바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운태 위원님께 용서를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존경하는 강 위원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강 위원 분석한 결과 노출되지 않는 3억 6000하고 제가 분석한 것하고 아까 빠진 것 이것 더하기 하면 근접한데 총리실 관계자들, 만약에 제대로 답 못하면 나한테 오세요. 해서, 자료 정리해서 내일 강 위원한테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것, 참 짜증스럽지 않게 똑같은 말 이렇게 안 나오도록 잘 좀 보좌를 하십시오. 그걸 갖고 아침부터 지금까지진 빠지 마시고, 총리실 관계자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잘하셔야 후보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걸 총리실 담당자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저분들한테 이런이런 일 해 달라고 부탁을 잘 드렸어야 할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희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정희수 위원** 하여튼 다른 얘기 있습니다마는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내일 또 있으니까,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운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강운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운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안에 관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위원, 잘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똑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여기가 뭐 통과 의례장입니까?

내가 갑자기 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수차례 걸쳐서 자료요구했고 조금은 자료, 국세청에서 보내 준 자료, 관보에 나온 자료,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갑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드렸다고 10페이지짜리 장장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위원께서 잘못 판단하셨다. 몇 페이지 그것은 좀 중복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나는 숨긴 게 없습니다’ 누가 숨겼다 그랬습니까? 바르게 살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간에 계산상 안 맞기 때문에, 또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밝혀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께서 그림 판 것도 나오고 또 Y 회사에서 1000만 원 받은 것도 나오고 또 아침에 수정신고도 나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피곤하다는 등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다시 한번 부탁건대, 우리 나성린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세무전문가하고, 특히 국세청 당무자의 도

움을 받으셔서 제가 만든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것을 석명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는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내일 또 계속, 우리 정 위원님께서 피곤하더라도 나는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께서 위원장 대신에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운태 위원님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총리실 보좌진들이 제대로, 후보에게 처음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강 위원께서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제가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래요. 최재성 위원님……

○정희수 위원 그러나 같은 이것을 우리가 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서로 잘 주고 받고, 물론 도덕성과 모든 걸…… 인사청문회의 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아’ ‘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후보자한테, 7분 범위, 아무리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도 주고 해야지 이야기하려면 말 끊어버리고 그다음 ‘내 시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보기가 좀 딱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

다. 제가 다른 그건 없습니다.

○강운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리가 뭐……

○강운태 위원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

○위원장 정의화 그런데 정희수 위원님, 지금 우리 청문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위원님들끼리, 청문 위원님들끼리 이런 대화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 답변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에 어긋나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다리 발언만 하시니까 자꾸 시간 제약 때문에 그만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서를 본 결과하고 후보자의 발언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후보자가 저희들한테 보낸,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보낸 답변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문이 갈 정도고요.

또 급여대장을 한번 떼어 봤습니다.

저거 언제 보셨습니까? 전혀 안 보시고…… yes24 급여대장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청문

위원들한테 자료는 점점 안 하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청문 위원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저게. 그러면 안 보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yes24에서 바로 보낸 거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면질의……

○최재성 위원 그러면 총리실 관계자들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대 자료 요청하면, 서울대에서 자료 제출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yes24 자료는 총리실 청문준비TF 안 거쳐서 오는 거예요, yes24만? 이것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다른 서울대 자료도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속기가 되니까요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봤다고 치자 말입니다.

‘급여대장’이라는 저 글자는 보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보입니다, 정운찬 고문 급여대장.

○최재성 위원 급여대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아까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 내일 청문회 시작 전에 꼭 제출을 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만 후보자 배우자께서 위장전입 과거에 하신 것은, 그 사실 자체는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단어를……

○최재성 위원 다만 그것이 본래 주소지 이전을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단어가 위장 전

입인지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재성 위원** 거기서 살지 않으면 위장 전입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지금 지난주에 진행됐던 장관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이라고 국민적으로 지적받고 청문 위원들 지적받았던 게 살지 않았는데 이사 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부동산 취득 문제나, 이것으로 갈릴 뿐입니다.

위장 전입은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상?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거기서 살려고 갔다가 다시 후퇴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병역 문제는 백원우 위원께서 또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탈루도 수정신고 하셨지만 지난 15일 날,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내셨고 오늘도 또 내시지 않았습니까? 굳이 법률을 내세워서 이것은 수정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만 아무튼 탈루된 것을 15일 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납부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탈루한 것 없는 거지요? 이제 더 수정신고 할 것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얘기해서 아주 일체저에 대해서 감사라 그럴까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국립 서울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거기 교수하시고 총장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연료라든가 또

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후보자께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은 좋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소홀히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후보자님과 가까이 지내거나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강연료나 이런 것 다 신고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는 지성의 전당 상아탑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초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률을 위원께서 계속 ‘나도 신고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후보자 주변 분들은 거의 다 신고했을 겁니다. 후보자가 유독 무감각했거나 아니면 해태했던 것인데 이것을 왜 바르게 산다는 이유로 자꾸 강변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시정조치 한 것 아닙니까, 15일하고 오늘하고. 조금 더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하셔야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걸리는 문제가 없어요. 내일 하루 더 청문회가 남았습니다만 조금 더 명백하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부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일국의 총리가 말입니다 청문 위원들이 알려 주는 내용을 이해하냐고 물었을 때 비로소 이해한다라고 고개나 끄덕거리고. 이게 어디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 문제지요.

그다음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yes24에서 급여대장 직접 왔다 그랬지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위증입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못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총리실은 어떻습니까?

○**최재성 위원** 그러면 청문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졌다는 겁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료는, 총리실에서 보낸 자료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실에 직접 줍니까? 이게 청문회 맞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훈 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서로 오해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이애미대학의 입학 허가를 신청할 때 내신 서류에 영어로 표현하면 ‘I a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밀리터리 서비스(military service)가 코리아 밀리터리 서비스를 얘기한 게 아니고 US 밀리터리 서비스를 얘기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해훈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미국 군대로부터 면제받았다. 즉 얘기하면 난 미국 군대를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해훈 위원** 그러면 이게 표현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됐건 ‘나는 미국 군대를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썼건 어쨌든 그게 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게 더 적절했을까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하고

이런 사항과 관계가 없을 듯싶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훈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미국 대학이 지금도 입학 허가를 줄 때,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받아서 줄 때 어플리케이션 폼에 병역란이 지금도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요새 직접 지원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겁니다. 당시는 월남전 때문에 학생들이 강제로 군대에 불러 가는 일이 있었습지만 지금은 지원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그냥 판단합니다.

○**이해훈 위원** 사실 저는 88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저도 어플리케이션 폼을 냈던 사람인데요. 뭐 여자이기 때문에 저도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입학 신청서야 여자 남자 구분이 없이 공통된 폼으로 나오니까 저도 봤는데 제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제가 입학 허가를 신청했던 10개 대학에서 이런 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런 난이 있지도 않은 것이고 당시 70년대 월남전 때문에 징집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자국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주장을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이애미대학의 입학허가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해외유학생 관련 여권과 비자 발급에 입학 허가서가, 미국 대학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당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때 조건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유학생 비자요?

○이혜훈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때만 해도 1966년인가 7년인가 토플시험이 생겼는데 저는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플시험을 먼저 볼 여유가 없어서 한 미재단에 가서 먼저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3월인가 다시 토플시험을 봐 가지고 미국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것을 기초로, 제 대학 때 성적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입학 허가를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혜훈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학생에게 여권과 비자를 발급할 때 뭘 보고 그것을 줬었는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권을 발급할 때 유학시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영어하고 국사하고 아마 윤리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유학생 자격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의 경우는 병무청에서 또 허가가 나와 여권이 나왔습니다.

○이혜훈 위원 아침에 계속되는 공방을 보면서 좀 알아 봤습니다, 관계기관에. 그런데 지금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당시 유학생 비자의 발급 요건은 여권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가 ‘교과부가 주관하는 유학시험에 통과한 합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왔고요.

두 번째는 ‘병역의무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면 병무청이 허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혹시 그때 보증인을 세우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총리를 하셨던 이현재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이혜훈 위원 이 두 가지 관계기관의 답변으로 보면 외국 대학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서류지요. 그것은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 대학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치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군 복무를 안 한다면 보증 선 분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과태료를 냈든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혜훈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관련 규정도 피보증인, 보증의 대상이 되었던—소위 말하면 지금 후보자시지요—후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면 그럴 경우에는 보증을 섰던 이현재 전 총리께서 과태료를 무셨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제가 다음에 질문드릴 사항이었는데 아까 제가 들으니까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하신 것도 유학이 끝나서 병역면제 연기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귀국을 했어야 되는데 귀국하지 않고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했던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쭙 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76년에 유학이 끝났을 당시에 들어와서 귀국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기한 내에 들어오라고 통지서를 유학생

집으로 그때는 보냈지요. 유학생 사정이 학위가 끝났건 안 끝났건 상관도 없고 유학생이 유학을 끝내고 거기서 취직을 했건 아니건 다 상관이 없이 그런 입영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서가 왔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시다.

○**이혜훈 위원** 통지서가 없었고 만약에 통지서를 보냈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증인 섰던 분을 과태료를 매겼을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를 이현재 전 총리 쪽으로부터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현재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해 본 적은 없습시다만 과태료를 안 내셨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역기피를 한 것도 아니고 병역기피 할 사유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입영대상자가 돼서 그래서 오라고 통지가 가야 그것을 기피하려고 체류기간을 연장을 하든 뭐든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닌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하면서 병역을 기피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지금 여기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수많은 경제학 유학생 중에 단 한 명이 나오기가 어렵습시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70년에 한국 사람이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아까 총리후보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못 마쳤는데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이 증명서에 의하면 78년 12월까지 하신 것으로 청문회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시다. 제가 귀국은 8월 31일 날 즈음에 했지만 콜럼비아대학하고 계약이 끝난……

○**백원우 위원** 그러면 이때 78년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콜럼비아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미국은 대학이 1년 열두 달, 연봉을 열두 번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아홉 번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당시는……

○**백원우 위원**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안 받았습시다.

○**백원우 위원** 안 받으셨는데도 재직기록으로는 되어 계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럼요, 계약을 대개 1년씩 하니까요.

○**백원우 위원** 연봉은 안 받으시고 계약기간은 되어 계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재직기간으로 해 주는 거지요.

○**백원우 위원** 재직기간으로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콜럼비아대학의 교칙을 찾아봤습시다. 이게 85년도 교칙이라서 그 당시에 78년도에 바로 이 교칙이 적용되는 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시다, 웹

사이트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년도 내에 타 교육기관에서 교수행위를 할당받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콜럼비아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웹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번역했습니다.

즉, 콜럼비아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에 가서 이중으로 어떠한 교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것을 콜럼비아대학……

○백원우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오셔서 시간강사를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시간강사를 하실 때도 급료를 받으셨을 건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시간강사 급료 받았습시다.

○백원우 위원 콜럼비아대학 규정을 보면 금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시간강사 정도는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전임이나, 아니냐의 문제일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콜럼비아에서 허용해 줬을 것이다,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시간강사 하는 것을 허락해 줬을 것이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거의 휴직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교에 12월 초인가 중순인가 전임교수로 취업되는 바람에……

○백원우 위원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학식이 많지가 않아서, 미국 유학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콜럼비아대학, 우리 이해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명하고 큰 대학의 조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시간강사를 했다, 교직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참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첫째, 교직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콜럼비아대학교에서 저보고 어디 가서 잠시 휴직하라고 허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백원우 위원 휴직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휴직을 하셨습니까?

휴직, 휴직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미국 대학에서 굉장히 신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마이애미대학 입학원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저의 진실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지금 여기서 후보자의 의도와 속마음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만 갖고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했다, 나는 그렇게 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후보자의 말만 믿고 저희 청문위원들을 이 자리에 세워서 후보자를 검증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만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을 쓰셨습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다 내락을 받았고 입학원서가 유학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사실대로 쓰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 연기되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보는 영어 공문서를 보고서 어떻게 답할지 몰라서 그냥 ‘군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exempt’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것은 ‘면제’고요, ‘연기’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요, 제가 그것 불찰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백원우 위원 후보자의 부인이 마명리에 주소를 옮겨 놓으셨습니까?

사시지는 않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법률적 용어로 치면 그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법률적……

○백원우 위원 추호도 없다고 하셔도, 의도는 없으셨다라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위장전입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하나만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일생 동안 땅을 한 평도 가져 본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판 적도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파트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20년 전 일입니다. 정확히 21년 전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1988년 일입니다.

○백원우 위원 ‘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20년 전의 위장전입, 과거사인가?’ 이게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논평입니다.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의원님의 논평입니다. 당시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20여 년 전의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부총리직을 사임하라고 지금의 여당이 냈던 논평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전의 위장전입 하나로 현직의 경제부총리가 물러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88년에 그 동네 가서 살 생각으로 가서 잠깐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백원우 위원 차도 없으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버스로 직선거리로 55km가 되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버스로 가서 제 친구가 데리러 나왔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버스로 가셔서 가서 보시고 괜찮으시니까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옮기기 전에는 가보시지도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갔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옮기기 전에 가보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나서 또 가보니 차도 없는데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가 보셨을 때는, 그때도 버스로 가셨든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 친구가 괜찮은 차를 하나 사면 거기서 서울대학까지 한 40~50분이면 가니 같이 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거기서 서울대학교까지는요 88년도에…… 저희 시골집이 그쪽입니다. 포천군 내촌면인데요, 그 당시에 도로가 없던 시절에 치면 서너 시간 걸립니다, 차로 달려도.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백원우 위원 여러 번 가 보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등록되어 있는……

○백원우 위원 왜 여러 번 가 보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50일 동안, 주민등록 되어 있을 동안에 사실은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도 가고 주중에도 가고 아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제 친구가 버스정거장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수고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아까 4대강 문제를 제가 좀 여쭙어 보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정량적 고려 외에도 정성적 고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다 말씀 못 드린 것인데 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림 키우기 나라를 앞으로 훌륭한 강 키우기 나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양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계량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플랜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부분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경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정희 위원 그 내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체에 대해서 ‘일자리 34만, 그리고 40조 경제효과’ 이렇게 전체를 놓고 지금 정부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잘라서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체

를 놓고 하는 이 홍보의 근거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근거는 말씀드렸는데,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정부가 홍보로 내세웠던 34만 명과 40조 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대강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면답변서에 써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방향만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진들이 쓴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4대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이분들이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후보자처럼 산림을 키운 것처럼 강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도 아니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크고 수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마는 믿는다고 하더라도 찬성했던 분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게 일자리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이유이지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키우기처럼 강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제가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 4대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산림 키우기처럼 강을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후보자가 4대강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그게 커다란 이유고요. 그보다 하나 예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정희 위원** 됐습니다. ‘O·X’로…… ‘예·아니요’로 처리를 하지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수 피해가 정말 대단해서 피해액보다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3조 원이면 복구비가 4조 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또 거기다가 하나 보태서,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저는 대운하를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4대강도 한 번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과 홍수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저를 크게 움직인 것은 수질 문제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질이 나빠서 4대 강 유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아주 소극적인 데서 좀 적극적인 데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수질 문제와 가뭄, 홍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상세하게

여쭙 겁니다. 과연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지, 객관적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따로 여쭙 거고요.

지금 대운하하고 4대강은 다르다, 이렇게 의심도 했으나 이제는 오해가 풀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대운하는 안 하겠다고 천명을 하셔서 4대강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1월 달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찬성한다는 여론이 꽤 많은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좀 믿기 어렵다고 했던 그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절반 이상, 64%가량까지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왜 이 4대강이 대운하의 1단계다, 대운하 같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갖고는 대운하를 만들 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영어로 테크니컬(technical)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낙동강에 원래 4대강, 대운하 사업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5개의 보가 지금 4대강 사업에서 그중에 3개가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가동…… 지금

보 말씀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가동보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똑같이 온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정희 위원 똑같은 지점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더 드릴게요.

○이정희 위원 답변을 이런 걸 하셨습니다.

이전에, 몇 달 전에는…… 2009년 1월 달입니다. ‘뉴딜이라고 하면 대규모 취수사업을 떠올리게 된다. 녹색뉴딜은 토목건설 중심의, 과거에 많이 봐 왔던 패러다임이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토목공사 하면 성과가 금방 나니까 돈을 쓰려고 생각하겠지만 교육·관광·의료·보육에 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이 4대강 사업 안에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장래를 위한 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면답변을 하실 때는 ‘뉴딜정책은 SOC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보육 또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그런 내용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봄에 녹색뉴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뉴딜을 갖다가 그냥 토목사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바꾸고……

○**이정희 위원** 내정자님 이 답변이, 서면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읽으신 걸로 한다면 4대강 사업은 거기 교육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정희 위원** 아니, 잘못됐습니까? 이 답변이 내정자의 뜻과 다른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문제를 좀 바꿔 주십시오. 어떻게……

○**이정희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내정자께서 아까 계속 서면답변에 대해서 내가 서면답변 제대로 못 봤다, 또는 바꿨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답변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내정자께서 내정자의 지위로서 한 첫 번째 공식적인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내정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에 대해서 내정자가 일일이 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그런 방향은 얘기했지만 이거 본 적은 없다 이러시고,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내정자의 무엇을, 내정자의 생각을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이 청문회에서 제 의견을 주로 표출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내정자님, 굉장히 잘못 보신 겁니다, 그것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오늘 네 번에 걸쳐서 질의 순서를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조금 미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분 계시면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님……

○**강운태 위원** 3분이요?

○**위원장 정의화** 5분 드릴까요?

좋습니다. 5분 드릴게요.

○**강운태 위원** 사실은 위원장께서 오늘 12시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5분 내에 마쳐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후보자 가계수지 상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개연 가능성, ‘Y회사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개연 가능성을 물었더니 ‘Y회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셨단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평소에 Y회사로부터 무슨 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단어를 잘



못 쓴 것을,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강운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쳐 주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강운태 위원 지금 Y회사의 회장이 500만 원, 50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줄 때에 후보자에게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쫓단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 때입니다.

○강운태 위원 글썄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외국 사람들 앞에서 궁하게 살지 말라는 표시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글썄 말이지요.

어찌됐든 간에 보면 후보자께서는 작년의 경우에 한 달에 신용카드만 1000만 원 이상, 1년에 1억 2000 이상 쓰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외국에 사실 때에, 재작년에도 말하자면 한 달에 1000만 원쯤 쓰셨고요.

그런데 그 Y회사의 회장이 돈을 주면서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 스스로 궁핍하게 사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생활도 방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강운태 위원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장남은 그런데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건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좋습니다. 자식 문제를 깊이 있게 따지지는 않겠고요.

화제를 돌려서, 배우자께서 2004년 · 2005년 · 2007년 세 번 그림을 팔았는데 5900만 원, 대략 아까 답변에서 ‘한 5점 정도 이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5점의 그림을 5명이 나눠서 샀습니까, 한 사람이 다 샀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림을 팔았다는 정황을 파악을 했지만 물어보지 않았고, 이번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비로소 5점을 팔았다고 하는 것 알게 됐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저녁에 가서 가지고 확인해서 내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무엇을 알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누구한테 팔았는지, 한 사람한테 팔았는지 또는 다섯 사람한테 팔았는지…… 지금 그림을 5점 판매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기억으로 5점입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뭐 5점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6점을 팔았다면 6명한테 판 건지, 한 사람한테 몽땅 판 건지, 그 사람은 누군지 하는 것을 좀 물어보셔서 가지고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주시면 내일 청문회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신고 문제 관련해서 9월 15일에 이미 수정신고 하셨고 또 오늘 아침에 수정신고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수정신고 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해도 좋습니다’ 또 그러셨는데,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후보자께서 이걸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후보자 배우자의 소위 그림 판매 문제인데, 원천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다소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설령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가족의 세금납부실적을 낸 것을 보면 후보자의 부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점에서 후보자가 그림을 판 부분, 59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세무를 보좌하는 분하고 상의하셔서 역시 내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 해에 걸쳐서 나눠어졌어도……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까?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500만 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상이면?

○강운태 위원 이상이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종합소득을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시고요. 거듭 반복됩

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될 분이 과거도 아니고 지난 3년 동안에 어쨌든 4억 가까운 돈이 뭔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결코 후보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후보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에 국세청 세무를 잘 담당하는 그런 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처럼 계산을 명백히 하셔서 내일 아침에 주셔서 제가 만약 그걸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가면 ‘제가 이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국민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의화 또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시다.

아까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9억 9500만 원에 분양권을 사고, 그것이 토지 부분에 대한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라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샀을 때 대지만 남아 있었지요, 토지 부분만.

그런데 그것을 1억 4000만 원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시가가 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관례랍시고 용인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시가보다도 적게 신

고하는 경우까지 적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운계약서가 당연히 마치 적법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2006년 부동산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다운계약서가 그때 처음으로 위법하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관행으로 용인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내일 또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계신데, 부선망 독자를 활용한 징집연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군 장성 병무국장 출신의 후보자 장인의 영향력에 의한 면제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71년에 미국 유학 가실 때 별도로 징집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징집연기 신청을 하고 가셨습니까? 71년 미국 유학 갈 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때 징집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방부에 미국 가려는……

○김종률 위원 허가를 받아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들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해명을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계속 군대

말씀하십니까?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하나 부탁 말씀……

○김종률 위원 유학 도중에 그러면 이렇게 입영통지가 날아오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귀국할 생각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꼭, 그러면 와야지요.

○김종률 위원 입영통지가 오면 언제든지 돌아올 생각을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73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르셔 갖고 귀국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귀국 안 했다가보다는 귀국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김 위원님!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드는 질문을 갖고, 당연히 들 수 있지요. 아마 후보자님의 진정성을 좀 호소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77년 1월 고령으로 병역 면제되자마자 그다음 해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귀국하신 것은 78년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1년 반이 지났었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계속 외국 유학 기간 내에 소집 명령, 입영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 그 시점의 자료 제출을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응소자 명부 그리고 방위 소집 대상자 명부와 명령서만 있으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일 오전까지 국가기록원에서 꼭, 일부러라도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출을 하실 단계입니다. 이 정도 의혹이 와 있으면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명령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 장성, 병무국장 출신인 장인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인데, 실제로 후보자께서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당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1분만 더 드리세요.

○**김종률 위원** 67년 정 후보자님 장인과 만난 분이 “당시 병무국장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해외 출국을 허가받지 못한 자신을 즉석에서 내보내 줄 정도였다” 이런 말씀 보도된 적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못 들어 봤습니다.

○**김종률 위원** 실제로 그 당시 후보자 장인께서는, 그 당시의 병무청장 그리고 후보자 장인의 육사 동기이자 같은 장군 출신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하나 정말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저의 장인, 돌아가신 장인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에 흠이 갈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가 후보자님 장인의 명예하고 관련돼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김 위원님은 지금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률 위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검증의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국에서 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위원** 저도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후보자와 장인과의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구나 왜 이렇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우연이 많습니까? 왜 그 시점에, 66년 병무국장도 하시고 71년 군사령관도 하시고 그랬는데 왜 또 후보자의 장인…… 그때 군대 연기 중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드는 상식적인 의문을 왜……

○**위원장 정의화** 김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지금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었고 공직후보자님께서도 그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님께서 망자에 대한 존중을, 망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 정도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종률 위원** 예.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그것으로 이 단계 정도 와 있으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차명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아까 보충질의 때 제가 후보자님 병역과 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 봤습니다.

67년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2년간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논산에서 돌아오셨는데 2년차가 되는 24세 때 법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1을종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충역이 됩니다. 보충역은 6개월 복무대상자인데 1을종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여쭙어 봤느냐 하면, ‘기왕이면 6개월 복무대상자이면 방위인데 방위 하시고 갔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쭙어 봤더니 후보자께서는 ‘나는 그때 입영 대상이 아니었다, 그냥 무조건 대기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 말씀이 이해가 안가서 당시 관련 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후보자 말씀이 맞더라고요. 당시 병역법 제21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여기서 가사 사정으로는 집안 사정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독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후보자지요. ‘그중에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 그러니까 후보자가 보충역에 편입된 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자는 ‘보결입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기 상태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가사 사정으로 보충역이 된 사람은 대기 상태도 아니고 사실상 면제,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후보자를 염두에 두어서 71년도에 또 장인어른께서 법을 고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기억이 맞다면 71년에는 벌써 예비역이셨던 것 같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농담 비슷하게 장인어른을 거론했는데, 장인어른과는 상관없이 이 법이 존재하고 거기서 이미 보결입영을 하지 않는 예비역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런 것을 당시에 법을 통해서 다 일일이 확인해 보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 이게 하여튼 예비역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부르면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신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방위병 제도도 몰랐습니다. 저의 후배 학생들한테나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시절에 방위병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일도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다른 분은 1분까지 더 주 고서 저는 처음 시작부터 간략하게……

○위원장 정의화 원래 사실은 한두 분만 더 하기로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 전원 다 한 바퀴 더 도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이지요.

○박상돈 위원 원칙적으로 추가 발언할 게 있으면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의화 물론이지요. 저로서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상돈 위원 내일은 또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이고,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상돈 위원 아침부터 똑같은 세종시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9월 3일 날 내정자께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경제학자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언론이나 또 이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본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쭙 보는 건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끝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저에게 맡겨 달라, 나라를 위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 질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총리의 재량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총리한테 맡겨 주고 안 맡겨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총리는 집행하면 될 뿐입니다. 기속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맡겨 주면 세종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친 월권적인 말씀이지요. 이것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실례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123조제2항을 보면 말하자면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그 법률은 위헌제청을 했지만 이것은 합헌 판결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든 법일 뿐만 아니라 위헌제청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까지 났으니까 이것은 국민적 합의다,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이것은 국민적 합의라고 평가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같은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연속성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종시 건설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정자께서 하신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가 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런 계층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까지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도 한 말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이 오늘 아침부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지요, 저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으로서는 단언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금 위법 상태를 해소하면 되는 건데 자꾸 “나한테 맡겨 달라, 내가 알아서 잘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단지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종시 백지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종시가 백지화가 되면 제 직을 걸겠습니다, 제가 임명되더라도.

두 번째로는 단지 세종시의 모습을 국가와 세종시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건데 이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요로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 모습을 정말로 세종시에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 방향……

○**박상돈 위원** 그런데 “세종시를 백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그 행정기관은 전부 서울에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에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종시 백지화가 된다면 저는 임명되더라도 총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결국은 하는데 모습은 의논하자,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노력을 해서 나라와 세종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세종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로 만든다, 그리고 자족기능을 복안하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요, 후보자께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충청권 정치권 그리고 정부와 깊이 논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현재 총리의 입장이나 후보자의 입장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게 파악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사안의 성격상 이 자리에서 총리후보 개인 자격으로 단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

안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권경석 위원 이 부분은 이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총리로 취임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권, 충청권 그리고 정부와 깊이 논의해서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최적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자꾸 반복해 봐야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단언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권경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법을 만들어야 될 당사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세종시의 문제는 세 갈래로 나갑니다, 세 갈래. 첫째는 건설특별법에 의해 기반 조성 공사를 비롯한 기반을 닦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또 하나는 국회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설치법을 지금 입법 과정 중에 있어요. 행안위 전체회의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통과했고. 그리고 정부 행정고시, 변경고시하는 이 문제, 이 세 갈래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두 과제는 이미 확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행정변경고시 이것 가지고 아까 말한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대안, 최적 대안을 찾겠다는 노력을 하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후보자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

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늘 마지막에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은 최재성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후보자에게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가뭄 문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최종 보고서가 2009년 7월에 나왔는데 거기 물 부족량이 2011년 8억m<sup>3</sup>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읽어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정희 위원 후보자께서 만약에 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4대강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당장 10월 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가 대단히 많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4대강 살리기 용수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공부를 하셔서 내일 얘기할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정책이 감세, 4대강 이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감세와 4대강이라는 것이 제가 아침에도 오늘 감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렸고 4대강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를 드릴 것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그리고 얼마나 토론 없이 그리고 얼마나 다른 반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과장·확대 포장되어 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보자가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선의, 아까 대통령의 선의를 믿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정희 위원 그 선의가 과연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의는 그냥 청와대 안에 있는 선의로 머물고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부자 감세, 그리고 말 그대로 환경 파괴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거취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보자가 기대를,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한 총리가 되었

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후보자가 대단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해 오셨습니다. 아까 토목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셨고 감세에 대해서도 그러셨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 기대는 이제 후보자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것인지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숨죽이고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토론을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4대강 문제도 그렇고 감세 문제도 그랬는데 서면답변을 토대로 저는 질의를 준비했고 그래서 여쭙았는데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시고 답변에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를 한번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은 정책토론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밤에라도 검토를 좀 하셔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내일 오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좀 고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 대해서

아까 하신 답변은 사실 적절치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도 꼭 숙지하셔서 내일은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최재성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하려다가 먼저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책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서를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질문 하나에 몇 초씩 쓰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파악도 못해보거나 혹은 후보자가 오늘 얘기한 내용하고 전혀 답변서가 동떨어져 있거나 이거는 이 청문회 자체가 이렇게 진행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청문위원들은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스24를 직접 의원실로 찾다고 황당한 거짓말을 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금방……

○**최재성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후보자께서 전혀 자료를 청문위원들한테 제공하는 데 개입 안 하십니까?

안 보세요, 그거? 총리실 직원들이 자료 목록을 가지고 오면 후보자께서 전혀 보지 않고 청문위원들 방으로 보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정부 가까이 전연 없던 사람이……

○**최재성 위원** 아니, 이번 경우만 얘기를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주일 동안 이거 준비하느라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힘이……

○**최재성 위원** 최종적인 이 자료를 청문위원실로 보내는데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합니까? 총리실 직원들이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청문위원들한테 주는, 아까 얘기한 급여대장이라든가 각종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청문위원들한테 책임지고 ‘이 자료는 내가 책임지고 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우리 스태프들이 찾겠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급여대장을 못 봤다는 것은 일단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일 오는 자료는 반드시 후보자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께서 소위 말해서 기부금을 2009년에 871만 6000원, 그다음에 2007년에 1490만 원, 그리고 2006년에 929만 원 기부금을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에 신고를 합니다. 기부금 내역서를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사업자에게 신고를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 냈다, 장학금으로 얼마 냈다, 이 세부내역을 서울대학에 신고를 해야 후보자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미 공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장학금 몇 회 얼마, 교회는 횟수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료 내일 청문회 시작 전까지 꼭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청문회 시작 전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

다.

○최재성 위원 왜 어렵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될 수 있으면 빨리 내겠습니다. 지금 열 시인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잘 못 하는 것은, 못 할 것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빨리 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자료 제가 지금 요구 하는 것? 오늘 시작 전에도 문서로 위원장님께 제출했던, 저는 발언 대신에 이 자료를 달라고 오전에 첫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제가 문서로 제출했던 것 중에 있는 내역입니다.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루 동안 이것은 준비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내일 오전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내일 청문회는 그야말로 후보자께서 마음 속에서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수준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총리실 관계자를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께서 성의 있게 자료 제출 및 이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헛발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후보자의 최종적 책임하에 보낸 각종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감사합니다.

○백원우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어차피 이것이 다 공개된

것이니까 후보자님 보시고, 신동아에서 오늘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까 Y모 기업, 그 용돈 받으셨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소위, 여기 다 언론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제 두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선거 때 서울대병원장님께서 총장님 선거를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국민적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입장을, 해명하시는 입장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써?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는 증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다 거짓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두산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기가 된 의혹이 있으니,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 청문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정도에 대해서는 총장님한테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도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가 아니니 적어도 후보자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좀 정리된 의견들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 정의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원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신동아 몇 월호입니까? 10월호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해 달라는 뜻

같습니다. 물론 질의는 백원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떤 질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내일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으로 우리 정옥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鄭玉任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제 의사 다 끝났는데……

○鄭玉任 委員 그러면 제가 발언을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오늘 제기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후보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의혹 차원의 질문들이 많이 있고 또 후보자로서는 답변을, 우리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것이라면 후보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볼 때는 제가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간 중간에 거의 다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를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우리 정옥임 위원님 말씀대로 후보자께서 이 말씀 오늘 꼭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 하나하고 또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yes24 대장은 총리실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을 착오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대강과 관련한 질문을 이정희 위원께서 하셨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 질의에 대한 대답은 4대강이 단순한 SOC 투자사업은 아니며 수질 개선, 환경, 레저, 문화, IT 등 소프트파워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상으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다소 까다로운 질문에도 성실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총리후보자의 노고도 함께 치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한 자세와 우리 총리후보자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총리 인사청문회답게 품격 높은 청문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후보자께서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설명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정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청문회에서 좀 명쾌하게 정리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여서 청문회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13인)

강운태 권경석 김종률 나  
성린 박상돈 백원우 이정  
희 이해훈 정옥임 정의화  
정희수 차명진 최재성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3인)

공성진 김동철 김창수 박  
영아 서병수 안상수 양승  
조 우윤근 원혜영 이강래  
이상민 정진석  
진수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준철  
직무대리 정재룡  
전문위원

#### ○출석 공직후보자

정운찬

#### ○정부측 참석자

국무총리실사무차장 조원동

第284回國會  
(定期會)

國務總理(鄭雲燦)任命同意에 관한  
人事聽聞特別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3 號

國會議務處

日 時 2009年9月22日(火)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審査된案件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청문회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위원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박상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문회의 진행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청문회 진행에 관하여 간사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먼저 오전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할 때에 총리후보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자를 배석시키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오전·오후 각 9분씩 1차 및 2차 질의를 한 다음에 10분간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님에게도 요청드리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명쾌하게 규명해 달라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모 언론사의 월간지에 의해서 후보자께서 총장선거 과정에서 D그룹으로부터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그 D그룹이 운영하는 야구단의 열광적인 팬이라고 하는 증언도 계셨습니다.

○**이혜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말이 의사진행이지요. 질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백원우 위원** 예, 그래서 어제 후보자께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여쭙 봤을 때 이 사실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당 위원님들과 또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도 이렇게 제기된 의혹을 이 자리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만들어가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후보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또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됐던, 이분의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김종인 교수님이나 두 분의 회장님 그다음에 이 기사를 쓰셨던 기자님 이런 분들을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좀 요청을 해서 오후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한 청문회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후보에게 쏠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시키는 길이라고도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백원우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우선 오늘 청문회 중에 양당 간사 간에 그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번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현시점에서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는 세종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고요. 이 법은 국회가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권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은 국회가 심의하고 결정해서 단지행정부는 그에 따라서 집행할 권한만 갖고 있고.

또 현시점에서 전체 예산의 24%가 집행되어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 2월 25일 이후 정부개편에 의해서 종전 12부 4처 2청을 9부 2처 2청으로 변경 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는 준법을 촉구하는 추궁을 했습

니다마는 전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은 자족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부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이런 위법 상태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데 대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조차도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세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말을 계속 믿고 들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청문회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 목적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원만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을 충분히 담아서 질의를 잘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직후보자께서도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자기의 법적 권한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정의화**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민주당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출신 김종률 위원입니다.

총리후보자, 어제 세종시 수정 발언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혹시 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리·위법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의혹, 온갖 의혹이 제기되니까 도덕성으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과 법이 정한,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에게 추진을 약속하고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세종시 발언을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 청와대 집무실 앞에 세종시 모형을 만들어 놓고 큰 관심을 기울였던 사실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못 들어 봤습니다.

**○김종률 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못 들어 봤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정운영의 철학 그 고뇌의 산물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 제123조 잘 모르시지요?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함께 유일하게 우리 헌법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따라서 세종시 사업은 비록 참여정부 핵심 국정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헌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세종시가 이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철학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경제학자의 눈으로만 보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도 다른 누구보다도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간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률 위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학에서 총장할 때 ……

○김종률 위원 그 말씀을 어제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역균형선발제도를……

○김종률 위원 그것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자,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률 위원 들어 보세요. 후보자께서

는 현재 수도권이 수도권 집중과밀화로 인해서 교통혼잡비용 먼지오염환경비용 주택보급비용, 30조가 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세종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의 이런 외부비용,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시키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비효율 발언은 말하자면 이런 수도권의 외부비용까지를 넘는 그런 비효율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도 또 혁신도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혁신도시도 잘 만들어야 되고 세종시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나라의 발전과 그 지역, 이 경우에는 세종시의 발전을 동시에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원론적이고 고답적인 얘기를 할 수준은 지났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시가 축소 변질이 되면 당연히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도 잘못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상호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세종시 효율성 발언이 행정부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그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역대 우리 정부가 행정기관 분산정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왜 정부부처를 이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행정기관이 모여 있어야 된다면 모든 행정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원안이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인데 추가로 이전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모두 다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률 위원 모두 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도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종시를 신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위험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그것은 행정수도지요.

행복도시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당시에는 군대라도 동원해서 반대 입장, 막겠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분조차도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한 집행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이렇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또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대통령도 누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총리내정자께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도 없다면서 이렇게 수정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앞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총리 입장에서 사과하고 또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

가……

○김종률 위원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총리가 되면 변경고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종률 위원 조금 이따가 그걸 묻겠습니다마는,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요. 어제 쏟아 놓은 말이 우리 후보자께서 주위 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 있고, 너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청와대하고 사전 교감 없이 정말 그런 소신만 갖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참 총리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바른말을 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 심각성조차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 후보자께서 세종시 수정발언 당연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와대와 교감을 직간접적으로 거쳐서 했다면 그건 참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종률 위원 헌법과…… 좋습니다. 자꾸 구구하게 계속 교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세종시 수정발언 정말 헌법과 법

을 짓밟는 쿠데타적인 발상인데, 사실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해 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세종시 원안 추진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이용해서 이런 세종시 원안 추진 변경을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부 책임자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오전에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률 위원 법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 책임자가 이렇게 헌법, 법 훼손하면서 무시하겠다는 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문회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 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어제 계속됐던 병역과 관련한 공방이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같은 말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제 계속된 일이었지만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에 입학허가서를 신청할 때 병역란에 ‘나는 면제다’라고 썼다는 표현을 가지고 일부 위원께서 그것은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는데 면제라고 허위 기재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70년대 월남전 때문에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로 병역을 운영하고 있던 미국의 사정 때문에 당시로는 미국 학생들, 미국 본토의 신입생들에게 ‘병역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말로 이해, 물어보는 말이었고 해서 본인은 미국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I’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military service’라는 것은 한국 군대, ‘Korea army’가 아니라 ‘US army’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물어보는 말, 지금도 유학 입학 허가신청서에 이런 물어보는 말이 있는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징병제가 없어지고 모병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혜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있었던 특수한 사항이고 당연히 그것은 미국군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한국군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어제 계속 그런 얘기가 제기가 됐는데도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마이애미대학 측에다가 문의를 했고 마이애미대학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은 마이애미대학의 브루스 코크란이라는 대학원장께서 보내오신 것인데 총장의 지시로 이 이메일을 보낸다고 되어 있고 원문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해 드리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병역사항에 대한, 한국에서의 병역사항은 입학 허가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번역한 것이니까 원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I can assure you that his status with respect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had no bearing whatsoever on his admission to Miami',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러면 그 military service status라는 게 뭔지를 의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것은 미국군대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his own country, 그러니까 정 후보의 모국인 한국군대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It was in fact in reference to US military service rather than service in his own country',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이애미대학의 총장의 지시로 대학원장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군대 병역에 관한 것이 한국군대가 면제됐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미국군대의 병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논란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한국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미국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I'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는 이 얘기가 재차 불필요하게 공회전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의혹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대학에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허위로 병역사항을 기재한 이유는 여권과 비자,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기 위한 여권과 비자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당시에 미국에 가기 위한,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기 위한 여권과 비자의 발급요건이 무엇이었는지 후보자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과는 달라서 1970년대 초반 해도 유학을 가려면 당시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유학시험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고 나서 미국 대학에 입학지원서를 보내지요. 그래서 거기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두 서류를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유학허가서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허가제도가 아니었습니까? 외환 부족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병무청하고, 병무청에 조회를 해서 병역에 하자가 없으면 해외 출국을 허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저희들이 알아본 바와 일치합니다. 당시 유학생 비자와 여권을 발급하는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은. 교과부가 주관하는 유학시험을 통과해서 유학시험 합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 두 번째 서류는 상관 없는데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병역을 기피해서 귀국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벌일 때 그 책임을 질 보증인을 세우면 병무청이 허가를 해 주고 유학에 관한 여권과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병역의무를 후보자께서 불이행하시고 귀국을 안 하는 등의 일을 하실 때 혹시 책임질 보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중에 총리를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헌재 선생님한테 부탁을 올리고 선생님이 흔쾌히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혜훈 위원 저희가 한국 당국에 확인한 걸로도 유학생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는데 마이애미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는 전혀 필요치도 않고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증인 관계가 나중에 나오는 문제와도 연결이 돼서 좀더 자세히 여쭙 보겠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대학을 졸업을 하고 컬럼비아대학의 조교수로 재직을 했던 것도 이곳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병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조교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만약에 컬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면 유학이 돼서 그 병역 연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병역당국이 어떤 조치를 그때 취하고 그러는 것이 관례 아니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주로 취했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병역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운이 좋아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76년 7월부터 강의는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면에서는 운이 안 좋아서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공부는 다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77년 말까지 학생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학생 신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을 해야 됐었고 귀국해서 병역을 의무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리고 돌아와서 병역을 마쳐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병역당국이 입영대상자의 상황, 유학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와는 상관없이 유학생 집으로 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통지서가 아무데도 안 왔습니다.

○이혜훈 위원 통지서도 발급이 안 됐고, 통지서를 발급을 하고도 본인이 만약에 귀국을 안 하면 만약에 입영 대상인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과태료를 물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헌재 총리께서 그런 과태료를 물거나 한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습니다. 과태료를 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명예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당시는 제가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마는 병역 업무는 미필자가 공무원에서 쫓겨날 정도로 중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의 병무 허가가 아주 어려웠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

○이혜훈 위원 마지막 마무리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시간을 오전에는 더 드

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혜훈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발언하신 분은 주셨잖아요.

○위원장 정의화 저희들이 방송 시간이…… 기왕이면 국민들을 위해서 오전에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한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그 부분 30초 나중에 오 후에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광주 남구 출신의 강운태 위원입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Y회사의 회장으로 부터 1000만 원 용돈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발언 후회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강운태 위원 지난 4월 30일 날 Y회사 창업 50주년 축하연에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때 하얏트호텔에서 있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때 헤드테이블에 누구누구 앉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강운태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헤드테이블에 계셨고 김종인 전 의원 그리고 지금 Y회사의 회장 그리고 D그룹의 회장 이런 분들이 앉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D그룹의 회장님은 기억 안 납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Y회사 회장께서 주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말을 했는데 그 인사말을 한 내용을 보면 ‘내가 앞장서서 저기에 계시는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총장이 되도록 하는 데 적극 뛰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기록이 돼 있고 물론 증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어렴풋하나마 기억을 합니다. 가볍게 이해를 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런데 어제 후보자께서 다른 것은 부인하시면서 ‘Y회사로부터 평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글쎄,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취소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해할 때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도록 하는데 Y회사 회장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할 정도가 됐다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서울대 총장 되시는데 도움을 받은 이런 것이 연상이 돼서 순간적으로 ‘내가 Y회사로부터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모임에서 Y회사의 회장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 저와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운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장 되시는 데 도움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안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부 회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알던 D그룹에 계신 분한테 가서 ‘정운찬하고 나하고 친하니 정운찬 회장 되는데 한 표 좀 찍어 줘’ 이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런데 D그룹의 회장은 서울대학교의 평교수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병원장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투표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1201명인데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가 가장 많아요. 300명이나 돼요. 말하자면 병원장이 가장 절친한 Y회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 특정인을 지지하고 또는 싫어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후보자께서 서울대 총장에 안 나오셨다면 모르지만 서울대 총장 후보에 나오셨는데 선거운동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대 병원장한테 부탁을 하는 것은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어제부터 한사코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이 영 어색하다는 말이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그분한테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안 받았다는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강운태 위원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단지 그분이, 우선 Y회사 회장이 D그룹의……

○강운태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분들이,

교수이던 D그룹에 계신 분이 저한테 흔쾌히 한 표를 던져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좋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정책 검증은 좀 해 볼까요?

감세에 대해서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말하자면 감세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다’ 기본적으로 감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작년 말에 세법을 개정해서 96조, 이 정부가 자랑하는 것처럼 사상 최대의 감세를 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동안에 96조에 해당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감세를 작년 말에 세법을 고쳐서 확정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제 잠깐 비슷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강운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국가부채가 지금 한 366조가 됩니다. 이 국가부채는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 누적된 국가부채가 366조인데 현 정부 출범 이래 무려 5분지 1에 해당하는 67조의 부채를 늘려왔다는 말이지요, 현 정부가 2년 동안에. 그런데 내년이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국가 전체의 부채가 한 400조가 되고 그리고 현 정부가 그중에 100조를, 국민의 빚을 늘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는 100조라는 돈을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으로는 100조라는 빚을 얻고 그래 가지고 한마디로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지금 밀어붙이는 형국이 됐다는 말이지요. 재정운영, 올바르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좀더 건전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만약 총리가 되시면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년에 추가로 감세하도록 되어 있는 몫이 무려 13조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받던 감세해 줬던 것을 다시 증세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기왕 감세해 줬던 것에 추가로 더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무려 13조 2000억인데 그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이 되는 최고 부자들한테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겠다, 그리고 대기업이 내는 최고세율 법인세 22%를 20%로 낮추겠다, 그 2개 합해서 5조가 됩니다, 5조.

이 5조를 내년부터 또 깎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우리가 작년에 경제위기에 당해……

○강운태 위원 그래서 결론만, 결론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것을……

○강운태 위원 들어가면 고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환원, 환원하는 것으로 제

가 이해하겠습니다.

5조라면…… 우리 대학생들 일자리 없잖아요, 지금. 연봉 2000만 원짜리면 반듯합니다. 연봉 2000만 원짜리 일자리가 무려 25만 개가 생깁니다, 이 5조면. 대한민국 최고계층 1%도 안 되는 부자들, 대한민국 대기업에게 깎아 주겠다는 5조면 말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 청소년들 25만 개 일자리라니까요.

그걸 내년에 또 해준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후보자께서 같이 공감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것이 금방 일자리로 연결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운태 위원 아니 이를테면 계산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만 여쭙 보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마저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하세요.

내년의 재정 규모를, 금년도 재정 규모가 건국 이래 최대였던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내년도 재정 규모도 더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닌가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우선.

○강운태 위원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감세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감세의 유예에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방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제 열렸던 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발언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국민 앞에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민주당의 성명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도 넘은 정운찬 방탄청문회’라는 제목으로, 부대변인 논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유학을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받은 것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분풀이”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분풀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혹시나 해서 회의록을 네 번이나 뒤져 봤습니다마는,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혹시 정운찬 후보께서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발언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분단국가에서 이왕이면 병역을 마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에 볼 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케이스가 많은데 마치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라는 비난을 받으니 좀

갑갑하시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본인도 생각 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생각납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서 제가 이런 케이스도 들었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형생활을 해서 면제받은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몸이 많이 아파 가지고 또 면제받은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 대기를 하다가 면제받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 군대가기 싫어서 민주화했느냐?”라고 말하는 거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 비난이나 유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전혀 하지도 않은 ‘분풀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 용어가 그대로 나왔고 또 요새 인터넷의 네티즌 여러분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논평을 마치도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대로 옮겨 쓴 조간신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당 차원에서 본인은 윤리위 제소를 건의할 것이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종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후보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 후보자께서 어제 세종시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약속을 반드시 또

지키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일단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히 지키되 국가의 국무를 맡게 될 총리로서, 그러나 또 충청 출신으로서 자족기능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은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자족기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할 문제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압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나 자족기능의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이 충청도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또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정 후보자께서는 이 세종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 발전에 표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 발전에도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예, 바로 그렇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도 막고 또 충청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용역보고서를 잠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세종시로 내려갈 관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청사가 이전이 되더라도 본인이 거주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내지는 ‘혼자가겠다’ 내지는 ‘가족 일부만 가겠다’라고 대답한 공무원이 70%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어렵פות이 기억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 또 전용 열차를 운영하고 가족 간의 격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본인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억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어제 차명진 위원이 ‘길거리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기억합니다.

○鄭玉任 委員 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학 정원 할당제 그리고 특수목적고 설립, 우수 교사 유치를 추진하며 34만 평,

18홀 규모의 공무원 전용 골프장까지 만들고 아파트를 특별로 공급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고쳐야 된다'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가 슬그머니 들어간 바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처음 듣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한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세종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며 그다음에 계류 중인 세종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통과하겠다는 것이 원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드리면서, 경제학자로서 외국여행 많이 다니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많이 다녔습니다.

○鄭玉任 委員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수도를 이전한다든지 내지는 수도를 분할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어제 보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다른 예를 또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리우데자네이루하고 상파울루, 브라질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호주도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브라질리아 혹시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못 가 봤습니다.

○鄭玉任 委員 브라질리아도 바로 수도를 이전해서…… 지금 많이 예를 드신 사례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 브라질리아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기억으로는 저 학생 때인 60년대인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40년 됐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鄭玉任 委員 40년 전에 브라질리아 만들면서 애초에 브라질 정부가 세웠던 인구, 이전의 목표 수가 바로 지금 세종시와 똑같은 50만이었습니. 그것 잘 모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몰랐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혹시 브라질리아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鄭玉任 委員 20만입니다. 40년 동안 애를 쓰고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 모양의 도시를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지금 브라질리아 인구가 20만 정도입니다. 바로 총리께서 지적하신 그 자족기능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일은 국회가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세종시의 장래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제가 임명된다면 총리로서 '자족적 도시로 만듭시다'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넣으려고 광범위한 노력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돈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입장에서 봐 가지고서는 고시를 한다더니 왜 이렇게 고시를 안 하

나,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변경 고시를, 정말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후보자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하신 것이 있어서 그 발언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률 위원님께서 어제 장남 분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장남께서 상실했다는 의혹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 자료를 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임시회의록을 확인을 해 봤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강한 부정의 뜻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볼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아드님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적이 전혀 없고 매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리고 진짜 의혹에 지나지 않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김종률 위원님이 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뭐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병역을 2001년에 마치셨는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오늘 보고자료를

주셨습니다. 국적법에 따르세요.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제를 총리 후보로 내정되어서 장남과 국적 문제를 상의도 하였고 그리고 9월 16일에 미국 국적 포기서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도 하였고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 국적 상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한국 국적 회복을 아직 신청 못 하였고, 현재는 미국 국적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로 지금 장남께서 미국 국적이시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오늘 내셨는데 어제는 왜 “저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의혹인 것처럼 대답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요, 어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됐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미국 여권을 가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이정희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국적 상실의 경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국적자라는 것을 9월 16일 이전에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내정되고 장남 분과 상의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미국 국적자라는 것

을 알고 어제 청문회에 나오신 거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어제는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냐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쎄, 특수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이정희 위원 경위는 알고 있고요, 서면으로 주셨으니까. 어제 왜 이렇게 미국 국적이 아닌 것처럼, 한국 국적자임이 분명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느냐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냐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미국 국적 포기 신청을 벌써 냈습니다.

○이정희 위원 포기 신청은 냈습니다만 아직 국적 상실 절차가 미국에서 완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답변서에 3~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완전히 저쪽에서 도장 찍는 절차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정희 위원 아니, 국적이라는 게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이것 공법관계인데요, 절차가 완료 안 되면 아직 미국 국적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면 제가……

○이정희 위원 어제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저희 특수한 경우로, 특수한 경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총리께서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실 의무와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정희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저희 특수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9월 21일 현재 장남께서 국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미국 국적이라고 오늘 답변을 하셨네요. 그런데 어제는 왜 미국 국적 전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는 말이지요.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안 됐으면 당연히 미국 국적자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적 포기신청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제 거짓말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 미국 국적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께서 설마 장남의 국적 문제를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하실 정도면 설마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순진했다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정희 위원님, 제가 거짓말하려면 오늘 그런 자료를 제출했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하루면 들통 날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어제.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미국 국적 아니네. 야당 위원이 이상한 얘기 하네.’ 이렇게 느끼셨겠지요, 보시는 분이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오늘 오전에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언제 그러면 정리해 주실 겁니까? 오늘이면 청문회가 끝이 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끝날 때까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정희 위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수준이 지난 20년, 30년 전으로 한꺼번에 되돌아갔다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87년 6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또 노동3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서 진전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갑자기 거꾸로 되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직접 본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권의 문제보다도 아주 평범한 인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농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진료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 온종일을, 십여 일을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쭙 봤습니다.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부러지고 상처 나고 그리고 성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대답은 농성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께도 요청을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고 지체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시 총리셨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본 인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너질까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당시 경찰에 대해서, 의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경찰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사측이 막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태는 종료가 됐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경찰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무너진 기본권을 총리후보자께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상식과 인권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경찰이 위반했습니다, 사 측이 위반했고.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역시 위반했습니다.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다 잠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좀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 경찰을 지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총리가 되면 실상을 파악해서 바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 신상,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위해 모든 것에 우선권을 주셔야 돼요.

○**위원장 정의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내로 제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저는 제 발언 시간을 나중에 빼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 요구를 위한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1분 하십시오. 나중에 발언……

○**백원우 위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마이크 주십시오.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증인으로 채택된 김동녕 yes24 대표이사, 정운찬 후보자의 대학 1년, 과 1년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한 14일 날, 당일 날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망으로 간주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 이 김동녕 대표이사의 출국기록을 바로 좀 가져다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저희가 14일 날 증인을 채택하는 시점에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반드시 고발조치를 취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 발언 시간 1분 이따 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후보자께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직권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여전히 학자적인, 양심적인 터를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답변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자녀 국적 문제에 관해서 특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유학 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국에서 살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이름은 ‘유택정’이었습니다. 미국 이름을 ‘제프리’라고도 지었지만 ‘제프리 유택정’이라고 지어 줍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또 반포에 살면서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준택’이라고 했습니다. 정유택의 6촌, 다시 말해서 제 사촌형의 아들이 유택이가 있다고 이름을 좀 고쳐 달라고 해서 ‘그러면 정준택으로 합시다’ 그래서 정준택이 한국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포에다가는 반포 출신이라고 해 갖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군대를 했습니다, 그냥.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마친 후 언어연수도 한번 안 했으니 인턴이나 한번 학생인턴으로 가자 해서 인턴으로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는데, 저희 애도 저하고 비슷하게 그냥 모르고 저대로 쓰는 스타일입니다.

출생지가 어디냐고 쓰는 걸 갖다가 ‘뉴욕’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뉴욕 출생이면 미국 시민인데 미국 시민한테 무슨 비자를 주느냐고 그래서 비

자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부리나케 출생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출생증명서를 받아다가 미국 시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미국 갔다 와 가지고 그냥 미국 시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한국인 정준택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 제프리 유택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저 보고 미국 한 번 갔다 왔으니 이제 됐으니 ‘미국 국적 포기합시다’ 그런 제의를 저한테 해 왔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너 그다음 번에 미국 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한 번 비자를 거부 받으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다시 받기 힘들다던데. 그리고 또 혹시 유학을 가게 되면 학비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다시 생각해 보지’ 이러다가 그냥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국 이름의 미국인, 한국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 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국적 포기합시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제 아들은 군대 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격려해 주고 고마워하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국적 상태가 어떻든지 군대를 했고 또 미국 국적, 한국 국적 상태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한국 국적도 갖고 미국 국적도 갖는데 제 아이는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미국 국적, 한국 국적 갖고 있었습니



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의문을 제기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병역의무는 필했고 군대 갔다 왔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물론 필했습니다.

○정희수 위원 또 모든 유학생들이 겪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생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8세인가 20세쯤 되면 선택 여부를 정해야 된다 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혼동이 일어났을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 미 국적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리고 한국 국적을, 현재로서는 제가 역시 법률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한국 국적의 소멸……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군대를 하고 나오면 2년 내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군대 하고 2년 후까지도 자기가 미국 국적을 이미 포기한 것으로 착각하고 소멸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약간 혼동이 있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본인의 뜻이 아니라 국적법에 따라서 그냥 한국 국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희수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혼동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갈등이 상당히…… 어

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 사회통합이 상당히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갈등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성장에도……

(「신상발언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내 시간 좀 빼 주세요. 내가 시끄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시간 되돌려 줘요. 30초.

○위원장 정의화 정희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흔히들 향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폐법이 있고 폐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희수 위원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얼마만큼 잘 작동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불법의 경우에도 정서로, 때로 이렇게 해결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의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래서 모 연구기관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갈등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적어도 GDP의 1%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GDP 1% 올라가게 된다면 연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같은 경제학자시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청년실업이다,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법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년 6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분들이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혼자만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리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국정을 다시 한번 잘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셔야 돼요.

○위원장 정의화 예, 그것은 압니다만, 지금 김종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12시 전에 제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위원입니다.

매우 특별한 후보자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처벌을 받거나 혹은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을 후보자는 특수한 사정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스폰서 총장 아니었느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스폰서’자 빼 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거부한 yes24 대표 김동녕 씨 오늘 안 나옵니다.

꽤 오래되신 사이지요, yes24 대표이사 하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최재성 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제출한 공식 자료에는 야구 관람, 야구 관련 인터뷰, 사인회, 시상식 등 총 여섯 차례의 활동 기록만 있고, 958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실상의 도움을 준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한 말씀……

○최재성 위원 그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학 교수가……

○최재성 위원 자료를……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위원님 제 사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위원장 정의화 백원우 위원님, 그건 위

원장이……

○**최재성 위원** 위원장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서 저한테 대답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예, 질문과 답변만……

○**최재성 위원** 아니, 이것은 오후 질의시간도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들은 국적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정 후보자님께서 ‘이것 비자 한번 거부당하면 다시 받기 어렵다. 또 나중에 혹시 유학 갈 때 시민권이 없으면 학비를 오히려 더 부담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좀 아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사실입니다.

○**최재성 위원**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그런 말 해도 적어도 서울대 총장 지냈고 또 제가 보기에 자서전이나 여러 모로 봤을 때, 주변 분들과의 어떤 대화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총장을 끝으로 모든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고 더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리라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공인인 정운찬 총장께서 오히려 아들에게, 국적을, 시민권을 포기하자는 아들에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은 저는 심각한 흠결이라고 보고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76년 10월 달에 서울대 교수로 이미 그때는 결정이 난 거지요, 76년 10월 달 미국에 계실 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76년 10월에 선 받은 것입니다.

○**최재성 위원** 77년 1월에 고령으로 면제

가 되지요, 병역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런데 왜, 78년 3월 달에 장남을 출산하는데 10개월 동안 귀국을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병역이 면제됐을 때 장남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장남이 잉태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77년 1월 달 병역 면제되었을 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희 아이는 78년 3월생입니다.

○**최재성 위원** 물론이지요. 77년 1월하고 10개월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10개월 차이가 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4개월입니다.

○**최재성 위원** 아, 14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늦춘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아들딸도 마음대로 낳습니까?

○**최재성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78년 3월에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옵니다. 이미 서울대 자리는 예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미국 대학의 계약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계약했으면 그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최재성 위원** 나중에 질문하겠다고 그러지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발언 후에 하겠습니다.

백성학 회장하고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20년 됐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업체도 여러 가지 하시고 연간 16억 달러 정도 매

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를 생산했던 주체라는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압니다.

○최재성 위원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경인방송 관련되어서 세간의 주목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모자 제조업자 아닙니까?

○최재성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내가 16억 달러 얘기했을 때 모자 제조니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말입니다, 경인방송 관련되어서 뉴스 됐던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세히는 못 읽었습니다마는, 대강만 압니다.

○최재성 위원 이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죄로 고발이 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내 정세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을 했다는 신모 교수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국회에서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미국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정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분한테 어떻게 작년에 1000만 원을 받았지요? 20년 동안 가까운 사이로 지내 왔으면 자세히는 몰라도 이분이 물의를 일으킨 적이 나 혹은 또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나 또 신문에 보도되는 일은 적어도 지인 사이라면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몰랐습니까? 이런 뉴스도 못 봤

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그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심 선고 나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심 후에 또 2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재성 위원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이분이 그런 논란에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무죄 나오리라고 확신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는 후보자가 자기 관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분한테 1000만 원을 받으니까,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요?

그리고 받은 돈이 이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뭐 해외여행을 같이 가거나 이런 일상적인 사교도 안 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 정도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후보자께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조금 이따 대답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하여튼 그것도 특수한 관  
계로 설명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연구용역 수주 관련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시장의 전망과 자산관리공사의  
발전방향’, 또 산자부에서 2002년도에 ‘핵변  
환 발전로 개발’, 이래 가지고 총 9건 43억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저희  
한테 자료를 줬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 서류를  
봤습니다만 맨 앞의 거, 맨 앞의 거는 제  
가……

○**최재성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

이게 맞는 자료예요, 아니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틀리는 자료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틀림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몇 번 몇 번이 틀립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왜 틀린 자료를 줬  
니까?

그리고 어저께 두 번이나 이 자료 달라  
고 또 요청을 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서울대  
학교에서 나온 것을 제가 어떤 것은 빼  
고……

○**최재성 위원** 제가 어제 얘기했지요?  
‘답변서와 제출 자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  
가 책임지는 자료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  
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서울대학  
교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가 제 입맛에 따  
라서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  
진입니다.

후보자님,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얼마 전까지 현재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과 접촉하  
면서 그쪽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요청을 받  
고, 그리고 본인도 그것과 관련해서 의향  
을 비쳤다 이런 세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결  
말이 났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번 기회를 이  
용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에서 저한테 대통령 나오라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확실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받은 일이 없는  
데 어떡합니까?

○**차명진 위원** 야구 좋아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좋아합니다.

○**차명진 위원** 야구선수가 팀을 옮길 때  
는 몸값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그럴 소지  
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예컨대 야  
당 장관하다 여당 정치인이 되거나 야당  
정치인 하다가 여당 장관 하는 그런 경우  
는 우리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 점을 염  
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는  
교수 때 건설적 비판을 하거나 또는 앞으  
로 기회가 주어지면 총리를 하거나 제 목  
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그리고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사회의, 국가의 발전입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과 다른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차명진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 직을 최대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이 자리를 발판 삼아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생기면 당적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대선후보가 된대거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대선후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은사이신 조순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딴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저한테 좀 과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만—중국의 원자바오처럼 해라’ 이런 말씀을 어느 일간신문에서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이어서 여쭙 보겠습니다.

‘세종도시는 하겠다. 그러나 세종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어제 청문회 과정에 잠깐 산업단지라든가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디어 수준에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저의 특수

성, 저의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박상돈 위원께서 자꾸 그림을 한번 보여 주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총리도 되기 전에 그 그림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를 만들고 또 자족적 도시로 만들고 하는 데 제가 온 힘을 바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차명진 위원** 좋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셨다니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자족성 강화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 중심 기능으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할 경우에 가장 기초적인 입자가속기를 설치하려면 최소 여의도 땅만 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100만 평.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을 유치하겠다 하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면 파주 LG필립스가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계획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는 점을 이미 숙지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도시가 아마 2280만 평인가요?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된다면 제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안을 놓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어제도 분명히 제 의견에 동의하셨지만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께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종도시의 자족성 강화방안을 고민하시면서 어제도 분명히 저와 확인하셨듯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 낭비 문제, 그리고 안보 공백 가능성 문제, 통일 이후의 천도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도 다 함께 고려하셔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차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정말 잘 답변하실 수 있는 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지요? 그런데 어제오늘 교육 관련 질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과거에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그렇게 과찬해 주시면……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 지금 교육의 핵심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대치동에서 이무기 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원가가 몰려 있는 대치동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속진교육을 받아서 문고답하기식 천편일률식 대학입시 교육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차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별로 창조성

이 없으면서 우수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 가면 오히려 좀 열등한 측이 됩니다.

저는 개인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지역할당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가지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게 다 편법이다, 저는 소위 말하면 고교평준화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본고사를 치르도록 이렇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자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한국의 교육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방형 인간보다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학 입시에서도 모방형 학생보다는 창조형 학생을 입학시켜야 하고 그러자면 대학 입시에서 그걸 보여야 되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걸 바라보고 어려서부터 클래스도 의논하는 것, 세미나식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이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병역을 필하지 않고 해외유학을 나가 있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인터넷 제보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친이 먼저 돌아가셔서 독자가 되셨고, 이것은 군 면제의 사유는 아닙니다. 연기의 사유는 맞습니다. 연기를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병역법에 이 연기 사유는 23세까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25세가 돼서 유학길에 오르십니다. 이 과정에 불법은 없으셨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병역 연기는 부선망 독자로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선망 독자로 병역이 연기되신 건 아닙니다. 그건 23세까지고요. 이후의 병역 연기는 유학으로 인한 병역 연기가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불법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께서 만 29세가 넘은 76년 7월부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78년도에 논문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셨다고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비자를 바꾸셨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학생에서 유학생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무청 유학생 관리지침에 의해서도 영리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시고, 그러면 교육부 규정 병무청 규정 등에 의하면 즉시 귀국하셔서 병역을 마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 합당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셨던, 그리고 유학 가는데 ‘야, 유학 마치면 빨리 돌아와서 병역 마쳐라’라고 후보자를

믿고 보증을 서 주셨던 분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정운찬 후보자를 믿고 나이가 차기 전에 유학을 마치면 돌아와서 병역을 필할 것을 믿고 보증을 서 주셨던 분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적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특히 그 나이였다라면 당연히 이것을 몰랐다, 소집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몰랐다, 그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원우 위원 아닙니다. 이걸 제 입장만 정리를 하고요, 질문은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나이가 한계인지 몰랐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시고 가르치다 보면,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고 또 대한민국의 총리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분이 총리가 되신다면 저는 이런 말이 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병역비리가 있었을 때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유행어가 돌 것 같습니다. ‘신의 아들’ ‘장군의 사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가 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35세, 지금은 후보자와 같은 그런 병역면제 사례가 많아서 35



세까지 연령 기준을 높여 놔습니다. 35세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박사학위를 연기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면제받아도 고위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불행한, 좋지 않은 교훈과 역사를 만들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더 이상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후보자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러면 병역 문제를 그만 말씀하실 거면 잠깐 한 말씀……

○백원우 위원 그것은 지금 방송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님께서 종합적으로 몇 번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해훈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어제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하급공직자가 후보자처럼 아주 가까운 지인, 20년 동안 사귀었던 형제 같은 지인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 제가 언론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총리실 암행 감찰에 걸리는, 그래서 직위가 해제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떡값 수수 내용들을 봤습니다.

건교부 모 팀장은 직무 연관성 없는 친구로부터 50만 원을 받아서 총리실 암행감찰에 걸렸습니다. 대전시청 공무원은 30만 원을 받고 걸렸습니다. 500만 원의, 10만 원짜리 상품권 14장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최근에 경남지방경찰청장과 몇몇 공직자가 기업인과 접대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총리가 어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다가올 추석에 공직

자들의 떡값 감찰, 암행 감찰로 인해 많은 결재를 해야 되는 서류가 올라올 텐데 결재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여쭙 봤던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대답을 드리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용어 사용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하고 또 대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 분하고는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저하고 어떤 회사의 회장하고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런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30만 원 떡값 수수했고 그 사람들의 소명서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20년 지기이다,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고향친구다, 아무 직무 연관성이 없다 이런 해명서가 첨부돼서 결재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총리께서 최종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제가 총리가 된 후 결정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신동아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총리가 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의문들을 계속 총리께서 안고 가시는 것은 총리의 직을 수행하시는 데도 대단히 큰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D그룹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다 정운찬 총리와 연결

시켜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니요. 앞으로 총리가 되시고 나서 이 D그룹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 이걸 다 정운찬 총리와 관계됐다고 하는 세간의 소문에 시달리실 거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위원님!

○백원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모 여교수였죠. 문제가 됐던 ‘모 여교수와 의 저녁식사 미스터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실렸습니다.

저는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을 총리가 안고 총리 직을 수행하시기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총리께서 도리어 여당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이 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을 빨리 찾아서 오후 늦게라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시게 해서 말끔하게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총리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의한다는 것이 아침에 지적하신 분들을 증인으로 모셔오자는 말씀입니까?

○백원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그분들의 사정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세상에 잘 알려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의 팬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덟 학기 동안 두산의 전신인 OB맥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돈은 OB맥주가

냈지만 사실은 그분이 서울상대 동창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됐고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그냥 저한테 대학 시절 장학금을 줬던 회사의 구단과 친밀감을 느껴서 오늘날까지 두산베어스의 팬이 돼 있지 두산하고 저하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투표한 사람이 1200명이고 의과대학……

○위원장 정의화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의과대학 300명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쳤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 당시 투표권자는 한 천오륙백 명 됐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유권자가…… 그다음에 투표한 사람이 12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의과대학 300명이 다 투표했다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두산그룹의 그 교수가 자기 표는 줬는지 또 주변의 어떤 표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저의 총장선거를 도와서 제가 총장이 됐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답변까지 합쳐서 7분 내인데 제가 한 1분 답변할 기회를 줍니다.

다음은 권경석 한나라당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창원 갑 출신 권경석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중도실용론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중도실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전제 위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탈 이념적 또 실사구시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동의를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를 실용 정부라 그러합니다. 그런데 중도실용론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도실용정부라고도 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중도실용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점 국정과제 중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이 뭐냐, 녹색금융은 뭐고 녹색성장은 뭐고 녹색뉴딜은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은 하되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신문에 난 거라든지 관보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권경석 위원 깊이 파악해 보신 바는 없네요, 구체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깊은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경석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금년에 인제대학 가서 강의하신 적도 있고 금융연구원에서 강의하신 적 있는데 그 강연 내용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는 조금 차

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그 배경은 알려진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 이제 화석연료가 곧 고갈 상태에 있는데 이와 같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성, 이것은 이제 녹색성장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이 정책을 채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2012년도까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적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 안에 4대강 사업도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 안에 4대강 사업도 들어 있고 녹색 교통망, 녹색 정보 인프라, 그린 카, 청정 에너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 우리 후보자께서 인제대에서 발언한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뉴딜정책은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인 데 비해서 한국의 이른바 녹색성장, 녹색 뉴딜정책은 미래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YS정부 때도 100일 동안 과잉 투자해 가지고 IMF 경제위기를 불러 왔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마는.

○권경석 위원 오래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 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국민도 궁금할 거예요. 아까 중도실용정부라는 말씀을 드렸고 녹색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내용과 후보자가 강연한 내용이 이렇게 뚜렷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것들을 비판한 것은 단기적 안목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930년대의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정치와 경제 간의 권력 관계, 또 경제 내에서도 금융과 실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는 것이 위주였고 그것을 다 고친 다음에, 첫 100일 동안에 그것을 고친 후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 있으신 TVA 사업을 벌이든가 하는 것이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의 '새 경제'라든지 또는 이번 최근에 중도실용정책을 내걸기 이전의 이명박 정부도 장기적인 의미에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세력 관계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녹색성장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녹색성장한다고 해서 집도 그 방향으로 짓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 원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는 또 이미 많은 준비를……

○권경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많은 준비를 해 온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 옴으로 해서 국제수지 적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기초부터 쌓는 녹색성장, 또는 기초부터 쌓는 신성장 동력 마련 이런 것을……

○권경석 위원 원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10대 사업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4대강 살리기, 그린 교통망, 그린 에너지 개발 등등, 이런 구체적인 성장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장 정책 발표 내용과 후보자의 소신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정책 자체는 비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비판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총리로 된다면 전체 정책을 다 살펴서 좀 무리가 있는 것은 고치자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내부에서 제안할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정리를 하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녹색 뉴딜정책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졸속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졸속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좀 빨리 서두른다 하는……

○권경석 위원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빨리 해야 될 것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속적인 성

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 중에 특히 4대강 사업은 여기에 부합된다, 이런 견해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4대강 사업을 왜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큰 것은 50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산림 녹화를 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산하고 강하고 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된다, 우선 그 아이디어에 찬성하고……

○권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첫째가 재해 예방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압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 암묵적인 투자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이고 수량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수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 3대 목표가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사업의 결과 강까지도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강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자유선진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제 몸이 아닙니다. 대의정치 체제 하에서 국민의 대표이고 그러므로 이 순간 저는 국민의 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감정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제 처음 청문회에 임할 때에는 정운찬 내정자가 지난 9월 3일에 한 발언이 전적으로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준비 없이 나온 발언이려니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운찬 내정자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염원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적 소신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걱정하는 측면은 있다지만 정부의 일원이 되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후에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마는 내정자의 답변을 보면 지속적으로 모호한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고요.

사실상 국무총리로 할 수 없는 권한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하는 답변을 끝내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전화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난 어떤 분들은 ‘총리 지명자가 고향을 팔아서 총리직을 산 것 아니냐, 매향노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본인한테 한번 추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제든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삼국지에 나오는 조식의 시, 자두 연두라는 것 있잖아요?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때니 콩은 솥 안에서 우는구나. 본래 같은 뿌리에서 난 것인데 서로 지지는 것이 어찌 이다지도 급한가’ 하는 시를 자꾸 또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 내정자가 우리 충청도 출신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까지 듣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내정자께서도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세종시가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시면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자족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아주 모호하고 듣기에 따라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답변만 계속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정운찬 내정자 입을 통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 후 자족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 또 이미 이명박 정부의 속내가 세종시를 추진하기는 하되 행정기관은 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 내정자에게 가졌던 기대감이 배신감으로 와 닿고 저명한 경제학자라는 믿음이 일순간 불신으로 와 닿는 현실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제 말한 ‘세종시 건설이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듣는 사람을 농락하는 모순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율의 문제인가 가치의 문제인가거든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치라는 것은 철학이지만 효율이라는 것은 철학이 아니거든요. 자족 도시가 어떻게 철학입니까? 자족 도시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대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종시를 만드는데 그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족 도시라는 것은 결코 철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원대한 큰 철학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세종시와 혁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효율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지적인 효율인가 국토적인, 말하자면 국가 전체로서의 효율인가 이렇게 따져 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 행정 부처를 현 위치대로 그냥 그대로 놓고, 지금대로 놔두고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나 채우자. 말하자면 수도권에 어떤 위성 도시 하나 만들자. 이런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 보자. 그렇지 않으면 뭐 교육 기능이나 과학 기능 집어넣고 교육 과학 도시 정도 하나, 요즘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입막음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배신감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새 계획은 정부 부처 이동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

○박상돈 위원 결정이 안 됩니까? 법으로 9부 2처 2청이 옮겨 가게 되어 있는데 아니, 9부 2처 2 어느 부처인지 우리 내정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부처가 옮겨 가는 되는 건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총리실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총리실을 비롯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지경부라고 그러나요?

○박상돈 위원 지식경제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지식경제부 다음에 또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획재정부도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조차도 결정이 안 되어, 그림이 아직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정말로 고려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총리가 되어도 ……

○박상돈 위원 법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총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대통령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그 의사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이상한 말씀으로 변명을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총리내정자는 더욱더 힘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개인으로서 보기에 세종시는 정말로 자족적인 도시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균형이 보이는 도시,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산 말씀도 드렸고, 또 오죽하면 사실은 다른 지역 사람이……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9부 2처 2청이 원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합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나 과학 기능이나 기업 기능 이것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가 볼 때에 자족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자족 기능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총리가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을 독려해서 즉각적으로 여기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변경 고시 이것은 즉각 변경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 원안대로는 안 됩니다’ 원안대로 안 된다

면 법 위반 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원안대로 된다, 안 된다는 다 떠나서 지금 그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상돈 위원 그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림을 지금 그려낼……

○박상돈 위원 아니, 그림은 국회가 그려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림을 앞으로 그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꼭 할 거고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겁니다.

○박상돈 위원 자족기능을 보완한다는 건 좋으나 그림도 그려줬고 구체적으로 9부 2차 2청 옮겨 가도록끔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법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라는 얘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건 물적 자원이건 그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원만 무한하다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있으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걱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후보자께서는 그 부

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또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에 아마 공중파 방송의 중계는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국회방송은 계속해서 중계를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나라당의 나성린 위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예, 한나라당 나성린 위원입니다.

세종시를 지난 정부에서 참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시는 꼭 해야 된다면 4대강 개발은 안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두 가지를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이제 22.5조 원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들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세종시의 개발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인데 차라리 22.5조 원을 각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서 4조, 5조 원씩 나눠 주면 훨씬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도 지역은 온 국민들한테 지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와 반대로 4대강 개발은 어떠냐면 지금 15, 16조 원이 드는데 이것은 미래의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래의 수익이. 지역 개발에도, 주변지역 개발로도 수익이 발생하고 관광·문화 등등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매년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홍수 예방 또 수해복구비에 2조 4000억 원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 든다면 얼마 정도 되지요? 24조 원 이상이 들 거예요. 그게 다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두 가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한쪽은 수익이 안 발생하고 한쪽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세종시는 해야 된다면 4대강 개발은 하지 말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좀 주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주당 위원께서 감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놀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감세를 하자는 것은 부자를 감세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감세를 해 주고 대기업도 해 주고 고소득층도 해 주고 저소득층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감세가 2단계에 걸쳐서,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다 합의를 봤습니다, 2단계에 걸쳐서 감세를 하기로. 그래서 1단계는 올해 되고 2단계가 내년에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율 같은 건 말이에요.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2%포인트를 다 인하해 드렸어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내년에 해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가 신경을 쓴 겁니다.

신경을 쓴 건데,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만일 고소득층 세율 인하를 유예하고 또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유예하면 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는 데 그건 아닙니다. 3

조 7000억 원이 발생합니다. 3조 7000억 원이 발생하고 모든 감세를 유예하면 5조 원이 발생하지요. 3조 7000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고요.

현재 정부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7.7조 원이라는 새로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그것도 저소득층이나 중소 영세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소득층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로 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조세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자’ 이걸 우리 당도 그랬고 야당도 그랬고 모든 재정학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조세원칙에 맞게 지금 세율을 인하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 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자꾸 감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아시는 게 나중에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민 빈곤층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2기 내각이 되는 겁니다, 한승수 총리 내각이 1기 내각이고.

2기 내각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서민·빈곤층 대책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에 찬성하셔서 총리후보자로 수락하셨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서민·빈곤층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려서 또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다음에 서민·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빈곤 유지책이 되면 안 됩니다, 서민·빈곤층 대책은. 자칫 잘못하면 빈곤 유지책이 될 수 있어요. 빈곤 탈출책이 되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되겠지요. 제가 볼 때 이게 서민·빈곤층 대책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업을 얻어서 돈을 벌도록 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이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빨리 경제성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제 위기 후유증으로 서민·빈곤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 중도실용을 하게 된 것도 그동안에 정부, 국민 모두가 다 노력해서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는 극복했으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 특히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친서민 정책을 쓴 것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서민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어떤 대책을 취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성린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것을 공부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거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참여정부보다도 사회복지비를 절대액으로도 많이 지출했고 GDP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2008년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편성이 4.9조 원이었는데 그중의 반 이상이 다 저소득층, 농어촌, 서민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류과동 시 유가환급금, 유가보조금도 10조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9년, 올해 추경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추경 편성이 29조 원이 넘는데 세출만 따지면 17.7조 원입니다. 그중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4.2조 원을 쓰고 고용 유지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3.5조 원을 쓰고 중소 자영업자들 4.5조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가 서민, 빈곤층을 위해서 그동안 안 해 온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서민·빈곤층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도 많이 정책을 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총리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릅니다. 아마 아까 후보 자께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 드릴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여정부 5년 동안은 지니계수라고 해서……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전국 가구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입니다. 소득 불평등도가 계속 악화되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장 소득—정부 정책이 반영되기 전 시장 소득—은 조금 악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 오히려 지니계수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것은 상대적 빈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니계수는 딱히 어떤 정부라기보다 1997년에 외환 위기를 맞은 이후에 계속해서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나성린 위원 악화되었다 좀 개선되었다 다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요. 이 정부가 그렇게 빈곤·서민층들하고…… 부자만을 위한 정부

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부자만을 위한 대책을 쓰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도 그렇고 말입니다. 부자를 위해서 어떤 감세나 규제 완화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를 살려서 궁극적으로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것이지요. 이 진심을 좀 총리후보자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교육시키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방송 계속 생중계 중입니다.

공직후보자께서 아까 병역 문제와 yes24 관련해서 무언가 답변을 더 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지금 준비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F비자는 유학비자고 H비자는 취업비자입니다. F비자에서 H비자로 바꾸었으면 빨리 귀국해야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학위를 끝내기 전에라도 취업비자로 바꿔 줍니다, 고용자가.

그런데 저는 실제로 박사학위가 77년 말까지 끝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저쪽에서 그냥 취직을 시켜 주고 또 비자를 바꿔 주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정희 위원님한테 오늘도 좀 실수

를 한 것 같습니다. 제 병역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에서 저희 아들 국적 문제까지 거론이 되자 제가 그냥 제 아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병역을 필하지 않아도 되는데 병역을 필했다 하는 생각에서 좀 너무 빠른 또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상입니까?

○**김종률 위원** 저기요!

○**위원장 정의화** 일단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김종률 위원님 뭐 발언하시려고요? 무슨 말씀?

○**김종률 위원**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하신 사과는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그것은 오후 2시에 따로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따로 오후에 신상……

○**위원장 정의화** 1분 내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자료 요구입니다.

후보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주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히 1971년도 유학 이전의 주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저 의사진행……

○**위원장 정의화** 잠시……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최재성 위원** 자료 요청하고……

○**위원장 정의화** 최재성 위원님!

○**최재성 위원** 우선 어제 자료 때문에 그렇게 실랑이를 했는데 또……

yes24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이 아니고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에 의한 신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이거 달라는 건데 가입 사실 증명원으로 지금 알아

보고 있다고 저한테 서류상 답변이 왔는데 제가 무슨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속기도 다 되어 있는데……

몇 번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에 의한 신고서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해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얻어 옵니까?

○**최재성 위원** yes24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아니……

○**위원장 정의화**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어제 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후보자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yes24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인이 이 테이블에, 오늘 이 청문회 시작되는 이 테이블에 yes24 김 대표는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출석으로 뒤늦게 바뀌었는데 사업차 지금 베트남 출장을 갔다고 해서 지금 못 돌아온다고 하고 출석 사유를 그렇게 제출했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베트남 가는 사람이 하루 전날 비행기 예약해서 그 이튿날 외국으로 갑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또 한 분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그 부분은 공직후보자에게서 답변하실 성질은 못 되고요.

○**최재성 위원** 그분은……

○**위원장 정의화** 이 부분은 최재성 위원님……

○**최재성 위원** 증인을 신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김동녕 증인은 후보자하고 관계가 있고 사실상의 오너고요. 또 한 분의 증인은 나중에 영입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인에게 확인할 것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2명을 부른 것이지……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둘 중에 1명만 오면 되니까 1명은 외국가도 좋다는 뜻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제가……

○최재성 위원 왜 이 일에 후보자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여쭙어 본 겁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백원우 민주당 측 간사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됐으니까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을 위시해서 신동아에 난 분들은 총리후보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총리후보자가 의혹을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고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백 회장도 또 외국으로 가 버렸어요. 그러면 뭘니까, 이게?

○위원장 정의화 자, 최재성 위원님, 그 부분은……

○최재성 위원 전부 지금 도망자가 되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인데,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또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해서 총리 후보로서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격한지를 검증해야 될 이 청문회장이 도망자들판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께서 분명히 합의를 하시고 청문회를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없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해서라도 해야지 도망간 것이 역력하게 확인되는데 여기서 청문회를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의화 자, 최재성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밝히시면 되고요. 방금 그 말씀은 위원장을 보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증인 및……

○차명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가,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분명히 인격체인데 증인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에 상당히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은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용어를……

○최재성 위원 위원장님, 저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의화 아니, 최재성 위원님, 지금 최재성 위원님께서 ‘도망’이라고 확인하지 않고 말씀한 데에 대해서는 차명진 위

원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 중에 간사와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의화** 아직 공직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먼저, 후보자 없어도 가능한 거니까.

**○위원장 정의화** 지금 통로가 막혀 가지고 아마 피해서 오시는 모양이에요.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잠깐만. 개회부터 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문회의 전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청문회 일정의 진행에 관해서 간사님들과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할 때에 총리 후보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자를 배석시키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오후에는 9분씩 질의를 한 다음에 10분간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의결 및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출석을 요구한 분은 증인 4명, 참고인 9명으로 총 13명입니다만, 오늘 김기목 참고인께서 건강상 못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모두 열두 분이 참석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 및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석하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하여는 각 증인별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고 직접 대답을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증인의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위원회 행정실에서 각 증인들의 신분증을 대조해서 본인임을 확인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은 본 위원장이 증인의 성명을 부르면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대답하신 후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중에서 김동녕 증인이 불출석을 오늘 오전에 통보를 해 왔는데 상당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불출석한 동기를 충분히 조사·분석한 후에 국회법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수 증인님!

○증인 김진수 예.

○위원장 정의화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박기남 증인님!

○증인 박기남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이혜경 증인님!

○증인 이혜경 예.

○위원장 정의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은 마쳤고요.

다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인도 증인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행정실에서 미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호명하면 ‘예’라고 일어서서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명숙 참고인!

○참고인 권명숙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김기목 참고인!

○참고인 김기목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독고운 참고인!

○참고인 독고운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박경규 참고인!

○참고인 박경규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박창근 참고인!

○참고인 박창근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변창구 참고인!

○참고인 변창구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심명필 참고인!

○참고인 심명필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전성인 참고인!

○참고인 전성인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최막중 참고인!

○참고인 최막중 예.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제가 다 호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국회가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선서한 증인께서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의 증인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김진수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함께 일어나시지요.

○**증인 김진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증인 김진수

증인 박기남

증인 이해경

○**위원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그 비공개 여부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문하시시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9분 이내로 하기로 간사 간 합의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입니다.

어제 정운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 명예가 훼손이 됐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장남 국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오래 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후보자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저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근거 없이 의혹만 부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명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장남이 미국 국적 갖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오히려 하루 만에 들통 날 거짓말로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후보자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본 위원에게 사과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제가 어제 사회를 보면서 들었을 때는 후보자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되셨다면 우리 후보자께서도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 때는 그 말씀을—질의를—정확하게 잘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럴 수도 있었다 하는 판단이 쉽니다만……

○**김종률 위원** 아니, 제가 묻은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의화** 우리 공직후보자께서 방금 김종률 위원님의 말씀에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의 병역의무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실 때 제 아들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즉각적으로 제 아들은 비록 미국에서 출생해서 군대를 안 가도……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 명예에 대해서 신상발언 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후보자님의 장남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묻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물었기 때문에 그 순간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저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근거 없이 후보자 장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처럼 비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의 병역의무 의혹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 애의 이름이 나온 순간 저는 제 애는 미국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위원님께 급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김종률 위원** 예, 맞습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병역법에 대한민국 병역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묻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사람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회의진행을 조금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김종률 위원**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백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핵심 증인인 김동녕 yes24 대표의 불출석과 관련된 저희 민주당과 다른 야당 간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공방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yes24 대표와 정운찬 전 총장, 지금 총리 후보는 서울 상대 경제학과 선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바로 직계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의 고문으로 등록이 되어 계셨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 핵심 증인이 바로 후보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밝혀 줄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9월 1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3시에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3시, 당일날 3시 29분에 베트남으로 출

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내일이죠.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구구한 여러 가지 변명들을 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이 돼서야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통보를 하자마자 바로 이런 출석사유서를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망의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자 불출석한 이 증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혹시 후보자 측과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우리 백원우 위원님, 오늘 김동녕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오후의 신문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도 고의성의 의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회의를,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의 소관입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앞에 계시니까 아마 백위원님이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무런 공모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물론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지금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민주당 김종률 위원입니다.

후보자 장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계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국적권에서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보충으로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 장남은 현재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물두 살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적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국적이 상실되어 있고 또 현재 후보자 장남은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서 사회보장번호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번 후보자께서 청문회 즈음하면서 9월 16일 미국 국적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후보자께서 미국 국적 포기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후보자가 먼저 이렇게 만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니까 만류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하라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냥 가볍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그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그동안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립대학 총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후보자의 장남 국적 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 속을 썩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본인, 후보자 장남 본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속을 썩이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9월 16일 이번 청문회에 임해서 비로소 미국 국적포기서를 아마 중용한 것처럼 됐는데 이 청문회에 대비해서 급하게 이렇게 국적 포기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는 1978년 귀국 이후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군대를 다 마쳤습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님, 제가 병역을 묻지 않았고 당연히 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양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이중국적이 됐던 겁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 아까 또 오전에 답변하실 때 아들이 미국 여권을 가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미국 가기 전에, 아주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여행을 귀국 후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미국 여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렇게 정정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권을 2004년도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미국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귀국할 때 어린 나이에 저희하고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출생……

○김종률 위원 지난번 한국 여권으로 미국을 가려고 하다가 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으로 오냐 그래서 거부되는 바람에, 그때 당연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간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1978년 귀국 이후에 여권이 어디……

○김종률 위원 22살 되는 해에 군대 다녀와서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선택한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해서 자동으로 그때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됐던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법적……

○김종률 위원 그리고 우리 후보자 장남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 장남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을, 1억 8000이 넘는 돈을, 월 500만 원이 넘는 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3년간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보다 훨씬 많은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후보자 장남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씬씬이가 아주 이례적으로 큰 편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희 아이는 금융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외국에서 비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또 제 동생은……

○김종률 위원 아니, 특별히 이렇게 월 카드사용액만 600만 원이 넘는 이런 씬씬이가 큰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외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램을 사서, 금융에 관한 것을 사서……

○**김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인 지출로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럼요. 한꺼번에 내는……

○**김종률 위원** 그러면 월급은 다 합해서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사용액만 1억 8000만 원이 넘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고 아마 월부로 지불했을 가능성이,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시다. 또 제 딸 다시 말해서 저희 아들의 동생이 직업이 없고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갖고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만들었다고 그럴까 아니면 빌려주고 쓰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태서……

○**김종률 위원**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일방적으로 해명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것 아닙니다.

후보자 장남은 2009년 올해지요, 4월 20일 날 금융기관에서 6300만 원 대출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이것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대출 증여해 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혀 아닙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 장남 직장이 어디지요? 여의도 다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의도에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대출받을 때 어디서 대출받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김종률 위원** 어디 농협에서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농협 서울대지점에서 받았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래요. 후보자 장남이 대출을 받는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농협에서 6300만 원 대출받았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30대 초반에……

○**김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가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사람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 얼굴 봐서 대출을 해 줬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확인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 대출을 왜 서울대지점에서 받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거야 아무 데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들이 신용대출을……

○**김종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혀 아닙니다.

○**김종률 위원** 계좌 신고할 때, 계좌 만들 때 순전히 대출 계좌거든요. 그때 직접 후보자가 같이 안 가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논문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내가 본 한국경제—97년 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것은 98년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의 50% 이상을 무단 인용하고 표절한 겁니다. 즉 18쪽 논문의 9쪽 정도의 분량이 출처나 인용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절을 인정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종률 위원 이중 게재는 인정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당한 이중 게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 스스로 만든 서울대 윤리규정 2006년도에 만든 것을 보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중 게재로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이중 게재로 이것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직접 만드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김종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판단을 할까요?

○김종률 위원 아니, 판단은 후보자하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요청했던 자료…… 이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저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병무청의 박경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후보자의 병역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이라 군대를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보니까 파월 장교로 국가유공자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의외로 군대도 안 갔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아무리 여쭙 봐도 헛갈려 가지고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이 징집연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징집연기.

○참고인 박경규 예.

○鄭玉任 委員 그래서 보니까 제가 찾아본 병무행정백서에 따르면 ‘구 법상 징집연기라는 말은 일반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입영연기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신 병역법에서는 징집연기라는 용어를 징병검사 연기로 바꾸었거니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예.

○鄭玉任 委員 맞습니까? 부연해서……

○참고인 박경규 지금 총리 후보자님 병역사항 공개된 것에 징병검사 연기와 관련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玉任 委員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 박경규 그게 당시 병역법에서 징집연기로 표시돼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징병검사 연기로 표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래서 징병검사 연기 규정에 따라 징집연기를 받은 것이 바로 1967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박경규 6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여기 보면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의 해가 1967년으로 돼 있고요, 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 다음에 부선망 독자로 의가사로 징집을 23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집연기라 함은 입영연기가 아니라 징병검사 연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정 후보자는 1970년에 징집연기 즉, 징병검사 연기를 한 번 받아 가지고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24세에. 맞지요?

○참고인 박경규 1970년도에 2차로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鄭玉任 委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1년에 보충역으로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1971년의 병역법에 의하면 ‘가사 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및 입영 등 연기’ 해 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아서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경우에

는 보충역으로 편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정 후보는 징병검사 결과 1을종이었기 때문에 보충역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박경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징병검사 결과 1종 체격등위를 받았지만 그해 말 종결처분에서 가사 사유, 그러니까 부선망 독자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겁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방위 소집 대상자가 된 겁니까?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방위 소집 대상자가 됐고 그다음에 1971년~77년까지 유학을 떠나지 않습니까. 후보, 확실하지요? 71년~77년까지 유학생할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71년~78년까지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78년까지 했고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 체재 중인 자는 그 소집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당시 병역법에 방위 소집 대상자는 국외여행 하거나 국외체재 중일 경우에 방위소집 통지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소집을 보류한다라는 말은, 또 여기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보류라는 말하고 연기라는 말이 또 다르지요?

○참고인 박경규 다릅니다.

○鄭玉任 委員 예,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경규 연기는 일반적으로 징집연기, 입영연기 할 때 연기라는 표현을 쓰고 보류는, 연기는 어떠한 통지서가 나갔을 때 연기를 하는 것이고 보류는 통지 자

체가 나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후보가 ‘통지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받았으니까.

○참고인 박경규 당시 병역법에는 보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지서가 나가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鄭玉任 委員 만약에 이게 또 연기라 하면 예컨대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연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후보는 연기가 아니라 아예 보류였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보면 보통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학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망 독자의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규정이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70년도 12월 30일 공포된 병역법에 의하면 부산망 독자 보충역의 경우에는 기간에 불문하고 해외여행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어제 의혹 중에서 후보자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친모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의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오면 입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참고인 박경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년도 12월 30일 공포된 병역법에서는 부산망 독자의 경우에 해외여행 허가를 할 때 나머지 일반 자원들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24세 연령을 정해서 나갔지만 부산망

독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후보는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알고 또 충분한 여비가 있어서 들어왔다 해 가지고 그냥 군대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제가 여기서, 그 표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군대를 가게 되는, 또는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의 제기는……

○참고인 박경규 중간에 일시귀국했을 경우를……

○鄭玉任 委員 귀국했다 하더라도……

○참고인 박경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玉任 委員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 박경규 그런데 현재 병역법에는 중간에 일시귀국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병역법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43년 전의 얘기라 서류들이 다 파기돼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시행령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또 한 가지, 77년에…… 학위를 정확하게 언제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공식적으로는 78년에 받았습시다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쓴 것은 77년 말입니다,

○鄭玉任 委員 학위는 78년에 받았더라는 의미는 78년에 졸업을 하셨다는 의미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졸업식에 갔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참고인께 질의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병역법 34조에 의한 소집 면제를 받은 해, 연월일을 아십니까?

○참고인 박경규 1977년도 1월 1일부로 소집 면제 처분됐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1977년 1월 1일부로 소집 면제를 받았고 졸업은 78년에 하신 것이군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978년 6월입니다.

○鄭玉任 委員 6월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어제 내용 중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년 내에 통상 60일 이상의 급료를 받는 사람은 영리활동을 하는 자고 영리활동을 하는 자는 당장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다는 규정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참고인?

○참고인 박경규 제가 이해하기로 어제 아마 제가 국방위원회가 있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 직원이 모니터를 했는데 아마 유학 중에 수입이 있었을 경우의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참고인 박경규 지금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鄭玉任 委員 예, 그러니까 어제 의혹은 유학 중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국내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박경규 현재 병역법, 당시의 병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이주자나 영

주권자의 경우는 해외에서 사는 조건으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세 1월 1일부로 병역을 면제 시킵니다.

다만 해외 이주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귀국해서 취업을 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허가를 받고 나가서 영리활동을 하느냐의 여부는 병역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민주당 소속 강운태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서 Y회사, 어차피 영안모자로 실명화되었습니다.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과 또 D그룹의 박 회장 그리고 내정자 이렇게 3인의 관계를 묻는 답변에 우리 후보자의 답변의 핵심은 ‘1000만 원 이상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 때 도움을 줬던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당시 했던 박 회장이 그저 본인 한 표는 줬을지 모르겠다. 준 것 같다. 그 외에는 특별히 뭐 도움을 받은 것 없다.’ 그러셨단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들은 전국의 시청자들이 저에게 점심 때 수많은 전화를 해서 “이것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선 기본적으로 백성학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기 앞에 계시는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총장이 되도록 내가 뛰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 후보자가 인정을 하셨고 그리



고 서울의대 교수들 300명이나 되는 그쪽의 병원장을 맡은 박용현 당시 병원장께 부탁을 했던 것까지는 전부 확인이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별다른 도움이 없었고 그저 한 표 정도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왜 저런가 모르겠다…… 아니, 후보자가 그렇게 해서 아는 사이여서 이렇게 백 회장이 부탁을 했고 또 박 회장이 도와줬고 그래서 아마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다 그래서 무슨 법 위반도 아닐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지요. 어차피 서울대 총장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지인이 도와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글쎄, 한 표는 줬을지 모르겠다’ 그것이 온당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서울대학 교수들이 총장 직접선거에서 그룹을 지어서 어떤 후보를 찍고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강운태 위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체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게다가……

○강운태 위원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대답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

○강운태 위원 아니, 제가…… 이미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밖에 도움을 안 줬다고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데 자르세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체가 한 1500명 되는데 그때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1200명 되고 또 의대

교수들 한 300명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러셨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큰 게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300명이 다 투표했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운태 위원 글쎄 그러셨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 차점자하고 차이가 한 100표쯤 되더라고요, 100표. 그리고 또 300명이 다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한 87%, 90% 되던데 그러면 한 260명, 270명 참여했거든요, 의대교수만. 물론 의대교수가 병원장이 얘기했다 그래서 전원 정운찬 대표께 투표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거의 다소한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상이지 그렇게 ‘그분 한 표 정도 도움을 줬는지…… 글쎄, 그런 정도야 도움을 줬겠지요’ 이것이 온당한 답이냐 그 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선거는 비밀선거입니다, 첫째.

○강운태 위원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두 번째 서울의대 교수들이 대학병원 원장의 지시라든지 부탁을 받고……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을 모독하는 말씀이십니다.

○강운태 위원 지금 후보자가 대학교 교수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지금 듣고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자, 다른 질문합니다.

낮에 동아일보 기사를 잠시 보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강운태 위원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학 회장의 증언입니다. 백성학 회장의 증언인데 ‘나와 몇몇 기업인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몇 차례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아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 회장의 소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 회장이 1000만 원을 준 용돈을 물으니까 ‘때 묻지 말라고 연구비로 쓰라고 줬다’ 이렇게 증언이 돼 있어요.

제가 직접 백 회장께 확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백 회장 외에는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수차 그러셨다는 말이지요. 백 회장은 ‘나와 몇몇 기업인이 줬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백 회장이 그러면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 주도록 요청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두 번째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백 회장 이외로부터 어떤, 어떤……

○강운태 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백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백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기사화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내정자께서는 백 회장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줬다’ 그랬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소액이라는 말은 취소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백 회장이 소액이라고 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액을 받았다고.

그런데 백 회장 말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때 묻지 말고 살라고 줬다’ 완전히 달라요, 뉘앙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후보자께서는 백 회장이 개입되면서 때가 묻어 버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묻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떤 의미에서 때가 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운태 위원 1000만 원 받은 것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때 아닙니까?

수차 지금 아침부터 우리 일선 공직자들이 단 돈 100만 원, 50만 원 받아서 파면되고 직위해제 당하는데 그러면 때가 묻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제 후보자 부인과 관련해서 미술품 판매를 이렇게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다가 어제 주셨는데 5900만 원 판매한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좀 알아 달라고 했더니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또 금액이 바뀌었네요. 6156만 8000원, 이렇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부터 네 사람한테 판매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2004년에 개인전을 인사동 인사갤러리에서 열

으셨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 ‘조용히하기 위해서 뭐 일체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별로 알리지 않았습시다.

○강운태 위원 그런데 6월 30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열렸는데 6월 30일이 되기 전에 6월 28일날 신문에 났다고,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정운찬 총장 부인 최선주 씨 첫 개인전’ 신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이미 신문은 말하자면 한 3일 전에 나버린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위원님. 제가 그 전시회를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미리 알고 낸 겁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신문에 났으니까 널리 알려졌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문을 보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희가 알린 것은 아닙니다.

○강운태 위원 어쨌든 간 알려졌으니까 났겠지요.

그런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6100만원, 4점이면 한 점당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천경자 씨 정도의 그림 수준 값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서 다음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까마는 이 점을 명쾌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오해가 생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Y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총장선거 기간 중이 아니라……

○강운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6개월 살 때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좀더 청렴했어야 하는데 너무 친한 사이여서 별 생각 않고 받은 것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 그런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총리가 되면 더더욱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경북 영천 출신의 정희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도덕성과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여러 분 중의 한 분으로 주변에서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아 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14위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선행행위입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기부행위가 아직 대한민국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분들의 사회적인 책임,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은 개인이 모은 재산을 참 뜻 있게 쓰는 이러한 문화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다행히 후보자께서는 ‘스코필드 박사 동우회’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선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러분들이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게 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한 34인 중의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은혜에 보답을 못 한 것 같아서 ‘호랑이 스코필드 동우회’를 만들어서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은 아주 훌륭한 휴머니스트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 좋은 일 중에 큰 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코필드 동우회를 만들어서 스코필드 정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그 분을 따라서 장학금을 저도 좀 내려고 노력해 왔고 조금 했습니다.

○**정희수 위원** 대한민국에도 가진 분들의 조건 없는 그런 선행이 많이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문화가 빠른 시간 안에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훌륭하게 서울대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잘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21세기는 좌우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사교육비가 연간 20조 원이 넘는데 전부 다 요즘은, 옛날에 어릴 때는 공부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교육을 받아 갖고 좋은 학교, 좋은 학교 가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 학생이라도 일단 학업은 시켜주고 졸업 후에 취업 후에 그때 자기의 돈을 받는, 물론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손 치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참 우리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같이 하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전부 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정원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한 정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가 정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수용 시설과 교수를 고려해 보게 되면 한 150명 받아도 괜찮다 앞으로 그런 여유가 생긴다 하면 그만큼 풀어 준다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입학하기 쉽게 문호를 좀더 많이 열어 주고 그 대신 대학

에 와서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해서 졸업할 때는 일정 학점 이상이 된 학생에 한해서 졸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문은 많이 열어 놓고 졸업은 좀 엄하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대학, 시설 좋은 학교에서는 그만큼 학생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그 문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하는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학 들어가기 전의 그러한 경쟁의 중심을 대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야말로 졸업 후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정부 교과부에서는 그러한 학과 중심에서 특성화 쪽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대학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대학 교육은 모든 대학한테 골고루, 교과부에서 지원도 평등하게 해 주고 또 정원을 조정해서.....

어떤 유명 대학의 정원을 늘려 주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학생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대학도 생길런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간다면 우선 사교육비와 열심히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총장님이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뽑자면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교육과 전세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교육을 좀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동시에 공교육을 좀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을 지금보다 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동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대학을 직업양성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의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첨단기술이 필요한 경제인데 이러한 경제에서는 이제는 대학을 직업양성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학문 또는 기술을 길러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떤 대학은 오히려 정원을 좀 줄여서, 글썄요 저는 그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학을 좀더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찬성이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 보고 그다음에 용산 문제에 대해서 질

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4대강이 대운하와 다르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논거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대강이 대운하와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운하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좁은 국토가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운하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또 무엇이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운하에 들어가는 비용과 4대강에 들어가는……

○이정희 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비용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원래 대운하는 반대하셨는데 4대강은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정희 위원 무엇이 달라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운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정희 위원 오직 그 이유 하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그뿐이 아니라 대운하는 필요 없는 것이고 4대강은 필요하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위원 대운하와 4대강은 무엇이

다른니까?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떤 면에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4대강 정비공사를 해도 이것은 절대로 앞으로 대운하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정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짧은 지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들으셨다, 기술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깊이 공부 안해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박창근 참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4대강과 대운하가 기술적으로, 4대강이 기술적으로 대운하로 가기는 어렵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러셨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참고인 박창근 저는 운하 1단계 내지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말에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하의 보 높이는 10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섰는데 지금 10m~14m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보 설계다.

그리고 운하를 하게 되면 6m 수심을 확보하게 되는데 낙동강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6m 수심을 유지하거든요. 만약에 운하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수심을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정운찬 후보자께서 ‘산림녹화를 50년 동안 해서 성공했듯 이제는 강을 정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참고인 박창근 산림녹화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거든요. 그것은 친환경적인 국토개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 이것은 준설도 대규모입니다. 거의 하천을 다 끊어내는 정도의 규모인데 반환경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2년 만에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더 여쭙 보겠습니다.

용산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새벽에 용산에서 망루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한 일이 있고 거기에서 고귀한 생명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농성 그 이후에는 유족들께서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 돌아가신분의 부인이신 권명숙 씨께서 나와 계십니까.

총리후보자님, 권명숙 씨 얼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 권명숙 참고인에게 목례)

자리에 앉으십시오.

권명숙 님, 아직 장례를 못 치르셨습니다. 그동안,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나 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권명숙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권명숙 답답합니다. 생존권을, 주거권을 외치고자 마지막 선택한 것이 망루였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의 대화도 나눠 보지 않은 채 공권력으로만 저희를 탄압했던 거지요. 그래서 강경진압으로 무고하게 6명이 희생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도 책임이 무조건 철거민들에게만 돌아가고 그리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고인 권명숙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이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이지만, 없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탄압을 받고 지금 실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안실에서 같이 8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정희 위원 정부와, 서울시와 대화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참고인 권명숙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측에서는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합 간의, 유가족 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

게 말씀해 오고 계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인이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그렇게 급하게 공권력으로 저희 철거민들을 탄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안타깝습니다.

○이정희 위원 권명숙 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병원에서 또는 용산에서 나서서 어딘가 가려고 하면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24시간 감시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참고인 권명숙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다섯 가족이 함께 하고 있지만 옆에 슈퍼도 못 갑니다. 공권력으로 경찰들이 뒤밟고, 하물며 유가족을 한 점, 두 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속 뒤까지 밟고 있습니다. 저희 사생활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신부님들과 여러 종교인들이 용산 현장에 오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이나 그 목소리를 모았는데 정부에서는 정말로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참고인 권명숙 없습니다. 정부에서 돌아오는 것은 탄압뿐입니다.

○이정희 위원 심지어 신부님들이 단식기도를 하시는데도 천막을 부수고 또 신부님들을 폭행했던 일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참고인 권명숙 사실입니다. 신부님들이 저희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시국미사도 드려 주시고 현장에서 또 역시 저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 주십니다.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조차 공권력이, 신부님들 역시 폭행하고 탄압하고 하물며 연로하신 문정현 신부님한테까지 ‘네가 신부냐?’ 마구잡이 말을 함부로 하고 계십니

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정희 위원 총리후보자님, 장례는 치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려면 조건이 있는 것보다 사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하려면 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 반발하면, 서울시가 말을 안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임명되신다면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지 간에 돌아간 분들의 장례도 8개월 동안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라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싶었지만 아직 임명받기 전에 주체님은 것 같아서 못 했고 임명을 받게 되면 지금 권 여사로부터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좀더 전향적인 태세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에 임명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 해야 할 것은, 용산참사의 유족들과 한번 만나서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제와 제 주제가 겹칩니다. 그



래서 제가 겹치게 된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권명숙 참고인!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참고인 권명숙 답변할 이유가 있다면 답변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우리 권명숙 참고인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용인에서 노점을 하시다가 남편과 함께 용인 수지의 이런 개발을 계기로 해서 용인전철연에 가입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권명숙 대답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차명진 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참고인에게 특별한 위해를 가할 거 아니니까 마음을 풀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명숙 참고인에게서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느끼고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그리고 법 쪽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 차원의, 그야말로 맨몸으로 함께 희생하면서 싸우신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이제……

그리고 또 이번에 용산 관련해 가지고 정말 부군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정말 표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우리 권명숙 참고인. 이번에 용산범대위에 같은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권명숙 무엇이요?

○차명진 위원 용산범대위.

○참고인 권명숙 저희랑 유가족이랑요?

○차명진 위원 예, 권명숙 참고인에게서. 그렇지요?

○참고인 권명숙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범대위에서는 크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농성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의 세입자 보상이 참 부족하다, 턱없이.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무리하게 개입해서 진압을 해서 인명 살상까지 왔다. 그렇지요?

○참고인 권명숙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저는 그 요구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시신을 냉동고에 6개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또 우리 권명숙 참고인도 그 뜻이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유명을 달리하신 남편의 뜻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에게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권명숙 (고개를 끄덕임)

○차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난 6월, 8월달에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범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합의안을 거의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자 1인당 4억씩 보상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운영 우선 분양권도 5개 주기로 하고 그리고 전철연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금,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감정평가액의 150% 지급하기로 한 것 하고 그리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그 현장은 아니지만 이 공사를 하는 삼성건설의 다른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2개 주기로 이렇게 가합의를 우선 봤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권명숙 전혀 아닙니다. 저희 유가족은 보상액수 처음, 근거 없는 얘기고

요. 상가·합바, 합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합에서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유가족하고 일괄적으로 대화가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은 전혀 거짓입니다. 저희는 들은 적 없고, 액수 문제 역시도. 그리고 상가 그런 얘기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왜 종교인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 유가족도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종교인이 합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중재를 해 가지고, 중재를 해서 시공사 그리고 조합, 범대위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니까……

**○참고인 권명숙** 예, 사실무근입니다.

**○차명진 위원** 제가 더 여쭙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사실 관심이 있어서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에서 누가 나와서 협상테이블에 앉았는지 그리고 범대위 내부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은 분들의 실제 발언력·영향력이 어떤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물론 어떤 일관된 조직처럼 되지는 않지만 범대위에서 상당 부분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합의를 봤는데 범대위에서 추가로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보장해 달라, 또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것 때문에 결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잘 알아보십시오. 정부 사과는 이미 대통령께서 2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시상가나 임대상가는 그 공사현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가능할 수 있고……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 기간 이렇게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시신을 차가운 냉동고에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유족의 도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취지는 좋으시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국에서도 공직자로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전혀 잘못된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총리후보자님, 지금 얘기를 들으셨지만 일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용산 사건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마치 공안정부로 가는 정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사례로 드는 경우입니다, 이 용산 사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저는 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정말로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8개월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가 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산의 유족들과 한번 만나서 위로를 해 드리고 또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제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특히 준법을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또 당사자 주의, 정부가 당사자 아니다, 조합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대화를 만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열린 자세로 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은 문제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경규 참고인, 병무청에서 나오셨는데 후보자 병역과 관련해서 딱 하나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71년도에 보충역으로 1급 을을 받아 가지고 보충역 방위에 편제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방위에 편제되면서 당장 방위를 받는 게 아니라 6개월 보류가 됐는데 미국으로 갔거든요. 간 다음에 그러면 다시 와야 되는지, 다시 온 사례가 있는지, 사실상의 면제인지……

○위원장 정의화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경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리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부사망 독자 보충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법규에 따라서 국외여행 허가를 할 때 기간에 불문하고 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71년도 당시에 국외여행 허가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국외 체재하는 게, 그 이상 다른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의사진행발언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그 얘기는 좀 적당히……

○최재성 위원 아니,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정의화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해 드릴게요, 4시 이후에.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40분 후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깐요. 아,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면 청문회 끝날 때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요청합니다.

후보자의 기부금 내역 그다음에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용역 리스트 아까 잘못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가 한 두 번 더 하면 한 열 번 될 겁니다. 이거 빨리 갖다 주십시오. 금방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의화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주시고요.

질의 시작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아니, 후보자 대답 좀 해보세요.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자료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제가 정부 일에 익숙하지 못해서……

○최재성 위원 후보자 자료예요, 다른 자료가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익숙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대학에서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금방 금방 잘해 오기는 하네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고서라든가 신고

신청서인가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 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용역 했다고 하는 거는 역시 제가 서울대학에서 온 자료를 보았는데 참 터무니없이 제 이름이 막 써 있는 걸 봤고요.

(뒤를 돌아보며)

그다음에 기부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십시오. 달라면 전부 드리세요. 있는 걸 왜 안 드립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첫 자료 말고요. 첫 자료는 뭉뚱그려서 주셨는데 공제 받으려면 후보자가 제출한 공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달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금 공제 말씀이십니까?

○**최재성 위원** 기부로 인한 공제 자료니까요. 기부금 내역이 명시돼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문회 시작 이미 전에, 자료제출요구서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왜 청문 위원들을 갑자기 자료제출 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이거 벌써 오래 전에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 정의화** 질의 시작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어제 청문회 속기록 19페이지에 ‘1년의 수당을—yes24라는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거기의 고문직을 하면서 수당을 열두 번으로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말씀드렸습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는 어저께 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 늦은 시간까지도 급여명세서를 청문회 이 순간에 봤다, 어제 그 자리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는 yes24 고문료가 수당으로 처리 안 되고 급여로 처리된 사실을 그러면 어제 알은 거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회사에서 한꺼번에 주고, 한꺼번에 결정하고 단지 열두 번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후보자가 묻는 말씀에도 포인트를 잘 모르시면 그건 시칭하는 국민들이 말도 잘 해석을 못하는 분으로 폄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급여로 처리된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거지요. 지금도 모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열두 번으로 나누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매달 급여로 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그게 급여의 형태로, 본인은 몰랐지만 급여의 형태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최재성 위원** 준비과정에서 알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급여로 저런 것을 갖다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데 어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사실은 어제 처음 봤습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최재성 위원** 자료는 후보자 책임 아래 제출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최소한 2007년 12월 연말정산 때 혹은 2008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점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최재성 위원** 인정하느냐, 못 하느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몰랐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때 몰랐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는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yes24에서 받은 돈을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합니다.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는 몰랐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세무대리인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세무대리인은 후보자가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기타수입으로 할 경우보다 근로소득세로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아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처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yes24에서 받은 돈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서 9월 15일에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때 근로소득으로 했습니까, 기타소득으로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최재성 위원** 이번에 9월 15일에 부랴부랴 세금낸 거 아닙니까? 그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어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

까, 여기서 받은 고문료 1억 원을?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재성 위원** 청문회 준비 과정 불과 일주일 전에 세상에 이것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갖고 신고한 건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결과는 근로소득으로 합산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시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마 저 그……

○**최재성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의 존립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리활동이고 이윤추구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yes24는 코스닥 상장주식회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후보자 주장대로 하면 고문직은 수락하고 일정 금액으로 자문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렇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결과적으로 yes24에서 돈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받은 거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러면 후보자는 재산상의 이득을 본 거고 영리활동을 하신 거죠, 후보자 개인의 영리활동을.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고 또 책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단숨에 받았습시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하셨죠.

모 언론사 칼럼에, 오늘 칼럼에……

그러나 돈은 받은 거 아닙니까, 책을 위

해서 홍보를 했던 그것 때문에 수락을 했든?

모 언론사 칼럼입니다.

“억대의 고문료를 받아 놓고 보수는 받았으나 영리활동은 아니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보다 더 우습다.” 이런 칼럼이 오늘 나왔습니다.

급여대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총리실에서 제출한 임명동의안입니다.

이건 법률적 자료입니다. 그렇죠? 법률적 자료입니다. 임명동의안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인사청문특위 요구자료입니다. 이 또한 법률적 자료입니다.

청문회법에 의거해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사항이 제시된 법률적 자료고 또 요구자료입니다.

이들 자료에는 후보자께서 yes24로부터 받은 돈이 근로소득이라고 시종일관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9월 15일, 일주일 전에 이것이 언론에 나고 문제가 되자 탈루를 뒤늦게 수정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영리 행위한 적도 없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하시는데 그럼 이 자료가 결국은 잘못된 자료네요? 그렇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게 아니라 끝까지 챙기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아무튼 이 자료, 청문위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 자료는 아무튼 왜곡됐거나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후보자의 주장하고 다른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후보자는 yes24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제출한 yes24 급여명세표 어제 보셨죠? 이게 급여명세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항목에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2007년 11월 첫 급여 때 고용보험료를 냈다가 이중고용보험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상실 신고를 yes24에서 하게 되고 후보자는 회사분외에 개인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es24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 내고 4대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허황된 메아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영리 행위를 했고 이중근로에 의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는 제 주장이 아니고 후보자가 제출한 법률적 자료들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yes24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죠?

○증인 김진수 저는 이번 9월 1일부터 취임해서……

○최재성 위원 9월 1일…… 그럼 며칠 안 되셨네요?

○증인 김진수 예,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증인 김진수 그래서 제가 좀 내부 직원

들한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직접 처리하신 일은 아니지요?

○증인 김진수 예,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김동녕 증인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운찬 후보자가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왔다갔다……

○증인 김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전혀 회사에서는……

○증인 김진수 예.

○최재성 위원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강연회 형태라든가 혹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했습니까?

○증인 김진수 내부적으로 어떤 그러한 활동,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개적인 그러한 활동 외에는……

○최재성 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한 그런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증인 김진수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과 개인적인 어떤 자문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재성 위원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까?

○증인 김진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테지만 그런 것 들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증인 김진수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하여튼 그 제출한 자료 외에는 공식적인 활동은 없었던 거지요?

○증인 김진수 예.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입니다.

심명필 참고인 계십니까?

○참고인 심명필 예.

○권경석 위원 4대강 살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선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물 문제 해결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친수공간이라든지 확보하고 또 경제위기 탈피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참고인이 아시기에 지난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이나 2년부터 2006년도까지 태풍이 많이 불어 닥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4대강 범람 또는 홍수 등등 피해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 복구액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계세요?

○참고인 심명필 예, 물론 일부에서 홍수 피해는 장기간으로 보면 피해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으로 보면 최근 5년간 피해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 피해가 한 1.7조 정도 되고 복구하는 데에는 연 평균 한 2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것은 4대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4대강 대상입니다.

○권경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5년간에 예방 투자 1.1조, 피해는 2.7조, 복구액은 약 4.2~4.3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 평균 하천 범

람이나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예방투자액은 연간 5.5조~6조에 달합니다. 그런 통계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4대강 살리기의 목적 중 하나가 재해 예방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심명필 예.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 재해 예방은 사후 복구공사가 땀질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예방투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재해 예방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일종의 투자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까지는 땀질 공사를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그와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사업을 벌이게 된 목적 중의 하나 아닙니까?

○참고인 심명필 예, 맞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수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사업의 내용이 제방 승상, 준설, 하폭 조정 이런 사업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을 벌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게 첫째 이유이고 그다음 사업시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개선에 관한, 다시 말해서 수질 개선에 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권경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참고인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 악화 문제만 해도 저희들 첫 번째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천 바닥을 일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한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보를 쌓으면 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수질오염 혹은 수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수질 개선하는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할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수중보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결국 저수지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침체된 물이 썩을 것이다 그래서 오염이 가중된다, 가속화된다는 이런 지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인 심명필 한강에도 지금 2개의 수중보가 있습니다. 잠실과 신곡수중보가 있는데 수질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4대강에 설치하는 보들은 수중보라기보다도 필요시에 항상 문을 열 수 있는, 수문이 달려 있는 가동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이 적을 때는 또 오염이 났을 때는 물을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권경석 위원 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수질 악화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동식 수중보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참고인 심명필 이동식이라기보다는 그 보에 수문이 달려 가지고……

○권경석 위원 수문이 달려서……

○참고인 심명필 수문을 열게 되면 물을 언제든지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권경석 위원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 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지장 없이 흘려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참고인 심명필 예, 맞습니다.

○권경석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심명필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총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경석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계기로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졸속 평가가 아니다 이

런 이야기입니까?

○참고인 심명필 예, 맞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한강의 예를 들었는데 한강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참고인 심명필 한강은 1982년도부터 86년까지 한 5년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한강 개발이 낙동강 내지 4대강 살리기의 하나의 선행 모델케이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고인 심명필 여러 가지, 지금 4대강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홍수에 대비한다든지 또 일부 물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참고인께서는 한강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강 유역 일대의 홍수 피해를 겪은 사례가 많은데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참고인 심명필 물론 우리 역사상 한강의 제일 큰 피해라면 1925년도의 을축 대홍수입니다. 그것은 무려 80년 전입니다마는 최근으로 보면 1990년도에 대홍수도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 일산의 제방이 무너져서 지금 자유로 같이 저희들이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마는, 한강도 다른 강에 비해서는 홍수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홍수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주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한강 개발을 이루기 전에, 공사 기간 중이었나요, 86년도인가 85년도인가 큰 피해가 있었지요? 풍납동 일대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한강은 수년에 한번 정도 피해를 겪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 개발사업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요?

○참고인 심명필 피해는 많이 줄었지요.

○권경석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 등등 주변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레저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참고인 심명필 예, 일종의 강의 다목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태화강의 사례, 5급수를 2급수로 만들었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권경석 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심명필 태화강은 저도 최근에 한번 방문을 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화강의 일부를 준설을 하고, 바닥에 쌓여 있는 흙들을 준설을 하고 여러 가지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 해서 지금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병역 문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병무청에서 오신 참고인……

○참고인 박경규 예.

○백원우 위원 부선망 독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독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지요? 연기, 징집 연장, 보충역 복무 이런……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부선망 독자에게 왜 이런

혜택을 주는지 아십니까?

○참고인 박경규 제가 당시의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에 아마 가게 보전 이런 측면에서 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독자니까 아들이 혼자 남아서 어머니를 잘 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가 있겠지요?

부선망,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으시고 연로하셨으니 아들이 남아서 어머니를 잘 보필해라, 생계를 꾸려 가라, 그렇기 때문에 징집도 좀 연장해주고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서 복무 기간도 단축해 주고, 이것이 부선망 독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근본 취지이지요, 맞지요?

○참고인 박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병역법의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그런 것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선망 독자라는 조항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부선망 독자가 유학용 혜택은 아니지요? 유학을 가라고, 아까 입법 취지에 맞춰서 보면 부선망 독자는 어머니를 잘 부양하라고 그런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것도 양자로 입적해서, 원래 아니었는데 양자로 입적해서 법적으로 부선망 독자가 됐고,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이 연기됐고, 그런데 그것을 갖고 해외 유학 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요?

○참고인 박경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역 법령에 정한 사항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병역 법령상에는……

○백원우 위원 아, 병역법만 얘기하세요?

문교부령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4조에 해외 유학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은 그 유학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혹시 병무 관련해서 이런 규정 알고 계십니까?

해외 유학생은 유학을 마치면 즉시 귀국해야 된다, 이것은 뭐 법 이전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그것은 교육행정이고요, 병역법에는……

○백원우 위원 상식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병역법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허가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유학생과 유학생 아닌 자를 가르는 기준에 유학비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을 해외 유학생으로 봅니다? 유학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유학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병역 의무자는 허가서를……

○백원우 위원 참고인, 박사과정…… 예전에도 이 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70년도나 76년도 당시에 있었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지금 병역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 외에는 40여 년 전의 얘기라 전부가 파기돼서 그러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최근의 것을 좀 추론해서 말씀드려 보지요.

취지를 말씀드려 보면, 박사과정은 28세가 지나면 더 이상 병역미필자는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지금 현재 유학 허가를 할 때, 그러니까 학위별로 그렇게 제한 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박사과정이 28세까지이지요?

○참고인 박경규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 이상이 지나면 본인이 소집통보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분명히 귀국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요?

○참고인 박경규 지금은 허가 자체를 28세까지만 해 주고 있고 지금 총리후보님 같은……

○백원우 위원 허가를 그렇게 해 줘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에 유학 등으로 인해서 귀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398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략 맞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대략 이 정도로 해외에 나가서 유학생이 돌아오지 않아서 병역을 면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인 박경규 다수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전에 30세까지로 되어 있던 기준이 지금은 삼십몇 세까지로 기준이 올라가 있지요? 35세까지 올라가 있지요? 35세까지 국내에 들어오면 병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참고인 박경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5세는 병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서 소위 미귀국자로서 검찰에 고발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

해졌습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더 이상 병역 문제에 대해서, 아까 부선망 독자의 법적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시라면 별문제가 안 됩니다. 하급 공무원이라도 별문제가 안 됩니다. 서울대 총장까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보다 당당하지 자꾸만 여러 가지 조항들을 들이밀면서, 뿔뿔하게 부선망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자로 입적한 부선망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나는 병역에 한 점 의혹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터넷에서는 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당당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익열 장군님 잘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압니다.

○백원우 위원 김성주 씨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집……

○백원우 위원 김성례 씨도 잘 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이분들 과외를 누구를 시켰습니까? 김성주 씨입니까, 김성례 씨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성례입니다.

○백원우 위원 김성례…… 입주 과외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제 친구 여동생들입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몇 년도…… 대학생 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 몇

학년 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제가 1970년도에 넷인가 다섯 가르치다가 다 대학을 붙고 그중에 하나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바로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위원 대학생 때 과외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대학생 때 과외를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대학 4학년 때 가르쳤는데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인 69년도에 김성주 씨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성례……

○백원우 위원 김성례 씨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러면 김성례 씨 나이가 당시 고3 또는 재수생 이렇게 되시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고2 아니면 고3……

○백원우 위원 김성주 씨가 후보자 부인의 친구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김익열 장군은 65년도에 국방대학원장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모르지만 군인이셨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백원우 위원 69년도에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69년이요?

○백원우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모

르고 있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장인 되시는 분과 같은 군에 계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도 모릅니다.

○백원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잘 모릅니다.

○백원우 위원 과외를 가르치는 집의 김성주 씨를 통해서 부인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전혀……

○백원우 위원 김성주 씨와 부인에게서 친구 아니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고 친구입니다. 위원님……

○백원우 위원 여고 친구시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것은 지금 미시간대학에 있는 제 친구가 그 집에서 거의 입주하다시피 했었는데 영어를 가르칠 선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가서 그룹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학생이……

○백원우 위원 그 집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 집의 아버님이 장군이셨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압니다.

○백원우 위원 그때 후보자 부인도 같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백원우 위원 어쨌든 그때 후보자 부인을 만나게 되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그것은.

○백원우 위원 나중에 만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이후로 만난 것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제 존경하는 그러면서도 이미 돌아가신 장인 말씀은 하지 말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중차대한 청문회라 할지라도 저희 가족 아들, 딸, 제 집사람과 관련된 얘기는 안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백원우 위원 위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 문제가 나타나 있는 자료도 있어요.

○백원우 위원 후보자는 69년도에 부인을 안 만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 부적절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위원장 정의화 후보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위증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충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나성린 위원입니다.

공직 후보에 나오면 이런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특히 공직에서도 제

일 높은 총리 후보이기 때문에 너무 섬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 위원님,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압니다. 2년 전에 누가 만들어낸 소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성린 위원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시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데 안 나오는 게 좋지요,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려면. 그런데 또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꺾듯이 헤쳐나가야지요.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

정책에 대한 질문을 총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곧 정책에 대한 질문만 주로 해왔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은 후보자 검증은 정책능력과 도덕성 검증인데 저는 정책능력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한 번 잘못 말한 게 있기는 한데, 탈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네티즌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정책 검증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선진화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단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두 트랙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08년 10월 7일에 조선일보의 기고문에서 시장만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면 “미국 금융위기를 기회로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내외적 규제완화, 특히 미국식 시장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정책들이 과연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지 의문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고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좌파나 진보 경제학자들이 마치 우리 경제가 이미 시장만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또 금방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될 것처럼 비판하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보기 나름입니다만……

○나성린 위원 제가 좀 다르게 돌려서 여쭙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정부 중에서 신자유주의적·시장만능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져 본 정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DJ 정부, YS 정부 또 지난 참여정부, 전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와 관계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따진다면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좌파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미국식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그것도 완전한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 성격상 그런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아직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금씩 완화해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쟁국보다는 규제가 너무 강하게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한 쪽에 있고 저쪽이 규제가 아주 완화된 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마치 많은 학자들이 당장 우리가 아주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 경제체제를 따라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 위원께서도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규제보다 좀 더하다, 덜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에서의 경제력 집중,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제력 집중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 또는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 취지를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경실련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것을 많이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그

런데 옛날 우리가 폐쇄경제하에서의 경제력 집중과 완전개방경제하에서의 경제력 집중은 다르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독점일 수 있지만 세계경제에서는 독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독점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규정도 어느 정도 변해 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도 많이 개선되어 왔고. 사외이사 제도라든지 또는 사외감사 제도라든지 공시제도도 강화하고.

옛날 97년도 재벌과 지금 재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영업실적도 좋고 또 재무 상태도 좋고 또 현금도 많고 해서, 물론 도태된 그룹도 있지만 훨씬 상황이 좋아진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나 저나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주의자들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전성 규제라든지 공정성 규제, 정보에 대한 규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라고 해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규제를 하되 적절하게 하고 또 그게 지나치면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정부를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저는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의 부정확한 비판에 대

해서 총리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조금 우리가, 그분들을 완전히 설득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논의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왜곡되게 지금 한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겠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투명성이 좀 부족해서 오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투명성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총리가 되시면. 저도 그렇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즉 강조를 해 왔습니다, 학자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하에서 일관성을 지키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좌파적 경제주의 원칙하에서 일관성을 지키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일관성을 지키면 안 되겠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원칙하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원칙하에서 상황에 따라서 미시조정도 하고 또 소외계층을 보듬는 정책, 두 가지를 조화하는 어떤 철학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금은 무조건적인 감세가 아니라 우리 경쟁국보다 세 부담이 높으면 안 되겠지

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다른 것과 따져 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하다고 한다면……

○나성린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다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금리도 높고, 요새는 좀 낮아졌지만, 땅값도 비싸고 임금도 비싸고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것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높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따져도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1년 반에 걸쳐서 감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의 대폭적인 감세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 감세 논쟁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감세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또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총리가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규제완화도 그렇지요. 우리 경쟁국보다 규제가 높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도 역시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다면……

○나성린 위원 다른 조건이 나쁘다면 더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천연자원 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방 확대는 계속 필요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실 정운찬 내정자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소신만 분명히 한다면 저는 그동안 저명한 경제학자로서의 명예도 지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했지만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런 상황인 만큼 도덕적인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안 간 문제, 양자로 입적되어서 부선망 지위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고령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다고 하나 참으로 딱한 것은 남들은 3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고 묵묵히 국가의 부름을 따랐는데 부선망 독자 혜택을 받아서 기껏해야 6개월밖에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인데 그런데 해외유학 간다고 면제를 받았다는 것 이걸 좀 부끄러운 일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박상돈 위원** 양자로 가지 않았다면 36개월이라는 기간을 꼬박 복무했어야 되는 그런 신분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는 복무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지 않아도 타인과의 형평상으로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취직을 하려면 당연히 군 복무를 필한 상태에서 취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말이죠. 직장도 또 당연히 군 복무를 필한 사람을 선별해서 채용하는 것이 상식

인데 취직하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또 군대부터 먼저 갔다 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인데 그런데도 정운찬 내정자께서는 병역미필자 신분으로 한국은행에 입행을 하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런데 당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 같았다면 어떻게든지 군 복무 문제 해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1년 6개월이나 근무를 했거든요. 재직을 1년 6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도 군 입대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첫째는 정운찬 내정자께서 군대를 의도적으로 기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인위적으로 기피를 하는 것을 용인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그 외 제3의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박 위원님도 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병역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첫째로는 6개월짜리 방위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군대를 안 간 것에 대해서 제 동료라든지 선후배 또 군대 보낸 여러 부모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역을 완료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모두 사정이 있었고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일부러 가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거니와 법 위반은 또……

○박상돈 위원 하여튼 저도 일부러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볼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쭙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해외유학 갈 때 필요한 해외여행 허가서라는 거 이것은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건데 사실 군 미필자에게 그것도 장기간 해외유학을 계획한 내정자에게 발급되었다는 게, 이거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선 선뜻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또 해외유학을 갔다 오면 틀림없이 박사 학위까지 받는 기간까지 장기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당연히 병역면제가 예상되는 나이인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정황들 물론 내정자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고 또 일부러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 역시 내정자의 양심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다만 그런 결과로 대통령도 병역면제자고 국무총리도 면제자고 그랬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국가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데 국군통수권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유고가 생길 때에는 그걸 대행하는 분이 국무총리인데 국무

총리까지 병역면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가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법 위반도 아니지만 군대를 안 간 데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군대 안 하셨다고 했고 저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만 더욱 더 나라에 봉사하는 것으로 갚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세계의 지도자들 중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하면서도 국방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르켈도 있고 옛날에 대처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세금 탈루 문제 이것도 상식, 저는 사실 자료는 죽 있었습시다라는 자료라는 것도 상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가질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yes24 인터넷서점 업체로부터 받은 자문료, 자문할 때마다 별도로 받은 자문료도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힌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소득세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답변인가, 그리고 급여를 매월 400만 원 이상씩 주는 회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400만 원 이상씩 소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정 내정자께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혜롭게 극복하시면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지금 훌륭한 경제학자로서 사회활동도 하시는 것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순수하게 받아 주겠는가, 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긴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응해서도 한 말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 문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나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했습니다. 여러분……

○**박상돈 위원** 그래요. 저도 볼 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였고 세상 약게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보통 국민이라면 그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쭙 보는 것이고요.

청렴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Y사 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거 사실은 일반인들 같으면 범죄의식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국립대 교수 신분 그런 신분인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사시라고 소액을 준 걸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서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으로서는 이걸 조금 심한 말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위원장 정의화**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돈 위원** 사모님께서 88년도에 포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셨는데 그것은 마음에 좀 맞으면 거기서 살려고 했다……

○**위원장 정의화**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좀 해 주시죠. 제가 듣기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위원** 전성인 교수님께 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전성인 교수는 유학을 다녀오셨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유학과 병역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으니까 유학을 갈 때 유학여권과 비자가 나오려면 병무청장의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병역미필인데. 그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성인 교수님께서 유학 가실 때 병역을 필하고 가셨나요?

○**참고인 전성인** 공교롭게도 저는 병역을 필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혜훈 위원** 혹시 같이 유학 갔던 학생들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채 온 학생들은 없었나요?

○**참고인 전성인** 저희 때 해외유학 자유화 조치가 있어서 저보다 먼저 떠난, 대학교 4학년 때 수속을 해서 떠난 사람 중에는 병역 미필인 상태에서 유학을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저도 88년에 유학을 갔지만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저의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 많은 경우에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병역을 기피할 경우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인의 동의, 보증이 있으면 병무청장의 허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나요?

○**참고인 전성인** 예, 정확한 절차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일종의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게 아주 희귀해서 특별한 백이나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의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라고 보셨나요?

○**참고인 전성인**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때는 그것은 무슨 특혜나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런 절차 요건에 충족함을 보이면 허가가 나오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감사합니다.

또 유학을 마치고 나서, 물론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스턴대학의 유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콜럼비아대학의 조교수를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 유학이 끝났는데도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처럼 많이들 얘기

하는데, 미국에서 경제학박사를 하고 나면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인지 어떤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전성인** 병역을 기피하실 의도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콜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가셨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에는 더욱더 굉장한 어떤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단적인 방법으로 쉽게 채택하거나 사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 않나,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선생님만큼 공부를 못해서 콜럼비아대학의 캠퍼스 비지트까지 가서 교수 채용 세미나 같은 것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콜럼비아대학 조교수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혜훈 위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 해에 경제학박사가 한 300명 이상 한국인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만큼 미국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얻기를 원했지만 한 해에 한 명, 두 명 정도, 그것도 콜럼비아 대학 정도는 아니고 다른 티칭스쿨에 자리를 얻었던,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영예로 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왕 답하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쭙 보겠습니다.

부선망 독자 규정을 ‘본인 생부로는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양부까지 얻어서 가면서까지 병역 기피를 도모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작은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많은지 본인의 생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많은지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선망 독자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자로 가면서까지 병역 기피를 획책했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혹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전성인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됴됨이에 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병역 문제도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개인 개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제가 선생님을, 호칭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지명……

○이혜훈 위원 후보자.

○참고인 전성인 후보자를 뵈는 것이 1979년부터 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 보면 열추 몇십 년의 기간이 있는데 제가 아는 후보자를 본다면, 제 판단이 그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병역 비리 문제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진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혜훈 위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부가 계시고 작은아버지가 계시면 작은아버지가 세상을 더 빨리 떠날 확률이 그렇게 많은가요? 작은아버지가 빨리 떠날 것으로 그렇게 확실히 예상이 되는 어떤 무슨 사정이 있으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은 1953년에 벌써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는 1965년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아버님이 그렇게 먼저 돌아가셨으면 양자로 가지 않아도 굳이, 부선망 독자 규정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어떤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굳이 양자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정운혁하고 저하고 둘이었는데 저희 형은 군대 다 했습니다.

○이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짧은 것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현 정부가 많이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사교육이나 입시학원들을 중심으로 한 입시준비 이런 것을 더 부추기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정과 인맥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회보다 더 작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입시의 공정성 이런 부분을 더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이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공부 잘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점수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잘 주

어지지 않아서 사회·문화적으로 전혀 혜택 못 받은 사람 또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전체 점수는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 정신을 받아 주었으면 좋지만 이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성적이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이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 자체는 좋지만 잘못해서 규모가 너무 커지면 부작용이 커져서 사실은 원래의 의미를, 원래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혜훈 위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90%가 비정규직이고 70% 이상이 전혀 교육과 관련 없는 그래서 입시에 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좀더 신중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답변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잠깐 1, 2분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혜훈 위원님께 미진한 답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혹시 아까 다른 질의에…… 나중에 또 추가 보충질문 있으니까

요, 그러면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것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1차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는데 신청하기 전에 또는 오늘 오전 중으로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던 부분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계신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회 시간 동안에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늦어도 일몰 전에 다 귀가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20분 간 정회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신문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보충신문 및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에게 추가자료 제출해 오셨

는데, 보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에 공직자재산등록에서 7980만 원 인세 수입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공직자재산등록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계신데, 다만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재산신고 왜 누락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기 때문에 재산신고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림이 재산인지도 몰랐어요.

○김종률 위원 그건 후보자께서 그렇게 인식을 못 하신 것이고요, 그 당시 2006년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당연히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도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2항아호에 500만 원 이상의 예술품을 재산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작품인지는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은 1000만 원 넘게 2004년도부터 팔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615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원래는 5900만 원어치 팔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 하루 사이에 또 200만 원 이상이 올라간 셈입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공직자 재산등록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 7980만 원을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금액을 잘못 적은 것 말씀입니까?

○김종률 위원 아니, 재산 신고 안 한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답변자료에서 인정을 해 오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총리후보자로서 이렇게 청문회에 임하기 때문에 발견된 사실이지만 총장도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직자윤리법, 실정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사안인데,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후보자께서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그것이 저희 집사람의……

○김종률 위원 아니, 인세 수입.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인세 수입이요?

○김종률 위원 예, 7980만 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 재산 신고를 안 한 거요? 그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법에 그렇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종률 위원 재산 신고를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 세금 탈루했는지 여부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이후에……

○김종률 위원 설명 다 봤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그 사실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

인정을 해 오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하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도표를 가리키며)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이것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쉬는 시간에 봤더니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평가 기준 불법의혹에 대해서 당에서 정리한 평가 기준으로 삼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 뒤에 있는 저 패널을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됨으로써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중에서 7관왕을 차지하셨어요. 지금 한창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는 소위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보다도 의혹이 오히려 더, 별이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별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2002년 9월 최초 신고 이후 지식재산권을 명기하였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재산등록신고서상에 명기하지 못 하였습니다. 당시……

○김종률 위원 글썄, 여기 답변서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해 드렸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합산 신고……

○김종률 위원 아니, 제가 소득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금은 다 냈습

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것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어떻게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면 꼭 양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자꾸 양파 껍질 까듯 계속 그렇게 불필요한 해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좀 묻겠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는 총리 내정 직후까지 자사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았던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직후까지 자립형 사립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맞습니다. 아직 개교도 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맞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이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2008년도부터 청문회, 총리후보로 내정된 게 9월 3일이니까 그 이후인 9월 10일에서야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사임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학교는요, 하나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아주 절친한 분인 김승유 한화금융지주회장이 서울에 짓고 있는 자사고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하나고 법인 이사 이력을 빠트리셨



는데 뭐 고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김종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몇 개월 안 한 거라 뻔합니다.

○김종률 위원 2008년도부터 재직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안 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 설립 준비.

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까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법인의 이사로 활동했던 점은 저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이기준 교육부총리 역시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사흘 만에 낙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yes24 고문직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 겸직 문제를 저는 가볍게 이렇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하나학원 이사직은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립형 사립고를 준다는 것에, 우리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이사직을 수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산 참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총리 내정 수락하신 것은 서민을 위한다는 말에 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서민, 민생을 말하려고 하면 용산 참사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용산 참사 일어난 지 244일째입

니다. 아직까지, 용산 참사는 공권력이 무리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여섯 분이 생명을 잃은 아주 참사인데 아직까지 유족들이 장례식까지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지금 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화염병이 참사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부분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총리로 임명이 되면 용산 참사 현장 방문하시고 또 대통령 대신해서 고인들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유족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또 실상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종률 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유가족, 유족이 나와 계시지요? 후보자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명숙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얼마 전에 사생활, 3000쪽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다 이렇게, 수사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묻고 싶은 것은 공권력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 6명이 죽었습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으로 인해 진압한 그분들의 사생활이 우선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권명숙 참고인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께서는 후보자에게 질의를

할 권리가 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권명숙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추석 안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경북 영천 출신 정희수 위원입니다.

참 후보자께서 아주 예의가 바르시네요. 대부분 보면 참고인은 뒤에서 한다고 해서 의자를 안 돌립니다, 관행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되는데 일일이 의자까지 돌려서 참고인 얼굴을 대면하면서까지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 태도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품격에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나중에 총리가 되시고 나서 더욱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정희수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집이 한 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채입니다.

○정희수 위원 두 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후보자 부인께서 이렇게 주소지를 옮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땅 뭐 이렇게 취득한

적 있습니까, 주소를 이전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일생에 땅은 사 본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위원님이 아파트에 있는 땅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험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땅을 사 본 적이 없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신용 사회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최근 일간지를 보니까 남해안 어떤 마을에 어떤 신용불량자, 개인 채무 빚을 최고 많게는 한 1억까지 빚진 분들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아하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법 내용을 몰랐던 거지요, 마을 분들이.

섬사람인데 육지의 누군가가 와서 전단을 뿌리면서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것을 알선했 주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분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1억까지 빚진 분이 채무 탕감을 다 받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연쇄적으로 그 부담을 안게 되니까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과 또 국가의 개인 채무 탕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억하기로 선진국은 한번 자기 신용이 불량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사회에서는 뭔가 하기 힘든, 그런 뭔가 패널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두 번 다시 그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재주 좋은 사람은 빠져나가서 그런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신용사회 정착은 상당히 요원할 것 아닌가.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또 금융 전문가이시고 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시고 난 후에 이러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국가 기강을 또 바로잡아 주어야 될는지 그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200달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도착할 때는 백 한 구십 달러 정도 됐었는데 외국인 지도 교수가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갔는데 은행에서 그 자리에서 임시수표 5장을, 은행 계좌를 설정해 주고 임시수표 5장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수표책이 오는 것을 봤는데 아, 이게 바로 신용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엄격한 사회를 속에서나 신용 사회가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금융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패자 부활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용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패자부활전의 기회로 삼고 그 대신에 다른 면에서는 아주 엄격한 금융 집행을 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훌륭한 신용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그게 정석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패자부활전 한 번, 1회에 허용한다 하면 1회까지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피

해 나갈 수 있다 이거지요. 왕창 한 번 일 저지르고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신용,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강한 규제와 법이 집행되어야 선의의 그야말로 열심히 일해서 평생……

유예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1억의 빚을 졌다, 그것을 유예를 시켜 주는 겁니다. 평생 갚아 나가라, 이런 것은 되지만 그것을 아예 소멸을 시켜 준다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는 정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큰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고, 사실 저는 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는 요새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미소금융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4대강 살리기, 대운하는 그때 찬성을 안 하셨다, 4대강은 찬성하신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임위가 국토해양위원회인데 저도 4대강 살리기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년 홍수 피해로 한 3조 원 가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한 4조 원 정도, 그것만 하더라도 한 7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그것 몇 번만 하더라도 한 15조가 넘는 예산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라 경우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국토부의 전문가 자료를 보면 2011년에 한 8억t 부족하고 16년에 10억t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개월 중에 여름 한철, 한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총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 넘도록 4대강의 하상이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홍수나고 넘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준설을 해서 수심도 어느 정도 깊게 하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가동보로 환경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울산의 태화강이 그렇게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나서 수질과 모든 것이 좋아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환경 4대강 사업만큼은 하나의 의지를 갖고 후보자께서 나중에 총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잘 만드셔서 대한민국의 불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좀 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의 동감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배우자에 관한 얘기를 가급적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지금 참고 참습시다라는 이것은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미술품 판매 문제인데, 확인 중 그랬다가 독촉을 또 해서 어제 5900만 원 했다가 오늘은 610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산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좀 밝히기 어렵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4점을 팔았는데 6100만 원이거든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두 가지 논점인데, 우선 묻겠습니다.

배우자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아마추어 작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제가 직접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99년에 처음으로 출품했더라고요. ‘표현과 발언’이라고 하는 그룹에 첫 작품을 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새내기 작가,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작가 그림 한 점에 1600만 원을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직접 ‘한국의 그림가격지수’라고 하는 책을 구해 보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 화가들이 전부 나와 있고, 예컨대 그 유명한 천경자 씨는 그림 가격으로 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열두 번째로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천경자 씨의 팔린 그림을 보니까요, 1100만 원에 팔렸는데 유화가 엽서로 따져서 대략 5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배우자의 그림은 1600만 원 썩에 팔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뭐…… 후보자께서 자주 그렇게 용어를 쓰시지만 잘 아는 지인이 그냥 좀 주고 대신에 그림을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은 화랑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몇 사람을 더 한번 제가 예시하면 윤중식 작가보다도 그림 값이 비싸고요. 이만익 작가, 우리나라 톱을 달리는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냥 접근했거나 아니면 선의로 그림 하나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용돈 비슷하게 주었거나 둘 중의 하나로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된 단 말이지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후보자에게서도 잘 모르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저희 집사람이 유화 이른바 오일페인팅을 99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강운태 위원 글썄……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워낙 미술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은 있고요.

○강운태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전에 가서 입선을 몇 번 했어요.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중에 이따가 아마 저녁 한 다음에 또 보충시간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술대학뿐만 아니라 미술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전문 작가들이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호당 3만 원 내지 5만 원—유화입니다—그리고 잘나가는 신인 작가가 호당 10만 원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석이 안 된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미술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100만 원 하지만 나는 저것 1억 주고 사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좌우지간 그런 정황을 알아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나중에’라는 게 언제 ……

○강운태 위원 이따가 나중에 저녁 먹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위원님, 몇 말씀 ……

○강운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명쾌하시려면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가서 그래요, 지금 벌써.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사실 그림 파는 데 대해서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엿저녁에 물어봤더니 판 것이 모두 다 100호예요. 그렇고……

○강운태 위원 100호라 하더라도 계산해봤더니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00호 그림이고……

○강운태 위원 그러면 그림 가지고 계속 얘기할까요, 그냥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그림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마음대로 하십시오.

○강운태 위원 자, 잠깐 한번 바꿔 볼게요, 정책 검증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아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 검증 좀 하겠는데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바로 후보자께서 쓰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강운태 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저서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를 강하게 주장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셔야겠지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재벌에게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도 주고—은행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텔레비전 방송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총리가 되시면 그것을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현 정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미디어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데……

○강운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요, 내정자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기왕에 책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경제학을 공부하는 청년·학생

들이 보는 책인데 그 책에서 금산분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까지 이렇게 소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하냐?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이 지금 미디어법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금산분리에 관해서는 그 책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것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금산분리의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총리가 되시면 원상회복 한번 해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미 법이 4%에서 9%로 됐으니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왕에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대단히 나약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여러 번……

○강운태 위원 그냥 따라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여러 번 여러 번이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된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커다란 효력, 그것이 있으나 마나 큰 차이가 없었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의 대표 작품으로, 첫 작품으로 한마디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 버렸는데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말에 그 실랑이를 치다가 금년 3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방망이를 쳐 버렸어요.

보니까 10대 그룹이 IMF 전에 자산이 GDP의 57.9%였는데 작년 말에 74%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계열사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장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것이 과연 온당하냐?

소신 한번 밝히세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교수일 때는 저한테 물어봤다면……

○강운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해요. 지금 국민들이 그나마 일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저분이 교수 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이 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답변을 들어 보면 ‘아, 그것은 이미 법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제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버리니까 그것마저 이제 안 되겠구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를

그렇게 너무 약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소신이 있어서……

○강운태 위원 알았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소신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운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밖에 안 돼요, 지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자 자, 시간 다 가네요. 시간 다 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오늘 당장 제가 마음먹는다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강운태 위원 이것 좀 빼 줘야지, 안 되겠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 또 정부를 표방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화장한다 그래서 본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세수해 버리면 금방 본래 모습이 나오잖아요. 최소한도 성형수술을 해야만 그런대로 조금 이게 긴가민가 그런 건데……

성형수술을 할 분이 누구냐? 만약 들어가신다면 정운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위원장 정의화 나중에 다시 한 번……

○강운태 위원 아니, 1분만 빼, 1분만. 이것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 정의화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분도 똑같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강운태 위원 사람이 말하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특별히 제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 들어가신다면 성형수술을 해야 할 분이 정운찬 후보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서민 정부로 평가 받으려면 최소한도, 최소한도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부자 감세 철회하고요, 철회. 부자 감세 철회하고, 내년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철회하고.

두 번째는 재벌에 대한 잘못된 정책, 재벌에게 텔레비전 방송국 주고 또 은행 주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 허용하는 것 고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년 예산, 엄청난 팽창예산입니다. 그것도 국가 재정이 거덜 나 가지고 국가 빚이 400조가 넘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년 재정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서민들 주택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되고,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충고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그냥 허수아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예, 차명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관련해서 공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가지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근 참고인님 계시지요? 그리고 심명필 참고인,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제가 여쭙 보는 질의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똑같은 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가 원래 예정된 그 길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지금 교량이 있는데 자 우리 박창근 참고인,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둘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있는 교량에 손을 가해야 되는 정도가 둘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참고인 박창근 차이가 납니다.

○차명진 위원 차이가 납니까?

○참고인 박창근 예.

○차명진 위원 어떻게 납니까?

○참고인 박창근 대운하 때는 명확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이번에 4대강……

○차명진 위원 간단히 대답……



○참고인 박창근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좀 차이가 납니다.

○차명진 위원 우리 심명필 참고인님!

○참고인 심명필 지금 한강과 낙동강을 예로 들면 한강에는 지금 한 66개 정도 또 낙동강도 66개, 합쳐서 한 132개가 있습니다, 교량이.

이게 운하가 되는 경우에 한 4분의 1 정도를 전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반 정도는 기초를 보강해야 됩니다, 나머지 반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한 반 정도를 기초만 보강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면 개축이라는 것은 거의 신설 수준인데 이 4대강 사업에서는 하천에서 바닥만 일부 보강만 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4대강과 대운하에서는 벌써 교량에 대한 어떤 부분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바닥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의 기둥을 조금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4대강은 배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배 높이를 고려해서 기둥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하는 기둥을 다 높여야 됩니다. 교량을 뜯어서 상판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수심을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 과연 4대강과 대운하는 수심의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우리 박창근 참고인 이것 어떻습니까?

○참고인 박창근 예,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당시 5000t급 배가 다니려면 수심이 6m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동강 같은 경우에 주 구간은 6m이고 상류구간은 4m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6m 이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 면에 있어서는 한반도 대운하랑 같다고 저는……

○차명진 위원 거의 차이 안 난다, 예.

심명필 참고인님!

○참고인 심명필 낙동강의 길이 하면 거의 한 400, 500킬로가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주구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구미까지 구간은 한 6m 수심을 유지합니다. 구미에서 상류는, 저쪽에 한 예천 밑에 정도 되는데 4m를 수심을 유지하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저 안동댐까지 가는 데는 한 2, 3m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6m 수심을 유지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계획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자, 후보자님 이렇습니다.

배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4대…… 대운하는 수심이 거의 일정해야 합니다, 배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4대강은 사실 물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심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2m에서 6m까지.

자, 그다음에 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나가는 데 보를 설치합니다. 그럼 우리 박창근 참고인님, 그 보의 규모와 그 보의 형태에 있어서 4대강과 대운하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참고인 박창근 당초에 작년 연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하가 되

려면 1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보가 있어야 대운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에 보면 보의 높이가 10에서 한 십삼사m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분명히 10m 이상 되면 대운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가 10에서 십삼사m 되면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동보 문제는 이것은 한반도 대운하 때도 가동보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가동보 얘기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차명진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심명필 참고인님!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일수록 원래 탁 짧게 얘기하는 법입니다.

○참고인 심명필 예, 보의 높이는 낙동강은 한 10m, 십이삼m가 맞습시다라는 영산강이라든지 금강 쪽은 보의 높이가 10m가 되지를 앓고요.

그다음 보의 높이는 우리가 대운하를 하는 경우는 보의 개수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의 높이를 더 높여서 물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 개수를 토털 16개를 한 이유는 가능하면 수심을 낮게 하고 또 큰 배가 다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명진 위원 이렇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차명진 위원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4대강에는 보의 관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가 이렇게 보를 넘나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운하는 보마다 배를 들어서 옮기기 위해서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 관문이 상당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듯이 4대강 살리기는 물을 거의 찰찰찰 흐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의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면서 여러 개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 대운하는 보의 높이를 높이 해서 한꺼번에 물을 깊이, 솟자를 적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4대강과 대운하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물 흐름을, 주변을 이렇게 파지요, 그렇지요? 저수로나 둔치를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박창근 참고인?

○참고인 박창근 예, 물량을 보면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물량이 8억t을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5.7억<sup>m³</sup>인데 비중량을 곱하게 되면 9억t쯤 됩니다.

준설하는 물량은 오히려 한반도 대운하 때보다도 1억t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준설하는고 하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4.4억<sup>m³</sup>를 준설하는데 부산에서 안동까지가 330km인데 폭을 200m로 해 가지고 깊이 평균적으로 6m를, 그러니까 330km 구간을 폭을 200m로 해서 깊이를 평균 6m로 쪽 다 파야 4.4억<sup>m³</sup>가 됩니다.

○차명진 위원 예, 심명필 참고인!

○참고인 심명필 예, 조금 전의 그 얘기에 우리가 일부에서 6m를 판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라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례로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6m를 파지 않습니다. 수심을 6m 유지하는 것은 보의 높이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준설하는 깊이는 평균 1.3m입니다. 그다음 다른 강은 1m가 되지를 앓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렇습니다. 후보자님!

4대강 살리기는 물을 맑게 해야 되는 것

이기 때문에 물길 말고 주변에, 둔치에 습지 같은 것 그리고 녹지를 형성하게 해서 거기를 다시 정비해서 파야 됩니다.

대운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외국의 대운하가 보시면 되지만 주변에 시멘트로 이렇게 주로 해 가지고 물길만 제대로 살리면 되고 주변은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의 물길 주변의 공사 여부는 다릅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는 꾸불꾸불해도 되지요, 배가 안 지나갈 테니까. 그러나 대운하는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최소 200m, 300m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형이 직선으로 돼야지 그게 그냥 이렇게 뱀처럼 꾸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박창근 참고인, 그러면 이런 약간의 사소한 차이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4대강에서 대운하로 바꾸기가 쉽다 이런 말씀이신데 바꾸는 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참고인 박창근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 그러니까 운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정 수심을 확보하는 것하고……

○차명진 위원 아, 비용 얘기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참고인 박창근 비용은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 일정 수심을……

○차명진 위원 안 했으면 됐고요.

심명필 참고인!

○참고인 심명필 일부에서 대운하라는 그런 전 단계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거의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도 운하는 추진하지 않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명진 위원 비용 말씀하시라고요.

○참고인 심명필 여기에서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대운하로 간다면 사실 많은 비용과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대운하를 건설하는 비용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4대강에서 대운하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기존에 또 4대강 살리기 하느라고 했던 것을 매몰비용 처리해 버리고, 완전히 허물고 다시 해야 될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먼저 참고인들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심명필 참고인이 시지요? 먼저 여쭙어 보겠습니다.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가 필요합니까?

○참고인 심명필 지금 보는 우선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수라든지

물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모으면 혹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9조 원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준설까지 같이 필요한 것입니까?

○참고인 심명필 준설은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기존의 제방이라든지 댐 쌓는 대신에 새로운 개념으로 오랫동안 쌓여 있던 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홍수와 가뭄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와 준설이 꼭 필요합니까?

박창근 참고인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창근 저는 홍수도 막아야 되고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물도 확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류 구간이 아니고 지류 구간입니다.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10명의 인명 피해와 2300억 원의 홍수 피해가 났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지류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홍수 피해액의 3.6%가 국가하천에서 일어났고 나머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분류에다가 홍수 공간을 많이 확보해 봤자 지류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전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대 이렇게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대강이 아니라 지류 쪽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참고인 박창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 그러면 가뭄을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심명필 참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창근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심명필 기후 변화라는 것은 결국 가뭄과 홍수, 물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이런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뭄이라든지 물 부족 문제, 물은 수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얼마나 모자라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참고인 심명필 저희들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매 10년마다 20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근래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5년마다 수시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세운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2016년도에 한 10억㎥ 정도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는 그 자료들만 해도 지금은 대폭 수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박창근 참고인께서는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박창근 그것은 우리가 통계 자료를 너무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라는 하여간 저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낙동강과 한강 유역에 지난 30여 년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안동, 구미, 대구, 김해, 부산, 양산과 같이 대하천 옆에 있는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한 적이 없고

독극물 및 수질오염 때문에 제한급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부터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 62개 시·군인데 이것은 전부 산간 농촌 도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정부의 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이 400만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산간 농촌 지역, 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태화강 사례를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태화강 사례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창근 태화강은 분명히 5급수에서 2급수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된 준설토를 걷어냈거든요. 거기에 왜 오염된 준설토가 있었는데 하니 거기에 방사보가 있었습니다. 보가 하나 설치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바다로 못 나오고 쌓였지요. 그래서 태화강의 오염물질을 걷어내고, 다음에 방사보를 뜯어내고 즉 철거를 한 거지요.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사보를 철거했고 오염물질을 걷어냈다는 건데 지금 현재 한강 낙동강 같이 4대강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에 모래가 잘 살아 있습니다. 극히 일부 구간만 오염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설을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서 가동보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

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창근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로 들어서는 보 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영산강 하구언도 우리가 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언도 보면 가동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하천바닥, 그러니까 영산강 보 바로 위에 저질을 떠보니까 썩어 있고 거의 무산소, 산소가 하나도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후보자께서는 준설통사는 일단 시작을 해도 속도조절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준설을 먼저 시작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는 준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창근 제가 어제 남한강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해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남한강 같은 경우도 대규모 준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설을 하고 다음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는데 그것이 팔당상수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준설이 필요하고 보를 설치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창근** 저는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를 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4대강은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4대강 살리는 어떤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향은 전혀, 조금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속도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4대강 살리기를 제대로 하자는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카운트파트너로 같이 앉아 가지고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혀 그러한 논의가 없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22.2조 원의 국책사업이 이와 같이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할 경우에는 만약 그것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되었을 경우에는 환경파괴 그리고 엄청난 국가재정낭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창근 참고인께서는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차분하게 생각하고 하자라는 표현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계속 후보자께서 4대강에 찬성한다라고 주장하신 근거가 산림녹화 50년 동안 했다, 그러니 이제 강도 한번 정비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연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경제효과가 얼마 날 수 있다,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자연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파괴되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하게 하라는 법률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토에 관한, 하천에 관한 신중한 평가체계들 계획체계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절차와 평가·조사·토론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질이나 홍수 문제 등에 대해서 대체적인 지식은 지난 한 2주일 동안 습득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짧은 업무과악기간을 감안해 볼 때 상세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자세하게 업무 파악한 다음에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준설품사가 시작하는 게 10월 초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 끼고 이러면 상세하게 업무과악하시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돼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과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말씀하신 것은 준설품사를 일단 시작해도 속도 조절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한번 시작해 놓으면 그것이 일부 구간에서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를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를 못 할 테니까 사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과악과 토론이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중단하시는 것이—일단 좀 미루는 것이

—맛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과약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그러나 규모나 속도 이런 데 대해서는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관해서 오전 오후 연이어 질문을 했고, 이제 미진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명필 참고인 계시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권경석 위원 이게 대운하가 되려면 낙동강의 경우에 한강과 연결해야 원래의 대운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심명필 작년, 이 전에 나왔던 초기의 대운하 계획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는 수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참고인 심명필 그것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당시의 계획에는 신설 수로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수로가 없으면 선박이 통행할 수 없으니까 운하가 될 수 없지요?

○참고인 심명필 운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갑문과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높낮이……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참고인 심명필 예, 갑문과 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경석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수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거지요?

○참고인 심명필 예.

○권경석 위원 지금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준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낙동강에 수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니까?

○참고인 심명필 아마 수로라기보다 갑문이 될 건데요, 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높이 차이를 조정하려면 새로운 설계와 비용,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어느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니까?

○참고인 심명필 지금 당장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권경석 위원 구체적인 산출된 자료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참고인 심명필 그렇지요. 왜냐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낙동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오전에도 제가 질문했습시다마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또는 낙동강의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은 지금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지요?

○참고인 심명필 저희들 낙동강 혹은 한강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는 기존의 계획도 있고요, 하천기본계획이랑 국가에서 정하는 많은 계획들이 이미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엄청난 준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참고인 심명필 예, 계획은 오랫동안 세워 왔고 다만 예산 관계로 실질적인 집행

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뤄져 왔을 뿐이지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껴 왔고, 또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참고인 심명필 맞습니다.

○권경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5조 내지 6조가 반복 투자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정비사업은 벌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해경 증인 제시지요?

○증인 이해경 예.

○권경석 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해경 서울대학교 교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맡은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증인 이해경 2004년 3월부터 교원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정운찬 후보자께서 겸직허가에 관한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해경 예,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yes 고문 겸직허가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해경 예.

○권경석 위원 언제였습니까?

○증인 이해경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권경석 위원 대충 언제쯤 됩니까?

○증인 이해경 아마 후보자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걸로 봐서는 총장 임기

끝나고 나서 언제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이해경 지금 현재 학교에서 겸직허가를 하고 있는 게 사외이사나 벤처기업의 이사나 감사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감사 직책에 관한 건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고 겸직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문 같은 자문위원 활동 그런 건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인사지침이나 규정상 고문직에 대한 겸직허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이해경 없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도 없습니까?

○증인 이해경 예, 없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고문직은 사전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운용되어 왔다, 이 말이죠?

○증인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후보자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에 질의를 한 결과 단순한 조언이나 자문활동은 겸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다만 대학의 장이 판단할 그런 사유로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면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였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후보자에게 배우자 그림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신고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 창작품일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지금 서면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까?

그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적 창작품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미상이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아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은 지식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시에는 경고나 시정조치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희 집의 그림이 전부 저희 집사람이 그린 거고 사 가기 전에 그 그림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나온 답변과 또 우리 후보자께서 발언한 내용 등등 이게 일치한다고 보는데 현재 배우자께서는 예술품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기가 그린 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사고팔고 하는 일은 안 합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몇 점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자작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어제 오늘

아마추어라고 한 건……

○권경석 위원 아니, 지금 몇 점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집에 대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수입니다. 취미로 하는 겁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비록 그 가격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예술품은 일단 신고대상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기가 그린 것도 그렇습니까?

○권경석 위원 자작품 여부 불문하고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일단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권고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박경규 참고인, 계십니까?

○참고인 박경규 예.

○권경석 위원 70년 전후해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입영한 그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70년 전후해서?

○참고인 박경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리령 44호에 의해서 실제 관계 병무관계 서류가 보존기간이 다 지나서 파기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권경석 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 게 있는데요. 70년하고 77년도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제가 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권경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70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일단 징집 대상으로 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약 54%가 연기되거나 면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확인 못 하신 모양인데. 그리고 77년의 경우에는 무려 67%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인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고인 박경규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외출국 허가 시에 후보자에 대해서 조건이나 기간, 연령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까?

○참고인 박경규 아까 여러 번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독자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허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이혜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정운찬 후보자께서 yes24의 고문직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신청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나요?

○증인 이혜경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고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신청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증인 이혜경 예, 지금 고문에 대해서는

검직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청 대상이 서울대 규정에 특정돼 있기 때문이지요? 상장법인 사외이사, 벤처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증인 이혜경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혜경 예.

○최재성 위원 그러면 검직해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혜경 검직해도 좋다는 답변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검직허가를 하고 있는 기준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교육공무원법 위반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입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한 포지티브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은 이것 이것이다. 그게 상장법인 사외이사고 벤처기업의 임원과 직원입니다. 이혜경 증인님 맞습니까?

○증인 이혜경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영리업무는 할 수 없고 다른 것들은 다른 직무를 겸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비영리법인에, 아까 말씀 나왔던 하나학원 같은 그런 경우도……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비영리법인 그것은 신청해서 당연히……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증인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직무에 전념할 수 없게 시간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비영리법인도?

○**증인 이해경** 예, 그게 직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최재성 위원** 하여튼 그것은 사족 같은 얘기인데요. 비영리법인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증인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교수로서 승인받아야 될 두 가지를, 영리법인일 경우에 승인받아야 될 두 가지를 서울대 규정에 명시한 게 아까 얘기한대로 벤처기업과 상장법인의 그 해당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지금 고문으로 계속 고문료만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데는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문으로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해경 증인이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경 증인께서 후보자가 만약에 내가 영리법인의 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고문료를 한 번에 받든 열 두 달에 나누어서 받든 고문료를 받는 그런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문하셨겠어요? 이해경 증인, 된다고 하셨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혹은 ‘안 된다’ 둘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요.

○**증인 이해경** 그런 질문은 하실 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걸로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최재성 위원** 그러면 영리회사 고문이라고는 얘기하셨습니까?

○**증인 이해경** 그냥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대충 기억은 나는데요.

○**최재성 위원** 영리회사 고문이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증인 이해경** 고문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고문 같은 것들은 교수님들이 자문 위나 이런 활동은 많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최재성 위원** 그래서 영리회사인지는 모르고 하신 건가요?

○**증인 이해경** 그렇다기보다는 그 고문이 자문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고, 이제 그것은 어떤 직무 아니면 책임,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닐 걸로 제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재성 위원** 하여튼 영리회사인지는 몰랐던 상태지요? 그리고 급료를 받는지도 몰랐던 상태고?

○**증인 이해경** 어쨌든 자문 활동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다면 아니라고 말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자문 활동, 영리회사의 자문 활동이었다고 그러면……

○**증인 이해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해했던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영리회사의 자문 활동으로서 급료를 받는다고 했으면 허락받을 필요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나, 그것은 서울대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대에서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영리법인이고 거기에서 자문료가 됐든 봉급의 형

태로든 돈을 받게 되면 그것은 서울대에서 상담조차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인께서 그전에 얘기했던 답변을 드렸던 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교수로서의 자문 활동이기 때문에 이해경 증인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그것인 줄 알고 이것은 두 가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법인의 활동에 해당하는 벤처기업과 상장법인 사외이사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받을 필요 없다고 하셨던 거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비영리법인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허락받아야 된다고 답변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참 이상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자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 영리행위 금지, 다시 말해서 음대 교수가 음악학원에 자문해 주고 봉급의 형태든 아니면 일시불의 형태든, 자문료의 형태든 돈을 받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득이 1억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법상의 겸직 금지 조항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아래 아래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두 가지 특례사항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영리법인의.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최대한 파면이나 해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이미 파면이나 해임이 됐어야 될 전직 공무원을 앉혀 놓고 일인지하 만인지상 자리인 총리후보자로 적합한지를 따져 보고 있는 아주 이상한 청문회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우기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3월 1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하고 연구 제휴 협약 맺으신 적 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재성 위원 삼성화재 부설 방재연구소하고 연구 제휴 협약.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그러면 삼성 사장단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강연이나 간담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총장 시절에 삼성 사장단 앞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은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yes24 말고 급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자문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지요? 그냥 무료자문이나 아는 관계이고 또 도와주고 싶어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우선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전부 사직을 했습니다만, 여기 총리 지명……

○최재성 위원 지금 다 사직하셨지요, 당연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총리 지명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청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이사 자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것은 물론……

○**최재성 위원** 영리기업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돼서 보수를 안 받더라도, 자문료를 안 받더라도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제의를 받거나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고요.

Y모자 백 회장께서 신동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석상에서 정운찬 총장께서 백 회장 등의 도움으로 서울대 총장이 될 수 있어 그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후보자가 발언을 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18일 날. 일주일 전이지요.

그러면 이 도움이라는 것이 후보자가 표현한 대로 1표의 도움이겠습니까, 박 회장님 1표의 도움? 여기는 백회장님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양반이 아마 그 당시 70세이고 그 양반이 운영하는 회사가 50주년 되는 기념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덕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덕담 중의 하나에 제가 ‘우리 백 회장이 훌륭한 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서울대학 총장 시절에 일부러 대학병원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나성린 위원** 다시 나성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여기 포함해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야당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냥 다음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뭐 조금 하고 또 질질 끌고 조금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주시고 야당 위원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나성린 위원** 이것은 뭐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자꾸 왔다갔다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찢끔 찢끔하고. 국민들도 볼 때 답답할 거예요.

우선 국가공무원법 규정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울대학도 그렇고 법제처도 그렇고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심도 있는 법적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영리행위 겸직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행위 겸직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공무원법에 특례를 뒤 가지고 영리행위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에 한해서는 허가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외이사보다 영리성이 작은 고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법적인 판단을 받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희 스테프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 짓고 사실 저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른 분들이 정책에 대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은 1기 내각에서도 서민 대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기 내각에서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서민 대책 추진 안한다고 난리 치다가 이제 서민 대책 추진 하니까 또 이게 뭐 그냥 하는 척한다, 위장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들어오셔서 서민 대책을 취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인위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정책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정책이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중도실용의 서민정책을 쓴다 하면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 한참 과거처럼 무리하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죠. 무리하게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저번처럼 국정홍보처 같은 것 뒤 가지고 강하게 홍보할 필요가 없지

요, 우리가 진실이 보이면 되니까.

저는 서민대책은 말로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서민, 서민 위하지만 그게 나중에 오히려 서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수도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노동자, 농민 위한다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 농민 먹거리도 해결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친서민정책을 쓴다면 실제로 친서민정책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정말 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친서민정책에 대해서 여기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부가 추진한 게 크게도 마흔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죽 추진하고 계시니까 계속 추진하시고, 또 경제도 살려 가지고 일자리 많이 창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시키고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2기 내각을 시작하시게 되면 우선 당장 필요한 게 사회복지비,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여하튼 참여정부 때보다는 더 많이 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나 GDP 대비로나 또는 총예산 대비로나 강력히…… 제가 재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자정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성린 위원** 저는 이미 정책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대책에 우리가 치중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서민 세제 지원 같은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그동안 소득공제를 안 해 줬습니다. 저소득층 월세…… 왜냐하면 월세 소득공제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무담보소액대출 같은 것 있지요, 마이크로 크레딧 이런 것들도 강화하게 되어 있고, 저신용 근로자 대출 지원 같은 것도 하기로 했고 죽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기억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부자정부다, 재벌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산분리에 있어서 이번에 금산분리를 조금 완화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약하게 완화했는데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 지분을 가져야지 소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수의 입장이었을 때로 말씀드리자면 퍼센티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재벌들이 힘을 합하면 그냥 재벌의 은행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나성린 위원** 그래서 소유란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소유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4%를 10%까지만 한 겁니다. 그것도 야당이 하도 반대를 해서 타협해서 9%로 낮췄지만 그 대신에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함부로 되지 못합니다. 적격성 심사도 굉장히 강합니다. 인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대주주가 여신 같은 데 관여할 수 없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 규제를 다 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단지 사후적 감독 또는 사후적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철저히 해야지요.

그리고 요새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이 유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워낙 다른…… 은행의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다른 수익률 높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재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이전 재벌과 지금 재벌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이전 재벌은 정경유착도 있었고 문어발식 경영도 하고 했지만 그동안에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지금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대우 해체돼 버렸지요. LG 지금 다 분산돼 버렸지요, 그렇지요? LG가 한 네댓 개로 다 분산됐습니다. 현대도 다 분산됐어요.

지금 삼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속·증여세법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삼십 년 내에 아마 지금과 같은 재벌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이 한 역할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또한 많이 있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성린 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줄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은 말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은 외국 나가서 우리 대기업들 로고를 보고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온 세계의 공항에 내리면 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삼성 같은 경우에 오십몇 개의 계열기업 자산 다 합해 봤자 도요타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이 나

가서 잘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이것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나쁘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성 규제, 투명성 규제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또 여러 가지로 기(氣)도 살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도 우리 국민이고 부자도 우리 국민이고 중산층도 우리 국민이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펴고 경제체제를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지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회, 농민이 부자가 되는 사회,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계층 간 갈등을 유도하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총리 후보자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예전의 말씀과 후보자가 되고 나서 말씀에 말 바꾸기가 많은 분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후보자 자서전에 보면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기록이 있으십니다. 그러셨던 것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소위 3불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참여정부와 많은 각을 세우셨던 그런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총리에 지명되시고 나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지난 정부에서 즉 추진했던 것과 같이 후보자의 소신을 꺾고 ‘기여입학제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서면답변에 해 오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여입학제 불가가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백원우 위원 이것 안 보시고 하셨습니까?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고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니까 3불정책 중에서 기여입학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백원우 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여입학제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이것 안 보시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말씀 맞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여입학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리에 취임하시면 평소 소신대로 폐지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백 위원님, 우리나라에 지금 기여입학제는 없습니다. 기여입학은……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롭게 도입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

○백원우 위원 평소 소신은 기여입학제 같은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대학은 절대 안 되고……

○백원우 위원 국립대학은 안 되고 사립대학은 가능하다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좀더 신축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참 오랫동안……

○백원우 위원 평소 소신이셨는데 자서전에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되시면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시기상조다,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오늘날 보자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지금 보시면 시기상조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러나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총리가 되신다고 그래서 다시 기여입학제를 쉽게 도입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스

터디는 한번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백원우 위원 후보자께서는 작년에 ‘국정원에 사찰당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잡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언론에 나왔으니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 친구한테 한 것을 어떤 분이 엿듣고서 거기다 낸 것 같습니다.

○백원우 위원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안 당했습니다.

○백원우 위원 후보자님께서서는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백원우 위원 우리 국민들이 아마 후보자만큼 또는 후보자님보다 더 대한민국에서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오셨다라고 믿는 분 중의 한 분이 우리 시민운동가의 대부이신 박원순 변호사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박원순 변호사님이 최근에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이 돼서 국가가 한 시민을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원로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셔서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의 지평을 넓혀 오셨던 우리 박원순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보도를 통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왜 소송 당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조금

은 압니다.

○백원우 위원 어떤 내용, 왜 소송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소문에 의하면 박 변호사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도움을 주는 주체들한테 이런저런 압력이 있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국정원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이제 총리가 되시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시면 통할하셔야 되는 법무부장관이 이 시민운동을 향해서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겁니다. 저는 국가가 시민운동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하게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박원순 변호사께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하나은행에서 300억 원을 출연해서 하나 희망재단을 설립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증언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라고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압니다.

○백원우 위원 이 ‘아름다운 가게’가 대학 안에다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학예요?

○백원우 위원 예,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박원순 변호사의 말씀은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모범을 보여 오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 가게’를 후원

하는 사유가 무어냐?’ 이것을 국정원 직원들이 그 대학 관계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라고 저희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자활을 돕는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로부터는 많은 예산 지원들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를 만났더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백원우 위원 사회연대은행.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사회연대은행이요?

○백원우 위원 예, 사회연대은행 이사진 가운데 참여정부와 친했던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박원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성민우회라고 오래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중소기업인이 전화가 와서 여성민우회는 불법시위단체라서 후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박원순 변호사가 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 사건 수임하지 마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박원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이것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돼서 이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관할하셔야 되는 법무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이 돼서 여기를 소송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들어가서, 잘 모르니까 들어가 가지고 파악해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적어도 소신 있는, 한때 국민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정운찬 교수님의 소신을 갖고 이런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기본권의 침해는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씨 준 모범답안 읽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생각입니다.

○백원우 위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백원우 위원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을 취하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답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정부에 들어가면……

○백원우 위원 그러면 법무부나 국정원에서 소송을 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한마디 하십시오. 그것이 원로 시민운동가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실상을 파악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기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만약에 그 소송

이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위원 예.

아까 제가 후보자의 처가에 대한 부분을 물으면 화를 좀 많이 내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김 장군님의 장녀인 김 성례 씨를 과외를 가르친 게 69년도 4학년 때 그리고 재수를 해서 70년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것을 좀 고치겠습니다.

1970년에 가르쳤고……

○백원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리고 그 학생이 대학에 실패해서 71년도에 가르쳤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막내인 김성주 씨가 후보자의 부인과 동기이신데 69학번이십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원우 위원 그것은 후보자가 후보자의 부인을 만난 시점이고 그래서 후보자의 장인을 만나게 되는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김씨 가문에 가서 김씨들을 처음 본 것은 1970년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여인들의 오빠가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위원입니다.

다시 세종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문에서 제가 한번 여쭙았는데요. 지금 세종시로 이전 예정된 부처가 9부 2처 2청 아닙니까? 그런데 9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한번 훑어는 보셨습니까? 어느 부처가 내려가게 예정돼 있는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훑어본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봤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돈 위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뭐 이런 부처들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 대상 부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내정자께서는 세종시 지역에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일부러 간 적은 없지만 공주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러……

○박상돈 위원 그게 몇 년도쯤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작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금년이 지금 2009년이지요? 2007년이 아니었나……

○박상돈 위원 2007년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2007년도에 가시면서 지나가셨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저기가 행복도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2007년도에는 기공할 때인데요, 착공.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전체 공정이 한 30% 정도 진행이 돼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25%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24% 정도 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는, 2007년도에는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이냐 하면 행정중심타운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12개 대기업이었는데 그중에 2개 기업은 벌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치를 채 거지요. 그리고 10개 기업이 남았는데 여기도 전전궁궁입니다. 왜 전전궁궁하고 일부 기업은 떨어져 나갔을까요? 사업기회인데 왜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미 이탈되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변경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의……

○박상돈 위원 의지가 약화된 것을 뭔가 눈치채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종시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 보는 것인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충청권 발전 구상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신데 대선 직전입니다. 이때 말하자면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

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십여 차례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례를 들자면 ‘행복도시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얘기하신다든지 또 어떤 때는 ‘누가 세종시가 축소될 것이라고 하더냐? 앞으로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청장도 안 바꾼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대선 직전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축소될 것이라고 하더냐? 앞으로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청장도 안 바꿨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예정대로 당초 계획대로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도 의심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정자께서 9월 3일에 딱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경제학자 눈으로 보기에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난리가 나니까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후회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신문에서는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함으로써 말하자면 한술 더 떠서 두 번 죽였다, 충청인을 두 번 죽인 꼴이 된 거예요. 그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요?

그렇다면 내정자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고 어제

얘기했지만 내정자는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는 국회에 있는 것이지요.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국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행할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만불손하거나 뭘 모르거나 전부 건방진 말쑥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제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를 한 것인지,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원안대로 다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이것은 뭐니까? 소신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계속 물어도 조금도 물려서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비능률이고 지역적으로 봐도 둘로 관청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비능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소신인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런데 소신이라면, 다른 소신은 내정자께서 그때그때마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오셨어요. 이를테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코멘트를 하셨는데 세종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02년 신행정수도 얘기가

나올 때 이후 이때까지, 2009년 9월 1일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22조 5000억이나 투자되는 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코멘트를 안 하셨는데 9월 1일 정정길 실장 만나고 9월 3일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소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건대 이것은 오래된 소신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생긴 소신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이 보여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객관적 사고를 하면서 살자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벌 말씀도 나오고 정치인 말씀도 나왔지만 제가 불가피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재벌들하고 안 만나려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하고도 또 고위관료들하고도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분들하고 만나고, 특히 자주 만나면 제 사고의 객관성을 잃을까 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주에 대해서도……

○박상돈 위원 세종시입니다. 공주는 일부가 들어가는 거지요. 나머지 대부분은 연기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공주가 들어가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 고향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박상돈 위원 그러면 9월 3일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날은 제가 지명을 받은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갑자기 물어보길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날 뭐라 그랬느냐 하면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날 어떤 기자가 ‘후회 안 하느냐?’ 그래서 ‘그냥 경제학자로서 한 얘기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뉘앙스를 갖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 위원님께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없는 저의 힘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또 나라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이것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할 테니까 그냥 좀더 지켜봐 주시고 변경고시 등을 포함해서 금방 해야 할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제가 임명을 받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방금 나성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특히 친서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Y모자 이 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총장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6개월간 총장직 끝나고, 맞습니까? 6개월간 미국에 가서 사시는 데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2006년 7월에 총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지 3년 됐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6개월 동안 미국에 가 있는데 평소에 형제와 같이 생각하는 Y모자의…… 사장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회장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회장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분이 어려울 테니 써라 하고 주셔서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세간에 도는 얘기가 ‘서울대 총장이 궁핍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다는 말이나. 아사자라는 말이나’, 그런 자괴 어린 국민들의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었고 또 평소에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마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정치 초년병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리 국가의 비전이라든지 행정역량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다독이거나 국민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면 감동을 드리지 못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냥 옳김으로써 마치 그게 적은 돈인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인식을 줬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鄭玉任 委員 물론 본인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회장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긴 합니다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청문회를 하면서 「가슴으로 생각하라」라는 자서전을 읽으면서 후보께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가슴에 남는 문구가 ‘쌀밥을 명절 때만 먹어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다 어려운 시절이기는 하지만 옥수수로 연명을 하면서 어머니가 삶바느질을 해 가지고 쌀밥을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빈한한 삶속에서 살아 왔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유사한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에 대한 정책 그리고 서민, 민초들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헤아리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전 재산을 다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봉급도 지금 다 내놓고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야당에서 그동안의 기부금명세서를 내놔라 해 가지고, 정운찬 후보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부금명세가 나왔습니다. 약 4·5·6·7·8, 5년 동안 전부 합하면 한 6000만 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다. 식구들을 먹이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논밭으로 달려 나가고 또 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이 땅의 농부와 상인들, 그리고 공장에서 날밤을 세우는 근로자들이야말로 존경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럼요.

○鄭玉任 委員 본인이 자서전에서 쓰신 글인데요. 정말 이 땅에 기회의 평등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에 대한 기대가 우리 여당, 특히 정부에서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하고 포퓰리즘은 좀 구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당연히 그렇습니다. 옳지도 않은 정책을 많은 사람들의 표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나라에 아주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유학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딱 한 번 편지를 하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



습니다만 그중에 한 문장이 ‘가마 타는 상황이 되면 가마를……’ 가마라는 것 아시지요?

○鄭玉任 委員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가마를 타게 되면 자네보다 가마꾼의 처지를 더 생각하게’ 이런 편지를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댄에는 올바르게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때는 무지로, 또 어떤 때는 이런저런 시간 부족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어머니·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가마 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네보다는 가마지기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보게나’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마 말씀을 확실하게 명심하고 가마를 끄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나라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비단 정운찬 후보뿐만이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로 학자 출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고운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독고운 교수님은 표절을 찾아내는 저승사자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제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표절은 또 그렇다 치고 이중게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고, 제가 지금 정치인이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쟁거리로 때로는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표절, 그다음에 이중게재의 차이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독고운 우선 표절은 남의 표현이나 남의 지식을 자기의 것처럼 공연히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자기 표절은 자기, 여기에서 자기 표절과 표절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절은 자기가 자기 것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 표절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절과 표절의 기준이 엄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자기 표절의 기준과 표절의 기준을 혼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학문의 발전에 저해되고 또 학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鄭玉任 委員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인 독고운 쉽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동차를 사용해서 출근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다시 쓰는 것이고 내가 내 자동차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걸 보험회사에다 보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먹는 행위는 자기가 자기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표절에 관해서는 매우 어려운 기준이기도 하지만, 가장 자기 표절이나 자기 표절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이 다른 독자군을 상대로 할 때는 자기 것을 재사용하게끔 허용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예,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자기 표절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이중게재가 독자가 다를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말씀까지 들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

○鄭玉任 委員 저 1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그만하시지요.

○鄭玉任 委員 다른 분들에게 1분 주시면서 1분 안 주시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꼭 하시겠습니까?

○鄭玉任 委員 예, 1분 꼭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1분 하십시오.

○鄭玉任 委員 다시 독고운 교수님께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처지에서 중복게재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이화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참고인 독고운 예,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아직 45초 남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예정된 보충신문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신문에 협조해 주신 오늘 오신 우리 증인 또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을 드립니다.

이제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논문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독고운 박사는 미안하지만 좀 더 남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 그럴 권리가 있는지는 저도 법조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질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한 바로는 더 이상 증인과 참고인에게 질의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6시 40분입니다,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1분 정도는 더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의화 예, 하십시오.

○강운태 위원 당초에 여야 간에 약속된 대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서 후회가 없는 청문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달고 다니셨던 의혹을 최선을 다해서 털 것은 털어 버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는 청문회가 돼야 되겠고 청문 위원들도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아, 이것 좀 물어볼 걸. 그 자료가 미흡했는데 못 물어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청문회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검증할 것은 최대한 검증하고 후보자도 소신껏 답변하고 이런 청문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큰 쟁점 중의 한 가지가 영안모자 백 회장과 관련된 또 두산그룹의 박 회장, 그 관련 사안이 너무나 지금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 백 회장이……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강운태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인이 후보자에게 용돈을 줬다라고 지금 언론에 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백 회장을 비롯해서 본인들의 동의하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후보자께서도 뭔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도 뭔가 물어봐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하에 여야 간 사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에 반드시 참고인으로 나오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시간까지 지금 아무런 답이 없는데 우리 청문 위원들을 위해서나 후보자를 위해서나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알아봤더니 뭐 외국에 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지금 또 국내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은 다른 분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떳떳하게 좀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많이 힘드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힘듭니다.

○김종률 위원 저희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엄정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힘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김종률 위원 박원순 변호사,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장 좀 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몇 번 만난 일도 있고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합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최근 국정원이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당했다면서 2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아까 물었을 때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최근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민간사찰을 다시 하고 또 국민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또 도청·감청하고 미행하고 하는 이런 민간사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많이는 못 봤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김종률 위원 최근에 보도가 계속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김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 비판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이렇게 소송·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실상을 파악해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가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무부장관이라면 총리의 통할 조정하에 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소송을 취하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실상을 파악해서 일이 잘못됐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소송을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정부 비판자들을 겁주고 또 옥죄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비판을 하면 월급 예금 집 재산 이런 것들을 러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래의 미네르바 판결이나 정연주 전 KBS 사장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민사재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옥죄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 사회단체의 후원자, 특히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이런 정부 비판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단체들의 후원을 꺼리게 될 것을 노리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국가가 법치주의를

질식시키고 또 비판언론이나 비판의사에 어떤 재갈을 물리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시키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총리가 된다면 실상을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가 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변경고시를 가급적 조속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이때 이전변경고시 대상은 원안은,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원래의 14부 4처 2청이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9부 2처 2청에 대해서 ‘조속하게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정 후보자께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다시 무한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부채질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을 보니까 상당 부분 수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당초 실행정수도에서 행복도시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또 다시 국민 분열과 갈

등을 초래할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세종시 백지화는 없다’, ‘총리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우선 후보자의 신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대단히 국회를 우습게 아는 그런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당부의,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또 ‘예산을 어떻게든 더 넣어서라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마치 주머니 싹짓돈 꺼내 주듯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또 충청권에 대해서 마치 무슨 보채는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자칫 충청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청권은 원래 세종시를 오라고 한 적도 없고 달라고 손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 점을, 충청권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충청도를 가볍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충청도를 모두 위하는 방안을 제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러분과 의논해서 계획을 한번 짜겠다는 말씀이었지 어떤 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 정의화 한 1분 더 드리겠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한번 더 기회가 있지요?

○위원장 정의화 가능하면 정리 잘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김종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정책적인 것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의화 계속하세요, 내가 1분 더 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시간 좀 드릴까요?

○김종률 위원 이따 한번 더 하지요.

○위원장 정의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한나라당의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수 위원 정희수 위원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입학시험 보는 것보다 백배, 천배 어렵네요.

○정희수 위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잘되려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해합니다.

○정희수 위원 사실 내가 늘 신경 쓰이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출구전략을 국제공조를 통해서 한다, 이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옛날에 이러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IB 이쪽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산업은행도 IB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하다가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여기에 더욱 겹나는 것은 제2금융권의 부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분야이고 앞으로 경제총리로서의 위상을 또 가지시려면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장만큼은 안정적으로 선진국 금융시장 못지않게 독특한 한국형 금융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융분야의 연봉도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수익을 쫓아서 지나치게 성과급을 지급을 해 줌으로 해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나중에 취임하시자마자 금융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채권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한다 하면서도 결국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시장통합법도 통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영미식 이러한 금융시장을 지향하면서 IB 쪽에 여전히 많은 비중(weight)을 두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롭게 재조명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규제라든가 뭔가를 만들어 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도 쓰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정도의 회복은 이룰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보다 소비를 더 하는 것, 또 소득분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득분배 상황이, 이 정부 탓은 아니라고 아까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동북아 금융허브라든지 여러 가지 구호성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쉽게 단기·중기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분에 맞는 경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벤처의 불을 일으켰는데 그 벤처의 여러 가지 해악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시

독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제2의 벤처의 붐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신성장동력’ 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나중에 총리가 되시면 꼭 잘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림 얘기 좀 계속 할까요, 아까 매듭을 못 지었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선 첫 번째는 시가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값으로 샀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100호입니다’ 이리셨어요, 100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자에서 100호짜리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유화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책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100대 이내에 들어가는 작가들인데요, 이 기준은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게 낙찰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지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봤더니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그림 한 점은 350만 원, 또 한 점은 1000만 원, 또 한 점은 2500만 원, 또 한 점은 2300만 원가량 받으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100호짜리를 가지고 봤더니 강요배 화가는, 100호입니다. 36위인데 2000만 원에 팔렸어요, 2000만 원. 그다음

에 이강소 역시 100호짜리이고 38위입니다. 그런데 10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100호짜리인데 도성욱 화가는 41위인데 2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선의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가만히 되짚어 보니 어제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 아내 그림만을 꼭 갖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추측건대 ‘아, 그렇다면 잘 아는 지인이, 잘 아는 분이 가지고 간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이걸 얘기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이야 저게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강운태 위원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유화를 그리기 시작한 지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던 사람입니다.

○강운태 위원 알고 있어요. 입선도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리고 국전에서 몇 번 입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듯이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만 국전에 온 사람이 제목이 바위에서 나오는 꽃……

○강운태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바위에다 풀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저희 집사람보고 그림 팔지 말라고 정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밥걱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

나, 자기가 그린 건……

○강운태 위원 대충 알겠고요, 위원장 말씀한 것처럼 7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림을 사 가는 사람……

○강운태 위원 잘 모르는 사람이 샀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림을 사 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 갔겠지만 저희……

○강운태 위원 한 사람이 샀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라도 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을……

○강운태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나름대로……

○강운태 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명조로 들리는데 나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책자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격에 의해서 100호짜리가 후보자의 부인보다도 훨씬 더 저명한 분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에 팔려서,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작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유화를 그린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강운태 위원 됐어요. 됐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저희 집사람을 그림 면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잘 그림니다.

○강운태 위원 다음에 아마도 후보자하고 저하고 정리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책상 위에 보면 ‘정운찬 후보자 가계수지 두 주장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또 청문 위원님들도 관심이 계시면 이것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

다.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수입보다 지출이 4200만 원이 더 많고 금융자산은 2005년 말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이 3억 6200만 원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해명이 안 되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경솔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를 하루종일 분석하고 되도록이면 후보자 입장에서 선의로 해석하고 그래서 다시 맞춰 본 것입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수입이 지출보다 4억 59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자산 증가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별게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자료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주장의 차이점을 제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보세요. 일단 이것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답변하세요. 후보자 책상 위에 이게 있습니다. 후보자 책상 위에 안 드렸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여기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래서 ‘3. 두 주장의 차이점 분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왜 차이가 나는가, 강운태 청문 위원은 3억 6200만 원이 오히려 빈다고 그러는데 후보자께서는 오히려 빈 게 아니라 초과한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라는 말이지요.

왜 차이가 나는가, 첫 번째 이유가 3년간 사업소득 수입 그게 3억 669만 원입니다. 후보자의 서류에도 인정이 되어 있습



니다. 기타소득 수입 6054만 원입니다. 임대소득 수입 204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려면 뭔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계산 방식이 이 청문 위원인 저하고 후보자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저는, ‘강운태 위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2008년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2억 2920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억 7465만 원을 직접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작성해 가지고, 간편장부로 일일이 전부 작성해서 세무서에 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이 된 거지요.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간편장부를 한 번도 작성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필요한 경비를 세법상 인정한 게 있습니다. 어제 나성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70~80%를 필요한 경비를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기타 수입의 경우에는 80% 필요한 경비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내용에 따라서 70~80% 사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그대로 저는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라서 인정한 일종의 의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경비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 3년간 필요한 경비는 700만 원을 지출했다, 오늘 아침에 낸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해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10일 전에 자료 요청하기를 사업소득을 비롯한……

○위원장 정의화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이것 빨리 하면…… 이것 숫자를 일부러 내가 다 만들어 왔어요.

○위원장 정의화 이것을 지금 다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이것만 해도 10분 이상 걸릴 텐데……

○강운태 위원 어차피 12시까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나왔다가.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확실히……

○위원장 정의화 물론 그것은 좋은데 다 같이 폐어하게 끌고루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종합 결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결론을 좀 정리……

○강운태 위원 아니, 결론을……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종합 결론을 보면 결국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가운데 2930만 원은 제 입장에서 인정이 됩니다. 2930만 원이 인정이 되어서 이 소득에다가 더하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무리 선의로 판단해 보더라도 3억 3270만 원이 역시 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될 분이 최근 3년간에 알 수 없는 소득원이 3억 이상 존재하더라, 그 꼬리표를 달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양심껏 오늘 아침에 낸 서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제가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세무사·법무사·회계사 다 불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만든 서류하고 후보자께서 만든 서

류 두 개를 국세청에 보냅니다. 국세청에 보내서 우리 청문회의가 앞으로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또는 세 번쯤은 더 열릴 거예요. 마지막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세청에서 어떤 서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는 것을 검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시는 데 동의하면 내가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저도 아주 유명한 회계법인의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강운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명력은 좀 부족하지만, 3억 이상의 예금이 늘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선 아침에 이 표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외에서, 어제든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2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서류의.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거는 제가 이중과세 이런 거는 딴 스토리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벌은 소득 중의 많은 부분이 그냥 필요경비로 되고 일부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것을 갖다가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06년, 2007년, 2008년 저희들의 계산으로 하면 수입이 9억이고 비용이 6억 6900만 원이……

○강운태 위원 제 서류에 붙여 놓았습니

다. 그대로 붙여 놓았습니다.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강 위원님과 저의 분석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강운태 위원 글썄 말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강 위원님의 수지 분석에서 제시된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추가 신고된 해외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운태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주장이 100%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연구비 등 사업수입을 지출해 온 관행으로 볼 때 이중계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연구비 등을 받으면 통장에 그대로 입금시킨 후 필요경비를 그때그때 카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위원님도 확인하셨듯이 제 카드사용액이 일반인보다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제 카드사용액에는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경비와 100%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강 위원님이 지출항목으로 계상한 비용 중에는 여전히 제 통장 구좌에 남아 있는 금액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운태 위원 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의화 아니,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운태 청문위원님께서 주신 이 데이터와 지금 공직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TF팀이 계시지요? 다시 분석해서 어차피 오늘 한 번쯤 더 제가 이 질의를 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지금 제가 하

고 있는데요, 추가로.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좀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입니다.

후보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만 좀……

위원님, 제가 정부에 있는 사람들 오라가라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밤새 가면서 이걸 계산해 낸 회계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위원님 보좌하는 분하고 같이 한번 숫자를 맞춰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강운태 위원 저도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세요.

○강운태 위원 나도 회계사의 자문을 받았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극히 합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국세청에 보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국세청을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에 보내서,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내일이 될지 모래 될지 글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쥐서 서로 간에 이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말하자면 부정하고 ‘내 회계사하고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 회계사, 세무사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면……

○강운태 위원 아, 그러자고요.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우선……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본부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게 아니라 위원님 회계사하고……

○강운태 위원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자료 보내자고요. 당장 불러오자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끝난 걸로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오늘은요.

○강운태 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 계산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빈다는 얘기이고 또 후보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얘기이고, 그런 선에서 이것을 그대로 국세청에 보내 가지고 검증을 받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제가 외국에서……

○강운태 위원 아니,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그럼?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만도 8500만 원인데……

○강운태 위원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그냥 몸이 날아가서 벌어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타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것을 계산해서 직접 본인이 ‘외국에서 강연하고 세미

나 할 때 이렇게 돈이 들었습니다'라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면 국세청이 인정을 하지만 제출이 안 됐을 때 세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80%까지 필요한 경비로 본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한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다 주세요, 자료를.

○위원장 정의화 그러시면 잠깐만요, 위원장이……

○강운태 위원 아니, 후보자가 10일 전에 제출한 서류를 안 주니까 이게 문제지……

○위원장 정의화 강운태 위원님께서도 위원장 발언을 조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두 분의 주장을 다 존중하는 뜻에서 그 자료를 상대방의, 의원실에 보내서 그 회계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국세청에 보내는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을는지 여부는 제가 좀더 법적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위원 제가 후보자에게 꼭 질의할 내용들이 아직 많은데 후보자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문제, 소위 말하면 소득과 지출의 차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썽요, 이렇게 아주 간단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금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이유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해외에서 8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09년에 올린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금을 정산하지 않은 2009년의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2009년에 번 것, 해외에서 번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엔 또는 재작년, 재재작년의 수입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었는데 필요경비를 60원 인정받았다 그러면 40원은 과세감이고 60원은 경비로 쓰라고 해서 통장에다 집어넣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억 충분히……

저는 어제 이 자료를 검토하고서 '아, 이 정도면 강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풀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강 위원님을 제가 설득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회계사한테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기 쉬운 방법으로 써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강운태 위원 아니, 지금 차명진 위원하고……

○위원장 정의화 지금 차명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고……

○차명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은 야당 위원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후보자에게서는 이게 국민들께 지금 다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적으로 꼭 내가 맞다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법 논리와 학문적 논리 그것이 여기서 보는 정치 논리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좀 준비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후보자 주변에 회계사는 있는데 세무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 점은 염두에 좀 두십시오.

제가 후보자에게 꼭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못 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역할·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무를 총괄한다고 그럴까요?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국무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국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대행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세종도시, 행정도시에 관한 계획과 관련해서 총리는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만 총리가 직접적으로 최종 결재를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에 따라서는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후보자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생각, 법과 관련되어서, 대통령도 입법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에 대해서 꼭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러 총리 합니까, 바지총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후보자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세종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을 쉽게 쉽게 외부에 표출했다가 그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쉽게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대통령께 ‘세종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간언을 할 생각입니다.

○**차명진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청문회 내내 후보자에게 꼭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감세문제입니다. 아쉽게 시간이 안 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용산의 유족을 만나셨습니다. 총리로 임명되면 찾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총리에 임명되신다면, 유족의 바람은 추석 전에 제발 좀 해결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리로서 임무를 수행하실 의향이 정말 있으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만큼 정말 이 문제를 빨리 그리고 유족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또 빨리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쪽입니다. 1만 페이지 중의 3000쪽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생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일을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 제 스태프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 때문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렇게 보

고를 받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수사기록의 목록을 혹시 보지는 못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정희 위원** 그 수사기록의 목록을 이미 법원이 검찰로부터 받아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하고 그리고 이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법원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목록은 대부분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경찰들 진술이 특별히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사생활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것이? 결국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가리면 그만입니다, 정말 공개하기 싫으면. 그리고 증인으로 부를 때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중의 하나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그중의 아주 일부만, 극히 일부만 다시 공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회 진술에서는 ‘들어갈 때 시너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1회 진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다가 검찰에서 약간 공개된 두 번째, 2회 진술을 보니까 ‘1회 진술이 잘못됐다. 나 그런 교육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찰특공대의 진술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서 한 사람의 진술이 1회는 공개되고 2회는 공개되지 않고 이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고 이미 법원이 명령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행하지 않는 검사는 검찰사건사고규칙에 따라서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이 청문회 끝난 다음에 스태프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후보자님, 향후에 국정을 운영하실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논리가 대단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셔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셔서 별도의 그런 반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교차보고를 요구하시든가 그리고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요구하시든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뜻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틀을 바로잡으려면 그러한 노력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다 믿지는 마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동안에 바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을 다 감안해서 이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종적인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사기록의 공개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이 1심 재판 만료 기일이 됩니다. 그전에 공개를 하셔야 용산의 유족들이 최소한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는 당연히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례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2005년에 종로구의 청진 6지구 재개발 문제에서는 철거민들에게 임시상가를 지어 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흑석동에서는 개발지구 내에 시장 개념이긴 하지만 역시 임시상가를 제공했고 임차권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마치 흥정하듯이 ‘얼마 줄래’, ‘얼마 받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또 지금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생각하면 돈이 요만큼이 아깝고, 그리고 이만큼은 못 주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고, 가능한 한 많이 양보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일반 상식선에서는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의……

○이정희 위원 재판 중인 것은 거기서 일어난 충돌에 관한 것이고요, 보상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민사 관계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세 번째는 거기에 지금 이 용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대위 활동을 하다가 수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대위 활동이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풀어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추석 전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사람들은 추석을 쇠러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배 상태에 있고 이렇다면 다 같이 마음이 풀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그리고 모두가 좀 마음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한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 번째 문제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이정희 위원 세 번째 문제는 용산 범대위 활동을 하다가 수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형사사건 문제는, 수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수배는 해제해서 추석 때 함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벌써 4개월, 5개월 넘게 유죄 아닌 유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결단을 보여 주셔야 저는 용산사건을 총리에 임명되시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다는 후보자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픈 가슴의 상처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도 아까, 권명숙 씨던가요?

○이정희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분을 보자마자 이 세션(session)이 끝나고 나가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봤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총리에 임명된다면 빨리 유족들을 만나는 데까지는 확실히 약속을 드리고, 지금 저한테 이것 이것 하라고 주문하신 것은 경청을 하고 스태프들하고 의논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기부금 내역을, 법원 자료를 아까 보았는데 2004년도에 1400만 원, 2005년도에는 1300만 원, 2006년도에 940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 1440만 원, 이렇게 매년 기부금을 1000만 원대로 죽 해 오셨네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이 나눔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고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에 있어서 진솔한 자세로,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그런 일단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권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남은 여생을 세상에 갚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권경석 위원 후보자께서는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 이것이 지금도 아직 소신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경제학자로서는 아직도 소신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지



금 생각 중입니다.

○권경석 위원 이 제도는 원래 ‘재벌은 선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재벌은 선이 아니다, 뭐 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벌이 가졌건 누가 가졌건 은행은……

○권경석 위원 아니,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그런 제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권경석 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우리 대기업은 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오늘날 우리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적이 증명해 주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인정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금산분리 내지 은산분리를 계속 주장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이것은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근대국가를 만들었던 나라들이……

○권경석 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금산분리 내지 은산분리 제도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도 때문

에…… 우리나라 은행 중에 국내자본이 50% 넘는 은행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마 우리은행은……

○권경석 위원 우리은행 하나죠?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다 넘어갔지요?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은산분리 정책이 그대로 고수되거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금산분리 완화나 은산분리 완화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잠재적으로 입는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로 취임하면 금방 바꾸겠다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겪으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떤 걸 느끼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어려서부터 정직, 성실, 근면 이렇게 살라고 배워왔고 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완벽에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해서 이번 청문회가 앞으로의 저의 생활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권경석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이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를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아마 후보자께서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걸 실감했을 것이다, 공

감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공감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서민층과 상류층 간 인식의 차이가 그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다수 국민의 정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깊이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공감합니다.

○권경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너무나 다양하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일일이 찾아서 챙기지 않으면 누락될 경우가 많다, 놓치기 쉬운 게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바로 그겁니다. 제가 너무 챙기지 않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아마 또 절감했을 겁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규정들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한 측면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예를 들면 검직금지 이것만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 내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선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공무원 검직이 적법이나 불법이나 하는 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제도 미비, 입법 미비 차원에서 문제 삼아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재산등록 이거 마찬가지로입

니다. 배우자의 미술, 예술품 가액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등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작품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어떻게 아느냐,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논란의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걸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고, 또 Y모자 1000만 원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과연 포괄적 뇌물이나 아니냐에 대한 애매한 기준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직자의 포괄적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이게 2대 요소입니다.

그러면 교수가 자문한 내용이 과연 직무관련성이나, 또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례들이 보도되면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서 고운 눈초리로 보지를 않습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들 만약에 총리로 취임하시면 깊이 챙겨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고……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세종시 관련 후보자의 견해는 사건이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아직까지 사건입니다.

○권경석 위원 아니, 사건이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권경석 위원 이런 사건 발표가 얼마나 큰 물의와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도 절실히 느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오늘 본 위원은 이 네 가지 문제가, 제가 직접 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소회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슴 깊이 새겨서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각종 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우선 총리후보자 청문회는 국회에서 청문 위원들이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과 정책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이지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홍보해 주거나 또 감싸 안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에게 제기한 문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리이고 응당한 의무이기 때문에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께서 야당에서 후보자의 흠결로 지적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도 미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석의 차이를 들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지금 제도적 미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다른 곳에서 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두 가지 조항 외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공

무원법 위반입니다.

총리실 관계자가 영리기업의 고문을 하고 2년에 1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총리후보자는 하실 말씀이 없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죄가 아닙니다. 야당 위원은 한 번도 뇌물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총리는 그렇게 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청렴의무를 위반한 거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파면감이라는 겁니다.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중점적으로 이걸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주민등록법은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세금탈루, 이중국적 이것은 분명히 본인과 본인 가족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인의 고액 미술품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고액으로 판매한 이후로는 스스로가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병역기피 의혹, 신동아 기사…… 모 언론에 나온 복수의 기업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의혹, 이것은 만약에 의혹이라고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또한 분명한 위반입니다.

장남의 국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국적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확인 중이라는, 이 자료 목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까? 아셨을 것 아닙니까, 이번 청문회 앞두고는?

그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군대를 한……

○최재성 위원 아니, 참…… 제가 정말로

답답한 게,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  
리…… 말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자료에 그  
렇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  
황 설명하시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저한테  
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  
까?

○최재성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좀 빼 주십시  
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말  
씀 들어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  
금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최재성 위원 아니, 이걸 좀 빼 주세요.  
왜냐하면 내내 어제오늘 그러시는데 저희  
들이 답변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  
제가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  
시니까 제한된 시간에 저희들이 쫓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묻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계속 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9월 16일 미국 국적 포기  
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였다. 국적  
상실 절차, 미국에서의 상실 절차가 완료  
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아드님하고, 장남하  
고 상의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상의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 절차도 그렇게  
알아보시고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전에는 몰랐  
습니다만 그 후로 알았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이렇게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지금 법률이나 규

정에 입각해서 밝아 나가고 계시는 겁니  
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누가 검토했습니까? 직접  
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저희 스태  
프한테도 물어봤고 또 바깥에 있는 제 친  
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최재성 위원 직접은 안 보시고요? 직접  
그 관련 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안 보  
시고 다 물어보시고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난 2주일 간  
은 저한테는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너무 업무도 과약해야 되고 그래서……

○최재성 위원 죄송한데요, 긴가 아닌가  
말씀하시면 되지요. 이것은 단순한 사안인  
데 자꾸 그렇게 과정 설명하시고 그러면  
제가 좀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 말씀 못  
들어주는 것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모든  
일을 다 규정을 보고서 하십니까?

○최재성 위원 잠깐만, 이것도 좀 끊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이것  
은 청문위원회에 대한 그야말로 후보자님 표  
현하기 좋아하는 모독인데, 제가 그것을  
타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  
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제가 후보자님을 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셨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건 안 보고 주변에 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것 가지  
고 언쟁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요, 직접 검토하고  
하신 게 아니고 주변하고 하셨냐 아니면  
직접 검토했느냐 이걸에 이걸 제가 그럴  
시간이 없었고 이 세상에 그런 걸 다 꼭

직접 검토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 주변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질의 계속 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요, 후보자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질의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거지요. 한번 얘기했으면 적어도 납득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국적 관련해서 결국 질의를 못 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아니,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뭘 말씀 올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묻는 말씀에나 무엇을 묻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의화 최재성 위원님, 제가 정리하도록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거의 청문 절차가, 지금 질의가 거의 정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계시겠지만 이틀 동안 아주 긴 시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후보자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대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으로서 따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나성린 위원 나성린입니다.

정운찬 후보자 가계수지에 대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젯저녁에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요구했고, 고생한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 제가 이름은 일부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위원님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싶어서 참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백원우 위원 후보자에게 질문하세요.

○나성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하고 후보자한테 질문할게요. 왜냐하면 설명을, 후보자는 지금 모르니까 제가 우선 내 의견을 말하고.

교수와 전문가들이 받는 가외 소득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고 그 소득의 5%가 원천과세됩니다. 사업소득은 3%가 원천과세되고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수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요, 왜냐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기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 80%가 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를 경비로 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세요, 혹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기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나성린 위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다, 2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왜 인정해 주느냐 하면 그게 물적 경비, 자본 경비에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정신적인 비용, 시간적인 비용, 왔다갔다한 교통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80%를.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니에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나간 비용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요. 제가 20만 원을 받고 5% 원천과세하고 얼마입니까, 19만 원을 받았으면 그 19만 원은 그냥 소득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거기서 80% 필요 없는 것을 빼버리고 진짜 받은 돈 이것밖에 안 된다 하면 그게 곤란한 거지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은 그렇게 계산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세법상에 있어서 세금을 감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80%를 필요경비로 빼 준 것이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간 비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워낙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이 청문회가 원활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이 문제가.....

○위원장 정의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알았습니다.

대강 제가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까, 공직후보자께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그런 맥락에서 강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하

다 실패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런데 본인이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나중에 대답하도록 하세요.

제가 이제 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국가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그것은 야당도 많이 지적하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재야 학자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레슨을 얻어야 됩니다. DJ정부가 97년도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는데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한 5배가량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판하기 좋은 사람은 빚으로 경제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가피했겠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정부가 경제성장을 제대로 못 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비도 급격히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 정부에도 국가 부채가 1.5배 늘어났습니다, 5년 동안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또 다시 국가 부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 내지 경제 성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늘리고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많이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나성린 위원 수입을 많이 늘리는 방법은 그냥 세율 1, 2% 올린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을 빨리빨리 해야지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수입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 10%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경제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세출 10% 줄이는 약속.

어떻게 줄일 의사가 있습니까, 원래 이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나성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출 줄이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 문제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무래도 낭비성 재정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성린 위원 낭비성이라든지 중복 예산들도 많고 경직성 경비 또 공공 부문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 또 공기업 개혁 같은 것을 해서 민영화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

다.

공기업 민영화를 하면 수입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 수입 가지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공기업 민영화를 제일 많이 한 수상인데 그때 영국 빚을 많이 줄였습니다, 민영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빨리 민영화 해 가지고 국가 빚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여당위원으로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후보자님,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것이 지도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이해합니다.

○백원우 위원 아침에 병역 문제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 모 경제 신문에 “나는 병역 의혹에 한점 부끄러움 없다” 이런 식의 대목이 또 제목으로 뒀어요. 그것을 본,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어제 본, 미국의 모 대학원생이 지금 후보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가 봅니다. 부선망(父先亡)이시고 지금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박사 과정인데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모 대학, 유명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계속해서 ‘나는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한점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을 옹호하면 옹호하실수록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청문회가 마감되어 가는 시점에서 후보자가 ‘나는 병역 의혹에 한점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모습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어쨌든 짝퉁 부선망입니다. 진짜 부선망이 아니시고 짝퉁 부선망이고, 어쨌든 짝퉁 부선망이지만 징집 검사를 연기 받고 병역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합법입니다, 짝퉁이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참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애미대학 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거기다가…… 나는 당연히, 미국 병역의 문제를 왜 한국 유학생에게 묻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 면제됐다고 썼다는 것도 어쨌든 국민적으로 보면 분명히 납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강변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애처롭게 국민들에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을 준비했다, 갑자기 갔다, 이것도 말씀이 계속 엇갈리셨어요. 유학 비용 마련하느라고 했다는 여당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다가 과외를, 갑자기 갔다,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석연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었겠지만 ‘비행기 표가 너무 비쌌다’ 이것도 참 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학생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들어오지 않았더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 온 미국 유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이 상당히 좀 분개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총장님의 이야기가 아직 많은 사람에게 퍼진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들에게는 꽤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병역법 82조, 도망에 의한 병역 기피라는 게 제가 법률 판단을 받았던 현직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칼럼에 썼습니다. “진화하는 병역 비리, 지도층은 만년 단골” 이런 칼럼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병역 비리 수사를 경찰이 강도 깊게 들어간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보셨지요? 병역 비리 수사를 경찰이 아주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언제 그랬습니까?

○백원우 위원 아, 최근에 언론을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최근에, 지금 매일매일 두 가지 수법의 신종 병역 비리를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못 봤습니다.

○백원우 위원 경찰을 통솔하고 행안부장관을 통솔해서 이 병역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가 총리가 입장을 발표하셔야 될 텐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쉽게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들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권력이 많은 자,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배운 자가 더욱 술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후보자가 제 생각에는 총리가 되신다면 우리 국민들은 되게 허탈해하실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또 지도자와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은 많이 후퇴할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그것 정리를 명쾌하게 못 하셨습니다, 김성례 씨.

정확하게 과외하신 게 몇 년, 이것 단순합니다. 이것 뭐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후보자의 솔직함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을 테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 후로 기억을 했고……

○백원우 위원 몇 년도에 과외……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집의 가족들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났습니다만 가족 이름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1970년 봄부터……

○백원우 위원 70년 봄부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누구를, 큰 따님이십니까, 막내 따님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둘째와 친구들입니다.

○백원우 위원 둘째를 하셨으면 막내 따님이 후보자님 사모님과 동기시니까 69학번이 되시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큰따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친구입니다.

○백원우 위원 큰 따님이 동기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백원우 위원 그러면 대충 나이가 맞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50년생이나 뒤 51년생이 되겠지요.

○백원우 위원 그렇게 되시면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의 장인을 아신 시점이 73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진술은 딱 맞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깨집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벌써 미국……

○백원우 위원 그것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백원우 위원 후보자님께서 뭔가 처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싶으시고 감추시고 싶은 것들,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장인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처가에서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없을 테니까 30초만, 1분만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총장님 재임 시절에 부하 직원이나 그 직원들이 서울대의 계열 회사나 협력 회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곳의 인사 문제에 만약에 개입했었다라면 총장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은 없……

○**백원우 위원** 총리가 만약에 되시면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그런 민간 기업에, 특히 또 민간 기업의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구설수에 오르신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법이나 규정을 확실하게 어겼다면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원우 위원** 확실하게 어긴 게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을 거고……

을 1월 8일에 포철의 이구택 회장이 이런 폭로를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폭로요?

○**백원우 위원** 예, 보도 못 보셨나 본데……

정준양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음 회장은 당신이 아니고 윤석만 사장이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지금 앞으로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 밑에 있는 실세 국무차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포철 관계자들을 죽 만났고 거기서 모종의 압력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박 차장은 예결위 답변을 통해 거론된 인사들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인사 개입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세가, 정치적인 실세가 만약에 이렇게 민간 기업…… 포철, 민간 기업 맞지요? 이렇게, 이런 구설수에 오른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경우에 따라서, 자리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현명

함…… 제가 최대한으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들 대단히 이틀 동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십시오.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제가 벌써 열 번 가까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군대 안 간 것을 갖다가 무슨 어떻게…… 군대 안 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중 도중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시기에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를 방어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군대 안 간 것이 잘한 거나 된 것처럼 말씀을,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그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예, 박상돈 위원입니다.

지난 3일 날, 9월 3일 날 내정자께서는 대통령을 만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만났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그때 만나셔서 국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한 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리고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저는 서울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만나 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후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그래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지 않았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구체적인 의견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대한 얘기가, 세종시라는 단어 하나 나온 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한 시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세종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 꼭 의사 표시를 하셨거든요, 강의나 강연이나 기고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언급을 하신 적이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없지요? 그런데 없는데, 그렇다면 최초로 9월 3일 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연히 기자가 묻기에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그냥 얘기한 거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생각을 그냥 개인 의견을 얘기했다 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출은 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그것이 소신화되어서 그걸 기자가 묻는 김에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소신이라고도 해석되고 사건이라고도 해석되고 이런데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의 답변을 보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건이냐?’ 물으니

까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 그것이 소신이든 사건이든 의견…… 총리내정자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 위반…… 위법상태를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빨리 해소시켜 주라 하고 부탁하려고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유도성 질의를 계속하는데 빗나갔어요, 계속.

말하자면 이것은 비능률적이어서 손봐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리나 있느냐, 저는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내정자한테.

그런 권리가 없다,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또 이것은, 이 법은,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받아서 결정한 이 사항을 누구 마음대로 바꾸느냐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 말이야, 이것은 손봐야 된다, 앞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것은 뭔가 그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 것같이 이렇게 제가 들어서 때로는 제가 언성을 많이 높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3자가, 지켜보는 분들은,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기정사실화시켜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데 우리 내정자께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렇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시가 제 고향 부근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앞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명받은 날 지명받은 소감을 서울대학교를 찾은……

○박상돈 위원 그렇지요. 그런 뜻으로 저도 아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로서는 제 개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 보니까, 석간입니까? 이것을 봤는데 이게 우리 후보님의 얘기를 넣으면서 차제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재론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우려하는 국론 분열이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다.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이 사안이 놓여 있는 입장은.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10여 차례를 공언을 했던 사안입니다. 전직 대통령, 돌아가신 노 대통령도 솔하게 얘기했고 당신이 기공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재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자족기능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원점부터 출발하자? 이것은 턱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내정자께서는 취임을 하시면 우선 이 내용을 알아보면 알아요, 제 말이 틀린가 옳은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정부 개편에 따른 변경 고시가 필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것을 절차에 맞게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각 변경 고시를 이행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사회비용을 줄여라. 이게 효율 아닙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 여러 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직까지는 총리가 되지도 않았고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박상돈 위원 된다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세종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세종시한테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도 세종시로도 좀 더 좋은 플랜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더 좋은 플랜으로 세종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 이상이 아니고 세종시는 절대로……

○박상돈 위원 아니,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그 코스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려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때로는 조금의 코스트는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조그만 코스트는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럴 입

장도 아닌 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국가 의 사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어떻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 아이디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는 꼭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또 세종시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같이 고민을 해 보기로 하시지요.

○박상돈 위원 같이하는 게 아니고요. 내정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답답하게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는데요.

아니,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럴 단계를 지난 거예요. 24%가 재정이 집행되어 있고 진도가 30%까지 나갔으면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천부터 다시 출발하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25%까지……

○박상돈 위원 그것은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박 위원님, 지금 25%까지 나갔으면 나머지 75%를 정말로 생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박상돈 위원 한번 보세요. 자꾸 아까 비능률이……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리아라든가 독일의 본을 예를 드셨는데 본의 경

우에는 6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브라질리아는 1129km가 떨어져 있는 데 예요. 그런 데하고 120km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비근한 예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면서 비능률의 표본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그것을 자꾸 저는 나름대로 좀 설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네요, 저는.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이틀 동안 세종시 문제로 정말 열변…… 저희들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래도 미진하시다면…… 지금 제가 3분을 더 드렸거든요. 제가 기왕 드린 김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이제 공직후보자가 충분히……

○박상돈 위원 3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지금 내정자께서 전혀 납득을 하지 않으셔요. 저는 제가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3일 대통령을 뵈었느냐, 이것을 논의하셨느냐……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충으로 3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박상돈 위원 자꾸 여쭙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위원장 정의화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거든요.

○박상돈 위원 아니, 그래도 앞으로……

○**위원장 정의화** 그래서 지금 국민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추가 질문을 할 기회를 얻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의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와 제가 청문회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바로 세종시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당사자명을 의원님이신데 거론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뉴스에 이미 나온 건데요.

○**위원장 정의화** 가능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의원님이신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후보와 제가 외국 사례를 왜곡해서 세종시 건설을 폄하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에서 브라질리아의 현재의 인구가 20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기억나시지요, 몇 명이냐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기억납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20만 명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틀린 얘기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50만 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브라질리아 행정수도의 인구가 200만 명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 뒷부분을 보면 ‘남의 좋은 예를 따르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오히려 실패니 뭐니 하면서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들을 비난했다’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잘나가는 브라질리아를 비난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을 보면 외교통상부에 야근하는 남미과 칠레·브라질 업무지원 담당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자료—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거고요—그것도 아무래도 또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서 브라질리아 홈페이지까지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볼 생각인데요.

사실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체 주가 26개이고 연방특구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방특구 이름도 브라질리아고 행정수도 이름도 브라질리아였던 거지요. 그래서 브라질리아 연방특구 내에 바로 우리 세종시와 같은 브라질리아시가 있고요. 이게 바로 브라질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리아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리아 연방특구와 브라질리아시를 여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리아, 제가 말하는 행정수도는 브라질리아시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아까 20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2000년에 19만 8422명이었고요. 또 2008년 자료를 저희 방에서 찾아보니까 19만 8906명, 그러니까 아마 8년 동안에 500명 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리아시는 472.12km<sup>2</sup>, 세종시가 몇 km<sup>2</sup>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평으로 2280만 평인데요.

○鄭玉任 委員 그래서 km<sup>2</sup>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라질리아가 훨씬 크게 그러면서 인구는 50만을 계획했는데 2008년 현재 20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니, 세종시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확한 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지 그게 좀 갑갑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종시를 더 잘 살려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강조하셨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종시에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 혈세로 자그마치 23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면 국가예산의 비용 효율을 정확히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거의 청문회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 촉구를 좀 드리려고 그러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총리 후보자의 이 세종시 발언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향노 또 매국노 심

지어는 이완용이라는 비난까지 들으시면서 좀 모욕을 당하셨는데요.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짜로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혈세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전력을 투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그럴 의지와 역량이 본인에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역량은 남이 평가해 줄 문제고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직을 위해서 바른 말을 포기하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예, 제가 그 부분은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공정이 20%, 30% 진행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용하고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사업비 22조 5000억 원 중에서 지금 공사비가 책정된 게 한 15조 4000억 원 되는데 이 중에 3.9%만 진행됐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20%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세종시에다 정말로 세종시민을 위해서 뭘 담을 것인지 후보자께서 소신껏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저는 사실은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신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꼭 궁금한 게 외교·안보·통상 사안인데 한미 FTA와 관련한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총론으로는 찬성하나 각론으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FTA의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고 사실 미국이 자기 나라 사정은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국이 FTA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소신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경제학자로서 FTA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또 비준할 때는 국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체결되기 바로 전에 어디에다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쌀은 예외로 한다 또 개성공단의 물건은 국산품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말로는 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Investor-State Dispute)라 그럴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손해 봤을 때 그것을 한국의 경제정책의 탓으로 돌리면 월드뱅크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나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서 모든 경우에 다 미국이 캐나다하고도 멕시코하고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세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론적으로 FTA 저는 찬성입니다만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는 것하고, 또 동시다발적 FTA 이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TA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냥 FTA가 우리나라 먹여 살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녁식사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좀 미진하거나 좀 더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청문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석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권경석 위원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그리고 각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합의해서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재보충 질문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협의도 없이 야당 위원들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 전체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의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방침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관련해서 보충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하십시오.

○강운태 위원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



록 냉정해야 됩니다. 청문회의 취지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시간에 쫓기시려고 그러니까?

더더욱 존경해 마지않는 정의화 위원장님께서 우리 인사청문회의 첫날 추가질의가 있는 사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밤을 새서라도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시간 쫓기듯이 그냥 막 이렇게 몰아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

우선 그 많은 증인, 참고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증인은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yes24의 김동녕 씨, 증인 채택을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비행기 타고 가 버렸어요.

‘도망’이라고 아까 한 표현에 대해서 그것은 확인이 안 됐지 않느냐…… 도망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어쨌든 증인 결정한 그 즈음에 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7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요. 비행기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이 이런 상황인데 참고 또 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시간 가지고 뭘 그렇게 자꾸 다 끝났는데 그러냐……

자, 보십시오. 나는……

○위원장 정의화 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강운태 위원 지금 계속 기본적인 것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의화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강운태 위원님께서 시간에 쫓기듯 느끼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전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가 이틀 동안 아주 품격 높게 청문회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끝까지 다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경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정의화 방금 권경석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줬왔고 또 할 이야기 다 한 상황인데 그래도 미진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연장하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지막 보충질의를 원하는 분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꼭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명진 위원 예.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세요.

○차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실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차 추가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회하시고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의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어제 우리가 그 합의하에 진행이 됐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

숨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미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차명진 위원 위원장님, 저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 질의시간에서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 상당히 아주 융통성 있게 시간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이번이 마지막 타임인 것을 고려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의화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저희 여당 위원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시간을 늘이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그냥 인내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그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백원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로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미진하신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야당 간사님께서 다시 또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위원장 정의화 그러시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10시 12분인데요,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다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지금 뭐 간사 간 협의를 해요? 두고 나가시면 되는데……

○김종률 위원 내용을 들어 봐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정의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원만하게 진행하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강운태 위원님, 아까 먼저 질의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강운태 위원 그럴까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이세요?

아까 순서가 김종률 위원이지요.

먼저 질의하시죠.

5분씩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아까 제 순서가 돼서 달려 왔는데 정회를 하셔서 가지고……

○위원장 정의화 아, 맞습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김종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총리 권한행사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리 지명을 수락하실 때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총리의 권한을 보장 받았단지 이와 관련해서 나눈 말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통령께?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잘 보필하겠습니다마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까지는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헌법상 보장된 총리 권한을 실제로 행사를 하셔야지 과거처럼 그냥 소위 의전총리라든가 바지총리에 그친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또 학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벼슬을 탐하는 지식인의 변절로 낙

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리로서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총리의 권한 행사가 제대로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총리직을 버리고 나올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 상황은 아직 설정 안 해 봤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조건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상황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자리를 탐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김종률 위원 아니, 후보자의 소신과 대통령의 생각이 충돌하거나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김종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실 때 자리를 박차고 나오실 각오가 돼 있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의견이 다를 때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 것을 바르다고 얘기 못하면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종률 위원 역대 총리 대부분은 정권에 이용만 당하고 바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간의 우리 헌정사의 경험입니다. 특히 학자 출신 중에는 예외 없이 정권의 호구 노릇을 했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철학, 경제철학 분야들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경제철학과 소위 MB노믹스 이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목사업과 공격적 감세라는 MB노믹스를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총리 내정 소감으로 MB정부의 정책의 균형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MB노믹스를 뿌리부터 흔들어야 가능한데, 그런데 총리의 그동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오늘까지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정권,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후보자는 이렇게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서 대립각을 세웠을 정도인데 그러나 지금은 갑자기 180도 변신해서 친절한 금자씨처럼 친절한 운찬씨로 세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80도 변신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이 바뀐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중도실용 철학을 보여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당선된 이후에는 다소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김종률 위원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중도실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기왕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오신 것과 서면질의 답변서가 너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감세정책……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김종률 위원 감세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세정책만 하더라도 MB정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 이 답변에 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인세·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문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또 그것하고 달라요. 어떻게 우리 후보자의 태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 오셨습니다.

감세가 실제 경제효과 없이, 소비 진작이나 투자 효과 이런 것도 없이 소수…… 마무리할게요.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답변 기조가 180도 달라졌습니까? 소신이 바뀐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다시 말해서 총리로 지명받은 후에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커다란 방향만 스텝들한테 정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그냥 당신들이 써 봐라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이 청문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답변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 부자감세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어떤 성찰 없이, 검토

없이 그대로 베껴 왔기 때문에 후보자의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유는 말이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중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다시피 했지요. 또 1가구 3주택 양도세를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내년부터, 2010년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 최상위 구간 아시지요? 그리고 법인세 최상위 구간, 소득세 최상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표기준으로 해서 8800만 원 이상인데 실제로는 연봉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1%도 안 되고 0.5%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소득세를 인하해 주고, 또 법인세도 2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해 주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재정건전성, 정부 재정 적자폭은 빠른 속도로 급격히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어서 정부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꼭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정의화** 제가 이미 3분 더 드렸어요.

○**김종률 위원** 그러면 제가 꼭지가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르시면 제가……

○**위원장 정의화** 지금 8분 얘기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단 한 번도 기존 내용을 반복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김종률 위원** 아니, 청문 위원한테 정책 검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야지……

○**위원장 정의화** 김종률 위원님, 제가 분명히 5분을 얘기를 하였고요. 나중에 추가로 또 하시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8분 다 쓰시고 나서 그러시면 또 다른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김종률 위원** 아니, 마무리하는 기회를 줘야지요.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요.

○**김종률 위원**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만 마무리하고, 이것은 꼭지가 다른 건데……

○**위원장 정의화** 그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꿨어요? 바꿨으면 사전에 연락 좀 주시고요.

○**차명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차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명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8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지하게 검증할게 있습니다.

후보자께 제가 꼭 여쭙보고 싶던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전문가

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꼭 여쭙보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그전에 기고, 그다음에 강연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 말씀 들어 보니까 후보자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그리고 재정지출에서도 토목보다는 중산층, 서민층을,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경기 회복에 훨씬 더 중요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단한 석학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어 보겠습니다, 감히.

그런데 말씀이지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 맞이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G20에 속한 나라들은 감세, 재정 지출…… 재정 지출에서도 토목과 중산층·서민 지원,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통화량 증발, 이 모든 정책을 동시에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우리 후보자처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이, 그중에서도 토목보다는 중산층·서민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모든 정책을 다 썼을까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은 세계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정부를 보더라도 재정 지출도 늘리고 세금도 줄이고 돈도 더 뿌리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감세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역시, 감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재정 지출 중에서도 당장 토목공사 하는 것보다는 역시 R&D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쓰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명진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 제가 권고를 드리는데요, 실제 아마 행정부에 들어가시면 이런 상황을 많이 부딪치실 것입니다.

후보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설과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는 그런 증거들 이런 것에 의해서 후보자의 어떤 생각들, 주장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또 사례도 있고, 이럴 때 다른 정책도 함께 보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행정 공무원들의 경험에 의한 주장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후보자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후보자의 아까 평소에 기고하던 그 말씀이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 부자 감세하면 안 되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거로 삼는, 기대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후보자 말씀을 근거로 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도록, 평소에 아마 언행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 말씀과 직접 연관이 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아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참여정부하에서 소득세 기준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때 1억 1000만 원 하던 사람들을 최고소득층으로 하다가 8800만 원으로 내려 주고, 즉 내렸습니다. 이때 참여정부에서 발표할 때 8800만 원 이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다 중산층과 서민으로 생각해서, 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8800만 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보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참여정부 때 써먹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바로 8800만 원 이하의 중산층·서민에게 65.2%의 혜택을 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숫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정부 식 기준이 하도 허무맹랑하니까 그러면 진짜 OECD 기준으로 해 보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OECD 기준으로 딱 해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 소득으로 하면 보통 15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인데 이것은 통계청 조사고요. 실제 소득세 내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한 32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입니다. 이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복잡한 통계수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차이나는데요. 소득 기준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320만 원을 중간으로 치면 거기서 플러스

150%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소득 4800만 원이 됩니다. 3200만 원이 중간이고 4800만 원이 그야말로 위의 150%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4800만 원 밑을 진짜 OECD 기준에 준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걸로도 따져보니까 이렇습니다. 60.9%가 중산층 서민이 혜택을 봅니다, 감세 혜택을. 그러면 34.8%, 적게 보면, 많이 치면 39.1%가 혜택을 본 감세를, 그 사람들이 부자에 해당하는데 이것 부자감세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최소 60.9%~65.2%를 중산층 서민이 혜택 봤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요, 애꾸눈이 아닌 이상. 그렇지요? 이게 국민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더 현실에 근거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저는 무슨 정권을 가리지 않고 건설적 비판을 하려고 애써 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쓸 것임을 믿어 주십시오. 그 대신에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관성을 지켜야 되고 또 바꾸더라도 너무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운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예 8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8분만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후보자 부인께서 그림 판매에 따른 소득 6150만 원 종합소득세 안 내셨지요? 지금 안 냈다고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자료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안 냈습니다.

○강운태 위원 추가 신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9월 15일 날 부동산 임대소득……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만 좀……

○강운태 위원 거 참, 하여튼 후보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시간 다 잡아먹고, 지금 질문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보고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아침에 낸 자료에 돼 있다니까요, 여기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오늘 아침에 드린 겁니까?

○강운태 위원 예, 아침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거 참,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주요하다 해서 아침에 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강운태 위원 그래서 9월 15일 날 우선 부동산 임대소득, yes24 고문료 종합소득세 해 가지고 한 번 수정 신고하셨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우리 청문회 날 아침에 후보자께서 해외에서 거두어들이신 강연료, 세미나료, 우리 나성린 위원 표현에 의하면 기타소득 부분 역시 추가 신고하셨어요. 두 번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번 하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탈세를 세 번 하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탈세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또 어감이 상당히 강해서 거부감도 있는데 탈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의가 있고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우에 고의인지 과실인지 하는 것은 시정하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무슨 한 말씀을 드려? 내가 지금 질문해야 한 말씀 하시지요.

지금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병역과 납세와 교육과……

○강운태 위원 근로와……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납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이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그런데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부인하시고 주로 질의를 했던 우리 백원우 위원께서는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의혹으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후보자 스스로가 인정하셨고 두 번 수정신고하셨고 앞으로 한 번 또 수정신고를 해야 할 마당이고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 분이 납세의무를 대단히 해태했다,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인정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아닙니다.

○강운태 위원 됐습니다. 제가 고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종합소득세는, 그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는 부부가 별개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글썄 말이지요, 그게 무려 2004년 2005년 2007년 세 번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때 그림소득을……

○강운태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 점은 이론이 없잖아요, 좌우지간.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을 소득신고해도 종합소득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면 아침 자리에는 왜 종합소득 신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요……

○강운태 위원 이게 도대체가 참 청문 자체를 못 하겠구만.

이렇게 자료를 내내 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다르



지 않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신고를 하면 이제 말하자면 세금이 나가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신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강운태 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내겠단?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강운태 위원 신고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계산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쪽에서 판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강운태 위원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해 탈했잖아요, 말하자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운태 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납세의무에 조금, 누가 보더라도 두 번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고 세 번째는 수정신고해서 세무관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마당인데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갖고 자꾸 부인하십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많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지적 경험도 풍부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물겠습니다.

총리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통의 수준, 크게 원치는 않습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분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통 수준의 도덕적 기준은 최소한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제하에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가계 수지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9억 100만 원, 수입이 9억 1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후보자나 저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보자가 준 자료가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이론이 없고요, 9억 100만 원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로소득 수입이 있습니다. 교수 봉급 같은 거지요. 거기에다가 yes24 고문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5억 1200만 원.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매에 따른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yes24가 어떻게 5억이나 됩니까?

○강운태 위원 아니요, 교수 봉급까지 합해 가지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강운태 위원 yes24 고문료가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세법도 모르시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답답하지요, 시간은 없고.

두 번째는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많지 않아요. 3년 해서 한 2000만 원 쯤 됩니다.

세 번째, 주로 용역수입도 되겠고 그런 것인데 사업소득 수입이 있는데 3년 동안

에 3억 669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기타소득—기타소득은 강연·세미나료 그런 것이지요—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0만 원, 2008년도는 제로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준 자료를 보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계상하셨느냐 하면 사업소득에서 단 7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후보자가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7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 논리는 작년도 사업소득 수입이 3억 669만 원인데 후보자의 세무대리인이 간이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기장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필요경비가 얼마나 하면 1억 746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억 7465만 원, 내가 쓴 게 아니고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해서 세무서에다 낸 것이. 그런데 후보자는 3년 동안에 700만 원이 필요경비다라고 써넣었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위원님!

○강운태 위원 아니, 아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것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썼다는 겁니다. 필요경비는 저쪽에서 배정을 받는 거고 제가 드린 세금증가액 원천 분석에서 ‘비용 계’할 때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경비로 배당받은 것 중에서 700만 원을 썼다는 것이지 필요경비를 배정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을 때 필요경비를 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무슨 시간에 쫓겼

는 말씀을 들으시고 ‘왜 저에게도 발언 기회 안 주십니까’ 그랬는데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다 줬어요. 적어도 내가 볼 때 후보자가 발언을 못 해서 해명을 못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엉뚱한 해명을 하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해가지고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사업소득 수입이 2억 2920만 원, 작년에 용역을 좀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 1억 7465만 원을 썼다고 제출했고 그것을 그대로 세무서가 받아줬어요.

그다음에, 들어 보시라고요. 도중에 자꾸 그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연도의 경우에는 기장을 안 하셨어요.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후보자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일 전에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지출 부분, 필요경비를 뭘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무서에 확인하고 세무사,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법상 정해진 필요경비를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후보자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해외에서 번 강연료 등등해서 그것만 해서 8500만 원인데 왜 그것은 인정 안 해 주냐 그러셨다는 말이지요? 인정하지요, 인정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정 방법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의화**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강운태 위원** 아니요,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시간 뺏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수 위원** 저는 몇 분 줍니까? 저도 8분 주시지요.

○**위원장 정의화**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정희수 위원** 예, 8분.

11시가 넘어가는데 참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시간을 끄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의 소득세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도무지 다른 분이 이야기하면 내가 막 헛갈려요. 내가 머리가 나쁜지.

후보자 하는 것과 내가 소득 즉 한 것, 어제든 내가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의심이 안 들 정도로 이해가 딱 되는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막 헛갈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많이 헛갈리겠지요.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공무원, 흔히 이야기하면 대학교수님들하고 일반 제조업체의 일반직 회사 근로자하고 근로소득세나 원천징수하는 거라든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일반직에 있었을 때에 소득을 받은 것하고 내 친구가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이 받는 것하고 상당히 좀 세율이라든가 이거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총리실 관계자들, 이거 세법에 좀 관계되는,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쪽하고 일반 제조업체하고 근로소득세라든가 이거 계산하는 게 좀 틀리다 이 말이지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이 교육공무원들, 교수들이 이야기할 때의 기회비용 그런 쪽에 대해서 세법상에 뭔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설명해 줄 분 있으면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잣대가 틀린데 동일하게 잣대를 대 버리면 지금 막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의 동일한 잣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국세청남인천세무서주사 박광수**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박광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백원우 위원** 아니,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신데 나오셔서 함부로 발언을 해요!

○**정희수 위원** 아니, 내가 잘 몰라서 이 분한테 설명 듣는 거예요.

○**백원우 위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셔서 해야 합니다.

○**강운태 위원**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데 발언을 해요!

○**김종률 위원** 자격이 없는데……

○**위원장 정의화** 자, 잠깐 제가 다른……

○**강운태 위원** 개판이야, 하여튼 한나라당이 깽판 할라고 작정을 했구만!

○**위원장 정의화** 아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차명진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뭘 껴판을 놔요, 껴판을!

○강운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원장 정의화 자,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 표현을 그러지 마시고……

○백원우 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지……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잠깐만.

○나성린 위원 에이, 할 사람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위원 퇴장)

○위원장 정의화 잠깐만요, 지금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법을 다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재성 위원 앓으세요, 예?

○위원장 정의화 그러니까 정희수 위원님께서 방금 아마 다른 분을 나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증인과 참고인 아니시면 나오지 마시길, 발언할 기회를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얘기는 메모를 하셔서 후보자에게 전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발언하다 말고 무슨 국세청에다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최재성 위원 그것은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위원장 정의화 이게 질서를 지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에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정희수 위원 사실 청문회는 진실을 이렇게 뭔가를 정확하게 좀 알라고 하는데 나도 내가 아는 지식하고 또 혹시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으면 내 지식을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지 참고인이나 그런 걸 좀더 지나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혹시 청문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뭐 내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가 성장을 한다 할 때는 항상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늘 수정·보완해 나갑니다. 탄력적으로 이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막아버리면 내가 흐름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데……

자, 또 그러면 후보자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그러니까 확실적인 잣대가 아니라 같은 근로소득세라 하더라도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하고 대학교의 교수분들이 내는 근로소득세하고 세율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봉이 5000만 원이라 했을 때 일반 기업체의 경우보다 대학교수 연봉 5000의 실 수령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가 물어봤더니만 세율이라든가, 아까 나성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기회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더 많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요, 틀리게 적용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더 국세청 관계자가 있기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됐네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 하면 교육공무

원입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같으면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국립대학교입니다.

○정희수 위원 국립대학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틀리게 한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정희수 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같은 교육공무원이지만 신분이 틀리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연세대학교 교수가 교육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수 위원 내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같은 교수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 되는 것이고 연대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교지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같은 교수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가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 교수분들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일반 공무원……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교육공무원이지요.

○정희수 위원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후보자께서는 교육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교육공무원 아닐까요?

지방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공무원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서, 후보자가 교육공무원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적용하게 되면 위배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세대 교수가 그야말로 외부인으로부터 연구비에 보태 쓰라고 어떤 돈을 받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서울대 교수에게 연구비에 보태 쓰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또 일반공무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의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일반공무원이 똑같은 돈을 받아냈을 때, 일반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삼자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내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후보자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죄송합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를 본 서울대 교수분들은 ‘야,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연세대 교수는 괜찮은데 서울대 교수만 국립대 교수라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월급도 국립대 교수가 사립대 교수보다도 훨씬 적고 그러면 얼마나 좀 답답해할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말씀하십시오.

○박상돈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40분인데요, 앞으로 발언할 사람들이, 발언할 위원들이 5~6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여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고려하셔야 될 일이고요.

○위원장 정의화 제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12시가 되면 다시 차수 변경을 하실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의화 박상돈 위원님, 그런 일까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대강 제가 시간을 재고 있는데 이런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박상돈 위원 8분씩 나가는데다가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의화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무원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면,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고용하는 공무원인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지요.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그중에서도,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공무원에 비해서 차별을 두면 좀 불리한

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위에 관해서만 똑같이 주지요. 하지만 의무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아까 아침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냐고 여쭙 봤잖아요. 답변을 제가 미루어드렸는데, 입장정리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yes24 고문직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정희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이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매달 12분의 1 형태로 받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작년 누락된 고문료는 수정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제 생각입니다.

○이정희 위원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급여가 처리가 된 것 자체로 일단 법률관계가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묵시의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법률관계는 객관적으로 표명된 것에 따라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판단하신 것이 저는 이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검직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잘못 잡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냥 전 총장으로서 재직하셨던 분이라면 좀 다르겠으나 총리가 되실 분이 이런 해석을 하셨다면 앞으로 서울대의 모든 교수님들에게 사실 책 파는 인터넷 회사에서 다 같이 광고모델 섭외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으실지 저는 우려됩니다.

이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에 다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제가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회신들을 죽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심지어 ‘일과 외에 강의 한번 나가는 것, 이것도 내가 허가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기관장 재량입니다.’ 이런 판단들을 받습니다.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것은 기관장의 허가사항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그 선례가 무너질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알고 계십시오.

제가 용산 문제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1년 반 만에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너졌다는 그런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단히 실망시켰습니다.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로 만들어 낸,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떨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국민들과 가깝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지요. 민주주의를

다시 쌓는 것, 인권에 기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그것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안기관들입니다. 경찰이 법에도 없는 행위들을 합니다. 말로 항의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잡아잡니다.

하지만 법상 규정된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어도 항의만 해도 잡아가는 것이 지금의 경찰입니다. 기무사가 군과 민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패킷 감청까지 해 갑니다.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안기관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로 임명된다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행 법률에 따라서 통제를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동시에 국민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두 번째 문제는 박원순 변호사님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발단은 뭐냐 하면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라는 것은 협치의 개념으로 가고 있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우리 사회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열심히 해 오던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국정원이 나서서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동아일보로 가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나서서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 가로

채기다, 이것이 사실 박원순 변호사가 고소를 당하게 된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 위험성을 정운찬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서 느낍니다. 예전에 규장각에서 일본 동경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일부를 기증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규장각에서? 그렇지요?

총장으로 임기 마치시기 며칠 전에 바로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실제로 서울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 환수 노력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불교계와 민간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때 공개질의를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문화재청도 안 도와주고 서울대 규장각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일언반구 말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것의 원칙을 세워서 이제 불법으로 탈취돼 간 문화재에 대해서 증거가 있고, 불법 탈취라는 증거가 있고 그것이 그 원칙에 기초해서 반환될 수 있는 상황에 왔는데 동경대에서 책임을 피하고 싶으니까 기증이라는 형식으로 서울대와 문화교류라는 것을, 교류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했고 그래서 실제 기여한 바도 없는데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 2006년 한 4, 5월쯤 됐습니다. 그쪽 동경대학에서 문화재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5월 15일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때……

○이정희 위원 직접 만나셨습니까? 동경대 부총장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동경대 부총장이 서울대학에 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리고 그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어떤 국회의원, 스님 이런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논했습니다,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한다면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많이 벌였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반환 노력을 시작한 사람들이 받아와야 되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그것이 올 텐데 누가 받는들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걸 받을 수 있게 노력한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이정희 위원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지금 8분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박상돈 위원님 발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20초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이 되려면 원칙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먼저 노력했던 사람들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 온 민간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원칙과 시민사회의 공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도 망치고 그리고 ‘누구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가로채기가 된다는 거지요.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지금 말씀한 시민사회와의 공조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제가 총리를 할 때……

○이정희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가능하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재성 위원 뒤에 하는 사람한테는 좀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시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교육상임위원으로서 서울대 국정감사 때 그때도 자료 때문에 제가 10분을 그대로 자료 얘기하다가 아무 질의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두 가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때의 악연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총장 신분이었고 지금은 총리후보자 신분인데 습관처럼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제가 yes24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제주도의 강 교수 같은 경우가 무보수로 교수들을 위한 교수 아파트 짓는 데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한시적인 회사에 무보수로.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해석은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총장 취임을 불허했습니다. 후보자에 비해서 제주도의 강 교수 문제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덜 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도와준 업체들이 다릅니다. 그쪽은 부동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쪽이……

○최재성 위원 yes24는 영리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고요. 여기는 한시적인……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다음에 저쪽이 고문이었습니까, 이사였습니까?

○최재성 위원 고문하고 이사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또 법률적 논쟁을 하기 싫고요. 그러면 제주대 강 교수의 경우는 지금 후보자보다 겸직금지 위반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최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크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요,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 경우는……

○최재성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주식회사 프로빌이라는 데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했고 또 프로빌아파트 사업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제가 다 알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다 알고 드리는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총리후보자보다, 이것은 총리후보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제주대 강 교수한테는 적용될 수 있다, 결론은 이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런 말씀이 아

나라 지금 업종이 다르고 직책이 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시간을 오버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이것 뿌리 한번 뽑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후보자님, 제 말씀 좀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대표이사냐 고문이나, 부동산 업체냐 책 파는 업체냐, 그렇게 얘기하면 후보자가 인지했든 안 했든 yes24는 저는 인터넷 사교육 업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 교수의 경우는 후보자보다,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겸직금지 조항을 강 교수는 적용할 수 있고 후보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하시냐는 문제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 간단한 얘기를…… 누가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후보자께서 대학교수 시절에 시국선언 해 보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초·중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해서 지금 징계위에 회부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물론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과연 국가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국가에서 자의적 내지는 건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초등학교 교수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수는 그 정도의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러면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른다 말씀드렸고요.

○**최재성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1986년에 개헌 서명 시국선언은, 서울대학교에서 나간 것은……

○**최재성 위원**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네요.

저 더 이상 질문 안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학교수의 정치적 행위가 허용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묻는 말씀의 요지를 왜 그렇게 왜곡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초·중등 교사의 시국선언 문제로 인한 징계 건은 정확하게 무엇을 위반했다고 정부에서 그러는 것인지, 또 교사들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잘 파악 못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의화**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닙니다. 저 시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 조항이나 영리행위금지 조항,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

들이 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께서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이 되는데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영안모자에서 1000만 원 수수해서 지금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세금 탈루 사실이나 또 혹은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또 추가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행위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후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최재성 위원 추가로 드러난, 지금 전혀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돈도 더 받은 적이 없다 그러셨고……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책임도 수반되는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도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명 행복도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 제6조에는 행복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법은 자세히 못 읽어 보셨을 테니까……

이 법의 의미는, 이 조항의 의미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행정기능이 중심이 된 복합형 자족도시를 반드시 만들라고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행복도시법 제1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되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서울에 머문다는 말씀이겠지요.

○박상돈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서울에 머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기관들 외에는 모두 세종시로 원칙적으로 이전하라는 뜻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래서 아까 말씀이 포지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 말뜻을 잘 좀 새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법안 수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

○박상돈 위원 한나라당이겠지요, 다수당이니까. 한나라당이 사실 다수당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데 얼마 전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 주체가 세종시 건설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수정할 뜻을 암시하는 말씀을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일관되게 내정자께서는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수당의 원내대표도 이런 의지 표명을 했고 현행법의 정신이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하되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사후 보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집중……

이런 세종시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혁신 도시는 그냥 해 보고 싶어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재미 보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17대 국회 때에 재미 보려고 이것을 공약을 한 게 아니지요. 본인은 조크하느라고 재미 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조크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재미……

공약을 하는데 국민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을 공약하면 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원하니까 그것이 표가 되니까 그것을 공약했을 것이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조크했다고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재미 봤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미를 봤다면 10여 차례 똑같이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짐하셨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재미 본 것으로 생각하라…… 그때의 재미는 정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재미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종시나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배태한 것인데요. 80년도에 수도권 인구는 전 인구의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였고

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계획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48.6%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2011년에는 49.8%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곧 50%가 넘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위 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가 시장점유율 75%를 넘으면 그것은 바로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규모로 보더라도 50% 목전에 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56.9%, 금융기관 예금액의 68.4%, 금융기관 대출액의 68.3% 등 모든 경제 규모나 그 내용이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국가경제를 얘기하자면 수도권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펴는 것이고 이것은 국정운영자의 철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혁신도시나 세종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도시를 만들고 보니까 비능률이 많더라. 그것은 각국의 예도 그런 예가 많다’ 하면서 늘 드는 예가 독일의 본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이런 데하고 우리의 행정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라는 인식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경우에는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600km 떨어져 있는 데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IT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화상회의 같은 것도 어려워서 그런 문

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2000년도, 2001년도에 화상회의를 자주 한 사람입니다. 매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화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IT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리아는 1129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과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이 지역과 단순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가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약속은 지키는 그런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잘돼서 총리가 되시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고향도 그 지역이고 감안해서 총리직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나라도 위하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도 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분 내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변경한다는데?」 하는 위원 있음)

○鄭玉任 委員 제 차례 아닙니까?

○김종률 위원 양보……

○위원장 정의화 양보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언제 양보를 했어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의화 먼저 하세요.

○김종률 위원 저 일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鄭玉任 委員 지금 제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위원장이 지금 뵈었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아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중간에 시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민의 반 가까이 되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과세된 사람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라든가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대폭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중에서 상위층 과표구간에 대해서 감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가, 과표구간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는 88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 소득자의 1%가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부자감세’라고 표현 안 하면 어떤 것을 도대체 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부자감세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자재정 폭도 대폭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기조가 필요한 거고 또 실제로 부자들 세금 깎아 줘 봐야 소비 늘어나지 않았더라는 것은 최근에 통계청,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계청에 의해서 실증적으로도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바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철회 내지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방향은 그렇지 만 실상을 더 파악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 세제개편안 내용 혹시 들여다보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의견을 묻고 싶은데, 장기주택마련저축, 흔히 장마저축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되고 또 TV와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문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모릅니다.

○김종률 위원 그리고 또 전세금에 대해서 소득세 신설해서 부과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든지 좀 쥐어짜 갖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 이런 내용의 개편안은 사실상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가 전가돼 갖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장마저축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 이렇게 논의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후보님께서도 총리가 되시면 이것을 좀 재검토하실, 그렇게 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김 위원님의 말씀을 주 경청했습니다.

실상을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질문을 드린 적이 없는데, 대운하 사업을 적극 반대했던 후보자는 총리 지명 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수질 개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셨는데, 즉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때리기는 했지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정의화 잠깐 더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김종률 위원 때리기는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운하하고 4대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위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

까 후보자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점은 다른 사안과……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콜라 마시고 운전한 사람보고 음주운전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률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안과 비슷하게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께서 수질 개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질 개선 문제는 사실은 이미 그동안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고 또 실제로 90% 이상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랄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나 대운하 사업은 환경적 과제를 일으킨다는 점, 또 대토목공사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명박 정권에서의 4대강 사업은, 생태하천 사업이나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것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4대강 사업은 댐이나 보 건설 중심입니다. 말하자면 문패만 바꿔 단 대운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바로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뉴딜 한다고 잠수되어 있던 대운하가 튀어나올까 봐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한국은행법 개정안, 지

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해서 통과된 안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통과되었습니까?

○김종률 위원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데 그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30초만 주세요.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래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시건전성 감독, 미시금융 감독 기능은 금감원 위주로 제대로 작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시건전성 감독이나 거시금융 감독 측면에서 대응하는 데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기획재정위의 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런 거시금융 감독 기능을 좀더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권한과 역할을 주자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를 했고, 또 제한적 범위 내에서나마 단독 조사와 검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위원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4분을 계속 드립니다.

○김종률 위원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은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

은행이 금융안정성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대운하는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고 확실히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과 관련시켜서 많이 됐다고 그러지만 역시 강뿐만이 아니라 지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7, 8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께서도 발언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옥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옥임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고 발언 끝나면 차수 변경을 해서 강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옥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제가 정운찬 후보자 가족의 수입·지출내역 총괄표, 강운태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것인데 필요경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경비를 보면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생해서 지출한 경비였습니다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제가 분명하게 여

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원을 벌었으면 세법상 80원은, 예를 들자면 70원이나 80원은 필요경비로 치고 30원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이 필요경비라는 것은 후보 본인이 쓴 경비가 아니라 세법상 TO로 이렇게 책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세법상 당신이 이것을……

○鄭玉任 委員 이 정도에 대해서는 경비로 쓴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경비로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그것을 정리를 했고요.

보통 그동안에 세금 신고는 주로 본인이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신 것 같아요.

통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제가 지금히 사적인 질의를 드리는데요. 통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부인이 그림 몇 점이나 그리셨는지 정확히 모르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 통장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있다는 뜻이고 저희 집사람도 또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딱 한 채 있으신 거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하나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보니까 자녀교육도



주로 부인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집에서의 교육 말씀이십니까? 저는 사실 바깥일에만 주로 관심을 뒀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여성으로서 그러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담론을 선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저명한 경제학자셨고 또 서울대 총장으로 총장 직무를 정말 인상 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국가사회에 대한, 특히 서민정책에 대한 소명감도 뛰어나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딱 옛날 선비 같은 인상이십니다. 집안의 쌀독이 비었는지 자식이 나가서 맞고 오는지 그런 것보다도 이런 일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올 때 굉장히 본인은 참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미처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은 안 쓰시고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의 허물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사실 총리 청문회의 기본 목적은 그 후보자의 신상에 관해서 그리고 도덕성에 관해서 그리고 정책 비전에 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지 어떤 틀에다가 사람을 몰아넣고 의혹만을 제기하는 그런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옆의 정희수 위원께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일련의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아들의 미국 국적 문제라든

지 또는 부인의 주민등록증 이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위장전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문제 삼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정책 결정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할 때 그런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병역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해서 부동산을 투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자식 군대 다 보내셨고 또 보니까 아파트 한 채, 아까 오피스텔도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정운찬은 정말 선비형의 그런 후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 더군다나 정운찬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여당보다도 야당에서 그동안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 오셨던 분이고 또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 때 상대 당의 대통령후보로 회자되었던 그런 인물이셨는데 이런 게 왜 생겼나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하나의 정치갈등 또 이념갈등의 한 측면이 아닌가,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총리실의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정책 조정 대신에 사회 위험과 갈등의 관리라는 그런 직무가 총리실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주요 기능에 공공사회 갈등 관리 및 갈등관리정책 연구와 사회 위험 및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서면질의를 제가 읽어 보니까 백원우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념, 지역, 계층 간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꼽으시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역량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자격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체감하셨을 이 갈등,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면 되겠는지 총리로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셨으리라고 보이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우선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도실용 이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학 운영한다는 게 정말로 갈등 해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서울대학교를 4년 운영하면서 내적 갈등, 또 외부와의 갈등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 ○출석 위원(13인)

강운태 권경석 김종률 나  
성린 박상돈 백원우 이정  
희 이혜훈 정옥임 정의화  
정희수 차명진 최재성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준철  
직무대리 정재룡  
전문위원

#### ○출석 공직후보자

정운찬

#### ○출석 증인

김진수(yes24 대표이사)

이혜경(서울대학교 공무원)

박기남(윙크출판사 대표이사)

#### ○출석 참고인

김기목(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독고윤(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경규(병무청 공무원)

변창구(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심명필(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교수)

최막중(서울대학교 교수)

박창근(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권명숙(주부)

第284回國會  
(定期會)

# 國務總理(鄭雲燦)任命同意에 관한 人事聽聞特別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9月23日(水)

場 所 第3會議場(245號)

## 議事日程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審査된案件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1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위원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갈등 관리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깨끗이 살아오셨다고 자부를 했으나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운태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에 안 맞는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비를 다 지출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생겼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운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강운태 위원 우리 정옥임 위원께서 세정의 전문가건 아니건 그건 별도 문제고 청문위원의 한 사람인 이 강운태 위원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서 의혹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하는 것은 발언 취소하시고 속기록 삭제하지 않으시면 청문회 더 이상 진행 못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예, 결론만 말씀하세요.

○鄭玉任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부풀렸다’고 혹시, 저는 ‘부풀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부풀렸다’는 표현이 만약에 있으면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그리고 정옥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청문……

○강운태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의혹이나 제기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어요, 그게?

○**위원장 정의화** 강운태 위원님,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려 14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가 보면 사람인 이상은 조금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계속해서 우리 강운태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강운태 위원** 어쨌면 마지막 질의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불투명한 수입원이 3억 원 이상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총리직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입장에서 특히 청문위원 입장에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청문위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후보자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서류가 있어요. ‘자료제출’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우선 보세요. 없으면 빨리 갖다 드리세요.

거기를 보시면 위원별로 이렇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운태 위원 되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찾았습니다.

○**강운태 위원** 거기 1페이지 보세요.

강운태 위원으로 되어 있는 1페이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찾았습니다.

○**강운태 위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후보자께서 아침에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이 9억 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3년 동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이 9억 100만 원은 틀림없습니다. 주신 자료 그대로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비용계가 6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저는 이것을 9억 4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9억 4300만 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 내용을 전부 얘기하면 또 한 시간도 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 밑의 필요경비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08년 200만 원, 2007년 300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1페이지를 보시라고요. 지금 1페이지를 제가 읽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운태 위원** 그다음에 2006년 2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에 필요경비가 700만 원으로 적혀 있지요?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있습니다. 비용으로 쓴 필요경비입니다.

○**강운태 위원** 글썄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필요경비를 700만 원, 3년 동안에 필요경비를 700만 원 지출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 등등의 필요경비를 3년 동

안에 7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 바로 작년에 사업소득 수입을 얼마 신고 하셨느냐면 2억 2920만 원 신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내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지출했다고 신고하셨느냐면 1억 7465만 원 썼다고 신고하셨어요.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이 그렇게 신고하셨다고요. 신고를 하셔서 말하자면 성실 기장을 했다 해서, 인건비로 얼마 나갔다, 회의비 얼마 나갔다 전부 기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실 신고를 하셨다고 그래서 세액에서, 세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지출했다라고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금액 자체가 1억 7000만 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3년 동안에 모두 지출했다고 여기에다 명기한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찌…… “위원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예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저희 주장과 후보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국세청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으시다. 국세청 결과에는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사끼리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반론 제기를 하면 저도 반론을 얼마든지 제기할게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서 저렇

게 하시는데 아니, 눈이 있으면 보세요. 세상에 이 3년 동안에 700만 원 쓰셨다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에 의뢰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제안을요? 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강운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뒤에 다 봤습니다.

이렇게 노란 줄까지 쳐놓았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써 온 것을 한번 읽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강운태 위원님의 자료상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자료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즉 2억 76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해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지만 수입 빼기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니, 마이너스인데 예금성 자산이 3억이나 된 이것을 설명하라 이런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의 자료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즉 2억 7600만 원이 실제로 발생해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일정률, 기타 소득은 80%, 사업소득은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세금 산정 목적으로 조세법이 인정하는 이른바 의제비용입니다. 따라서 동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의한 재산증가액을 산정하려면 수입금액에서 바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는 안 되고 수입금액에서 세금만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 말 주변이, 말씀씨가 없어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연료가 100만 원이라면 과세소득은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8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5만 원, 원천징수세율이 25%라고 그럴 때 세금은 5만 원이 되어 재산증가액은 15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성 자산이 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운태 위원 다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잠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해외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해외 자문료 등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얻어 온 소득이 또한 가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어서 필요경비에다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거기에다 더 보태서 금년도에 얻은 소득이 또 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러 가지 자료는 작년도까지이고 금년에, 2009년도 소득은 내년에 신고되는 소득으로 강 위원님의 분석표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 예금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09년 재산신고 내역에 기초한 예금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8월까지의 서울대 근로소득 및 해외 자문소득 등의 원천으로부터 약 1.2억 원 정도의 예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거를 이해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운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들어 보세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의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아니다 하는 말씀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실제 경비를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정운찬 후보자의 실제 경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경비를 내 달라’라고 10일 전부터 수차 요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실제 경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경비를 모르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된 의제경비,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하나 작년에 필요경비는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기장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1억 7465만 원을 신고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압니까, 신고하셨으니까 안 거지. 그래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해서 세액을 100만 원 공제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떠나서도 작년 1억 7000만 원은 세무대리인이 기장해서 신고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외 소득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아침에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저도 추가로 인정해요. 다만 인정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100%, 경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수입으로 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해외 가서서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고 항공비도 들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숙박비와 항

공비와 교통비가 꼭 그 강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지요. 다른 목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 정의화** 시간이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강운태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세무서에서 의제경비 제도를 두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금년도의, 지금까지 수입을 추가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달라고 수차 요구했고 10일 전에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와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은 후보자 등록 서류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장 시절에 관보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5년 말 2006년 초 대비 금년 9월이 됐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3년 평균 보면 한 달에 신용카드만 해서 1000만원 이상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9개월이면 9000만 원 이상을 털어내야 되는데 9000만 원을 털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좀 의외해서 검증을 받아 하는데 그렇게 거부하십니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생활비하고 필요경비 이것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비하고 필요경비가 바로 저희가 신용카드를 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용역 하면서 인건비는 어떻게 신용카드로 주겠어요? 작년에 2억 2000 얼마를 용역을 하셨던데 그중에 용역원들한테 인건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

면 그것을 신용카드로 줘니까? 신용카드 주면서 당신 인건비 내 신용카드에서 빼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잘 모르신다고요, 제가 보면. 답답할 정도로 모르세요. 밑에서 적어 준 거 가지고 계속 하시니까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강운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진실로 적은 거고 저도 개념은 다 압니다. 숫자를 적어 오라고 한 겁니다.

○**강운태 위원** 아니, 정운찬 후보자님, 내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주장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뢰하자 말이지요, 검증하자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의화** 1분 더 드리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위원** 아, 1분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지금 이 문답 과정을 지켜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정의화** 그러나 제가 좀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봐서는 날 새도 지금 얘기가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강운태 위원** 다른 얘기 하겠다고, 다른 얘기.

○**위원장 정의화** 예.

○**강운태 위원** 제가 짧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는 개헌을 강드라이브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 안 하시다가 지난 15일 날 드디어 ‘권력구조 개편’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한나라당은 국회에다 특위를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개헌의 초점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 그래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 또는 일부의원내각제 등등 의견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 권력구조에 있어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조금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것은 제가 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강운태 위원 또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 어쨌든 차수 변경해서 모양 좋게 끝내시려고 그러는데 좀 주세요. 시간 가지고 그냥, 1분씩 해서……

그래서 말이지요, 문제는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이 됐든 간에 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개헌 논의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0일 날 끝나고요, 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한 9개월의 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말하자면 누가 ‘당신 임기 단축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개헌 논의를 잔뜩 해 가지고 ‘자, 우리 모두가 권력구조 개편을 하기로 하고 의원집정부제로 가자’ 이런 등등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난 임기 단축 못 하겠다’ 해 버리면 개헌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미 제안하셨으니까요, ‘좋다.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내 임기 단축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지금 진정성이 나옵니다, 진정성이. 그러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해 보시오’, 그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는 좀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여권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강운태 위원 깊게 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 말씀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두 번째, 짧게 또 질문드릴 것은, 4대강 문제는 장군 명군입니다. 한쪽에서는 홍수 대비해서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쪽에서는 홍수는 4대강 지류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 난 것이지 4대강 본류는 재해가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에 가면 우리나라 물이, 특히 낙동강은 부족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낙동강이 다소 부족하지만 지역 간 물을 이동하면 낙동강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수질을 오히려 악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방망이 쳐 버리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과연 그것이 수질개선이 되고 과연 그것이 용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천리 금수강산 치산치수 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11%밖에 타당성조사를 앓고 있고, 그러고는 아예 준설하는 거, 보 쌓는 거, 댐 만드는 거, 그것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안 해도 된다고 밀어붙인단 말이지요.

환경영향평가, 지난 6월 24일 날 의뢰해가지고 7월 30일 날 1차 시안이 나와서 그렇게 막 급히 가고 있던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문위원으로 사실은 네 번째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내정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정운찬 총장이 총리를 맡아?’ 이렇게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내정 첫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 불가피, 4대강 추진’, 그 발언하신 것을 보고 ‘야,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빨리 변해?’, ‘저게 아마 총리 직 제의 또 수락의 전제조건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놀랐습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청문회에 임하면서 도덕성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운찬 후보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정 총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사람 원치를 압니다. 누구나 흠결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잣대 기준은 적어도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평균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적이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동료 위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3억 이상이 빈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재산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그냥 도대체가 이래 버리니 이게 과연 내가 청문을 한 것인지 뭐 한 것인지, 답변의 내용과 태도를 보고 적이 놀랐다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해 보니까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과 공직후보자와의 후보자 가계수지에 관한 이 논쟁은 결론을 내기가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운태 위원님께서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소득 차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보니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운태 위원님이 작성하신 문건과 총리후보자가 국세 전문가 등의 감정 의견을 함께 동 법 제10조의2항 중요증거자료로 첨부해서 경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최재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 더 쓴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선 후보자님이 아들 국적 정리하실 때요, 지금 미국 국적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 포기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대한민국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법무부장관 승인이 나면 그것 가지고 미국에 시민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법률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길로 나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못 알려드려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것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좀 자문을 해 주거나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더 늦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남의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또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인데 법적으로는 아까 최근에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군대 마친 후 2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

○**최재성 위원** 다 압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러면 그런 모양입니다.

○**김종률 위원**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국적 신청 안 하면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제 질의 중에 2005년도에 삼성 사장단 강연하신 적이 있다 그러셨지요? 혹시 이것이 삼성의 지도위원을 하시면서 지도위원의 대가를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강연이라도 해야겠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강연을하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저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지도위원이라는 게 뭐를 하는 겁니까?

○**최재성 위원** 삼성화재의 자문위원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지금 그냥 텅없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신뢰할 만한 곳으로부터 지금 제보가 왔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하고 지금 수입하고 지출 차익에 대해서 지루한 공방을 하셨는데 청문위원들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의 잣대를 후보자에게 제시를 하면 그것이 의혹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실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같은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청문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의 잣대를 제기하는 게 청문위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삼성화재의 비공개 자문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삼성에 비판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자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맡김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 후보께서는 그냥

자문활동을 하기 어려우니 최소한 내 양심상 강연은 해야겠다 해서 이 강연이 삼성 사장단에게 강연을 한 것으로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시라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최재성 위원 삼성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안 자체를 비공식적으로 받아보신 적도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기억이 안 납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그걸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삼성은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영안모자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최재성 위원 세계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제가 삼성의 자문위원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최재성 위원 아니, 그런 제안도 안 받으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주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제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일은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제안은 받으신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그러니까 지금……

○최재성 위원 받았습니까? 어렵듯이 기억이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어렵듯한 기억은 있으나 제가 말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삼성으로부터 자문위원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거든요. 그러면 총장 취임하기 전후인데, 그러면 이게 오래된 일이 아

닌데 이게 무슨 yes24와 같이 일반인이 이렇게…… 삼성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에도 분명히 자문 역할을 하셨는데 삼성 같은 굴지의 기업에서 자문위원 요청을 했는데 어렵듯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그룹이나, 죄송합니다만 그전부터 잘 알지 못하던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객관적 사고를 위함입니다. 삼성하고 저하고……

○최재성 위원 하여튼 제안을 받은 기억은 어렵듯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재성 위원 그걸 분명히 하세요.

백원우 위원이 어제 오늘 병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그때 또 기억을 되짚으셔서 한 게 60년대 70년대, 60년대로부터 거슬러가는 4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쟁점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정책에 관한 무거운 질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법률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문제 등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굴지의 기업 삼성으로부터 제안조차 받은 기억이 없다, 혹은 어렵듯하다 이것은 나중에 수락하시고 안 수락하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렵듯한 기억이 있다고 분

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어렴풋한 겁니까, 분명히 그런 제안은 있었는데 거절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한 말씀만……

○최재성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어렴풋하게 그런 기억은 있는데 내가 말지는 않았습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말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그런 말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는 겁니다.

저는 대기업 그룹하고 관계 맺는 걸 원칙적으로 안 해 왔습시다만……

○최재성 위원 알겠고요.

두산도 대기업이고 그리고 영안모자도 꽤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하고 거리 두려고 노력해 왔고 또 잘 모르는 정치인하고 거리 두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학총장이 적어도 정운찬 후보자보다 더 많이 기업인을 만나고 또 교분을 해 온 총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말씀은 정운찬 후보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걸 자꾸 강변하시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죠, 다른 총장님들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김종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오.

○김종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하고요, 73년도 역종별 명부 중에서 공주시 탄천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제출한다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 첨부서류는 자료 파악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73년도 역종별 명부는 ‘전국적으로 방대하므로 후보자와 관계있는 공주시 탄천면 73년도 역종별 명부를 오늘까지 제출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두 자료 다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신고 첨부서류는 소득세 탈루와 관련해서 인세가 거기 포함돼 있는지 또 다른 관련 소득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별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첨부서류는 자료 파악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소득세 탈루와 관련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첨부한 서류 그것하고 또 73년도 역종별 명부 중에서 후보자와 관계있는 공주시 탄천면 73년도 역종별 명부에 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저에게…… 어제까지였네요, 지금 차수가 변경됐으니까. 어제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수가 변경됐으니까 73년도 역종별 명부 중에서 공주시 탄천면 것만, 전국 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공주시 탄천면 73년도 역종별 명부를 오늘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에게 있는 중

대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의화** 후보자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예,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뒤의 스태프들이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 한 2시 전에는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오전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3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위원장 정의화** 오늘까지라 그래서 제가 2시 정도……

○**김종률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글썄, 그게 가능한지 공주시예……

○**위원장 정의화**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일 오후…… 아니, 그게 오늘이죠. 오늘 오후 5시 경에 간사회의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4일 경으로 대충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그 전에 한두 말씀만 먼저 드린 다음에 마무리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의화** 좋습니다.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이견 종합 정리한 겁니다.

먼저 이틀간의 청문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을지 몰라서 저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서 군대 안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법하게 면제받았고 기피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yes24 고문직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12분의 1 형태로 받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누락된 고문료는 수정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해외 부문 수입에 대한 신고 누락을 이번에 발견하여 자진 신고하고 수정 신고 및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의 증가는 수입 및 지출 후의 예금 증가입니다.

Y회사와 관련해서 대가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용돈의 성격으로 위법사항은 없으나 돌이켜보면 경솔하였던 행위였습니다.

아내와의 관련 사항입니다.

포천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살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주민등록법상 잘못이 있고, 이 점 사과드립니다. 땅은 산 일이 없습니다.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한 그림의 대금에 대해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위법은 없

으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것은 잘못이고 추후 미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예,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정운찬 높은 경륜과 경험으로 청문회를 격조 있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님, 이해훈 위원님, 정희수 위원님, 차명진 위원님, 나성린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귀중한 충고와 대안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운태 위원님, 김중률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따끔한 질책과 편달 겸허하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위원님, 고향을 사랑하시는 마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과 해안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원칙과 대의를 지키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수없이 다짐했 으면서도 때로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그리고 때로는 좀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 해서 크고 작은 흠집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이 반쯤 찬 유리잔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손쉽게 손가락질 하던 처지에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며 끌어 주고 밀어주는 역할로 제 입장이 바뀌더라도 훌륭한 시민이 되겠다던 학창 시절

의 각오를 늘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봉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회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 갈등을 조정하고 양극이 균형을 이루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서민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큰소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낮은 곳을 보듬고 흩어진 민심을 한데로 모으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께도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의화 저도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정운찬)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이틀간 품격 높은 청문회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리 후보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내일의 천자보다는 오늘의 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래의 막연한 일보다는 비록 좀 모자라더라도 당장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더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가 한때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위원장 입장에서 내일의 천자 못지않게 당장 오늘의 재상이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다소 좀 과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매섭게 각종 의혹을 몰아붙인 것은 그만큼 오늘의 재상 자리가 절대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정 수행 능력뿐만 아니고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봄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동료 의원들께서 조만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가부를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로 겸허히 인정하시고 더욱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 올린다면 국무총리로 인준되신다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관할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반추했던 곤궁했던 어린 시절처럼 이 순간에도 밥을 굶고 식사시간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삶의 끈을 놓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이들을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국무총리로 인준이 되신다면 오늘의 재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오늘의 재상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재상으로 후보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고생하신 정부 관계자와 그리고 의원 보좌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차수를 변경해서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첫 회의가 진행되었던 의원회관 1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7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강운태 권경석 김종률 박

상 돈 백 원 우 이 정 회 정 옥  
임 정 의 화 정 회 수 차 명 진  
최 재 성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준	철
직 무 대 리			
전 문 위 원	정	재	룡

○출석 공직후보자

정 윤 찬